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 특사 방북 관련
국내 주요 신문 기사집

2003. 1

통 일 부
(남북회담사무국)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한국일보

2003. 1. 7 (화)

"장관급회담 14일 열자"

정부, 북측에 제의

정부는 6일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9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14~17일 서울에서 열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이 제의를 수용하면 김령성 단장 등 북측 대표단이 14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경유해 입국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또 남북대화 사상 처음으로 정권 교체기에 열리는 것으로 북측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의 교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경향신문

2003. 1. 7 (화)

남북 장관급회담 14일 제의 통일부, 북측에 전화통지문

통일부는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장관 명의로 북측 대표단 김령성 단장에게 "제9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북측이 이 제의를 수락할 경우 북측 대표단은 14일 베이징(北京)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장관급회담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이번에는 북핵문제가 국내외의 최대 현안인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대한매일

2003. 1. 7 (화)

9차 남북장관급 회담 14~17일 서울개최 제의

통일부는 6일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장관 명의로 북측 대표단 김령성 단장에게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자. "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정부 당국자는 "9차 회담에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 시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상충부에 보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점기자 crystal@skdaily.com

世界日報

2003. 1. 7 (화)

남북장관회담 14일 제의 정부, 北측에 전통문 보내

정부가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오는 14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1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을 열자는 전화통지문을 6일 북측에 보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추가 핵 관련 조치로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장관급 회담을 14일에 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2lsmin@segye.com

朝鮮日報

2003. 1. 7 (화)

14일 남북 장관급회담 핵시설 원상복구 촉구

정부는 6일 남북 장관급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측 김령성 단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9차 장관급회담을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과 조율한 북한 핵문제 해법을 북측에 설명하면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 포기와 동결을 해제한 핵시설들의 원상복구를 촉구할 예정이다.

/金仁執기자 pinko@chosun.com

한겨레

2003. 1. 7 (화)

장관급회담 14일 서울개최 제의

정부 "북핵문제 논의할 것"

정부는 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4~17일 서울에서 열자고 6일 북측에 제의했다.

통일부 한상일 대변인은 "장관급 회담 우리측 정세현 수석대표 명의로 북측 대표단 김령성 단장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렇게 제의했다"라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8차 장관급회담에서 9차 회담을 '1월 중순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이 열리면, 핵문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마·일·중·러와 협의 뒤 정리된 우리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8차 회담 이후 진행돼 온 여러 일들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朝鮮日報

2003. 1. 10 (금)

南北 장관급회담 21~24일 개최

북한은 우리 측이 지난 6일 9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갖자고 제의한 데 대해, 9일 김영성 북측 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정세현(丁世鉉) 우리 측 수석대표 앞으로 보내 "21일부터 24일까지로 하자"고 수정 제의해왔다.

정부는 일단 북측의 수정 제의를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내 주 초 답신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대남통지문에서 회담 일정을 우리 측 제안보다 1주일 연기한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이 북핵(北核) 포기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한·미·일의 협의 결과와 미국

의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 나름대로 내부 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해, 회담을 일단 늦춘 것이 아니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남북한 적십자는 이날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1월 중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 3차 실무접촉을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병웅(李柄雄) 한직 총재 특보와 이금철 북적(北赤) 상무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이 접촉에서는 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만회소 건설, 전쟁 중 행방불명자 생사확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金仁기기자 ginko@chosun.com

남북장관급회담 21~24일 서울서

중앙일보

2003. 1. 10 (금)

제9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관계기사 3면)

올 들어 첫 남북 당국 간 공식 접촉인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어서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장관급 회담 북측 단장인 김영성 내각 책임자는 9일 판문점을 통해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에 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는 14일부터 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 측의 대북 제안을 수정 제의해온 것으로, 정부는 북측 안을 수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영종 기자

yilee@joongang.co.kr

장관급회담 21~24일 서울서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1~24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성(金鏞成)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장은 9일 오전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되 날짜를 1월 21일부터 24일까지로 하자"고 수정 제의해왔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ii@donga.com

東亞日報

2003. 1. 10 (금)

경향신문

2003. 1. 10 (금)

남북장관급회담 21일 서울서

통일부, 北 수정제 의 수용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김영성 단장은 9일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되 날짜를 1월 21일부터 24일까지로 하자"고 수정 제의했으며, 정부는 대략회의를 열고 북측의 제의를 받아들여기로 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북측에 정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14~17일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반도의 안정, 남북 화해·협력 흐름의 가속을 위해 핵포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북측에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북측과 유엔군사령부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사업이 조속히 완결돼야 한다는 입장에 북측에 유엔사 배제 기도를 철회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남북은 이와 함께 이날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제3차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윤욱기자

남북장관급회담 21일 서울서... 北核 등 논의

世界日報

2003. 1. 10 (금)

북한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오는 21일부터 4일간 개최하자는 수정 제의했다.

정부는 9일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김영성(金鏞成) 단장이 이날 남측 정세현(丁世鉉) 수석대표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같이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 동결 해제조치 이후 처음 열리는 남북간 최고위급 접촉이다.

한편 남북적십자사는 오는 20~22일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제3차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상민기자 21smin@segye.com

朝鮮日報

2003. 1. 11 (토)

정부 긴급 안보회의

정부는 10일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NPT 탈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뒤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조치의 위협성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이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영복기자 kkb@rjiosun.com

한겨레

2003. 1. 11 (토)

남북 장관급회담 예정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10일 북한의 핵 확산금지조약 탈퇴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이 한발 더 악화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인내심을 갖고 꾸준한 대화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9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21~24일 서울에서 단지는 북쪽의 수정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했다.

김용성 이재훈 기자 yskim@hani.co.kr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10일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관련,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중앙일보

2003. 1. 11 (토)

정부 “北경수로 지원중단 불가피”

안보회의, 탈퇴 철회 촉구 南北장관회담은 예정대로

정부는 10일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관련, “정부는 이번 조치의 위협성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NPT 탈퇴 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

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한 직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NPT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과 기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외교 당국자는 대북 경수로 공사와 관련, “앞으로 상황 전개를 보아가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

국들이 모여 다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NPT에 복귀하지 않으면 북한에 핵 관련 주요 부품과 이중 사용이 가능한 품목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9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예정대로 치르되 이를 북한의 핵 개발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채널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東亞日報

2003. 1. 16 (목)

21~24일 남북장관급 회담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21~24일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열린다. 남측은 15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이 수정 제의한 회담 일정을 수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21~24일 남북장관급 회담

남북 장관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15일 북한 김령성 단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9차 회담을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북한측의 지난 9일 제의를 수락한다고 통보했다.

/金仁執기자 ginko@chosun.com

대한매일

2003. 1. 16 (목)

朝鮮日報

2003. 1. 16 (목)

남북 장관급회담 21~24일 워커히서

제9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 동안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15일 오후 판문점연락관 접촉을 통해 정세현(丁世鉉) 장관 명의로 북측 대표단 김영성 단장에게 답신을 보내 북측이 지난 6일 보낸 회담 개최 일자 수정 제의를 받아들였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최대 현안인 만큼, 통상 의제인 남북교류사업 이외에 북측의 '핵포기' 설득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 시도도 반대하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이를 평양 상부에 상세히 보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북측은 8차 장관급 회담의 합의사항이면서 현재 민간인의 군사분계선(MDL) 통과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착공 등 남북교류 협력 3대 현안사업을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남북장관급회담

21~24일 워커히호텔서

정부는 15일 북측과의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정세현 통일부장관 명의로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제9차 장관급회담을 개최하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북측 김영성 대표 단장에게 보냈다. 이에따라 남북장관급회담은 21일부터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신창호기자

◀ 국민일보

2003. 1. 16 (목)

한겨레

2003. 1. 16 (목)

장관급회담 21~24일 서울서

제9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21~24일 서울 웨라튼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다.

장관급 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5일 북측 김령성 단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9차 회담을 21~24일 서울에서 열자는 북측 제의에 동의했다고 한상일 통일부 대변인이 밝혔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世界日報

2003. 1. 16 (목)

9차 남북장관급회담 21~24일 서울서 개최 정부, 北수정제의 수용

남북한은 오는 21~24일 서울 웨라튼 워커히호텔에서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열어 금강산 육로관광 문제 등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

장관급회담은 북핵 문제로 자칫 실종될 뻔했으나 우리측이 15일 북측의 수정 제의를 수용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냄으로써 가까스로 성사됐다.

/이상민기자

“盧당선자 안보관 없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WP와 인터뷰... 김씨 “그런말 안했다”

최근 미국 뉴욕 타임스에 실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식중(金奭中) 상무의 '사회주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국방부 신하 국방연구원(KIDA)의 한 연구위원이 '노무현(盧武鉉) 당선자는 안보관이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외국신문에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9일자 '반미감정 깊어지는 남한'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KIDA 김태우(金泰宇) 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해 "노 당선자와 측근들은 '안보관이 없다(have no concept of security)'" 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기사에

서 "노 당선자가 군 고위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는 노 당선자가 보수파들이 우려하는 주한미군 감축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김 위원장의 발언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16일 '며칠 전 워싱턴 포스트' 기자와 전화통화는 했지만 "그런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기사를 쓴 피터 S 굿맨 기자로부터 북한적 사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노 당선자측이 남북관계를 중시하므로 안보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한 것이 과장보도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미국 언론들이 최근 한국 내 반미감정을 확대 보도하는 것을 주로 지적했다"며 "해당 기자에게 진의를 왜곡한 데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미 뉴욕 주립대에서 핵문제물 전공한 전문가로 국방연구원에서 근무하다 1996년 15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아 서울 강남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국방연구원에 복직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중앙일보

2003. 1. 17 (금)

盧당선자 北대표단 만날까

노무현(盧武鉉)대통령당선자가 장관급 회담 북측대표단을 만나게 될까.

북측대표단은 장관급 회담이 열리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 머문다. 이 기간 중 盧당선자와 김영성(金瑛成)북측단장이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16일 오전 인수위 주변에서 흘러나왔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가 "북측이 민담을 요청해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으나"고 말하면서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진 듯했다. 그러나 오후의 기류는 부정적이었다. 당선자 측의 신계륜(申溪輪)비서실장과 이낙연(李洛淵)대변인, 인수위 외교공일안보 분과의 윤영관(尹永寬)간사 등이 모두 "검토한 바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격 안맞고 성과 없을 것” 지적하자 반나절만에 “검토한 바 없다”

盧당선자 측을 멈춰서리게 만든 이유는 뭘까.

우선 인수위나 당선자 주변의 신중론이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북핵 문제 등 현안 해결은 현 정부에 맡기고 할말 물러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 없이 북측 대표단을 만나는 것이 盧당선자에게 부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북측 수석대표가 바뀌었을 때만 대공영을 면담했던 기존의 관례에 비추면

때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반영됐을 직하다.

통일부 측의 부정적인 기류도 감안됐다고 한다.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만남에 나서와야 얻을 게 별로 없다"는 통일부의 입장이 당선자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대미 특사단장인 정대철(鄭大哲)의원이 미국에서 돌아온 뒤 곧바로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적이 있었으나, 특사 파견도 휘발

직후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문희상(文熙相)비서실장 내정자는 "당선자의 대북특사는 성과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盧당선자의 스타일에 미뤄 북측대표단과의 전격적인 회동 가능성을 짐치는 목소리도 있다. 인수위 관계자들도 "민담을 요청하더라도 거부하겠느냐"는 질문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말을 흐렸다.

盧당선자가 직접 나서기가 부담스러울 경우 당선자측 대리인이 북한 대표단을 맞아 향후 대북관계 기초 등을 설명하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대한매일

2003. 1. 17 (금)

盧·北장관급회담 대표단 서울면담 이루어질까

인수위 "검토한 바 없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오는 21~24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하는 북측 대표단과의 면담이 이뤄질까.

16일 오전 서울에 오는 북측 김령성 단장 등 회담 대표단 일행이 노 당선자와의 면담을 희망할 경우, 수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심사 여부가 관심사다. 그러나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검토한 바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당선자 및 몇몇 측근들은 핵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면담을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당선자측은 취임 전, 특히 최근처럼 미국이 유인한 입장을 보일 때 북핵 문제가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얼마전 외교·통일·안보 본과위의 건의에 따라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임동원 외교통일안보 특보를 대북 특사로 파견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한 것도 이같은 차원의 움직임이다.

대북 특사는 '특사를 보내는 주체'의 문제, '성과가 없을 경우의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 일단 당선자의 취임 후 파견쪽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다.

지금으로서는 노 당선자측이 적극적으로 나서 북측 대표단과의 면담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거부할 경우, 그리고 만난다 하더라도 핵과 관련한 성과가 없을 경우, 북측이 주장하는 '민족공조'에만 동조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측은 노 당선자의 향후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해법을 김경하기 위해서라도 면담을 적극 희망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

북측은 핵 문제 논의는 기술적으로 피하면서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열의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수정기자

'핵 설득' 北 수공할까

남북장관급회담 21일 시작

남북이 21일의 장관급회담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상시 같으면 각종 남북교류 현안들을 협의할 자리지만 북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통상적인 현안보다 북측 대표단을 상대로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데 온 힘을 쏟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떠한 핵개발 시도도 반대한다는 단호한 입장과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풀어간다는 원칙을 북측에 전달하고 이를 평양 상부에 상세히 보고해

북측 재량권 없어 성과 미지수 정부 "최소한 北진의는 파악"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여기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북핵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북핵 파문 이후 올해 첫 남북대화 체널인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취하는 태도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정부는 미·일·중·러와의 조율결과를 설명하면서 대화의지를 보이며 변화된 미국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고 북측에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의 설득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우선 북측 대표단 민만이 최고위급 인사가 아닌 실무자급이다. 북핵 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어느 누구도 아닌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있다. 따라서 우리측 설득이 먹혀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번 대표단이 김위원장의 메신저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김영성 북측 대표단장은 공식 직함이 내각 책임참사로 군부 등을 제외하고 직접 김위원장에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전달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처음으로 우라늄 핵개발을 시인한 직후 평양에서 열렸던 8차 장관급회담 때도 우리측 대표단은 김단장에게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던 적이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미국 입장이 변화하지 않았다며 핵문제를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자고 고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설득 전략이 먹혀들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최소한 북한의 진짜 의도라도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로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개발 초강수를 두고 있는 이유가 미국과의 협상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핵무기 보유 의도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북측이 과연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고, 핵개발 포기 의사를 보일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신창호기자 procol@kmib. co. kr

국민일보

2003. 1. 17 (금)

盧 "北 대표단 만날 생각 없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측이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북측 대표단이 노당선자와의 면담을 희망해도 만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16일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위 운영관 간사 등에게 확인한 결과 서울에서 열릴 남북장관급회담 기간 노당선자가 북측 대표단을 만나는 방안을 한번도 생각해보진 않았고 한다"고 밝혔다.

노당선자측의 이같은 입장은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은 현 정부가 책임지고 처

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북핵 문제는 현 정부가 주도해야 할 현안"이라며 "만에 하나 노당선자를 만나고 싶다는 북측 대표단의 요청이 있어도 완곡하게 거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한때 북측 대표단이 노당선자와의 면담을 요청할 경우 회담에 도움을 주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알리는 차원에서 노당선자가 만나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으나 없던 일로 돼버렸다.

남도영기자 dynam@kmib. co. kr

'核'빠진 남북대좌 파행예고

21일 개최 남북장관급회담 전망

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장관급회담은 올해 첫 최고위급 만남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이번 장관급회담의 최대 의제가 될 핵문제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나올 방침이어서 장관급회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조총련 부국장은 16일 "핵문제는 우리(북한)가 미국과 마주앉아 풀어야 할 핵문제가 풀 수 없다"고 못박고 나와 회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북한의 관심사가 오로지 남북 경협과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문제에만 국한된 경우 남한과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우리측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조평통 "核문제는 美와 해결" 천명 南, NPT탈퇴 철회등 北核 주력방침 北, 經協등 의제제한때 마찰불가피

남북 채널이 가동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철회 촉구 등 핵문제에 주력할 방침이다.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의 '북핵 3원칙'에도 언급됐듯이, 핵문제는 한국이 주도해 나간다는 입장이어

서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한가롭게 이산가족 문제 등만 다룬다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안 맞는다.

나아가 북측이 '민족공조'를 앞세워 미국의 핵위협을 비난하고 반미 분위기를 부각시킨다면 회담

결렬은 불을 보듯 뻔해진다. 조평통 조 부국장이 "이번 회담에서는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북과 남은 미국의 압력을 배격하는 대화, 전쟁을 방지하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보아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민족공조만 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남북한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개발 시인" 직후 제8차 평양 장관급회담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북측은 남한을 배제한 채 핵문제를 북미 대결 구도로만 몰아갔다.

정부는 연일 대척회의와 시골레이션(모의회)을 통해 머리를 짜내고 있지만, 북한을 설득할 마땅한 논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8차 때보다 좀더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회담 길렬도 각오해야 하는 우려 섞인 분위기가

김기동기자
kidong@segye.com

世界日報

2003. 1. 18 (토)

朝鮮日報

2003. 1. 18 (토)

"장관급 회담서 核문제 안다뤄"

北조평통, 조선신보 인터뷰

북한의 대남사업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6일 재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핵문제는 미국과 마주앉아 풀어야 할 핵문제가 풀 수 없다"고 말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9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한은 내주 중 장관급회담 외에 20일부터 금강산에서 3차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평양에서 22일부터 25일까지 2차 철도·도로 실무 협의회를 각각 가지며, 남한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과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등 남북 민간단체들은 21일부터 평양에서 접촉을 갖고 올해 공동행사 추진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金仁執기자 ginko@chosun.com

경향신문

2003. 1. 18 (토)

北, 장관회담 核논의 거부

조평통 "미국과 풀 문제"…경협과 분리 시사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오는 21~2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조평통 서기국 조총련 부국장은 16일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핵문제는 우리가 미국과 마주앉아 풀어야 할 핵문제가 풀 수 없다"고 말해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분리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북남 사이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장관급회담 등에서 논의하고 풀어나갈 수

있다"며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들고 앞으로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 교류사업을 적극 밀고나갈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부국장은 남한의 핵문제 중재 움직임에 대해 "남측 당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마주앉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북과 대결하기 위해 마주앉는다고 볼 수 없다"며 "남측 당국이 민족 자주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북측도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협기자
csh@kyunghyang.com

北核 돌파구 '기대半 부담半'

■ 남북 장관급회담 전망

오는 21~24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9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앞둔 정부가 준비에 부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남북한 재남을 통한 북핵 문제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데다, 국제사회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섞인 관심을 갖고 있어 부담감이 어느때보다 더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기조는 그같은 기대치를 낮추느라 애쓰는 모습이다.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 사실상 미국과의 문제라며 외면하고, 민족 공조로 미국에 함께 맞서자는 논리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남북이 서로 다른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엇박자' 회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햇볕정책을 펼치던 현 정부의 마지막이 될 이번 회담을 통해 ▲핵 문제 ▲금강산 육로관광과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군사분계선(MDL)통과 문제 ▲차기 정부와의 연계 문제 등 3가지 과제를 다룰 방침이다. 북한은 남북대화 자체가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인 감안, '좋은 얼굴'과 '좋은 말'로 회담에 나설 것이지만, 핵 문제와 군사 문



러 특사, 北核논의차 中방문... 북핵 문제 논의 중 위해 17일 베이징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베이징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베이징 AP

제에 대해선 논의 자체를 회피하려 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핵 문제 해결의 진전 없이 제10차 장관급 회담 날짜만 합의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대한매일

2003. 1. 18 (토)

한국일보

2003. 1. 18 (토)

北, 장관회담서 핵배제 시사

북한이 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핵 문제를 주요의제에서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조충한 부국장은 17일 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핵 문제는 우리(북한)가 미국과 마주앉아 풀어야지 남측 사람들이 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의 논의 수위와 해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조 부국장은 그러나 남북 교류협력사업에는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양정대기자

世界日報

2003. 1. 18 (토)

北, 장관급회담서 '核' 배제 시사

"美와 풀어야할 핵안" 주장

북한이 핵문제를 '북미간 현안'으로 간주, 21~2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장관급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삼지 않을 방침임을 내비쳐 파장 운영이 우려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조충한 부국장은 16일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핵문제는 우리(북한)가 미국과 마주앉아 풀어야지 남측 사람들이 풀 수는 없다"고 밝히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가 배

제될 것임을 밝혔다.

북한의 핵 논의 배제 방침은 우리측의 핵문제 우선 논의 방침과 어긋나 양측간 마찰이 예상되면서 장관급회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한편 정부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제2차 실무협의회(평양)를 22~25일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북측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기동기자 kidong@segye.com

東亞日報

2003. 1. 18 (토)

北 "장관회담 핵논의 안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조충한 부국장은 16일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핵문제는 우리(북)가 미국과 마주앉아 풀어야지 남측 사람들이 풀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부서인 조평통 고위간부의 이 같은 발언은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9차 남북장관급회담 때 남측과 핵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北장관급 대표단 원하면 만날 용의”

北·美 및 對北관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 회담 북측 대표들을 만날 뜻을 18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향후 노 당선자의 대북 해법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노 당선자는 북측 대표단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격식, 체면 따지

지 말고 만나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화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한다.”고 흔쾌히 답변했다.

물론 “북측 대표단이 만나길 원한다면”이란 단서를 붙이긴 했다. 그러나 노 당선자의 이같은 언급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취임 후 대북 특사 파견은 물론, 남북 정상회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관측이 강하다.

●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노 당선자는 최근 핵문제를 둘러싼 강경시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도 “북한이 결박하게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고, 금방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지만 개혁·개방을 하고 싶어한다.”고 단정짓고, 북·미간 자존심을 살리라며 조금씩 신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韓·美 수평관계 공고화

北核 평화적 해결 낙관

차제에 노 당선자가 북핵 문제 해법은 북·미간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노 당선자는 또 대미 관계에서 작전지휘권, 한·미 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5년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변화시키겠다.”면서 “그러나 국론의 심각한 대립·분열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미 정책에서도 직접적이고, 솔직한 행보가 있을 것이라 관측으로 연결된다.

대한매일

2003. 1. 20 (월)

“남북 장관급 회담 북대표 만날 용의”

노당선자 TV토론

“정당 지역구도 극복”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남북 장관급 회담 기간에 북측 대표가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 관련기사 3·5면

노 당선자는 지난 18일 밤 (한국방송) 토론 프로그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어느 만남이라도 격식이나 체면을 따지지 말고 만나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무슨 문제가 풀린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정치권의 지역구도틀 극복하기 위해 “중·대선

거구제를 하든지 비례대표제를 대폭 도입해 어느 지역도 한 정당이 석권하지 못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적절한 시기에 정식으로 여야 정치권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운영과 관련해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수집한 권력핵심 내부의 비리정보 등이 차단돼 버린 경우가 있다고 본다”며 “정보선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도록 하고, 정보전달은 직접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한·미 관계에 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 작전지휘권 문제, 주둔군지위협정(소파) 등을 5년 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할 만큼 변화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용현 기자 piaoo@hani.co.kr

한겨레

2003. 1. 20 (월)

盧당선자 'TV토론' 출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8일 KBS IT V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 "일단 순수 대통령제로 운영한 뒤 내년 총선에서는 과반수 정치세력이 총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당선자는 "그 전제조건으로 어느 한 정당에 어느 지역에서도 70~80% 이상 식권하지 못하게 해 지역구도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정치권에 정식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당선자는 이어 "헌법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 프랑수아형 이원집정부제 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한다"면서 "당 정분리를 통해 정당을 지배하지 않음으로써 한번 분권하고, 그 다음에 총리의 권한을 헌법 그대로 주면 기기에 상응하는 권한이 총리에게 가기 때문에 또 한번 분권하게 된다"며 2단계 분권론을 제시했다.

노당선자는 청와대 운영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의 문제점은 장관 위에 수석이 있고, 수석의 뜻이 마치 대통령 뜻인 것처럼 비쳐져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지시는 장관에게 직접 하거나 각료회의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자료에 관한 정보는 전달채널을 인사위원회로부터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민정수석과 정무수석을 통해서도 따로 전달받아 이 신들이 하나로 중간에 통합되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 노당선자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안전과 지원을 선택할 것"이라며 "북한은 개혁과 개방에 적극적이며 여기에는 한국 정부와 주변국가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하는 북측 대표단 면담 용의에 대해 "어느 만남이라도 격식과 체면을 따지지 않고 만나서 솔직하

국민일보

2003. 1. 20 (월)

“장관급 회담 北대표단 만날 용의”

지역구도 극복 조건... 2단계 분권론도 제시 “北 핵포기 대신 체제안전·지원 선택 확산”

게 대화해야 풀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북측대표단과의 면담을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노당선자는 "북핵 문제 얘기가 나오면 역시 하늘이 우리 한국민을 버리지 않는 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서 "당신 직후 미국에서 북한 공격가능성 얘기를 때는 절박한 심경이었지만 다행히 미국 여론이 돌아서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분위기가 됐다"고 전했다.

4000억원 대북 지원선 등 의혹사건에 대해 노당선자는 "누구라도 밝히지 않을

수 없으며, 안발할 재간도 없다"면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선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당선자는 한 패널이 "김원기 의원이 총리가 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묻자 "괴송하지만 총리 인신 문제는 아직은 비밀이고, 정해져 있지도 않고,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할 수 없다"고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썼다. 노당선자는 "다만 대통령이 안심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안정총리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노당선자는 당선 이후 달라진 일상에 대해 솔직 담백한 일화들을 공개. 웃음을 자아냈다. 노당선자는 "계속 대중목욕탕에 갈 것이냐"는 질문에 "집에 더운 물이 안나오고 해서 간 것"이라며 고백했다. 당선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선 "솔직히 아직 실감이 덜한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됐구나라고 가장 실감날 때는 당선자 선용치를 탈 때"라고 말했다.

노당선자는 이어 "하루는 집에 있는데 (아내가) 당신은 대통령이 됐는데 저기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며 생난 얼굴이 있다"면서 "역시 미누리는 영민한 마누라구나라는 생각에 들었는데 시연을 들어보니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남편이 대통령이 됐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부부간의 대화를 소개했다.

강영수기자

NYT “盧당선자 對美-對北시각 걱정안해도 돼”

東亞日報

2003. 1. 20 (월)

미국 일각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가 17일자 칼럼에서 강조했다.

뉴욕 타임스 취재진과 함께 서울에서 노 당선자를 인터뷰한 크리스토프씨는 '과자와 김치(Cookies and Kimchi)'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노 당선자의 미국 및 남북관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등에 대한 견해를 자세히

인터뷰서 '부시 멋진사람' 호평
金正日대 대화유도 노력

소개하면서 "한국의 새 대통령에 대해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인터뷰 중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대해 '멋진(cool) 사람'이라며 호감을 나타냈으며, 'cool이 냉정하다는 뜻이나'는 물음에 그는 "노, 노, 노, 남북관계, 멋있고 재미있고 훌륭하고 매력있고 유쾌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고 크리스토프씨는 설명했다.

크리스토프씨는 노 당선자의 대북(對北) 대화의지가 '대척 없이 순진하다'고 느껴졌으나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김 위원장을 달래 대화를 시작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고 썼다.

그러나 그는 "노 당선자의 시험은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시킬 수 있는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남북회담의 진행	
1월 20~22일	제3차 남북직접대표단 실무집회 (금강산)
21~24일	제9차 장관급회담(서울)
21~25일	2003년 남북민중공동행사 추진본부, 실무회담(평양)
22~25일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실무합 조차회의(평양)

적십자회담·장관급회담·경의선- 남북 '대화 주간'

북핵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간의 각종 회담이 이번 주 서울과 평양, 금강산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된다.

남북은 20~22일 금강산에서 제3차 직접대표단 실무집회를 시작으로 21~24일 서울에서 제9차 장관급회담, 22~25일 평양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남북 실무협의의 제2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남북 민간단체들도 2003년 민족공동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21일부터 5일간 평양에서 열 예정이다. 이처럼 남북회담이 한 주에 동시에 열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북한의 핵개발 시인과 핵시설 중립 해체, 핵화산금지조약(NPT) 탈퇴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여서 그 결과들이 주목된다.

남북은 핵위기 가운데서도 기존 협의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1991년 한반도 핵위기 때와는 달리 남북 모두 대화를 끊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우리측은 이번 회담들에서 북한 당국에 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들 회담에 대한 양측의 접근 자세가 워낙 달라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핵포기 설득-살마리 잠합지 관심

정부는 일단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 시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침을 거듭 천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의 핵문제 제기를 회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 언론매체들이 최근 "핵문제는 우리와 미국이 마주 앉아 풀어야지 남북 사람들이 풀 수 없다"고 강조한 점은 이쯤 시사한다.

남북 장관급회담과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의 또다른 주요 의제는 비무장지대(DMZ) 남북관리구역 내 군사분계선(MDL) 통과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경의선·동해선 연결 1단계 작업,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등이 곧바로 성사돼야 한다는 데는 인식할 길이 많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 걸림돌인 MDL 통과 문제에 관해서는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북측을 상대로 남북관리구역내 임시 통행 및 안전보장협약시에 유엔군사령부가 요구하는 '장전협정에 따른다', '남북관리구역은 DMZ의 일부'라는 문구류 삽입하는데 동의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민족화해 노력을 방해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증거가 MDL 통과에 대한 유엔사의 판지갑기라고 주장하며 최대한 배탈 것으로 분석된다.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직접대표단 실무집회에서는 지난 번 실무집회에서 대체로 합의된 점(2월1일)에 즈음한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정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금강산 면회소 신설 규모, 6·25 때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003 남북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간 실무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와 8·15 민족통일대회 등의 개최 여부 및 행사규모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맞이 공동행사는 지금 상황이 핵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긴장된 상태로 개최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신성호기자 procol@kmb.co.kr

국민일보

▶ 2003. 1. 20 (월)

한국일보

▶ 2003. 1. 20 (월)

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장관급 회담은 올해 첫 남북 최고위급 만남인데다, 남한의 장군교세기에 열리는 회담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피정도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큰 판'이 북한 핵 문제로 걸리적거린 경우 20일과 22일 각각 금강산과 평양에서 재개되는 적십자회담 및 철도·도로 실무집회 등 하위 회담들도 연쇄적으로 뒤따를 수 있다.

올 첫 최고위급 만남

핵이 '짐' 될 듯

■ 내일 南北 장관급회담 권간은 역시 핵 문제가 다. 8차 회담에서 합류해 '핵'이라는 단어를 공동보도문에 집어넣은 남한은 여세를 몰아 '핵 포기'를 설득할 기대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지도 북측 대표단을 만날 용의를 표명하는 등 대북 직접 설득에 가세할 방침이다. 북측도 남한의 대북정책을 따라 짐같은 차원에서도 노 당선자와의 만남,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일찌감치 핵 문제는 미국과의 문제라고 신을 그은 상태이다. '핵 문제는 우리(북한)가 미국과 마주 앉아 풀어야지 남북 사람들이 풀 수는 없다'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조종현 부국장의 16일 언급은 이번 회담이 치러

될 것치대결의 장이 될 가능성을 예고한다. 북측은 한걸음 더 나가 민족공동체를 위해 남북이 공동

으로 미국의 압력에 맞서자고 주장할 공산이 커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핵화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하루만인 11일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던 북한이 최근 들어 다소 누그러진 미국의 강경 기조를 확실히 더듬어 북미간 대타협의 징을 마련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발사 등 강경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핵 문제에 진척이 없을 경우 경의선 인왕 등 경제협력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큰 틀을 한미일 공조에 두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경험 요구를 수용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미국과의 타협을 위한 정략다리로 활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북한이 '정치적 방관'과 '경제적 실리'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관급 회담은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 범법행기에 주력하되 적십자 및 철도·도로 실무집회에서는 최대의 실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에 '북남 사이의 대화와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밀고 나갈 입장'이라는 점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을 가능케 한다.

/양정대기자(touch@hk.co.kr)

남북 장관회담 오늘 서울서

적십자·철도연결 실무협의등 연쇄 접촉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비롯해 제3차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 협의회 2차례의 등 남북간 회담이 20일부터 한주간 열린다.

3개의 남북회담이 동시에 열리는 것은 처음으로 정부는 특히 이번 장관급 회담을 핵문제 해결의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3면

장관급회담은 21~24일 서울 웨리톤 위키탈 호텔에서,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협의회는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며, 이에 앞서 적십자

실무접촉은 20일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개막됐다.

정부 당국자는 “북핵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니만큼 장관급회담에서 통상적인 의제 외에 이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은 불허하며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양 상부에 보고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장관급회담의 북측 대표단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북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담을 주

선한다는 계획이다.

노당선자와 북측 대표단의 면담은 남한의 차기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대화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은 김영성 내각 책임참사, 조성발 내각 사무국참사, 최성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김춘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서기장, 김만길 문화성 국장으로 구성됐다.

남측 대표단은 정세현 통일부 장관,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박문식 문화관광부 차관, 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서영교 통일부 국장으로 짜였다. 이음욱기자 woody@k.yunghyang.com

世界日報

‘당근’없는 ‘核’대좌 성과난망

오늘 장관급회담 전망

21일부터 개최되는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국제사회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핵문제에 대한 북한 고위층의 직접적인 해법을 들을 수 있고 한국을 통해 이뤄지는 간접적인 북미대화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 참여하는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핵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상황에서 열리는 회담이라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안고 회담에 임한다”며 부담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회담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북한이 이번 장관급회담

北서 논의 소극적... 거부는 안할듯

경의선 연결등 현안도 진통예상

일부에선 ‘깜짝메시지’ 점치기도

의 최대 의제가 될 핵문제에 대하여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러 채널을 동원, “핵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당국자는 “지난 8차 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에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북한이 논의 자체

를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핵문제와 더불어 정부는 미뤄지고 있는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간 현안을 마무리짓는다는 입장이지만 이것 역시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양국간 교류협력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북한도 군사분계선(MDL) 통과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던 마찬가지다.

북한을 설득할 만한 뚜렷한 카드가 없다는 것도 정부의 고민이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강조해 온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지만 북측에 제시할 ‘당근’은 없다.

일각에서는 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지원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는 에너지 지원이 국제적인 문제라 설자리 내놓을 수 없는 카드여서 곤혹스럽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는 것은 남북이 모두 바라지 않고 있어 북한이 뜻밖의 전향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상민기자

21smin@segye.com

서울·평양·금강산서 남북채널 동시가동

‘北核 돌파구’ 기대감

남북 협상의 한 주가 열렸다. 이번 주에는 장관급회담(서울)과 철도·도로 연결회담(평양), 적십자 실무회담(금강산)이 동시에 열려 다각적인 남북채널이 가동된다. 역시 최대 관심사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핵문제에 있어 돌파구가 열리느냐 여부다.

◇기대감 품는 정부=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연세적인 남북대화와 관련해 “정부는 남북간 접촉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접 전달하고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

서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급회담 남측 대변인을 맡은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통일정책실장도 회담에 임하기 직전 “북한 핵문제 해결의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핵포기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철회를 강권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고위 당국자는 “지난해 10월 제8차 평양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보다 구

체적인 내용을 보도문에 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개발 시인으로 야기된 ‘제네바협약 및 비핵화선언 준수’ 등 문구를 넣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착상태에 빠진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등 교류협력 과제들도 진전이 없을 것이라며 북측을 ‘어려다’는 방침이다.

◇예상되는 난관=북한은 이번의 9차 장관급회담에서 가급적 핵문제에 대해 논의를 회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북측은 아예 핵을 언급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나올 방침임을 시사하고 나섰다. 북측은 남북 검협과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문제에만 회담 의제를 국한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남측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남북 교류 협력사업도 일정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북측을 압박할 계획이다. 이봉조 대변인은 “북측은 핵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강하게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북·미간 대결 기류에 변화조짐이 엿보인다는 판단에 근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칫하면 ‘외박자’ 회담이 될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핵문제에 대한 북측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밀고 당기는 지루한 회담을 3박 일 동안 하게 될 것 같다”면서 “따라서 이번 회담은 핵문제 해결의 진전 없이 제10차 장관급 회담 날짜만 합의하고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장관급회담 오늘부터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21일 서울 웨라톤 위커킬호텔에서 시작된다.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담에는 남측에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 김령성 내각 책임참사가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회담 남측 대변인인 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20일 “이번 회담에선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북한이 스스로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하도록 설득하는 데 최우선을 둘 것”이라며 “이와 함께 철도·도로 연결과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착공 등 남북관계 현안들의 추진 일정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8면

남북은 20일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적십자회담 3차 실무접촉을 시작했다. 이병웅 대한적십자사 총재 특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은 이날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 편으로 금강산에 도착해 2박3일 일정에 들어갔다. 이 수석대표는 “지난 2차 실무접촉에서 타결짓지 못한 금강산 면회소 규모 및 이산가족 추가상봉,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원재 기자 wonje@hani.co.kr

한겨레

“南北정상 연내 서울서 회담”

인수위, 새정부 임기내 평화협정 체결 검토

3단계 평화정착안... 盧측 “확정된것 없다”

올해 안에 서울에서 2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갖고 새 정부 임기 내에 한반

도 평화협정 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단계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외교동일안보분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무팀에서 검토 중인 ‘3단계 평화정착 방안’은 1단계로 북한 핵 문제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올해 2차 남북 정상회담 실현을 담고 있다.

2단계인 2004~2005년에는 북·미(北米), 북·일(北日) 관계 정상화와 함께 대북 억지력에 초점을 뒀던 한·미동맹 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3단계는 2006년 이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변미군의 역할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한·미(韓美) 동맹 관계의 불가피한 변화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중 한 명이 만든 이 방안은 외교통상부·통일부 등과의 협의·토론을 거쳐 일부 수정된 뒤 노 당선자에게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수위 정은균(鄭恩均) 대변인은 “실무차원의 여러가지 논의 안 중 하나이며, 상당부분은 논의과정에서 폐기됐다”며 “노 당선자에게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며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석기기자 imagine@chosun.com



◇남북대표 악수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처음 열리는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린 21일, 회담장인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우리측 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사진 왼쪽)이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성 내각 책임참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석수 국무총리와 정세현(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21일 밤 세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인 김경성(왼쪽) 내각책임참사와 건배하고 있다. /원유한기자

◀ 한국일보

2003. 1. 22 (수)

北대표단 “盧당선자 만나겠다”

장관급회담 일행 입국

제3차 남북 장관급회담 김성령 북측 단장을 21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따뜻한 용의를 표명하면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면담 의사를 밝힌 노 당선자와 북측 대표단의 11명이 공항간 이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노 당선자와 김경성(金敬星) 북한 국방위원장 간 예상치 못한 대화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5면

북측 대표단은 도착성명에서 “외무부의 압력이 크고 정세가 엄중할수

록 우리는 열렬한 민족관과 뜨거운 동족관으로 난국을 타개해왔다”며 “이번 회담에서 북한 정부는 이런 의지를 내외에 과시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민족공조”를 강조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후 회담장인 세라톤 워커힐호텔에서 김 단장과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북측 문제 해결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후 7시 김

석수(金碩洙) 국무총리가 주최한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24일까지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한편 금강산에서 열린 적십자회담 3차 실무접촉 이틀째 회의에서 남북은 섬(2월1일)을 제기로 한 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는 의견이 좁아졌으나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규모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22일 최종합의문 도출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양정대기자 torcl@hok.co.kr

중앙일보

2003. 1. 22 (수)

北대표 “盧당선자 만날 용의”

9차 남북장관급회담 열려 북에 핵문제 조속해결 촉구

북한 핵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제9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21일 서울 세라톤 워커힐호텔에서 시작됐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과 김영성(金盈成) 내각 책임참사가 각각 남북 수석대표로 나서 오는 24일까지 열린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남측은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스스로 조속히 핵문제를 풀 것을 북측에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측은 서울 도착 성명에서 ‘외부의 압력이 크고 정세가 엄중할수

록 우리는 더 열렬한 민족관, 더 뜨거운 동족관을 가지고 함께 난국을 타개하자’고 밝히는 등 민족공조를 앞세우며 핵문제 논의를 회피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5면)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는 북측 대표단 환영만찬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성 북측 수석대표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만날 용의를 표할 경우 만나겠다”고 밝힌盧당선자와 북측 대표단의 면담 신사 이부가 주목된다. 한편 남북 군단국은 빠른민 이번주중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 통행문제를 논의한다.

이철화·고수석 기자
chlee@joongang.co.kr

盧당선자·北대표 금명 면담 가능성

대한매일

2003. 1. 22 (수)

北장관급회담 대표 "만날 의향있다"

북한 핵 파문 해소가 남북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21일 개막된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 기간중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북측 대표단 면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영성 북한 내각 책임직사 총장 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일행은 이날 오후 3시10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 기자들과 만나 "어디까지나 북측 대표단 면담을 위해 양자 채널을 우리

업무를 잘 수행한 다음 여유가 있으면, 노무현 당선자가 만나고자 하면 만날 것"이라고 말해 금명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李洛淵) 도당선 차 대변인은 면담 당사 여부에 대해 "오늘밤이 지나면 갑자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면담에는 남북 대표간 논의되는 것이 많지만, 직접 협상하는 것은 적절

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측 대표단이 어느 시점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노 당선자를 만날지, 노 당선자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남측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북측이 '스스로 조속한 시일 안에' 핵 문제를 풀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2면으로▶

盧당선자·北대표 면담 가능성

▷ 1면에서 이날 저녁 회담장인 서울 쉐라톤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김석수(金錫洙) 국무총리 우리 환영만찬사에서 남측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촉구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열리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핵 문제와 별도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차기 정권으로 이어 간다는 차원에서 노 당선자 취임 다음 달인 오는 3월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게 제안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석수 총장은 또박 또박한 "국민행복"이란 문구를 띄운 김석수 총리의 환영만찬에서, 더 박진한 분위기를 가지고 함께 민족을 위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자 한다"고 말했다. 만찬 참석자들은 10여분간 기동 강요하며 "민족 복흥번개를 보다 힘있게 날려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놓으실 것"이라며 "어라고 말했다. 이는 '민족강요' 원칙 위에서 핵 문제를 북-미간의 현안으로 둘러싸 남측과의 핵 논의의 회피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번 회담이 난공을 띠는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잘해봅시다” 21일 저녁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단 환영만찬에서 김석수 총리의 제의로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성 북측 대표단 단장, 김 총리, 정세현 통일부장관. ●사건공용취재단

국민일보

▶ 2003. 1. 22 (수)

北대표 “盧당선자 면담 용의”

장관급회담 북측일행 입국... 나흘간 핵문제 조율

적십자-경의선 실무협등 남북 동시다발 회담

남북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인 김영성 내각 책임직사는 21일 제9차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만나서 면담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면담 여부는 회담이 거의 끝나갈 때쯤 결정될 것"이라면서 "장관급회담

남북 양측 대표단 사이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1일 까지의 회담기간 중 노당선자와 북측 대표단 사이의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석수 총리는 회담장소인 서울 쉐라톤워커히호텔에서 열린 북측대표단 환영만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 김영성 대표단장은 도착식장에서 "외부의 압력이 크고, 정세가 악화될수록 우리는 더 열렬한 민족관, 더 뜨거운 민족관을 갖고 난국을 타개하며 함께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핵문제에 대한 민족공조를 강조, 회담의 진동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측대표단

에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우로 건설사업을 중단하고, 금강산관광 대가 지불 등 현금지원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단 착공 등 남북간의 화해·협력 사업은 핵문제와는 별개로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북측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생각"이라면서 "남북간의 화해·협력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북측이 핵문제에 보다 진취적인 조치를 위해 달라는 노당선자의 뜻을 북측대표단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호 신성호기자 jhpark@knib.co.kr

北核 평화적해결 실마리 찾나

■ 장관회담 '이슈' 점검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 대표단이 북한핵 문제를 해결 강점으로 삼을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났다. 17일인 21일 공식회의는 없었지만 비공식 회담과 만찬 등에서 여운 풀러싸고 엿바자물 냈다. '민족공조'를 키워드로 회담에 나선 북한과, 어떻게든 핵 문제의 기락을 잡고자 하는 우리 정부가 어떤 성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측 대표단, 노무현 당선자 면담 하나

북측 김영성 단장은 이날 노 대통령 당선자와 만찬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노 당선자가 만찬 의사를 표하면'이라고 진제조건을 내었다. 또 '이번에는 장관 회담을 위해 서울에 왔다. 여유가 있다면 (노 당선자와) 만나겠다.'고 밝힌 회담의 분위기를 띄우며, '만찬 후선 여부를 타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측으로선 노 당선자를 직접 만나 향후 대북정책과 북핵문제에 대한 시각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만, 핵 이슈가 지난 부담감으로 부담 요

北 "민족공조" 거듭강조... 전향적 자세 기대

개성공단등 교류·협력사업도 매듭 지을듯

친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표단이 김정일(金正日)위원장으로부터 노 당선자와의 면담 임무를 부여 받았는지는 미지수다.

당신자측도 현재까지 "북한이 먼저 요청하면"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18일 "각식과 체면을 따지지 않겠다."며 북측 대표단과의 면담의사를 밝힌 노 당선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사다. 면담이 이뤄진다면 2차 진제회의가 끝나는 23일 오후 3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핵문제 해결 '대' 민족공조'

북측은 북한에 대해 핵문제를 "스스로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협력의 진전·심화도 힘들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북한의 전향적 입장을 어떻게든 확보토록에 넣어 이를 남북의 이념으로 국제사회에 내보이고자 한다.

그러나 김영성 단장은 이날 6·15 합의의 이행을 유난히 강조하며 "주변 경제에 구애받지 말고 민족 내부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자."며 민족공조를 거듭 강조했다.

핵은 북·미간 문제라고 주장해온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도 우리측과의 핵논의 자체를 피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3대 사업 마무리는 차질없이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유로관광 ▲개성공단 착공식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교류·협력은 남북한 모두가 바라는 사업.

이 사업 전진의 전제조건인 군사분계선(MDL) 통과 문제에 대해 유엔사와 북측이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현 정부 임기 전 3대 사업을 마무리하는 입장을 잡을 가능성도 크다.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 정점

남	북	도
스승로 조속히 핵포기 한으로 북한 핵 비확장(비핵화) NPT가입 촉구 남한 국제사회의 문제	민간기업(인간 자원) 개발을 위한 유엔(UN)과 협력(개발)에 대한 지원과 국제사회의 지원	
"장관회담에 따르면" MDL 통과 유엔사와 MDL 통과	민간기업(인간 자원) 개발을 위한 유엔(UN)과 협력(개발)에 대한 지원과 국제사회의 지원	남북의 문제
연사 유엔과 인장'등 유엔사 요구에 북측의 긴장적자세 촉구		
현정부 임기내 실시 희망	경의선 동해선 연결 철도부 임기내 실시 희망	금강산 유로관광 개성공단 착공식
노무현당선자 취임후 조기에 개최 희망	제10차 남북 장관급 회담	당선자 취임후 조기에 개최 희망

北, 핵은유 "강추위 봄앞에 물리설것"

■ 남북장관급회담 이모저모

서울 세라톤 위커편 호텔에서 개최된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핵 회담'이라고 할라도 좋을 만했다. 의신들의 취재 열기는 예년 때보다 뜨거웠고, 항상 이유있고 화려한 표정을 보여왔던 북측 김영성 단장은 핵 문제를 의식해서인지, 다소 긴장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남북한은 공평한 남에서부터 시종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북측과 핵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우리

측 주장이 맞서 팽팽한 긴장감까지 들었다.

●이날 오후 7시 김석수 총리 우리측의 만찬장에서서도 만찬사를 통한 양측 입씨름은 계속됐다. 박재규 상무장관과 김 단장이 안부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도 눈에 띄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다.

김석수 총리는 만찬사에서 "양반

도 이해와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을 끝 뒤 "이 회담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실마리가 될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6·15공동선언과, 거기에 새겨진 '우리 민족끼리'의 대리는 분단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변을 극복하게 했다."면서

北측 '핵문제' 의식 다소 긴장

南 "핵포기 설득... 일정 고수"

북측이 하나로 굳게 뭉치자고 답했다. 또 "회담에서 북남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기질을 마련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핵문제 타결은 내재한 교류·협력에 적극성을 보일 뜻을 밝혔다.

이날 3시 10분 베이징발 항공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단장은 당일 나산 윤진식 재경부 차관이 핵 문제를 겨냥, "이번 겨울이 매우 추

고 길게 느껴진다. 회담이 잘 돼 추위도 녹이고 봄도 앞당기면 좋겠다."고 하자 "겨울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태동하는 봄 앞에 물리설기 마련"이라고 응답했다. 핵 문제 논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처우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하고 언급을 피했다.

● 지난번 8차 회담에서 일정을 하루 넘겨서까지 북한과 핵 문제로 씨름했던 정부는 이번에는 "일정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예 못박았다. 최대 한 북측에 대해 남한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가감없이 전하며 핵포기 설득을 해나가되, 북측이 '매달리는' 식으로 비치는 행보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장인 세라톤 위커편 호텔은 지난 92년 제7차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11년 만에 남북 회담장소로 사용돼 눈길을 끌었다.

●김수정 이두걸기자 crystal@kdaily.com

매일경제

2003. 1. 22 (수)

“핵포기” “민족공조” 충돌예상

그런 서울에서 막을 올린 9차 남북장관급회담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NPT(핵무기금지조약) 발효선언 이후 북미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남북간 첫 고위급 만남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은 핵문제에 대한 북한 고위층의 직접적인 해법을 들을 수 있어 한국을 통해 이뤄지는 간접적인 북미대화 성격도 띠고 있다.

하지만 회담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김영성 북측단장은 수석대표 관급에서 “주변 정세에 구애받지 말고 민족 내부문제를 잘 해결해 보다 더 민족 내부문제 해결에 크게 이바지하는 회담이 되도록 하자”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번 회담도 공동선언 정신에 맞게 민족이 힘을 합쳐 민족문제를 푸는 데 이바지하는 회담이 되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이번 회담에서 핵 문제에 대해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대신 남북관계 등 ‘민족공조’에 비중을 두었

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을 실무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장관급회담을 비롯해 격심자실무협축(20-22일·금강산), 경의선·동해선 인건 실무협의회(22-25일·평양)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같이 분야별 동시다발 회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데는 북한 파문 이후 달라진 대외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잘 풀고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자”며 “진지하게 협의하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을 섬뜩한 만한 뚜렷한 카드가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북핵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조해 온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지만 북한측에 제시할 ‘당근’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문제에는 소극적 대응을 하면서도 ‘민족공조’ 측면에서 남북경협, 이산가족 등 남북간 교류문제만 논의할 경우 진통이 불가피하다. 핵문제는 한국이 주도

한다는 게 정부 관공원에 한가롭 게 남북교류만 나란다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DMZ 내 군사분계선 개선(MDL) 등과 문제를 의제로 올릴 것으로 전해진다.

이 문제는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번 회담에서 동고할 뜻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경의선·동해선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직공직 등 남북교류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선 MDL 등과 문제가 타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긍정적 자세를 갖도록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DMZ 내 남북관리 구역의 관할권 문제를 놓고 유엔 사무부와 협의하게 대답해 온 북한이 늦어 다음주까지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제개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담에서 남북간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윤상환기자 shyoon@smk.co.kr

서울경제

2003. 1. 22 (수)

盧-北대표 만나게 될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장관급회담을 내서는 북측 대표단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21일 노무현 김영성 북측 단장도 만날 뜻을 내비쳐 일단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성 북측 단장은 “(노 당선자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 노 당선자측에서 먼저 불러주는 형식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이

번에는 남북 상급(장관급)회담을 위해 서울에 왔다. 여유가 있다면 (노 당선자와) 만나겠다”고 밝히 장관급 회담이 진통을 겪을 경우 노 당선자와의 만남을 미룰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당선자의 기본 입장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문제는 남북 양측 사이에 논의할 것으로 인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지난 18일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북측 대표단이 인하면)직접과 체면을 따지지 않고 만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 대표단이 원하면”이라는 단서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노 당선자와 북측 대표단 모두 연담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연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22일 1차 장관급 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교류를 파악한 뒤 연담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핵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행랭이 맞서 장관급 회담이 걸린 분위기로 갈 경우 노 당선자가 북측 대표단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환기자

北核·MDL통행문제 돌파구 기대

■ 남북 장관급 회담 전망

북한이 핵무기금지조약 발효선언을 낸 지 1년이 넘었지만 남북 장관급 회담에 북미와의 협상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NPT(핵무기금지조약) 발효선언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담에 북 핵 문제 해결의 외교적 돌파구 마련(북미와 군사분계선(MDL) 통행)에 대한 남북 양측이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은 새 정부와 북한간 남북대화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슨 내용이 오가나=이번 장관급 회담의 양대 현안은 북핵 핵 문제와 사무장지대(DMZ) 남북 관리구역내 군사분계선(MDL)통과 문제다. 회담에서는 또 MDL 협상 타결을 전제로 해서 경의·동해선 연결 1단계 작업,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등을 ‘국민의 정부’ 임기내인 다음달 24일 이전에 성사시키는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우리 정부는 국내외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북 핵 문제에 대해 북한측에 스스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남북 장관급 회담이 서울에서 열리는 것만으로도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며 “그러나 북 핵 문제는 복잡하고 심각한 사안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경의선·동해선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등 양측 동등로 작용해온 MDL 통행문제의 경우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세현 장관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거듭 이뤄지려면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북핵 역시 북 핵 문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되 협상 등 실무차별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 23일 이후 30일(1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이뤄질 수あれば, 노무현 다음주 중에는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일기자 minil@smk.co.kr



金중리-남북대표 건배

사진공동취재단

21일 서울 웨리톤 위커킵 호텔에서 김석수 국무총리(가운데) 주최로 열린 제9차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환영 만찬에서 김 중리와 남북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오른쪽), 김영성 내각책임참사가 건배하고 있다.

北대표 “盧당선자 만날수 있다”

장관급회담 北측 입국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성(金鎭成) 내각 책임참사는 21일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북측 김 수석대표는 이날 공항에

서 기자들이 노 당선자와 만나겠느냐고 묻자 “그분이 (우리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어 “그러나 이번에는 장관급회담을 위해 서울에 왔다”고 전제한 뒤 “북남 상급회담 앞에 나선 일을 잘 수행하고 여유가 있다면, 또 노 당선자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겠다”고 말해 장관급회담의 성과를 보아가며 노 당선자와의 면담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남북은 이날 서울 웨리톤위커킵 호텔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최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윤철이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인 제9차 장관급회담(21~24일) 일정에 들어갔다. 성동기기자 espri@donga.com

盧 - 김정일 北核교감?

•盧·北대표 면담 이뤄지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와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의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결과에 비대한 관심이 흘러고 있다.

북측 김영성 단장은 21일 입국 기자회견에서 “노당선자가 만날 용의를 표명한다면 만나겠다”면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만남 의향을 표시한바 있다”고 말했다.

노당선자는 지난 18일 KBS TV 토론에서 “격식과 체면을 따지지 않고 만나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화해야 (핵문제) 풀린다”고 밝혔다.

노당선자와 북측 대표단의 회동이 성사될 경우 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노당선자와 김정일(金正日) 위원장 간에 간접 메시지를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셈이다.

노당선자는 북측 김영성 단장과 이 뒤날 단독 요담에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核우려' 등 전달에 새정부 對北정책 탐색할듯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와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복안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노당선자가 북측 대표단을 접견하면 북한 핵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과 핵보유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이고 시시콜콜한 내용보다는 원칙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 대표단도 노당선자와의 면담을 차기 정부의 대북(對北)정책 기조를 읽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만으로도 양국 정상의 의중이 서로 교환되는 셈이어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측의 만남이 핵문제의 실

마리로 연결되리라 기대하기는 무리다. 김단장은 만남을 요청하는 대신 ‘상대방이 요청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특히 “어디까지나 9차 상급회담을 위해 왔다” “우리 임무를 잘 수행하고...”라면서 장관급회담의 주어진 의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남북장관급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면 당선자와 북측 김단장의 회동이 이뤄지더라도 의제적인 접근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이낙연(李洛淵) 당선자 대변인은 “(만남은) 회담진행 상황과 진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회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경계했다.

하지만 극적이면서도 파격을 즐기는 노당선자의 스타일로 미뤄볼 때, 현재로선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윤용기자 woody@kyunghyang.com



南北대표 건배

서울 웨리튼위커펀호텔에서 21일 저녁 열린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단 환영 만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가운데)와 정세현 통일부장관(오른쪽), 김령성 북측 단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北김령성 “盧당선자 만날용의” 장관급회담 개막...核논의 거부시사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김령성 북측 단장이 21일 “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만나자면 만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김 단장은 이날 북측 대표단 20명과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이 같이 말하고 “그러나 우리는 상급 회담(장관급회담) 앞에 나선 일을 잘 수행하고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면담 용의도 표명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핵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고 군사 분계선(MDL) 통과문제에서 양보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석수(金碩

洙) 국무총리도 이날 환영만찬에서 “한반도 비핵화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단장은 핵문제에 대해 “차후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이번 회담에서 의제로 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금강산에서 열린 적십자회담 3차 실무접촉에서 이방웅 남측 수석대표가 2월 하순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은 3월초 면회소 착공, 3월 중순 이산가족 상봉”을 주장,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김기동기자 kidong@segye.com

北核 ‘남북이몽’

서울 장관급회담 전망

21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 당국간 회담이다.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북측에 적극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화해협력의 물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핵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 핵 해법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회담 전망은 불투명하다. 북한이 회담 직전까지 “핵 문제는 북·미 간에 논의해야 할 현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조종한 부국장은 지난 17일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핵 문제는 우리가 미국과 마주 앉아 풀어야 할 남북 사

실무회담을 열어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이번 회담에서 물꼬를 트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 등 남북 경제 협력과 화해의 상징물들이 진행되기 위해선 MDL 통과 문제가 타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전향적 자세를 갖도록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DMZ 내 남북관리구역의 관한린 문제를 놓고 유엔사령부와 협의

하게 대립해 온 북측이 늦어도 다음주까지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간의 긴장감이 어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MDL 통과 문제에 대해 원칙적 합의가 이뤄지면 경의선·동해선 연결 1단계 공사와 개마고원 적공식 등을 국민의 정부 임기 내 추진할 방침이다. 21일 아산에

서 열린 김석수 북측 수석대표가 “당선자가 만난 용의, 허락하면 만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회창 당국자 대변인은 “현재는 정부 차원의 회담 재개 방안을 회담 과정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회담 전망에 따라 면담 시작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회창 기자 chlee@joongang.co.kr

중앙일보

2003. 1. 22 (수)

남·북 “봄 앞당기는 회담될것” 입모아

■ 장관급회담 이모저모

핵 해법등 민감 현안 많아 긴장감 도로 연결등 경험 타결에도 온힘

김대중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장관급회담이자 핵문제 등이 걸린 9차 회담이 21일 서울 대리문위기공 호텔에서 긴장 속에 막이 올랐다. 남북 회담 대표들도 인천공항에서 이뤄진 첫 대면에서 ‘아주 좁고 긴 겨울’(윤진식 남측 차석대표), ‘겨울의 기승’(김령성 북측 단장)이라는 말로 핵문제와 관련한 심정을 계절에 빗대 표현했다. 그러나 남북 모두 ‘봄을 앞당기는 회담’ 또는 ‘겨울은 봄에 물러서는 것’이라며 의지를 나타냈다.

회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무엇보다 핵문제가 회담 분위기를 누르고 있다. 북측 김 단장은 핵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애를러렸다. 대신 만간 때 6·15공동선언

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라고 강조했다. 핵문제를 남북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로 보는 남측의 인식과 시각차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주변 경제에 구애받지 말고 민족 내부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회담이 되도록 하자”라는 그의 다짐도 우리쪽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핵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해결에 협력한다’는 8차 회담 공동보도문의 원론적 합의 수준을 넘어선 구체적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를 것이라고 회담 고위 관계자는 밝혔다. 김석수 총리 주최로 열린 만찬 참석자의 면면도 눈길을 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두 차례나 면담한 박재규 전 통일부장관(1~4차 회담 수석대표), 민간교류 과정에서

김 단장과 친분을 쌓은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등이 김 단장과 같은 탁자에 앉아 북측의 ‘현실적 선택지’에 대해 집중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의선 철도 및 금강산 육로관광로 개통, 개성공단 착공 등 3대 경험 현안 해결에 필수적인 군사분계선(MDL) 통과 문제는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막판 진전 가능성은 있다. 남북 군 당국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한 문서 협의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고, 북측은 나름의 ‘수정안’을 제시하며 남한이 유엔사측과 좀더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전언이다. 남측은 ‘군사실무접촉을 열어 매듭짓자’고 제안했으나 아직 북측의 답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보다는 조금 좁혀지는 느낌이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이 즐겨 쓰는 ‘날리’ 개념을 빌려, 철도·도로 연결 등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임을 설득해 현 정부 임기 안에 매듭을 짓겠다는 생각이다.

이재춘 기자 nomad@hanja.co.kr

世界日報

2003. 1. 22 (수)

盧 - 北대표 회동여부 관심

김령성 ‘만날용의’ 언급 안팎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와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령성(金嶺成) 단장간 만남이 시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단장이 21일 인천공항 도착 직후 “노무현 당선자가 만나자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물론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 데다 ‘상급회담 장관급회담’ 앞에 나선 말을 잘 수행하고 여유가 있으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북한이 핵문제 등 민감한 질문을 놓칠 바키 간다는 점에서 노 당선자와의 만남 용의가 유망해 보인다. ‘준비된 만일’이라는 문장이다.

이낙연(李洛淵)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당선자의 기본입장은 이미 밝힌 바대로 남북 양측(회담

성사뎐 김정일 메시지 전달 가능성 커 인수위 “장관회담 막판까지 가부결정”

실무진) 사이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18일 TV토론에서 “어느 만남이라도 격식과 체면을 따지지 말고 만나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무슨 문제는

풀린다”고 강조했다. 선 면담 제외는 아니더라도 만나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 당선자와 김 단장 만남의 변수는 장관급회담에 달려 있다. 면

담이 성사된다면 그 시기는 회담 막바지인 23일이나 24일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한 인수위 관계자는 “(성사된다면) 장관급회담이 끝날 무렵에 가부간 결정날 것”이라며 “그 이유는 회담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 17일 노 당선자가 장관급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과 심무일에서 만나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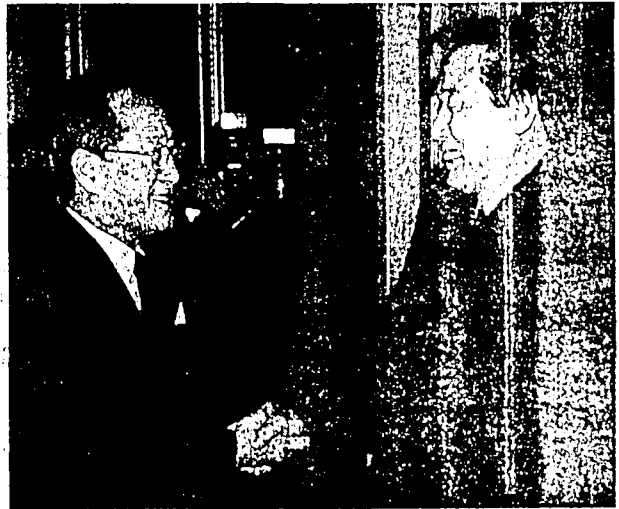
만남이 성사되면 여전히 핵 문제가 주요 논의할 전망이다. 북한이 ‘민족공동체 세세 위 장관급회담을 파격으로 용고갈 경우 노 당선자도 ‘핵’이라는 짐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 당선자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간 첫 간담 대외라는 점에서 북핵시대 해결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도 전달될 가능성이 높어 보인다.

/김기동기자 kidong@segve.com

한겨레

2003. 1. 22 (수)



다시 만난 남북 정세현 통일부장관(왼쪽)이 21일 오후 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는 서울 세라톤위커피호텔에 도착한 김영성 북쪽 단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강동취재단

북대표 “노당선자 만날 용의”

김영성단장등 서울 도착
오늘 장관급회담 열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남북 장관급 회담 북쪽 대표단 집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김영성 내각 참사를 단장으로 하는 제9차 남북 장관급 회담 북쪽 대표단은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해 “노 당선자가 (우리들) 만날 의향을 표시한 것을 안다”며 “만나자면 반발 용의가 있

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장관급 회담을 위해 왔다”며 “우리 임무를 잘 수행하고 여유가 있으면, 또 노 당선자가 만날 용의를 표명한다면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당선자의 기본 입장은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이 문제는 남북 양쪽 사이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북쪽 대표단 접견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당선자 쪽은 통일부와 남쪽 대표단에 북쪽 대표단이 회담할 경우

당선자가 접견할 뜻이 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쪽 대표단은 이날 저녁 7시 회담장인 서울 세라톤위커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김석수 국무총리가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김영성 단장은 만찬사에서 “이번 회담에서 앞으로 북남관계를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기쁨을 마련하도록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쪽의 회담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선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협의하는 동시에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작공 △금강산 육로관광 등 3대 경험 현안을 현 정

부 임기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남북은 이날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직접자회담 3차 실무접촉을 열어 이산가족 면회소 규모와 6차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면회소 규모와 관련해 남북은 2300명 규모를 제시한 반면, 북쪽은 2만명 규모를 주장했다. 남북은 6차 이산가족 상봉 인원을 각각 100명 규모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면회소 규모를 둘러싼 견해차가 커 상봉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박창식 승인제 기자, 김경산광동취재단 wonje@ham.co.kr

한국일보

2003. 1. 22 (수)

北核해법 ‘엇박자’ 예상

■ 남북 장관급회담 시작

北 “민족공조” 南 “조속해결”
北측, 내일 盧예방 가능성
盧·김정일 메시지 오갈수도

21일 시작된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와 북측 대표단의 면담 성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성 북쪽 단장을 인천공항 환영회에서 “노 당선자가 만날 의향 하

면 만나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미 노 당선자가 지난 18일 TV 토론에서 북측 대표단과 만날 의향을 밝힌 만큼 면담 성사는 시간문제다. 정부 당국자들은 23일 제2차 전체회의 이후 북측 대표단이 노 당선자측을 예방하는 형식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면담에서 노 당선자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 간 메시지가 오고 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노 당선자가 공개적으로 면담 의사를 밝혀놓은 만큼 북한 상층부가 대표단에게 모종의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노 당선자 역시 북핵 문

제를 포함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의지를 전달하려고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북핵 특사 파견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회담에서 남북은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북측이 스스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정세현(丁世鉉) 남측 단장은 “이번 회담에 대한 취재 열기가 가장 높다”는 말로 북측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핵 논의 여부에 대한 즉답을 회피, 의제 설정에서부

터 회담이 진전을 거듭 중임을 예고했다. 특히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며 우리측에 대해 대안제출을 요구할 공산이 커 북핵 폐기를 가려낼 북한의 태도가 더욱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작공 등, 금강산 육로관광 등에서는 상당적인 진전이 예상된다. 유엔사와 갈등을 빚어온 군사분계선(MDL) 북위분계에 대해 북측이 최근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기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이후 2년 됐던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이번 회담에 재개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특히 북측이 먼저 경의선·동해선 연결을 위한 실무접촉을 재연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7/경동대기자 chochul@korea.com

'核문제' 언저리서 사전탐색

• 장관급회담 이모저모

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1일 서울 세라톤 워커히호텔에서 3박4일 일정에 들어갔다.

정부는 환영만찬 및 회담에서 북핵 파문을 직·간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압박했지만, 북측은 '민족공조' 주장을 되풀이하며 피해나갔다.

○...김석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환영만찬에서 "이번 회담이 핵문제에 대한 공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측 단장인 김영성 내각 협사는 답사에서 "6·15공동선언과 거기에 새겨져 있는 '우리 민족끼리'의 대의는 2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경이적

정장관 "北선물 큰기대" 김단장 "우리끼리 풀자"

인 사변들을 이룩할 수 있게 하였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의 복잡한 주변정세에서 더욱이 중요하고 사합적인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북측 김단장은 이날 오후 5시 회담장에서 10여분간 회담을 나누며, 22일의 본회담에 앞서 숨고르기를 했다.

정대표는 "걸어가는 길에 몇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잘 풀고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자"며 "북 대표단이 선물을 많이 가져왔을 것"이라고 은근히 압박했다. 이에 김단장은 "(북한 속담에) '대로 한길 노래로 가라'는 말이 있는데, 곤란이 막아서더라도 뜻

을 급하지 말고 가던 길이 열린다는 뜻"이라며 "주변 정세에 구애받지 말고 민족 내부문제를 잘 해결하자"고 역의 '민족끼리' 주장을 폈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 1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영접 나온 윤진식 재경부 차관의 안내로 공항 귀빈실로 옮겨졌다. 김단장은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차후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으나, 윤차관은 "핵문제는 국제적인 중요 관심사인 만큼 이번에 해결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차관이 "회담이 잘해서 추위를 녹이고 봄도 앞당기도록 하자"고 말을 꺼내자, 김단장은 "공동선언 장신에 맞게 민족이 힘을 합쳐 민족문제를 푸는 데 이바지하는 회담이 되도록 하자"고만 했다. 이영욱기자

대한매일

2003. 1. 22 (수)

■ 남북대표 힘담

남북 회담사흘 통틀어 '말'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남측의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김영성 내각협사는 21일 오후 예의 유려한 말 솜씨로 '핵 회담' 전초전을 치렀다. 다음은 10분간 이어진 힘담록.

●정 오시나라 수고 많았다. 비협장에서 보니까 "근본을 잘 세우면 길 열려" 신수가 "곤란 생겨도 웃으며 가자" 할 때

●김 율허가 2003년인데 우리 조상들은 3자를 김수로 여긴다. 새해들어 건강상태가 좋아졌다. 북남 상급회담 열차를 생방 대표가 잘 몰아와서 민족사에 아로 새길 것이 많았다. '국민의 정부' 로선 마지막이지만 6·15정신을 잘 살려 통일의 길을 여는 데 기여하는 회담이 되도록 힘쓰자.

●정 걸어가는 길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잘 풀고 국민의 우

려를 불식시키자. 국제적으로도 환영받는, 국제적으로 평강히 관심이 많은 회담이다. 취재 열기가 최고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머리를 맞대 합리적으로 팔 팔자.

●김 (북한 속담에) '대로한길 노래로 가라.'는 말이 있다. 곤란이 막아서더라도 뜻을 급히 말고 가던 길이 열리므로 웃으면

서 가자는 뜻이다. 주변 정세에 구애받지 말고 민족

내부문제 해결에 크게 이바지하는 회담이 되도록 하자.

●정 근본을 잘 세우면 길이 열린다는 말이 있다. 민족공조를 위해서라도 여러 문제들을 일단 진지하게 협의하고 방법을 찾아보자.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이다.

●김 근본을 확실히 세워 10차, 11차 차수를 거듭해 나가는 데 장애가 없도록 하자.

이두걸기자

서울경제

2003. 1. 22 (수)

北대표 "盧 만날용의" 남북 장관급회담 시작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성 내각 책임협사가 21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만날 용의를 표할 경우 만나겠다"고 밝혔다. 김 북측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권력기사 5면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은 21일 만찬을 시작으로 4일간 서울 세라톤 워커히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김 내각 책임협사가 인족 수석대표로 나서 북한 핵문제 등을 공명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核 이견불구 대화는 텃다

北, 장관급회담서 첫 공식언급

남북은 22일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예상했던 대로 핵문제를 풀어나갈 공통분모를 찾지 못했다. 양측이 기존 입장을 상대방에게 재확인해주는 것 이상의 성과는 없었다.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기초발언에서 북측에 분명한 핵무기 개발 계획포기 선언, 핵동결 해제조치 원상회복,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철회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 10일 NPT 탈퇴를 선언할 당시 핵무기 제조의사가 없고 이를 검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실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남측은 특히 핵문제 해결 없이는 향후 경제협과 교류·협력 등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측의 진향적인 조치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북핵문제의 유연안보리 회담 움직임 등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전담하면서 북측이 스스로 조속히 해결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대표 '두 표정' 남북 장관급회담 정세현 남측수석대표(왼쪽)와 김영성 북측대표단장이 22일 서울 워커히호텔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

'북-미간 논의' 입장 바꿔... 南역할 가능성 北, 민족공조 강조... 南, 핵-경협 병행협의

그러나 북측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으며, NPT 탈퇴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압력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북측 김영성 대표 단장은 기본발언을 통해 "미국은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핵선제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고조시키고 북남사이의 화해·협력사업에 노골적으로 간섭하여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핵문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그는 "북남은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끝까지 고수해 전쟁의 위험을 막아야 한다"며 핵문제 해결에 있어 민족공조를 거듭 강조했다.

북측은 핵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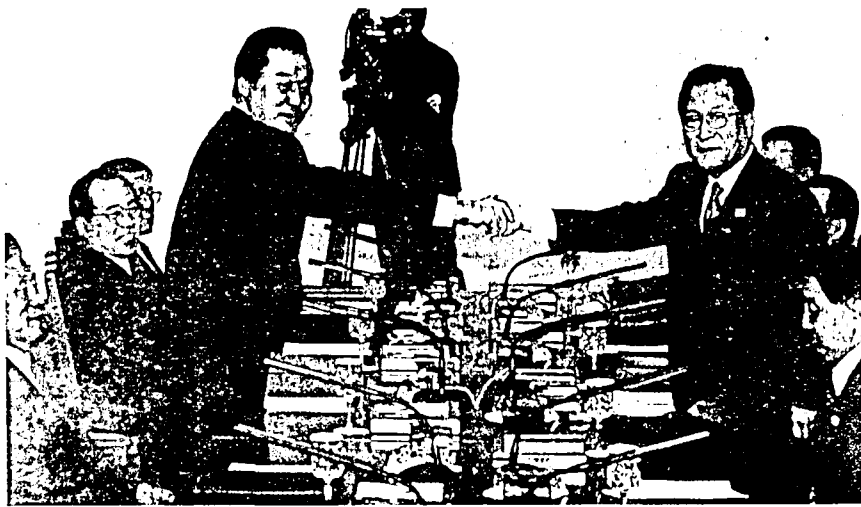
남측 요구에 대해 "북남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해 자주적대(쫓대)를 확고히 세우고 북남사이에 합의된 문제들을 중단없이 계속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문제와 남북관계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얘기다.

남북의 이, 같은 시각차 때문에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등 남북 3대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없지 않다. 이 사업들의 선결조건인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내 민간인의 군사분계선(MLD) 통행문제도 걸림돌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문제를 남북대화 테이

합에 얽었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핵문제는 북-미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던 점을 볼 때 남한을 지렛대로 핵문제 돌파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핵문제를 공개 언급한 것은 남북대화를 깨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측 이봉조 대변인(통일부 통일정책실장)도 브리핑에서 "북측이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논의의 토대는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대변인은 23일의 2차 전체회의에서도 핵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대변인은 아울러 "핵문제 실천방안과 경협문제는 선후의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핵문제와 병행해 남북간에 협의할 문제도 같이 논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선 핵문제 해결, 후 경협"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자세다. 박주호기자 jhpark@kmib.co.kr



◇南北대표 약속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에서 우리 측 정세현 수석대표와 북한측 김정성 단장이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악수할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9차 남북장관급회담 양측 입장

남한측	구분	북한측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 시일이 원안 재검	핵문제 기본인식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 핵 실험 재공격 등으로 전쟁 위협을 한 것이 원인
핵개발 계획 포기, 핵문제 대해 원상복구, NPT 탈퇴 철회,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핵무기 만류 의사 없음을 강조	핵문제 해결방안	남북한이 민족공조로 미국에 대항해야
동-서제안 실시도 2월 중 연구하고 개성공단 빨리 착공하는 등 합의사항 체결이 이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유모관광	미국의 간섭·방해로 지연되고 있는 만큼, 민족공조로 외세에 맞서 모든 협력사업 적극 추진

朝鮮日報

2003. 1. 23 (목)

“민족공조로 美國에 대처”
北, 공개 선전戰

장관급회담 표정

南 “核포기 요구”

북한은 22일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9차 남북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에서 핵 문제와 관련, 남북한의 '민족공조'로 미국에 대처해 나가자고 주장했으며, 우리 측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측 김정성 단장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는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압살 책동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라며 “북남 쌍방은 민족공조로 전쟁의 위험을 막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또 “외세에 의한 평화의 유린은 북쪽에만 재난(災難)으로 되지 않으며 남쪽에도 똑같이 재난으로 된다”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북과 남의 전 민족 대 외세와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측은 “우리의 신군(先軍)정치가 없었다면 조선반도에서는 이미 열백 번도 더 전쟁이 터졌을 것”이라며

“외세에 농락당하면서 동족을 해치는 것과 같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미공조로 북한 핵에 대처하고자 하는 우리 측에 대해 남북한이 함께 미국의 '북한 핵포기 압력'에 대항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북측은 기조발언에서 '우리 민족끼리'란 말을 일곱 차례나 사용했다. 북측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조발언을 드러낼 목적으로 처음부터 공개 회의를 주장했으며, 우리 측의 반대로 회의가 비공개로 되자 회의 후 기조발언의 내용조차 확인해 주지 않던 관행을 깨고 발언문을 통째로 남측의 한 방송기자에게 전달했다. 북측은 이 밖에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 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우리 측 정세현(丁世鉉) 수석대표는 “북한 핵 문제가 한 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 협력에 장애를 조성한다”며 유감을 표시하면서, “북측이 핵개발 계획 포기를 선언하고 이른 시일 내 핵동결 해제 조치를 원상복구하며 NPT 탈퇴 선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남북한은 전체회의에 이어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핵 문제와 관련한 입장 차이를 절충하고, 개성공단 착공과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인희기자 ginko@chosun.com



속내 뽐내기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린 22일 서울 광진구 웨리본워커히호텔에서 정세현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한 김정성 단장이 상반된 표정으로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

北 “核무기 만들 의사 없다”

장관급회담 금강산면회소 4월 착공 합의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김정성 북측 단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 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9면 김 단장은 22일 오전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9차 남북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는 미국의 압살책동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는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 남북화해와 협력에 장애를 조성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측은 이날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열린 직십자회담 3차 실무 접촉에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4월 착공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2월 1일)을 계기로 한 6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2월 20-25일 남북 이산가족 각 100명이 순차적으로 금강산을 방문해 이루어지게 됐다.

양측은 금강산 지역의 조포마을에 면회소를 착공해 1년 내 완공키로 하고 2월 10일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 첫 회의를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윤상환기자 shyoan@mk.co.kr

마주앉은 南北 '核' 평행선 확인

• 장관급회담 전망

'MDL 통행'은 의견접근 기대 '核' 맞물려 타결여부 불확실

남북한은 22일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양대 현안인 핵문제 및 비무장지대(DMZ) 남북관리구역내 군사분계선(MDL) 통과문제를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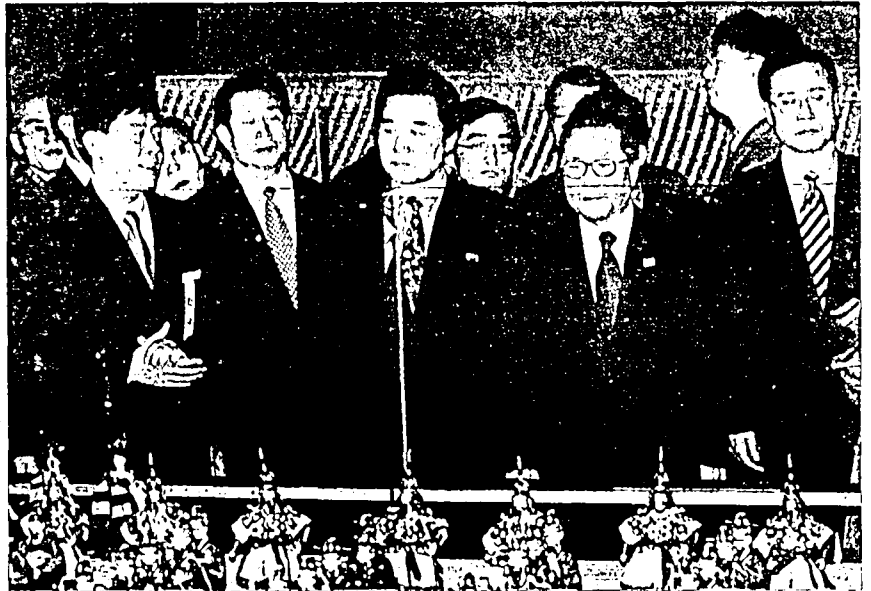
핵문제는 양측의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지만, MDL 통과문제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을 낳고 있다. 두가지 현안이 상호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남북문과 비관론 어느 한가지로 회담 전망을 저단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시각차 드러낸 핵문제=남북은 회의 기초발언을 통해 핵문제에 대한 각기 입장을 밝혔다. 예상대로 핵문제를 바라보는 남북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남측 정세현(丁世鉉) 수석대표는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화해·협력에 장애를 조성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한 뒤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핵무기 개발 계획 포기 선언 ▲핵동결 해제 조치 원상회복 ▲핵화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철회 등을 촉구했다고 남측 이봉조(李鳳朝) 대변인이 전했다. 또 북측이 지난 10일 NPT 탈퇴선언 당시 '핵무기 제조의사가 없음을 검증할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북측 김영성 단장은 "한 시기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진정위협은 민족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고 있다"며 "민족공조를 통해 진정위협을 막자고 주장했다. 김단장은 "핵무기 개발 의사는 없다"고 밝힌 뒤 미국이 만든 '핵의혹'이라는 유령, '그 무슨 핵문제를 들고 시시각각 끌어오는 미국의 진정위협' 등의 표현을 써가며 대미 비난전을 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북대표단을 만난 의사가 있다는 당초 입장에서 만나지 않기로 선회한 것도 핵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도 있다. 회담전 북한이 핵문제를 조-미간 논의사안이라고 뜻밖고 나서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 사진공동취재단

민속박물관 관람

장관급회담 대표단의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오른쪽 두번째)와 김영성 북측 단장(사번째)이 22일 오후 점심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을 관람하고 있다.

관배했으나, 이날 대화의 장으로 나온 것만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전망 밝은 MDL 통행=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원칙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핵문제가 어떻게 걸려나오느냐에 따라 MDL 문제의 최종타결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MDL만 떼어냈을 때 남북은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 물꼬를 트고 구제 사안을 군사심의회담으로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남측은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등 경제협력 3대 사안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MDL 통과 문제가 선타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측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

남북은 MDL 통행 문제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경의선·동해선 1단계 공사 준공식과 개성

공단 착공식 등을 현정부 임기내인 다음달 24일 이전에 성사시키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2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2차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 협의한다.

이용욱기자 wook@kyungbyong.com

경향신문

2003. 1. 23 (목)

世界日報

2003. 1. 23 (목)

北 "核무기 안만든다"

장관급회담 첫날 南 "核포기" 촉구

남북은 22일 서울 세라타워호텔 호텔에서 열린 제9차 장관급회담 첫날 회의에서 핵문제를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등 팽팽하게 맞섰다.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핵 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 남북 화해·협력에 장애를 조성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남측은 이어 ▲핵 개발계획 포기 ▲핵동결 해제 원상회복 ▲핵화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제사회가 신뢰할 만한 '실천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이봉조(李鳳朝) 회담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는 핵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이 문제와 병행해 남북경협 문제 등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기동기자 kidong@segye.com

"北대표와 면담 불필요" 盧, 정부판단 맡기기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22일 남북장관급 회담 북측대표단 면담 여부와 관련, "만나겠다고 하면 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통일부장관의 판단에 맡겨졌다"고 말했다.

신계륜(申溪輪) 당선자 비서실장은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고 있

는데 당선자가 북측대표를 만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민주당사를 방문, 지도부와 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두산중공업 노조원 분신사망사건 등 노사분규와 관련, "제일 민감하고 취약한 부분이 노사문제로 회사측의 어려움도 알고 있으나 사측이 적극 나서 포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남규기자 coolman@segye.com

南 “핵 해결안되면 협력차질” 北 “남북관계와 연계 말아야”

장관급회담 北核 시각차

남북한은 22일 서울 세라톤 위커펀 호텔에서 제9차 장관급회담 1차 전체 회의를 갖고 북한핵 문제 등에 관한 협

의를 벌였다. > 관련기사 3면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는 기초발언을 통해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 화해·협력에 장애를 조성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핵 문제가 해

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 관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수석대표는 또 북측이 분명하게 핵개발 포기를 선언하고, 핵동결 해제 조치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철회하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수석대표는 최근 북한이 핵무기 제조 의사가 없으며 이를 검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밝힌 점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성 북측 대표단장은 기본발언을 통해 “우리는 NPT에서 탈퇴하더라도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다”면서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오직 전력 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표단장은 특히 “핵 문제를 들고 시시각각으로 돌아오는 미국의 전쟁 위협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을 굴복시키려는 악의 야망의 산물”이라며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민족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대표단장은 “외부의 압력이 필수적이지 않더라도 추진 중인 모든 협력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핵 문제와 별도로 남북 경협과 교류·협력 사업을 계속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23일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도 남북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문 작성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주호 맹경한기자 jhpark@kmib.co.kr

국민일보

2003. 1. 23 (목)

한국일보

2003. 1. 23 (목)

北 “핵무기 안만든다”

장관급회담 전체회의

남북은 22일 서울 세라톤 위커펀 호텔에서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 전체회의를 갖고 북한 핵문제와 군사분계선(MDL) 통령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 관련기사 5면

북한측은 이날 기초발언에서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은 제네바 합의 무효화와 중유공급 중단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봉초(李鳳朝) 남측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대해 남측은 분명한 핵무기 개발 포기선언, 핵동결 해제조치 원상회복, NPT 탈퇴선언 철회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와 북측 대표단의 면담과 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회담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23일 오후에 북측 대표단이 노 당선자를 예방하는 형식으로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경향신문

2003. 1. 23 (목)

盧·北대표 면담 불발 가능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와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간 면담이 불발에 그칠 것 같다. 양측이 적극적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계륜(申溪輪) 당선자 비서실장은 22일 “서로 꼭 만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만나지 않게 되기가 쉽다”고 말했다. “우리쪽도 지쪽도 만나겠다고 하면 만날 수 있다”는 거지, 꼭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도 했다. 그는 “모든 만남에 대해 적극적인 노당선자가 ‘만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일 뿐 너무 과하게 나갈 필요는 없다”며 “장관급회담이 개최되고 있는데 당선자가 북측 대표를 만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노당선자측이 북측 대표단과의 회동에 선을 그은 것은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1일 밤 북측 대표단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북측이 별다른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뜻에 달려 있다고 판단해 운을 뚫으나 별 진척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장관급회담이 진행되는 마당에 북측 대표단이 당선자를 찾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을 뿐더러 현재로서는 성과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정부측 지적

도 영향을 줬다는 후문이다.

다만 ‘인사’ 차원의 면담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10차 장관급회담을 비롯해 향후 당국회담을 노무현 정부가 이끌어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양측 모두 ‘차나 한잔하며 얼굴 익히는 정도’는 나쁠 것도 없기 때문이다.

최재영기자 cjoyoung@kyunghyang.com

‘모양새 안 좋고 성과 기대안’

인사차원 만남은 배제못해

南 “NPT 탈퇴 철회해야” 北 “핵무기 만들 의사 없다”

장관급회담 1차회의

남북은 22일 오전 서울 세라톤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제9차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 기초발언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각각 공식 거론하고 나섰으나 뚜렷한 시각 차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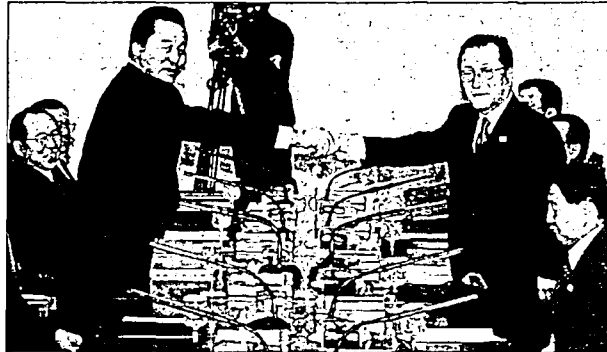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는 이날 기초발언에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분명한 핵무기 개발계획 포기 선언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 철회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령성 북측 단장은 핵문제는 미국이 대북 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하고 제네바합의와 NPT 등 각종 조약 및 합의 정신을 묵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록 NPT를 탈퇴했지만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핵문제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가 두드러지는 했지만 그동안 핵문제가 ‘북·미간 논의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북측이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자세 변화로 평가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22일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에서 남측 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북측 김령성 대표단장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虛·北대표 면담 불투명”

신계륜 당선자비서실장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신계륜 비서실장은 22일 노 당선자의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면담 가능성에 대해 “꼭 만나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만나지 않게 되기가 쉬운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모든 만남에 적극적인 노 당선자가 만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일 뿐 과하게 나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한겨레

북 “핵무기 만들 뜻 없다”

남, 핵해결 안되면 남북관계도 차질 지적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

남북은 22일 서울 세라톤 워커히호텔에서 9차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기사 3편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는 회의 기초발언을 통해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북측에 △분명한 핵 개발 포기 선언 △핵동결 해제 조치 원상복구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 철회 등을 촉구했다고 이봉조 회담 대변인이 밝혔다. 정 수석대표는 “최근 북측이 핵무기 제조 의사가 없고 별도 검증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김령성 북측 단장은 기본발언에서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며, 지난 10일 북측 정부 성명 내용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길은 오로지 민족공조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북측도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논의의 도대는 마련됐다”며 “북측의 구체적인 실천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현실화에 필수적인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측은 “진행 중인 경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고 밝혔고, 북측은 “외세의 방해책동”을 거론하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비무장지대 경의·동해선 연결을 위한 남북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22~25일)도 평양 고려호텔에서 시작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장관급 회담선 '탐색전'

남·북 핵관련 제입장 되풀이

북 "최악까진 안갈 것" 눈길

22일 서울 개라문위개발 호텔에서 열린 9차 장관급 회담 1차 전체회의에서 드러난 남북의 기본 방향은 예상대로였다. 남쪽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쪽의 '실질적 조치'를, 북쪽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회의 내용을 전한 이봉조 남쪽 회담 대변인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다. 회담 관계자는 "쌍방의 입장 차이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나쁜 출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평가는 북쪽 대표단이 핵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대변인은 "일단 논의의 도대는 마련됐다"고 말했다.

물론, 회담 결과를 전망하기는 어렵다. 북쪽은 1차 전체회의의 직전 공개 회의를 주장한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남쪽 회담진에게 김령성 단장의 기본발언문을 통째로 건네주는 '물출 행동'을 했다. 북쪽 대표단이 회담 한 장에서 기본발언문을 공개하기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과거 북쪽은 회담 진행이 불만이 있을 때 이런 행동을 보인 적이 있다. 그러나 남쪽 회담 관계자는 "원본적 입장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고 심각하게 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첫날 회담에서 북쪽은 '핵의혹' 논란을 미국에 의해 초래된 '엄중한 난관', '참예한 정세'로 규정하며 '민족공조'를 강조했고,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와 관련해서도 '외세의 방해력



남북 장관급회담 남쪽 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북쪽 단장인 김령성 내각 책임참사(가운데)가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웃으며 박수치고 있다.

동'으로 규정했다. 남쪽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핵개발 계획 포기선언을 포함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상황이 비관적이지만 한 것만은 아니다. 21일 저녁 호텔에서 열린 만찬 때 북쪽 관계자는 "미국과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게 공화국(북한)의 입장"이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남쪽의 한 참석자가 전했다. 남쪽 회담 고위 관계

자는 '최소한 북쪽이 핵무기를 만들 뜻이 없다'는 수준 이상의 구체적 언급을 공보도문에 담을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머리를 맞대었다는 '작지 않은 의미'를 넘어 구체적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훈 기자

한겨레

2003. 1. 23 (목)

경향신문

2003. 1. 23 (목)

北대표 "핵무기 개발뜻 없다"

장관급회담... 丁대표 '실패조치' 촉구

北 '민족공조'에 南 '남북관계 차질' 경고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참석한 북쪽 대표단의 김령성 단장은 22일 "우리는 비록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하더라도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5면

김단장은 이날 서울 개라문 위개발 호텔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기초 발언을 통해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 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천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단장은 또 "현 시기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위험은 민족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고 있다"면서 "북남 쌍방은 자주적 대의를 확고히 세우고 민족문제를 꺼여들려는 외세의 기도를 단호히 물리쳐야 하며, 경제협력사업을 비롯해 북남 사이에 합의된 문제들을 중단없이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쪽 대표단의 정세현(丁世鉉) 수석대표는 기초발언에서 "핵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남북 화해·협력에 장애를 조성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

고 지적한 뒤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될 경우 남북관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이봉조(李鳳朝) 대변인이 전했다.

정대표는 또 ▲핵개발계획 포기 선언 ▲핵동결 해제조치 원상복구 ▲NPT 탈퇴선언 철회를 요구한 뒤 핵무기 제조 의사가 없다는 북쪽의 주장을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남쪽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북핵문제가 유엔 안보리 등 다자협의 체로 넘어갈 경우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북한의 개혁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

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쪽은 아울러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등 3대 현안사업을 현 정부 임기내에 성사시키기 위해선 비무장지대(DMZ) 남북관리구역내 민간인의 군사분계선(MDL) 통행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북쪽의 진화적 조치를 촉구했다.

남쪽은 차기 정부 출범 후인 오는 4월에 제10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 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DMZ내 경의선·동해선 연결을 위한 남북신무협의회 제2차 회의가 이날부터 평양 고려호텔에서 시작했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核검증’ 실천 조치 촉구

대한매일

2003. 1. 23 (목)

■ 장관급회담 북핵조율 안팎

“민족의 기대와 관심이 큰 만큼 오늘 첫 회의는 쌍방의 입장을 대외에 알리는 방향에서 공개적으로 합시다.” 제9차 남북 고위급 회담 1차 전체회의에서 북한은 이례적으로 공개회의를 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우리측 김세현 수석대표가 “관례에 따라 비공개로 하자.”며 북측을 설득, 결국 기자회견을 물론 채 회의를 진행했다.

북측은 이날 10쪽에 달하는 기본 발언문을 제시하고, 회의가 끝난 뒤엔 기자들에게 일일이 돌렸다. 발언문 핵심은 6·15공동선언의 ‘민족공조’ 정신으로 ‘외세의 기도’를 단호히 물리쳐 교류·협력을 중단없이 해나가자는 것이다. 발언문에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가 13차례나 반복됐다.

그동안 핵 문제가 불거진 뒤 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선전전을 피운 북한이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핵동결 해제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논리 등을 남한과 국제사회에 알리려 했다는 분석이다.

핵문제 해결이 없으면 남북 관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리측 주장에 대해 북한은 “외세가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때에 모처럼 마련된 화해와 협력의 길을 버리고 민족끼리 대결하는 것은 민족 자멸행위로 될 뿐”이라고 맞섰다.

NPT 탈퇴 선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핵무기 제조 의사가 없고, 별도의 검증을 통해 이를 밝히겠다고 한 데 대해 국제사회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지만 북측은 핵 문제는 미국의 압살 정책이 만들어낸 ‘핵의혹’ 유령이라며 미국의 대북 정책을 거듭 비난했다.

■ 장관급회담 이모저모

22일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핵’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힌 북측 대표단은 전날에 이어 시종 ‘민족공조’ 논리에 집착했다. 방한 중인 존 할턴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방향과 이에 대한 한·미간 합의 사실을 밝히자 남북 대표단 모두 회담에 미칠 영향을 두고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 ‘민족공조’를 키워드로 이번 회담에 참가한 북측의 김영성 단장 등은 10쪽짜리 회담 기본 발언문을 나눠 주면서도 민족공조 원칙을 적용, 눈길을 끌었다.

회의 초반 공개회의를 요구했다가 우리측이 반대, 기본 발언문을 공개리에 낭독하지 못한 북측 대표단은 회의 직후 기다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린 22일 오후 정세현(앞줄 오른쪽부터) 남측 수석대표와 김영성 북측 단장 등 남북대표단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을 둘러보고 박수를 치고 있다.

● 김영국기자 Daunso@kdaily.com

“쌍방 입장 알리자” 北 공개회의 제의 北 발언문 ‘우리 민족끼리’ 단어 13차례

북한은 “NPT를 탈퇴하더라도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 활동은 오직 전력 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0일 NPT 탈퇴시 성명 내용과 같다.

특히 남한 대중을 겨냥한 발언이 두드러졌다. “외세의 오만한 태도는 남녘의 여러 분들이 더욱 갈심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버리고 동족 사이 대결과 민족 분열로 나가겠느냐,

아니면 화해와 협력의 손을 잡고 자주통일의 길로 나가겠느냐.”고 말했다. ‘민족공조’와 ‘외세공조’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논리인 셈이다.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끌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측의 이같은 분위기로 볼 때 어느 정도 전향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리던 남한의 한 기자에게 “내신만 돌려라.”며 슬쩍 건넰었다. 기자들은 외신기자들에게는 자료 배포를 차단한 채 각자 한 부씩 돌렸고, 이에 외신 기자들이 내신 기

北 시종 ‘민족공조’ 논리 강조 숫자 ‘3’ 화제로 상대 의중읽기

자들을 찾아 발언문을 읽어보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북측의 발언문 유출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비공개 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를 어겼다.”며 상당히 불쾌해했다.

● 남북 장관급회담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서울 잠실 롯데월

드 민속박물관을 칸판했다.

북측 김 단장은 남측 정세현 수석대표와 나란히 박물관에 입장한 뒤 방명록에 ‘우수한 민족공조를 적극 살리 나가자.’는 글을 남겼는데, 처음에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 단어를 추가했다.

● 회의에서 양측 수석대표들은 숫자 ‘3’을 화제로 상대방 의중읽기에 주력했다. 김 단장은 “조상들은 석 삼(三)을 길수(吉數)로 여겼다.”면서 “단군 탄생일도 10월3일, 9차 회담의 9도 삼이 세번 합한 것이다. 조국통일 3대 원칙도 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정 수석대표는 핵문제를 겨냥, “국제사회가 걱정하는 문제도 풀릴 수 있도록 회담을 잘 운영, 강원의 업을 이어 북녘이 하나가 자.”고 말했다. ● 김수정기자

北 “외세나 민족공조나” 택일 요구

■ 남북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

북한은 22일 9차 남북장관급 회담 첫 전체회의에서 예상대로 외세와 민족공조 중 택일할 것을 남측에 요구했다. '외세에 능동당하면서 동족을 해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북측 기본방안에선 비장감마저 느껴졌다.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 핵 위기를 풀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사실상 경고성 메시지까지 던진 셈이다. 그 만큼 이번 회담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다만 북한은 그 동안 '북미간 관계이기 때문에 남한이 끼어 들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으며 남측을 '3차

취급해 왔던 핵 문제를 이날 사실상 처음으로 본격 거론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사유를 장황하게 해명하기도 했다. 핵 문제의 의제 선정 여부를 놓고 남북이 시종 일관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예상됐

던 회담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은 예고한다. 북측은 더 나아가 '핵 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이어 '핵 문제 해결에 필요한 노력을 해달라'고 남측의 역할을 인정하기도 했다.

북측의 자세 변화는 물론 선전전의 성격이 강하다. 북측 김영성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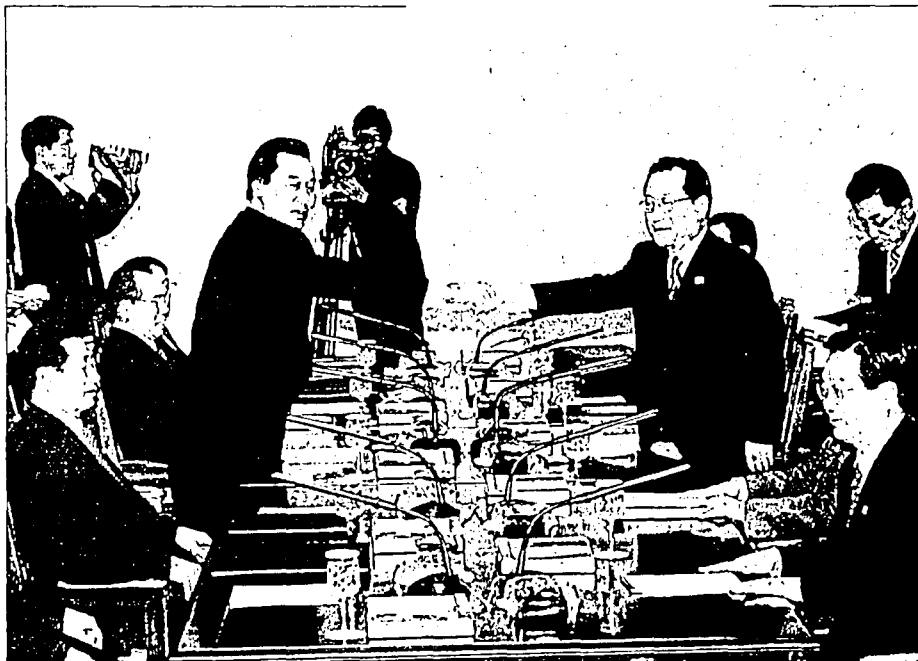
장이 "쌍방의 입장을 대외에 알리는 방향에서 공개적으로 하자"고 말한 데서 그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민족공조의 연장선상에서 남측과의 연대를 통해 핵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속내인 것이다. 한미공조와 민족공조의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남측을 압박,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때문에 남측은 핵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북측이 기대하는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남북관계도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로 차단막을 쳤다. 북측이 핵 위기를 해소하지 않는 한 민족공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측 관계자는 "북측이 핵 문제를 제기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핵 문제 해법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핵 문제에 대해 보다 진전된 자세로 나올 때 북측 대표단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 면담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면담에 집착하는 것은 자칫 분말을 전도할 수 있다"고 신을 그었지만, 북한의 핵 문제 입장이 면담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 당선자 면담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北, 핵 첫 거론 '南역할'인정 불구 “南을 압박, 회담 유리하게” 의도 南 “核해결돼야 경제 협력” 차단



정세현(오른쪽) 남측 대표와 김영성(왼쪽) 북측 대표 등 남북 대표단이 22일 서울 세라타워커힐 호텔에서 9차 남북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를 갖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일보

2003. 1. 23 (목)

北 “회담공개로” 南 “관례대로”

■ 회담 이모저모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22일 북측은 북측 회담 공개를 요구해 남측 대표단을 당황케 했다. 김영성 북측 단장은 전체회의 시작 직전 '새해 첫 북남회의에 민족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며 회담을 공개하자고 제안했고, 표징이 굳어진 남측 정세현(丁世鉉) 수석대표가 관례에 따르자며 비공개 회의를 요구해 심황은 일단락됐다.

북측은 회의 종료 후에도 '민족공

조'를 수차례 강조한 A4용지 10매 분량의 기초발언문을 기자회견에 배포하는 등 '선전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북회담의 관행은 기초발언문 전문을 상대측 언론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었다.

회의 초반에는 남북 수석대표들이 '양해'를 화제로 탐색전을 벌였다. 정 수석대표가 '1991년 양미 해는 비핵화 공동선언과 기본합의서 타결 등 남북관계가 자리를 잡는 해였다'며 '양미 해인 올해에 남북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고 말하자 김 단장은 '아침에 오늘 회담이 잘 될 거라 생각했다'고 회답했다.

양측은 그러나 핵문제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정 수석대표가 '국제사회가 걱정하는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잘 풀어가자'며 최대 현안이 북핵 문제임을 내비치자 김 단장은 '민족간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며 민족공조의 논리로 맞받았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北“核무기 만들 의사 없다” 南“核포기 분명히 밝혀야”

남북장관급 회담

김영성(金靈成) 9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은 22일 “북한은 핵무기류 만들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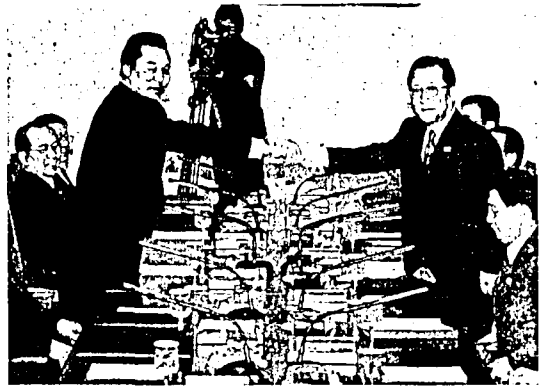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라톤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탈퇴는 미국의 압살책동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지위적 조치”라고 주장한 뒤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오직 전력 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측 대변인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북측도 핵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만큼 논의의 토대는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북측은 분명하게 핵개발 계획 포기 선언을 하고, 핵동결 해제 조치를 원상복구하고, NPT 탈퇴 선언을 철회하라”고 북측에 촉구했다.

정 대표는 또 최근 북한이 핵무기 제조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은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북측은 이날 쌍방의 입장을 대외에 알리자며 당초 비공개회의로 하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공개리에 하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정세현(통일부장관 오른쪽)과 북측 대표인 김영성 내각책임참사가 22일 회담장인 서울 세라톤 워커히 호텔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갖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지고 기습적으로 제의해 남측 대표단을 당황케 했다.

북측 김 단장은 “자, 이제 회의를 시작합시다”라는 남측 정 수석대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개회의를 전격 제안했다.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마지막 장관급회담이고 새해 들어 처음 하는 남북회담에 대한 민족의 기대와 관심이 큰 만큼 첫 회의는 쌍방의 입장을 알리는 차원에서 공개하자는 것이었다.

많은 취재기자들 앞에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당초의 비공개 약속을 뒤집자 남측 정세현 대표는 당황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관례대로 하자. 기자들도 준비가 안돼 있을

것이다.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된다”라며 비공개회의를 고집했다. 정 수석대표의 표정이 굳어지자, 김 단장은 “정 선생 뜻이 그렇다면 비공개회의로 합시다”라며 제의를 거둬들였다.

북측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 밖에 있던 남측 기자들에게 A4용지 10장 분량의 북측 단장 기조발언문 전문을 건네기도 했다.

북측의 기습적 공개회의 제안은 북한핵 문제가 본격화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민족공조의 당위성을 맘껏 부각시키고 남측의 핵문제 거론 수위를 낮추기 위한 선제 카드’였다는 분석이다.

성동기기자 esprin@donga.com

北“核무기 만들 의사 없다”

장관급회담서 재확인

남북은 22일 오전 서울 세라톤워커히 호텔에서 제9차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를 갖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을 공식 거론했으나 뚜렷한 시각차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관련기사 5면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는 이날 기조발언에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분명한 핵무기 개발계획 포기 선언 ▲핵동결 해제 조치 원상회복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 철회 등을 촉구했다.

또 최근 북한이 핵개발 의사가 없

다고 밝히고 이질 별도의 검증요를 통해 입증해 보일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가 신뢰할 만한 ‘일관적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성 북측 단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핵문제는 미국이 대북 핵선제공격을 경색화하고 북·미 제네바합의 등을 목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족공조로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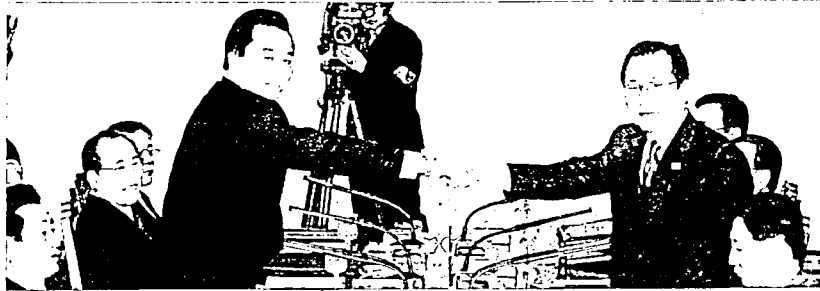
그는 또 “비록 NPT를 탈퇴했지만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고 기존 북한 정부의 입장을 재

확인했다.

북한이 이날 기조 발언에 핵문제 답답 남측 회담 테이블에 올린 것은 나름의 의미있는 자세 변화란 명가다. 특히 김 단장은 이날 “핵문제 해결에 남측이 필요한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남북 수석대표간 접촉과 23일 2차 전체회의의 결과로 주목된다.

남측은 ▲경의선·동해선 연결 1단계 사업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유로관광 등 3대 현안사업을 가급적 현 정부 임기내에 성사시키기 위해 그 선결조건인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내 군사분계선(MDL) 통행 문제에 북측이 전향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수경기자



손잡은 南北대표

서울 웨라몬위키텔 호텔에서 22일 시작된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제2일차 1차 전체회의에 앞서 남북대표 정세현(왼쪽) 통일부 장관, 오른쪽과 북측 김령성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世界日報

2003. 1. 23 (목)

‘核 동상이몽’... 출발부터 ‘삐걱’

남북장관급회담 안팎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초반부터 남북간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리였다.

22일 서울 웨라몬위키텔 호텔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부터 김령성 북측 단장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 말이 핵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회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우리측 질문에 대한 형식적인 답변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김 단장은 기초반은 직후 회개진이 나기려고 하자 오히려 “첫 회의는 방향의 입장을 대외에 알

리는 방향에서 공개적으로 하자”는 영혼한 제안을 내놓았다. 남북 회담은 그동안 비공개가 관례였다. 북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이 “옆에 사람이 있으면 집중이 안된다”고 요구, 일단락됐지만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南대표 핵문제 거론하자 北 동문서답 北, 민족공조-對美비난공세 치중역력

줄기차게 ‘민족공조’를 주장해온 북한으로서는 공개된 자리를 삼분 활용, 핵문제보다는 민족공조와 대미 비난 공세에 치중하려 했던 것 같았다.

또 핵과무으로 국제사회에서 수세에 몰린 만큼 회담을 통해, 남측의 집요한 예봉(兇鋒)을 피하

가려는 기색이 역력했다는 게 회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개 회담으로 진행할 경우 남측으로서는 손잡(북)을 몰아붙이기 어려워 북측의 일방적인 성토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다.

이날 회담에서 우리측은 핵문제를 주로 거론했지만 북측은 회담 의제를 경험에 국한하겠다는 의도만 드러냈다. 정 대표가 “국제사회가 걱정하는 문제도 잘 풀리도록 하자”며 핵문제를 거론을 암시하자, 김 단장은 “민족문제를 잘 해결하면 국제사회도 좋아할 것”이라고 동문서답했다.

북측은 또 “신뢰할 만한 실천조치를 위해 달라는 남측 요구에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김기동기자 kidong@segve.com

중일일보 ▶

2003. 1. 23 (목)

회담하러 왔나 선전하러 왔나 北, 장관급회담 공개 요구

북한이 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선전장’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측이 의혹을 살 만한 징후는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우선 북측이 장관급 회담을 공개하자고 주장한 대목부터 심상치 않다. 김영성(金鏞成) 북측 수석대표는 22일 첫번째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느닷없이 “회담을 공개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북남회담에 민족의 기대와 관심이 큰 만큼 오늘 첫 회의는 쌍방의 입장을 대외에 알리는 방향에서 공개적으로 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 김수석대표의 발언에 놀란 정세현(丁世鉉) 남측 수석대표가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집중이 잘 안된다”면서 “관례에 따라 비공개로 하자”고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북측의 회담 공개 제안은 지금까지 장관급회담 역사상 처음이어서, 우리측 회담 관계자들은 북측의 숨은 의도

를 분석하느라 골똘하고 있다. 게다가 북측은 회담이 끝난 직후 10쪽이나 되는 장문의 ‘제9차 북남상급회담 기본 발언문’을 남한 언론에 배포했다. 북측이 남한 언론에 기본 발언을 알린 것도 처음이다.

기본 발언에는 ‘민족공조로 전쟁의 위험을 막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등의 문구를 통해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회담직후 발언문 배포도 남남갈등 유도 속셈인듯

또한 민족공조에 동조하면 ‘애국’이고, 반대하면 ‘매국’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특히 기본 발언은 ‘미국의 전쟁 위협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을 굴복시키고 전 조선을 저들의 지배하에 두려는 악의 야망의 산물이다’ ‘외계에 농락당하면서 동족을 해치는 것과 같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퍼기도 했다. 기본 발언문은 또 “북남 사이에 합의된 모든 협력사업들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것을 단가워하지 않는 외세의 방해책동으로 인해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 핵 위협으로 불거진 현재의 상황을 ‘외세(미국) 대 동족 대결’로 몰고 남북협력사업도 미국의 방해로 진전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몰아붙여 한·미 정책공조에 균열을 가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북한의 방송은 과거와 달리 회담이 끝나자마자 기본 발언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우리측 회담 관계자는 “남한의 경제지원 확보에 역량을 쏟던 북측이 이번 회담에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북한의 자세는 한·미·일 대북 정책공조를 허용면서 남북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철희기자
chlee@joongang.co.kr

南·北 장관급회담 첫날 회의

南 핵포기 구체적 프로그램 내라 北 민족공조 통해 외부압력 막자

남북은 22일 9차 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남측은 핵문제의 해결책이 없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핵개발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강조했다. 반면 북측은 '민족공조'를 내세우면서 핵포기 압력을 비껴갔다.

김영성 북측 단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단장의 발언은 북한이 지난 10일 정부 성명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밝힌 것과 같은 수준의 핵포기 의사 표명이다.

우리측 회담 대변인인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은 북한의 핵관련 입장 표명에 대해 "논의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지만 북측이 핵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힌 만큼 논의의 토대는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정도로는 핵개발 포기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그 동안 북한이 취한 조치를 볼 때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일반적인 입장 표명으로는 국제사회의 남측을 우회하기 어렵다"며 본격적인 대화가 이뤄지려면 보다 구체적인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선



22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한 김영성 단장 등 북측 대표단(왼쪽)과 정세현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조·시·신)

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포기수준'에 대해 "적어도 이번 핵문제의 발단이 된 우리측 핵폭탄에 대한 명확한 상황과 개발포기 선언, 그리고 이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는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회담에서 '우리 민족끼리'를 유난히 내세웠다. 김 단장은 "원 시기 조선반도에서 경화를 위협하는 건쟁위협은 민족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고 있다"며 '민족공조'로 건쟁의 위협을 막자고 제의했다. 그는 "핵문제를 들고 시시각각 돌아오는 미

국의 건쟁위협은 건쟁으로 우리 민족을 굴복시키고 전조선을 저들의 지배하에 두려는 악의 아랑의 산물"이라며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을 비난했다.

특히 북측은 '민족공조' 차원에서 남북 교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김 단장은 "북남 양방은 자주적 대의를 확고히 세우고 민족문제에 기여하려는 의외의 기도를 단호히 물리쳐야 하며 경제협력사업을 비롯해 북남 사이에 합의된 문제들을 중단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기자 dilee@mk.co.kr
윤상환기자 shyoan@mk.co.kr

국민일보

北, 회의직후 발언문 이례적 공개

비공개 관례 깨 - "회담 활용해 입장 홍보 의도" 분석

서울 세라본 워커히 호텔에서 22일 오전 열린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는 양측 대표단 사이에 회의 공개와 비공개를 둘러싼 신경전 속에 시작됐다.

북측 김영성 단장과 남측 정세현·수석대표는 회의시작전 환담에서 날카로운 숫자 '3'을 소재로 회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오후 6시 시간이 지나 우리측 회담 관계자가 취재진을 회담장 밖으로 내보내려 했으나 김단장은 아랑곳 않고 계속 발언을 이어갔다.

김단장은 "국민의 정부 마지막이고, 2003년 새해 들어 처음하는 북남회담에 민족의 기대와 관심이 큰 만큼 첫 회의는 쌍방

의 입장을 대외에 알리는 방향에서 공개로 하자"고 말해 남측 대표단을 당황케했다. 정수석대표는 관례대로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들도 (공개에 따른)준비가 안돼 있을 것"이라며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남측 요구대로 회의는 비공개로 시작했다.

회의는 남북 양측간 기존 입장만 확인한 채 1시간 만에 끝났다. 그러나 북측의 한 관계자는 회의가 끝난 뒤 평소 안면이 있던 우리측 기자에게 전체회의에서 북측 김단장이 발표한 A4용지 10쪽 분량의 기본발언문을 넘겨주면서 자신들의 공개 주장을 간접적으로 관찰시켰다. 기본발언문에는 그들

안 북측이 성명 등을 통해 발표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7차례 등장하는 등 민족공조가 유난히 강조됐다.

북측이 그동안의 비공개 관례를 깨고 공개를 주장한 데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핵문제와 관련한 자신들의 주장을 대내외에 기각 없이 전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진전된 내용으로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보다는 이번 회담을 기존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선전장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관련 북측 대표단은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서울 잠실동 롯데월드 민족공조관을 합관했다. 명경원기자 khmaeng@kmb.co.kr

금강산면회소 4월 착공 다음달 20일 이산 상봉

남북 적십자 5개항 합의...면회소 1천명 수용규모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가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올 4월 착공되고, 다음달 20~25일 금강산에서 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린다. 남북은 22일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적십자 3차 실무접촉을 끝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5개 항이 담긴 합의서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동안 건설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던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이 본격화하게 됐다. 또

이산가족 상봉도 지난 9월 이후 5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관련기사 3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북쪽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에 착공된다. 남북은 이를 위해 남북 각 10명씩으로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을 구성해 다음달 10일 첫 회의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다. 면회소는 이산가족과 진행요원 등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봉장과 회의실 등을 갖춘 종합센

터 형태로 짓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면적은 건설추진단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지난해 1·2차 실무접촉에서 면회소 규모와 관련해 1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2300평 규모를 제시한 남쪽과 종합센터 방식의 2만2천평 규모를 주장한 북쪽의 입장이 갈려 합의서를 내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규모는 필요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북쪽과 남쪽 순서로 각 100명씩 금강산에서 상대쪽 가족과 만나기로 했다. 남북은 상봉단 후보 200명씩의 명단을 26일 교환하며, 대한적십자사는 23일 예비 후보 300명을 컴퓨터 추첨으로 선정한다. 남북은 면회소 완공 이전에도 상봉을 지속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시기 실종자의 생사·주소 확인과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문제는 면회소 착공식 뒤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4차 실무접촉을 4월 말 금강산에서 하기로 했다. 남북 대표인 이병용 대한적십자사 총재특보는 "서부지역 면회소 문제도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며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면 서부지역 면회소 건설에 대한 문제가 추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남쪽 대표단은 이날 금강산 관광선 실봉호 편으로 속초항을 통해 돌아왔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손원재 기자 wonje@hani.co.kr

금강산 면회소 4월 착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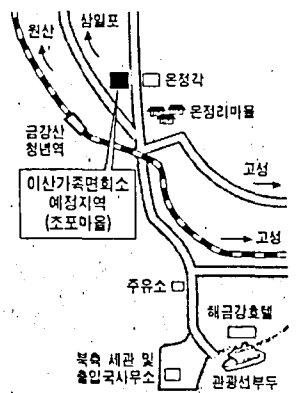
이산상봉은 내달 20~25일 100명씩 순차적으로

남북적십자 접촉서 합의

남북한은 22일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열린 적십자회담 3차 실무접촉에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4월에 착공하고, 내달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6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개항의 합의서를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남북은 금강산 지역인 강원 고성군 온정리 조포(烏

包) 마을에 면회소를 착공, 1년 내에 완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10일 남북 각각 10명 정도가 참여하는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각 10명 정도) 첫 회의가 금강산에서 열린다. 이산가족 면회소는 이산가족과 진행 요원 등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봉장과 객실 회의실 등을 갖춘 종합센터 형태로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인 면회소 규모는 양측 건설 실무자들이 공동으로 설계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 확

정하기로 했다. 6차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한에서 각 100명이 순차적으로 방문해 상대쪽 가족과 만나는 기존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양측은 면회소 완공 전이라도 상봉을 지속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전쟁 기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 및 주소 확인 문제와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확대 문제 등은 6차 이산상봉과 면회소 건설 착공식 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23일 오전 11시30분 서울 명동 본사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6차 이산가족 상봉 예비후보 3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금강산 면회소 4월중에 착공

내달 20~25일 이산 6차상봉

남북한은 22일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열린 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를 북한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에 면회장·객실·회의실을 갖춘 종합센터로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게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남북 각 10명씩 참여하는 '면회소 건설추진단'을 구성해, 첫 접촉을 2월 10일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으며, 4월 중 공동으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또 6차 이산가족 상봉을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하되, 남북 각각 100명씩 순차로 금강산에서 2박3일 동안 상대측 지역의 가족을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20일부터 열린 3차 실무접촉을 22일 끝내면서 이를 포함한 5개항의 합의를 채택했다. 이번 접촉

에서 우리 측은 면회소 규모를 안건 평 2300평으로, 북측은 2만2000평을 각각 제안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는 남측이, 부지·인력은 북측이 제공하며, 착공 후 1년 내에 면회소를 완공하고, 운영 문제는 완공 1개월 전까지 확정하기로 합의했으며, 4차 적십자 실무접촉을 4월 말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양측은 전쟁 중 행방불명자 생사·주소 확인문제,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 확대 문제는 매듭짓지 못했으며, 6차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착공식 후 협의해 해결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6차 이산가족 상봉단 100명을 선발할 예비 후보자 300명을 23일 오전 컴퓨터로 추첨한다. /금강산=공동취재단

대한매일

2003. 1. 23 (목)

이산면회소 4월 착공

남북赤 합의... 6차상봉 새달 20~25일 금강산서

남북한은 22일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적십자회담 3차 접촉을 갖고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4월에 착공하고, 다음달 20일부터 25일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치르는 것 등 5개 조항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남북한은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에 상봉장과 회의실 등을 갖추고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센터 형태의 면회소를 착공 1년 내에 완공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10일에 각 10명으로 구성된 남북 공동의 건설추진단 첫 회

의를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남북한은 또 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다음달 20일부터 25일 동안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되, 각 100명의 남북 이산가족들이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기존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양측은 면회소 완공 이전이라도 상봉을 지속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금강산 공동취재단·이두걸기자
douzir@kdaily.com

이산면회소 4월 착공

금강산에 내달20~25일 南北100명씩 상봉

적십자회담 3차실무접촉 5개항 합의

금강산 조포마을에 들어설 이산가족 면회소가 4월말 착공되고, 앞서 2월20~25일 6차 이산가족 상봉이 실시된다.

남북은 22일 금강산에서 끝난 적십자 3차 실무접촉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항의 합의서에 서명, 발표했다.

양측은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鳥包)마을에 4월말 면회소를 착공, 1년내에 완공기로 하고 다음달 10일 각각 10명씩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을 구성, 금강산에서 첫 실무회의를 갖기로 합의

했다. 면회소는 일단 이산가족과 진행요원 등 100명 수용규모에 상봉장과 객실, 회의실 등을 갖춘 종합센터 형태로 건설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남북은 또 6차 상봉행사는 내달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100명씩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면회소 완공 전이라도 상봉을 지속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6·25전쟁 행불자 및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문제 등은 면회소 착공식 후에 협의하

기로 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연건평 규모는 양측 건설 실무자들이 설계시업을 추진하면서 확정기로 해양후 논의과정에서 불씨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과 12월 두차례 실무접촉에서 남측은 1000명 수용규모의 연건평 7500㎡(2300여평) 규모로 짓자고 제안했고, 북측은 7만㎡(2만2000평) 규모를 요구하면서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다.

남북한은 4차 실무접촉은 4월말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김기동기자
kidong@segye.com

한겨레

핵 한파 뚫은 '한핏줄 온기'

■ 남북 적십자 합의 의미

평양서 면회소 수용 막판훈령 화해가 위기 안전판 판단한듯

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적십자 3차 실무접촉이 22일 막판에 타결된 것은 북한 핵문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남북관계에 모처럼 밝은 소식이다. 실무접촉이 타결된 것은 합의내용도 그렇지만, 타결됐다는 사실 그 자체도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합의내용에서 금강산 면회소

착공 결정과 6차 이산가족 상봉은 적지 않은 진전이다. 특히 금강산면회소 설치를 합의한 것은 남북의 이산가족 문제 해법 찾기가 제도화 문턱까지 다가섰다는 점에서 뜻이 깊다. 면회소 문제는 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6월27~30일 금강산에서 열린 1차 적십자 회담에서 원론적 합의에 이른 뒤 2년7개월여 만에 구체적 성과물을 만들어낸 셈이다. 이산가족 상봉 령

사도 그동안 나라 안팎에서 정상회담 이후 남북의 화해협력 노력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져 왔음을 감안하면, 남북이 여전히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이 이렇게 극적 합의에 이른 데는 적십자 1·2차 실무접촉에서 면회소 규모를 둘러싼 견해차에 걸려 거꾸 합의에 실패했다는 부담도 적잖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이번 실무접촉에서도 면회소를 2만2천평 규모로 짓자는 주장을 고수해,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보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측은 막판에 남측 주장에 다가선 줄출안을 냈다. 정황상 평양의 훈령이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북측이 이번 실무접촉의 성과를 최근 한반도 정세와 연관시키고

있음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핵 문제의 완만한 해결과 경제재건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남북관계의 지속·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리라 것이다. 북핵 문제의 와중에 '남북 공조' 모습을 보여줬을 수도 있다.

물론, 이산가족 문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상봉 정례화나 상봉 규모 확대의 전제가 되는 생사·주소확인 문제 등 제도적 해결책 모색과 관련해선 이번 접촉에서도 큰 진전이 없었다. 남북자·'국군포로' 문제 등과 연관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도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북측이 부담감을 갖고 있어 지속적인고도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이산가족상봉 5개월만에 재개

각 100명씩 순차적으로... 실종자 생사확인 합의도출 못해

■ 남북적십자회담

남북 장관급회담 첫날

북핵문제 견해차만 확인

지난해 9월 이후 중단상태에 있던 이산가족 상봉이 5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특히 건설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개설 작업도 본격화된다.

한편 제9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22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뚜렷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산가족 상봉 다음달 20일부터 옛새동안 열려=지난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 3차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22일 오전까지 진통을 거듭하다 이번 접촉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산

가족 면회소 규모와 관련, 이산가족과 진영요원 등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상봉장과 회의실 등을 갖춘 종합센터 형태로 건설한다는 데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금강산 지역인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에 면회소를 착공, 1년 내에 완공하기로 했다. 또 6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다음달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하되 남북한 이산가족 각 100명이 순차적으로 방문해 상대측 가족과 만나는 기존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 양측은 면회소 완공 전이라도 상봉을 지속한다는 데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23일 오전 10시30분 인선위원회를 열어 상봉후보자 선정기준 결정 후 오전 11시30분 서울 명동 본사에서 상봉예비후보 300명을 컴퓨터 추

첨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북핵 문제 상호 견해차 뚜렷 =제9차 장관급 회담 1차 전체회의가 22일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남북 화해·협력에 장애를 조성하는 유감스러운 일임을 지적하고 핵 문제가 해결이 안될 경우 남북 관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은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김령성 북측 단장은 "천 시기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위험은 민족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고 있다"며 '민족 공조'로 전쟁의 위험을 막자고 주장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김민열기자
mykim@sed.co.kr

1000명규모 이산면회소 건설

금강산서 4월 착공... 내달 20일 6차상봉

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내달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된다. 또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면회소가 4월 중 착공돼 내년 4월 완공된다.

남북 대표단은 22일 금강산에서 열린 적십자회담 3차 실무접촉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강원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

울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 건물 형태의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쌍방 건설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설계하면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는 남측이, 부지와 공사 인력은 북측이 제공하는 조건이다.

6·25전쟁 행방불명자 및 이산가족의 생사 주소 확인, 서신 교환 등의 의

제는 6차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착공식 이후에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남북은 적십자회담 4차 실무접촉을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4월 말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23일 오전 인선위원회를 열어 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후보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적은 이날 예비후보자 3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도 실시한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성동기기자 espril@donga.com

한국경제

2003. 1. 23 (목)

이산가족 면회소 4월착공

내달 20~25일 6차상봉
남북적십자 5개항 합의

이산가족과 진행요원 등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가 오는 4월 착공된다. 또 6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내달 20일부터 25일까지 6일 동안 남북 이산가족 각 1백명이 금강산을 순차적으로 방문한 가운데 처리된다.

남북 적십자 대표단은 22일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열린 적십자회담 3차 실무접촉에서 이같은 내용

에 합의하고 5개 항의 합의를 발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금강산 지역인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 마을에 면회소를 착공, 1년 내에 완공키로 하고 내달 10일 남북 공동의 '금강산 면회소 건설추진단' 첫 회의를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이산가족 면회소는 이산가족과 진행요원 등 1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고 상봉장 객실 회의실 등을 갖춘 종합센터 형태로 건설하기로 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내달 20~25일 이산상봉

남북적 합의... 장관급회담은 核싸고 난항

남북은 22일 서울 웨라톤 워커 힐호텔에서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핵무기 개발 계획 포기를 선언하고, 핵 동결 해제조치를 원상 회복해야 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철회할 것"을 북측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이봉조(李鳳朝·통일부 정책실장) 회담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면서 "전쟁 위험은 민족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고 있어 민족공조로 전쟁의 위험을 막아야 한다"며 또다시 민족공조를 주장했다.

한편 남북 적십자대표단은 이날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3차 실무접촉을 끝내고 6차 이산가족 상봉을 다음달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키로 합의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철희·고수석 기자

chlee@joongang.co.kr

중앙일보

2003. 1. 23 (목)

서울경제

2003. 1. 23 (목)

금강산면회소 4월 착공

南北赤 내달 20일 이산상봉등 5개항 합의

어제 장관급회담 1차회의

北측 "核 만들 의사 없다"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 김령성 북측 단장은 22일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라톤워커

힐호텔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에서 남측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신뢰할 만한 실전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촉구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이봉조 회담 대변인(통일부 정책실장)이 전했다.

우리측의 정세현 수석대표(통일부 장관)는 이날 전체회의의 기초발언을 통해

▲분명한 핵무기 개발계획 포기 선언 ▲ 핵동결 해제조치 원상회복 ▲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철회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기사 5면

한편 남북 적십자 대표단도 이날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적십자회담 3차 실무접촉을 갖고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오는 4월 착공 등 5개항에 합의했다.

6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다음달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되던 남북한 이산가족 각 100명이 순차적으로 방문, 상대측 가족과 만나는 기존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대한매일

2003. 1. 23 (목)

이산가족 교류 정례화 '디딤돌'

■ 남북 적십자회담 타결 의미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22일 국적으로 타결돼 5개월이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게 됐다. 동시에 이산가족 면회소도 규모 문제는 남였지만 건설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접촉의 최대 난제는 면회소 규모. 지난 2차 접촉에서 이미 시각차를 확인한 양측은 6차 이산가족 상봉을 다음 달에 실시한다는 데는 일찌감치 합의했지만, 규모 문제를 놓고 이날 오전 수석대표 접촉만 세차례나 갖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남북한은 이날 오전 비공식 전체회의를 열고 면회소 규모에 대해 다시 절충 작업에 들어갔다. 남측은 여전히 '1000명 수용 가능한 2300평 규모'로 배수진을 쳤고, 북측 역시 2만 2000평을 고집했다. 그러나 북측 단장인 이금철 북적 중앙위 상무위원이 비공식 접촉을 제의, 양측은 두 차례에 걸쳐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

계속된 줄다리기 끝에 북측이 남측 제안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것은 쌍방 건설전문가들이 확정하는 안을 수용하면서 한때 걸릴 적진까지 갔던 접촉이 합의 쪽으로 급선했다.

북측이 회의 내내 대규모 면회소 설치에 집착한 속내는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될 경우 면회소를 관광 인프라로 이용하는 북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남측은 이번 접촉에서 파국 직전에서 북측의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그동안의 '피주기 논란'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이산가족 교류를 정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6·25 전쟁 당시 실종자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는 다음 접촉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두게 됐다. 북측이 막판에 한발 뒤로 물러선 것은 최근 핵위기 여파로 신중대기 상태인 남북 교류·협력은 어떻게든 진전시켜야 할 필요성 때문이란 관측이다.

● 금강산 공동취재단·이두결기자
douzir@kdaily.com

경향신문

2003. 1. 23 (목)

내달 20일 6차 이산상봉

남북赤 합의...금강산면회소 4월착공 1년내 완공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가 오는 4월 착공되며, 제6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방문 협사가 다음달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린다. 남북은 22일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열린 적십자회담 3차 실무접촉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5개항의 합의서를 발표했다. 이산상봉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만에 재개된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금강

산지역인 강원 고성군 온정리 조포(烏包)마을에 면회소를 착공해 1년내 완공키로 했으며, 다음달 10일 남북 공동의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각 10명 정도) 첫 회의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다.

남북은 이산가족 면회소는 이산가족·전경요원 등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상봉장·객실·회의실 등

을 갖춘 종합센터 형태로 건설키로 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양측 건설 실무자들이 공동으로 설계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확정키로 했다.

남측은 앞서 두차례의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연건평 7,500㎡(2,300여평) 규모로 면회소를 건설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은 7만㎡(2만2천평) 규모를 주장, 합

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면회소 완공 전이라도 상봉을 지속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으며, 적십자회담 4차 실무접촉은 오는 4월말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양측은 그러나 전쟁때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와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 교환 확대문제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6차 이산상봉과 면회소 착공식 이후에 다시 협의키로 했다.

금강산 / 공동취재단·이용욱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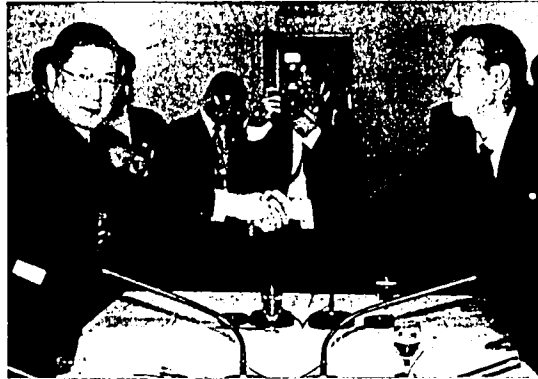
“더 끌면 안된다” 부담 작용

南北赤적축 합의 배경

22일 끝난 적십자회담 제3차 실무접촉에서 남북이 '4월말 면회소 착공' '2월 6차 이산가족 상봉' 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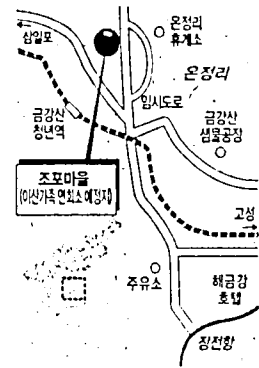
이는 그동안의 두 차례 실무 접촉 때부터 최대 쟁점이던 '면회소 규모'에 대해 남북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성사됐다.

회담 타결이 불투명하던 막판에 북측 리금철 단장이 남측 이병용 수석대표를 찾아와 이산가족 면회소 규모와 관련, 1000명 수용 규모의 남측안을 받아들였다. 대신 남측은 상봉장과 회의실 등을 갖춘 종합센터 형태로 짓자는 북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타협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연건평 규모는 남북 건설실무자들이 공동설계 과정에서 확정하기로 해 북측이 이



◇22일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병용(왼쪽) 남측 수석대표와 리금철 북측대표가 합의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날부터 평양에서 시작한 철도-도로 실무협의 2차 회의 등 남북 교류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북측으로서는 서울과 평양,



면회소규모-형태 양측 한발씩 양보 北, 핵문제까지 겹쳐 '국제고립' 우려 동시개최 다른 회담에 영향도 고려

문제를 추후에 또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북측은 그동안 면회소를 남측이 제시한 규모의 10배인 2만2000평(7만㎡)의 종합센터로 짓자면서 회담을 질질 끌어왔다. 2월10일 열리는 '건설 추진단' 회의에서 북측이 남측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남북한은 적십자회담에서 핵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성과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는 지적이다.

남북한의 이날 합의 배경에는 세차례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한 경우 양측이 느낄 정치적-심적 부

금강산에 동시에 3개 회담을 가질 정도로 의욕을 보여오던 '민족공조'에서도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중국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핵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남한과의 관계 단절은 북한의 '고립'을 자초하는 지름길임을 북측도 인식했다는 관측이다.

이번 합의안 도출과정에서는 북측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를 간접 전달하려 했던 측면이 눈에 띄었다.

북측이 6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노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일(2월25일)과 겹치는 2월23~

28일 갖자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 결국은 '현 정부내에 마쳐야 한다'는 남측의 주장에 대해 내달 20~25일 안을 수용하긴 했지만, 그만큼 남한의 차기 정부에서도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신호로 해석됐다.

적십자 실무접촉 타결의 여파는 평양의 철도-도로 실무협의 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주내 재개될 남북간 군사당국자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의 핵심 쟁점인 군사분계선(MDL) 통행과 관련된 진전이 예상되면서 그다지 큰 쟁점이 없는 실정이다. /이삼민기자

2lsmn@segye.com

◇ 남북적십자회담 실무접촉 합의서

1. 금강산 면회소 설치 및 운영 ①설치 장소는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 ②객실 회의실 등 종합센터 형식의 1000명 수용 규모 연건평 규모는 설계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 확정 ③건설 자재 장비는 남측이, 부지-인력은 북측이 제공 ④설계는 남북 북이 공동으로 작성 ⑤건설은 1년내 완공, 착공식은 4월중 남북이 공동 실시 ⑥실무협의 위해 각기 10명씩 금강산면회소 건설 추진단 구성 추진단의 첫 접촉은 2월 10일 금강산에서 진행 ⑦운영 문제는 완공 1개월 전까지 확정	2.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 ①2월 20~25일 금강산에서 순차적으로 실시 ②상봉 규모-절차 등 실무적 문제는 전례에 따른 3. 6·25 행방불명자 생사-주소 확인과 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등은 제6차 상봉과 면회소 착공후 협의 해결 4. 제4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4월말 금강산에서 개최 5.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 발생 2003년 1월 22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이병용, 북측대표단 단장 리금철
---	--

대한매일

2003. 1. 24 (금)

南 '北 핵시설 가동포기' 요구

南 '北 핵시설 가동포기' 요구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조율

남북한은 23일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 사흘째 회의를 갖고 제10차 장관급 회담을 오는 4일 중 개최하고, 제4차 경제협력추진위원 내담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 최대 현안인 북한 핵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24일 새벽까지 공동 보도문 문안 조율 작업을 거듭했다. ▶관련기사 5면

남측은 북측에 대해 "핵무기를 개

발할 의사가 없다."는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실천적 조치를 담아야 한다고 요구, 북한이 지난해 12월 동결 해제한 영변 방사화학실험실 등의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것을 보도문에 담은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전체회의에서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한 남북은 공동보도문 초안을 교환한 뒤 이를 토대로 23일 오전과 오후 실무대표 접촉 및 수석대표 접촉 등을 잇따라 가졌다.

북측은 공동보도문 초안에는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는 기초 발언과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중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기존 입장과 함께 '민족공조'의 정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2면으로 ▶

1면에서

남측은 공동보도문안에 경의·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등 3대 현안사업에 대해 현 정부 임기전인 2월 24일 이전에 끝낼 것을 주장했고, 북측은 이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업의 실현을 위한 남북 관리구역 내 군사분계선(MDL) 통행 문제 해결과 관련, 북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김영성 내각 참사 등 북측대표단은 24일 오전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북한으로 돌아간다.

世界日報

2003. 1. 24 (금)

남북 '核합의문' 조율 힘겨루기

南, 전향적 조치 촉구... 北 "대화해결" 되풀이

장관급회담 사흘째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 사흘째인 23일 남북은 '북핵문제와 개성공단 등 3대 현안'을 담은 공동보도문 초안을 교환하고 밤늦게까지 문안조율 작업을 벌였다.

남측은 진담에 이어 이날 수차례 실무대표 및 대표접촉을 갖고 공동보도문에 '핵문제'를 포함시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핵 문구를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관련기사 8면)

남측은 핵문제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북측에 보다 진전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핵-경협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핵무기 개발의사가 없다는 점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8차 장관급회담 합의내용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또 경의선 연결 및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착공 등 3대 경제협력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무장지대내 통행문제에서 북측의 전향적 입장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미국의 방해작업' 때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0차 장관급회담과 제4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차기 회담 일정 등은 상당부근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동기자 kidong@segye.com

핵문제 공동보도문 집중조율

남북장관급회담 사흘째
"평화적 해결" 의견 접근

남북은 23일 서울 웨라톤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9차 장관급 회담에서 밤늦도록 수석대표 접촉 등을 거듭하며 핵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공동 보도문에 담는 문제를 집중 조율했다. 남북은 한밤 협상에서 '핵무기를 만들 뜻이 없으며, 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문구를 보도문에 담는다는 데 의견 접근을 보고 막판 절충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면

이봉조 남북 대변인은 "북쪽은 (민족 공조와 같은) 북쪽의 전형적인 입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

장해 중요 논점의 하나가 되고 있다'면서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북쪽도 핵 문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회담 관계자는 핵 문제와 관련한 문구를 놓고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와 '(외세에 맞선) 민족 공조'라는 양쪽 주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절충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간 경험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사안들을 공동보도문에 어떻게 잘 포함시킬 것인가가 주된 논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남쪽은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 등 3대 경험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 일정표를 공동보도문에 명시하자고 촉구하고 있으나, 북쪽은 군사분계선 통과 문

제와 관련해 '외세의 방해 책동'을 거론하며 일정 명시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북은 10차 장관급 회담은 4월 초순 평양에서, 4차 경제협력 추진위원회는 다음달 12일 또는 19일께 서울에서 연다는 데 의견을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북쪽 대표단의 만남에 대해서는 "지금껏 논의 또는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견이 해소되면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북쪽 대표단은 24일 오전 아시아나항공 편으로 인천공항을 거쳐 중국 베이징으로 떠날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경향신문

2003. 1. 24 (금)

남북합의문 '핵문제 조율' 진통

장관급 회담...北 '민족공조'포함 주장 밤샘 절충

남북은 제9차 장관급회담 사흘째인 23일 공동보도문 작성을 위해 밤샘 절충을 받았으나 견해차로 난항을 겪었다. 핵 문제와 관련, 남측은 '핵 포기' '핵시설 동결 원상회복' 등의 문구를 보도문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천적 조치를 촉구했다고 회담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우라늄을 이용한 전력생산을 용인한다'는 문구와 '외세

의 핵 압력에 남북이 공동대응한다'는 '민족공조' 원칙을 보도문에 포함시킬 것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분계선(MDL) 통행절차와 관련, 남측은 북측의 통행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문구를 보도문에 넣자고 주장했으나 북측은 '외세의 간섭에 원인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집하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2월 초 서울에서 제4차 경제협력추진위를 열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육

로관광 등 3대 경험사안을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남북은 그러나 후속 10차 회담을 오는 4월 평양에서 연다는 데 의견접근을 보았다.

한편 남북은 이날 평양에서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협의회 2차회의 첫 전체회의를 열어 경의선 철도연결 목표시한 설정과 이를 위한 경의선 임시도로 개설, 열차운행 합의서 채택, 자재·장비 제공문제 등을 논의했다.

남북은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경의선 철도부터 연결하자는 남측 입장과 경의·동해선을 동시에 완공하자는 북측 입장이 충돌했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남북장관회담 공동보도문 난항

南 “핵사태 진전내용 담자” 北 “민족공조 포함” 맞서

盧당선자·北대표 면담 불발될듯

남북은 장관급회담 사흘째인 23일 실무대표와 수석대표 접촉을 잇달아 갖고 '북측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동보도문 조율 문제로 밤샘 협상을 진행했다. 회담이 난항을 거듭했고 북측 대표단이 24일 오전 비행기로 떠날 예정이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와 김영성(金靈成) 북측 단장간 면담은 사실상 불발됐다.

남측은 핵심 현안인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측이 전날 기조 발언에서 밝힌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는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진전된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담아야 한다는 방침 아래 북측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측은 '민족공조' 정신을 공동보도문에 담자고 맞서 최종문안 조율작업에 난항을 거듭했다.

그러나 남북은 10차 장관급회담을 4월중 평양에서, 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2월중 평양에서 각각 개최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또 비무장지대(DMZ) 남북관리구역 내 군사분계선(MDL) 통과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동기기자 espril@donga.com

국민일보

2003. 1. 24 (금)

남북 핵문제 입장차 '진통'

장관급회담 3일째... 南 우려 전달에 北 기본입장 되풀이

개성공단·금강산 육로관광 추진일정등 협의

남북한은 23일 오전 서울 웨라톤 위커펀 호텔에서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속개, 24일 새벽까지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북핵 문제와 남북경협 등 현안을 협의했으나 핵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 관련기사 3면

남북은 오전과 오후 실무대표 접촉에 이어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와 김영성 북측 단장간 접촉을 통해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자정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실무대표 접촉에서 남측은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핵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보다 전향적인 입장이 반드시 공동보도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22일의 1차 전체회의 기본발언 내용과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지난해 10월 8차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사항 등 기본입장만을 명시한 공동보도문 초안을 제시했다.

이봉조 남측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문제(핵문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해 절충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북은 또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등 3대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일정과 제10차 장관급회담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북측대표단은 2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베이징으로 떠날 예정이지만 합의점 도출을 위해 일정을 다소 늦출 수도 있다.

박주호기자 jhpark@kmib.co.kr

핵해법 반발짝씩 진전

■ 남북 장관급회담 표정 공동보도문 한밤 절충

9차 장관급 회담을 벌이고 있는 남북 대표단은 22일 핵 문제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한 논의에서 이견 해소를 위한 막판 절충을 거듭했다. 회담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두발짝 움직이면 북쪽은 한발짝만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이견 해소가 쉽지 않지만, 결국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의 최대 쟁점인 핵 문제와 관련해, 북쪽은 8차 회담에서 합의한 '대화를 통한 해결'과 지난 10일 정부 성명에서 밝힌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는 뜻과 함께 '핵 문제는' 외세에 의해 야기된 것이며, 민족 공조로 풀어야 한다

는 내용을 명문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남쪽은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라든지 '필요한 조치' 등의 북쪽의 실질적 조치를 시사하는 문구를 넣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두가지 표현은 남북이 모두 난색을 나타내 계속 절충에 난항을 겪었다. 회담 관계자는 "(외세에 맞선) 민족 공조에 대한 북쪽의 명문화 요구를 견어내고, 핵무기 개발 뜻이 없다는 북쪽의 명시적 표현 등 8차 회담의 합의내용보다 조금 진전된 수준에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등 3대 경협 현안 협실화에 필수적인 군사분계선(MDL) 통과 문제에서도 합의가 계속됐다. 남쪽은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북쪽을 설득하고 있으나, 북쪽은 '외세의 방해 책동' 때문이라는 기본 태도에서 물러서지 않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3대 경협 현안의 지속적 추진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에 가로막혀 최종 일정 재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서울의 회담 결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평양의 도로·철도 연결 실무협의회 접촉도 철도 연결 시기를 두고 합의점이 마련되지 못한 채 협의가 계속됐다. 회담 고위 관계자는 "적어도 경의선 철도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개통할 수 있게끔 일정을 명시할 수 있도록 절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이 10차 장관급 회담과 4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일정에 일찌감치 공감한 것은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국민일보

2003. 1. 24 (금)

核 이견 여전... 공동보도문 난항

남북장관급회담 일정지연 진통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 사흘째인 23일 남북대표단은 오후 3시 2차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보도문을 확정, 발표하고 오후 7시 환송만찬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핵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커 전체회의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등 하루 종일 진통을 겪었다.

양측은 전날 두 차례에 걸쳐 실무접촉을 갖고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 확인한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는 공동보도문안을 각각 제시한 뒤 문안조정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오전 두차례 접촉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후 들어서도 계속 실무자 접촉을 벌였다. 이봉소 장관급회담 남측 대변인은 오후 2시30분 기자회견에 돌러 "공동보도문 문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설명하지 않아 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北, 식량지원 감사표명 이번에도 비공식 요청說

핵심 쟁점은 역시 핵 문제와 관련된 문안이었다. 남측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항에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명시한 것보다 한 단계 진전되고 실천적인 북한의 입장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측은 기본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변인은 "북측이 제시한 공동보도문안 초안은 기본적인 입장만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은 대화하는 과정에서 핵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회담장 주변에서는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조기에 회부하겠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은 거듭해서 "유엔에서의 대북제재는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천명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 대표단원과 이들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실무요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남측 회담 관계자들에게 식량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 화제가 됐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2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때도 그랬고, 북측 실무요원들 상당수가 함께 움직이는 우리측 안내요원들에게 지난번 식량 40만kg 보내준 것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때문에 이번 실무접촉 등의 과정에서 북측이 비공식적으로 추가적인 식량지원 요청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맹경환기자 khmaeng@kmb.co.kr

한국일보

2003. 1. 24 (금)



23일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마지막날 환승 민선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오른쪽) 통일부장관과 북측 김경성 단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핵문구' 줄다리기

■ 장관급회담 표정

"지난 8차 때보다는 더 진일보한 문구를 담아야 한다." "국민과 국제사회에 내보일 실천적 조치들이 담겨야 한다."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사흘째인 23일 우리 정부가 북측에 집중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이다. 남북간은 이날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실무 접촉과 수석대표 김족, 전체 회의 할 잇달아 열고 공동 보도문을 만들어내기 위해 진통이 진통을 거듭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남북회담 공동 보도문에 담길 북한의 핵문구와 관련한

남 "핵 포기 의지 표시" 북 "대화해결·민족공조" 등 남북자 태도가 향후 남북자가족 노력에 중요한 토대

가 된다고 보고 북측을 설득했다. 우리측은 북측에 대해 핵문구 시 설을 제가동하지 말 것을 요구. "핵문구를 개발하지 않았다."는 북한의 실천적 조치들을 공동보도

문에 담아내려고 애썼다. 국제사 회에 대해 북한의 공격적 조치들 을 남북의 메시지로 드러내자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물론 "민족공조"를 강 조하는 북한에 대해 핵문제 해결 없이는 한반도 평화와 교류·협력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대해 북측은 "대화로 해결한다."는 일문적 입장과 함께 "핵문제는 민족공조를 통해 해결 한다."는 문구를 넣을 것을 고수.

회담이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21일 새벽까지 강화를 거

듭하면서 지속된 회의는 집약된 정도로 대담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 등의 일정과 관련, 우리측은 유엔사와 군사분계선(SMD) 통과 할 둘러싼 갈등해소를 위해 북측 에 건장각 자세를 촉구했다. 이 3 가지 현안은 남북 양측 모두 열의 를 갖고 있는 부분. 내달 안에 실시 할 것과 제4차 경제협력추진위와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각각 2 월과 4월에 치른다는 데는 어렵지 않게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을 피랍할북인관해 사부 총장, 최성 '결의' 정 용 남북자 도가 향우 용 남북자 노력에 중 장, 최우영 대며 종재 남북자가족 노력에 중 장, 최우영 대며 종재 남북자가족

합의회 회 장 등 남북자단체 대표단이 오후 워커히 호텔 내 만찬장 입구에서 남북자 명단을 북측 단장인 김영 성 내각 책임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민족화해 외원하는 북 한민국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 과 A4 용지 4장 분량의 남북자 명 단을 들고 "반드시 북측 대표단을 만나겠다."며 1시간동안 자리를 지켜 정부 경호대와 호텔 관계자 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최우연 대표는 "북한은 민족 공 조의 입장에서 같은 민족에게 기 법을 주고, 남한은 국민들의 피는 핏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울먹 였다. 관계 당국은 만찬 시작 직전 이들을 모처럼 데려갔다.

*김수철 이두걸기자 crystal@daily.com



23일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환승민선에서 남측 수석 대표인 정세현(오른쪽) 통일부 장관과 북측 김경성 단장이 환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核이전탈 '점점 찾기' 난항

■ 장관급회담 발세 진동

남북 장관급 회담의 열기 때문인 은 23일 오전에 예정됐던 전체회의 를 오후로 연기한 채 실무회담을 진행 을 잇따라 열며 핵 문제 해결의 전진장 을 시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진통을 좁히지 못한 채 공동보도문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남측은 지난해 10월 북한에서 열 린 8차 회담에서 '핵 문제를 해결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고 합의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핵 문제 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북측의 실천적 조치를 명기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반해 북측은 공동보도문 초안에서 '핵무기 제조 의사가 없으며 핵 개발에 대한 북측 에 이의가 없'이라는 문구를 넣을 한편 외세 위협에 대응한 '민족공

조'를 강조하는 문구 삽입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이에도 불 구하고 공식 입장 내에 공동보도문 이 발표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북한이 남북교류의 관마지 놓을 기

남 "핵 실천조치 보도문에 명기"에

北 "외세위협 민족공조" 삽입 강조

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북측은 이미 적십자회담 실무접촉에서 이 신가족 변화소와 관련해 남북 인을 대부분 수용했고, 현재 진행중인 경 의·동해선 연결 실무협의회도 먼저 체결한 바 있다. 남북 회담 관계자 들은 김일 북한과 최태열 북한군 사령관(MDL) 분쟁문제에 대해 서도 북측의 건장각인 자세 변화가

감지한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도 경의·동해선 연결 문제와 금강 산 육로관광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교환을 이뤘고, 오는 4월 평양 에서 10차 회담 개최에도 양측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도 핵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남측 이병 조(李秉朝) 회담 대 변인의 발언이나 "답은 나오게 되어 있다"는 북측 김령 성 단장이 발인 모두 회담 전망을 밝게 본다 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공동보도문이 양측을 모 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북 한 이 핵무기 개발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남북의 입장 차이가 정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정대기자 torch@hik.co.kr



국민일보

2003. 1. 24 (금)

장관급회담 환송만찬 / 남북 장관급회담 남북 정세현 수석대표(가운데)와 북측 김영성 단장이 23일 서울 웨리튼호텔에서 열린 환송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世界日報

2003. 1. 24 (금)



鄭 통일-김령성 北대표 건배 / 23일 저녁 서울 웨리튼웨리튼 호텔에서 열린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환송만찬에서 정세현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김영성 북측 단장이 건배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경향신문

▼ 2003. 1. 24 (금)



남북장관회담 환송만찬 / 23일 서울 웨리튼 웨리튼 호텔에서 열린 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 환송만찬에서 남북 정세현 수석대표(오른쪽)와 김영성 북측 단장이 건배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한겨레

2003. 1. 24 (금)



23일 저녁 서울 광장동 웨리튼웨리튼 호텔에서 열린 제9차 남북 장관급 회담 마지막 날 환송만찬에서 정세현 남북 수석대표(오른쪽)와 김영성 북측 단장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경의선 철도 내달 연결’ 의견접근

남북실무회담 이틀째

남북한은 23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협의회 이틀째 회의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을 2월까지 완공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조병균(趙炳均)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에서 ‘2월까지 마무리하자’고 제안했고 북측 대표단장인 박정성 철도성 국장도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이와 함께 ▲경의선 임시도로 조기 개통 ▲열차은행합의서 채택 ▲자재 및 장비 추가 제공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남측은 특히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통과문제에 대한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이견으로 임시도로 통행이 교착상태에 있음을 강조,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번 회의에서 북측은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병행 추진하자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큰 방향에 있어서는 남측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공동취재단, 이상민기자 21smin@segye.com



23일 오전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에서 조병균 남측 대표(왼쪽)와 박정성 북측 대표 등이 악수하고 있다. 평양/김경호 기자 jjae@hani.co.kr

동해·경의선 연결 일정 이견

북 “동시 연결”-남 “경의선 내달 마무리”

철도·도로실무협 이틀째

북측은 23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협의회 2차 회의 이틀째 접촉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를 동시에 연결하자”고 새롭게 제의했다. 이에 대해 남측 대표단의 조병균 수석대표는 “지난 해 말까지 완공하기로 했다”고 국내외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을 먼저 2월까지 마무리짓자”고 맞제의를 연결 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은 남측에선 이미 노반 공사와 궤도 부설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북측은 노반 공사는 끝났으나 궤도 부설 공사를 위해 3주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해선 철도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작업만 완료된 상태로, 올 9월 말 완공 예정이다.

남측 관계자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공사 일정이 9개월이나 차이가 나 동시 연결은 불가능하다”며 북측은 동해선 건설 일정을 대폭 앞당

겨 경의선과 같은 시기에 연결하자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표는 이날 접촉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해선 임시도로가 열려야 하는데, 현재 민간인의 군사분계선(MDL) 통과 문제를 놓고 북한군과 유엔사 간의 이견이 지속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며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남측은 이날 회의에서 경의선 철도은행 합의서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며,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의 궤도 부설을 위한 자재·장비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실무자 접촉을 통해 협의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손원재 기자 wonje@hani.co.kr

한겨레

2003. 1. 24 (금)

東亞日報

2003. 1. 24 (금)

盧 “정상회담 조건되면 평양 갈것”

아사히신문 인터뷰... “취임후 적당한때 회담추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23일 일본 아사히신문 하코시마 신이치(箱島信一) 시장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해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치가 갖춰질 경우 직접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 당선자는 “상호신뢰를 위해서는 남북 정상직접 대화의 필요가 있으며 취임 후 적당한 시기에 추진하겠다”며 “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례방문 약속이 지켜지길”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건이 갖춰지면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갈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노 당선자는 또 일본문화 진흥 개방에 대해 “시기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더 이상 늦추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 충분히 준비가 돼 있으

며 문화개방은 서로의 이익이 될 것이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아스쿠니신사 참배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며 과거사 문제는 아직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서도 “21세기 한일관계가 과거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 한일 지도자들이 자국민을 신중히 상대국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미래지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인터뷰에는 하코시마 시장 외에 아키야마 고타로(秋山歌太郎) 편집국장, 외타리 노부오(野田信雄) 외보부장, 고스게 이치(小管幸一) 서울지국장도 배석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202@donga.com

남북 공동보도문 심야 절충

한국일보

2003. 1. 24 (금)

장관급회담 핵명기 싸고

남북은 제9차 장관급 회담 차용체인 23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입장을 계속했다.

남북은 이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9차 장관급 회담에서 23일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문에 핵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회담 추진 조치를 명시할 것. 양국은 이에 대해 북측은 "핵무기 보유가 사가 없다고 이미 밝힌 만큼 핵무기 조 차원에서 경제협력에 우선순위를 입장을 교수, 공동보도문 발표로 난항을 겪었다.

남북은 그러나 이날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안정을 이루는 데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며 이라 공동보도문 채택을 위한 막판 협력을 보였다. ★관련기사 4면

남북 회담 관계자는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 무리였다"면서 "북측에 '핵 포기'가 없다는 남북교류도 어렵다고 말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었다.

남북은 또 경의선을 2월 중에 연결하는 등 경제 사업을 이어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북측은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물자 물관을 조기에 개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3일 회담에서 16차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는 데도 의견차를 좁혀 나간 점이었다.

한편 평양에서 진행된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실무협의회 2차 회의에서 남북은 경의선 철도 연결공사의 조속한 재개와 공의선 임시도로 연결, 일차협회의서 체결 등에서 상당한 의견교환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대기자 torch@hankook.kr

중앙일보

2003. 1. 24 (금)

南北 核합의 막판 진통

장관급회담 입장차 못 좁혀

장관급 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로 합의문안 도출이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남북한은 23일 서울 체라튼워키호텔에서 실무대표 접촉 등을 잇따라 열고 공동보도문 안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표현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집중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관련기사 4면> 이 접촉에서 남북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8차 회담 이후 북한의 핵 동결 해제 선언과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등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이란 인문적 입장을 밝힌 당시 보도문보다 구체적이고 강도 높게 핵문제에 대한 우려와 해결 의지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북측은 북핵에 관한 이른바 민족공조 문제를 합의문안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버티며 접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협의회 2차 회의에서 남북한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2월 중에 마무리한다는 데 의견차를 좁혀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화·이영증 기자
chlee@joongang.co.kr

南 “비핵화 선언 문구 넣자” 北 “핵 빼고 민족공조 담자”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진통

제9차 남북 장관급 회담 차용체인 23일 양측 대표단은 공동보도문 초안을 교환하고 문구 조율작업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밤새 진통을 겪었다.

남북은 성과없이 끝낼 경우 부담이 커다는 인식을 공유, 이날 오전 두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한 데 이어 오후에는 당초 예정했던 전체회의를 뒤로 미룬 채 또다시 실무대표 접촉과 수석대표 접촉을 잇따라 하는 등 24일 새벽까지 막판 줄다리를 밟았다.

◇“진전된 내용 담자”=공동보도문 문구 중 남북 간에 의견차가 가장 큰 것은 역시 핵 문제다. 우리 측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은 이미 8차 회담 공동보도문에 들어가 있는 만큼 더 진전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북측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 가능한 방법으로 조속히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수구 이상의 문구를 공동보도문에 넣자는 게 우리의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회담장을 선전장으로 만들면서까지 ‘민족공조’와 ‘외세배’를 주장해온 북측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합의한 민족공조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우리 측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

으면 남북 협정이 진전될 수 없다”며 북측을 압박하는 등 핵 관련 문구를 놓고 북측과 밤새 줄다리를 밟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중에 착수하지”=이날 회담에서 핵문제와 함께 핵심 의제인 경의·동해선 1단계 연결 공사,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등 ‘3대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쉽게 조율되지 않았다.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물인 3대 현안사업 착수 일정을 국민의 정부 임기 내인 2월 24일 이전으로 공동보도문에 못박자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북측은 “2월 중에 남북 경제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일정 등을 논의하

지”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3대 현안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풀려야 할 ‘군사분계선(MDL) 통한’ 문제도 회담 초기 알려졌던 것과 달리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 측은 ‘조속히 남북 군사 실무회담을 열어 MDL 통과 절차를 타협하는 것’은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담아 넣겠다는 입장이나, 북측은 ‘군부에 건의하겠다’는 선에서 마무리짓자고 오히려 우리 측을 실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관계자는 “공동보도문 문구 조율작업이 쉽지 않다”며 “하지만 관이 깨질 경우의 부담이 너무 커 합의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철회 기자
chlee@joongang.co.kr

10차 장관급회담 4월 평양서

남북대표 공동보도문 “핵 평화해결”...4차 경추위 내달 서울서

남북은 24일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 10차 장관급 회담을 4월 7~10일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나흘에 걸친 9차 장관급 회담(서울 세라톤 워커히호텔)을 끝낸 뒤 공동보도문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경제협력추진위원회 4차 회의를 다음달 11~14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봉조 남측 대표 대변인은 “10차 장관급 회담을 4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다음 정부에서도 장관급 회담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

정됐다”며 “남북 당국간 회담 역사상 10차까지 간 회담은 없었다”고 말했다.

남북은 보도문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6·15공동선언을 계속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한 군사보장 합의 문제는 경추위 4차 회의 이전에 북측이 자세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로 진전되지 못한 경의선 철도 개통,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등은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방북과 경

추위 4차 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일단 미뤄졌다.

그는 핵문제와 관련해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했으며,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북측에 전달하고 평화적 해결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령성 단장 등 북측 회담 대표단은 이날 오전 아시아나항공 편으로 인천공항을 거쳐 중국 베이징으로 떠났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한겨레

2003. 1. 25 (토)

핵 대화해결 실마리 마련

■ 남북 장관급회담 성과

경협 점차 가속도 붙을듯
북, 새정부와 협력 표명

24일 끝난 9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현안인 북핵 문제와 도로 철도 연결문제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 회담은 직후 발표된 임동원 대통령 특사 방북과 연결해 들여다봐야 온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핵 문제와 관련한 공동보도문 내용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정도였다. “북측의 실천적 조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애초 정부의 방침에 비하면 ‘알맹

이’가 없다. 그러나 회담에서 임 특사 방북이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상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임 특사 방북이라는 ‘간접적 정상회담’이 마련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총괄 조정 창구인 경제협력추진위원회 4차 회의를 현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다음달 11~14일(서울)로 바투 잡은 점도 일정상 주목할 만하다. 경협에서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등 3대 경협 현안은 공동보도문에 구체적 일정을 명시하는

데까지 가지 못했지만, 특사 방북이 적절한 성과를 내면 경추위 회의를 거치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사 방북을 계기로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의 가닥을 잡으면, 경추위에서 구체적 사업 추진 일정을 잡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경의선 철도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이 10차 장관급 회담을 차기 정부 집권 시기인 4월에 열기로 합의한 것도 의미가 크다. 2000년 6월 정상회담 이후 지속돼온 남북의 화해협력 노력을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갈 것임을 확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남북회담사에서는 지금껏 한번도 없었다는 당국자의 말처럼 회담의 지속성 담보는 또 하나의 성과라 할 만하다.

이재훈 손원재 기자
wonje@hani.co.kr

北核문제 구체합의 실패

남북장관급회담 폐막 “대화해결 협력” 원칙만 합의

世界日報

2003. 1. 25 (토)

10차회담 4월 평양서

북핵 문제의 안보리 조기 회부 움직임 등 급박한 국제정세속에서 열린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양측은 '핵문제와 경합' 등 2대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양측은 이날 2차 전체회의를 열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서명, 교환하는 선에서 그쳤다. (관련기사 5면)

핵 문제와 관련, 공동보도문은 "핵 문제에 대하여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8차 장관급회담과 달리 '핵'이라는 문구를 보도문에 담아냈지만 핵동결 해제조치 원상복구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철회 등 구체적인 실천조치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의선 연결·개성공단 착공 등 3대 경협사안의 관련인 남북관리구역 내 군사분계선(MDL)통행 문제도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지 못했다.

양측은 다만 ▲6·15 공동선언 준수 이행 ▲경제협력추진위원회 4차 회의의 2월11~14일 개최(서울) ▲제10차 장관급회담 4월7~10일 개최(평양)에 합의했다.

/김기동기자 kidong@segye.com

경향신문

2003. 1. 25 (토)

서울경제

2003. 1. 25 (토)

“핵 평화해결 협력”

남북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남북은 24일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서울 세라타워호텔 호텔에서 9차 장관급회담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양측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오는 2월11~14일 서울에서, 10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인 4월7~10일 평양에서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동보도문에는 "남과 북은 핵문제에 대해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했으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행선 협상 '3박 4일'

• 소득없이 끝난 장관급회담

제9차 장관급회담은 의협상 별다른 소득없이 24일 막을 내렸다. 남북은 3박4일간의 열띤 협상에도 불구하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계속 추진한다는 '빈약한' 공동보도문을 내놓는 데 그쳤다. 남북이 특사 파견을 앞두고 서로 탐색전으로 일관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관측된다.

◇평행선 달린 협안=최대 현안인 핵문제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0월의 8차 평양 장관급회담에서 확인한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만족해야 했다.

남측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목소리를 북측에 전달한 뒤 ▲핵포기 ▲핵동결 해제조치 원상회복 ▲핵확산금지조약탈퇴(NPT) 철회 등을 분명히 요구했다. 해법을 도출하기보다는 특사 파견전 남측의 입장을 정확히 북측에 전달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북측 역시 '핵을 개발할 의사가 없다' '민중공조로 대응해야 한다' '핵활동은 전력생산 목적에 국한된다'는 기본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북측은 또 회담 내내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기초발안문과 노동신문을 남측 기자단에 전달하는 등 선전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유로관광 등 3대 경협 현안에 대해서도 현 정부내 마무리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남측은 미타결되어 있는 남북교류 사업을 새정부 출범 전에 마무리짓겠다는 뜻을 전했고, 북측은 집짓 여유를 부렸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통행문제를

남북간의 대화기조 새정부 연결은 성과

둘러싼 유엔사와의 험거루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문제에 대한 군사당국자 협의와 합의가 없이는 경협의 실질적 진전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때문으로 보인다.

남측 대표단 대변인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정책실장은 "경협 사안은 MDL 문제와 연관이 있는 만큼 앞으로 북한이 좀더 연구를 한 뒤 상황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특사 파견 기간 동안 경협사안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뒤 다음달 1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경제협력추진위 4차 회의에서 구체적 입장을 미련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의 긍정적 성과=남북이 국민의 정부가 이뤄놓은 남북간 대화기조를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간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은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양측이 4월7~10일 제10차 장관급회담을 평양에서 갖기로 한 것은 이같은 맥락이다.

양측은 또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통해 구축한 남북관계 발전을 긍정 평가하고 공동선언을 계속 준수하기로 하는 등 대화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회담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도 남북간 실질적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동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국민일보

2003. 1. 25 (토)



“평양서 다시 만남이다” 남북장관급회담 정세현 남측수석대표(왼쪽)가 24일 오전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회담을 마치고 평양으로 귀환하는 김영성 북측대표단장을 환송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또 만남이다”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세라론워커힐호텔에서 회담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김영성 북측 단장을 환송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핵문제 평화해결 협력” 남북장관회담 공동보도문 10차회담 4월7일 평양서

남북은 24일 오전 5시40분 서울 세라론워커힐호텔에서 9차 장관급회담 2차 전체회의를 열고 6·15 공동선언을 계속 준수하고 이행하는 한편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또 경제협력추진위원회 4차 회의를 내달 11~14일 서울에서, 10차 장관급회담을 4월 7~11일 평양에서 각각 개최기로 했다. 남측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며 △핵개발 계획 포기선 △핵동결 해제조치 원상복구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 철회 등을 북측에 요구했으나 북측은 “핵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 결정한 입장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성동기기자 espril@donga.com

장관급회담 합의도출 실패

핵문제등 이견 “평화해결” 원칙만 확인

4월 평양서 10차회담 합의

남북한은 24일 오전 제9차 장관급회담을 마무리하면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남측은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양측 회담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보도문을 채택, 공식 발표했다. > 관련기사 4면 남측은 공동보도문에서 “핵문제에 대해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측은 핵개발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라는 남측 요구를 북측이 거부함에 따라 진행된 합의가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이봉조 남측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핵문제에 관한 남북의 입장차와 시각이 달라 집점을 찾지 못했으나 평화적 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점은 그나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남측은 6·15 공동선언을 계속 준수·이행해 나가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제4차 회의를 내달 11~14일 서울에서 개최하고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4월7~10일 평양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1단계 연결,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등 3대 경제협 현안 사업과 관련해 남측은 현 정부 임기중인 내달중 구체적인 날짜를 공동보도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구체적 일정을 잡지는 못했다. 박주호기자

경향신문

2003. 1. 25 (토)

“남북, 핵 평화해결 협력”

장관급회담...10차회담은 4월7일 평양서

남북은 24일 제9차 장관급회담을 마치며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6·15 공동선언을 계속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 관련기사 3면 남측은 아울러 2월11일부터 14일까지 제4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제10차 장관급회담을 4월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갖기로 했다. 경의선·동해선 1단계 연결,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등 3대 경제협 현안사업에 대해 남측은 계속 추진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2월 중 구체적인 날짜를 공동보도문에 명시하자는 남측 제안에 북측이 소극적 태도로 일해 구체적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용욱기자

'核'에 막혀 협상 빈보따리

9차 남북장관급회담 결산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최대 관심사인 핵문제의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기 못하는 등 알맹이 없는 회담으로 끝났다.

뒤늦게 알게 된 것이지만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를 대북특사로 파견기로 양측 간 물밑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서 '틀러리회담'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이번 장관급회담은 북한이 '민족공조'를 겨냥한 장(場)이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북한이 첫날부터 전체회의를 '공개'하자고 역지를 부린 것부터가 그런 의도를 반영해 주고 있다. 양측이 이번에 합의한 것이라고는 2월 경주의 회의와 4월 평양 장관급회담 개최 등 형식적인 것뿐이다.

◆핵해법 못 찾아=정부가 회담 내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선언 철회와 핵동결 해제조치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수사(修辭)만 이끌어냈다. 굳이 성과라 한다면 지난 8차 장관급회담과 달리 공동보도문에 '핵문제'를 명시, 남측 및 국제사회의 우려를 북측에 주지시킨 정도다.

하지만 정부의 당초 기대처럼 턱없이 모자란데다 오히려 북측은 이를 곧바로 대내 선전용으로 활용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령성 북측 단장은 24일 "2003년 북남관계와 민족문제를 6·15선언 근본정신에 따라 잘 해나갈 수

있는 기쁨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북한의 민족공조 원칙을 관찰시켰다는 만족감의 표시로 보인다.

◆후회한 남북 경험=해를 넘긴 ▲경의선 철도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등 3대 경험

협사업은 구체적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핵문제 진전이 경험 협상화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핵문제를 북미 구도로 몰아가면서 민족공조를 의인 북한이 경험 진전의 관건인 비무장지대(DMZ)내 군사분계선(MDL) 통행문제를 선뜻 양보할 리 없었다. 남측이 국민의 정부 이전 경험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음달 11일 열리는 제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일괄타결'을 요구했지만 일정을 정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향후 전망=김대중 정부 임기를 1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다음 회담 일정을 합의, 남북협안을 차기 정부가 논의할 토대를 마련했다. 4월 7일부터 제10차 장관급회담을 평양에서 갖고 경주위 일정까지 합의, 현 정부의 대화기조를 유지하는 '가고회담' 역할은 일정부분 수행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추후 회담에서 남측이 주도적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김기동기자
kidong@segye.com

核해법 시각차 '평화적 해결' 원칙만 합의
北, MDL문제등 기존입장 고수 경험 '뒷걸음'
차기회담 일정은 확정... 양국현안 새정부로

世界日報

2003. 1. 25 (토)

北측 기존입장 고수 핵 이견 끝내 못 좁혀

남북 장관급회담 성과·전망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린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남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남측은 회담 첫날부터 좁은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안임을 강조하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 핵문제 해결없는 남북관계에서 진전이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남측은 회담 내내 북측에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철회, 핵동결 해제조치의 원상회복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담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북측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는 지난 10일 NPT탈퇴 때의 입장과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지난해 10월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합의사항을 거듭 밝히면서 남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측은 오히려 남과 북이 외세의 압력에 맞서 대항해야 한다는 '민족공조'를 강조, 장관급 회담을 통해 핵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장을 남한국민과 국제사회에 홍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회담은 남북이 공동보도문에 담을 핵문제 항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나흘간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식으로 진행됐다. 협상이 난항에 부딪히면서 당초 성사될 것으로 기대됐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북측대표단의 면담도 이뤄지지 못했다.

양측은 23일 오전과 오후 실무대표 접촉과 수석대표 접촉을 잇따라 가져 조율을 시

나흘간 지루한 줄다리기를 불구 남측 요구사항 거의 반영안돼

도했으나 실패를 거듭, 한때 회담장 안팎에서는 공동보도문이 작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양측은 발생 협상 끝에 결국 24일 새벽 5시가 넘어 공동보도문에 합의, 2차 전체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은 핵문제와 관련, "남과 북은 핵문제에 대하여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고만 밝히며 남측의 요구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북측이 회담 내내 강조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준수와 이행을 공동보도문에 명시해 보기에 따라서는 북측의 민족공조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 핵문제에 발목이 잡혀 당초 남측이 현 정부 임기내에 마무리짓기로 계획했던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등 주요 3대 경험사업에 대한 향후 일정을 합의하는데도 실패했다.

하지만 북측이 핵문제를 남북대화의 주요제일인 장관급회담의 주요의제로 다루는데 반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질문의 성공'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핵문제에 대한 북측의 보다 진전된 태도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북측이 그동안 핵문제의 남북대국간 논의의 회피해 온 점을 감안하면 성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호기자 jhpark@kmib.co.kr

국민일보

2003. 1. 25 (토)

대통령 특사 방북

임동원 核특사 27일 평양에

金대통령 친서 김정일에 전달... 인수위 이종석위원 동행

남북 동시 발표... 미국 등과도 사전 협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임동원(林東源·사진)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북한에 파견키로 했다고 박선숙(朴仙淑)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차대변인은 24일 "이번 방북은 남북 합의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미국 등 우방들과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차대변인은 이어 "이번 核특사의 방북에는 노무현(盧武鉉)대통령당선자측을 대표해 이종석(李鍾奭)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이 동행하며, 임성준(任晟準)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3~4명이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의 이번 대북 특사 파견 결정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해결방안을 남북 간 직접 대화를 통해 모색하기 위한 것이어서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또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담판과 盧당선자와의 정상회담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총력 외교를 펼쳤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 간 직접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核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金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金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남측 정부가 기울여온 국제적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金위원장에게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盧당선자도 李위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李위원은 "盧당선자의 친서나 메시지 전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평양방송도 이날 오후 우리 정부와 같은 시각에 核특사의 방북 사실을 보도했다. 박선숙 기자

jbjean@joongang.co.kr

한겨레

2003. 1. 25 (토)

임동원특사 27일 북한방문

김위원장과 '북핵' 논의... 노당선자측 대표 이종석씨 동행

金대통령 친서 전달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7일 북한에 보내기로 했다.

이번 임 특사 일행 방북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측 대표로 이종석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함께 가며,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수행한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밝혔다. 북한 평양방송도 이날 임 특사 일행의 평양 방문을 공식 발표했다. > 관련기사 3면

임 특보는 김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방북하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 김



임동원 특사



이종석 인수위원

이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공개적인 합의 끝에 특사를 파견한 것은 2000년 9월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의 남쪽 방문과 지난해 4월 임 특사의 방북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임 특보 일행은 27일 오전

항공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해 2박3일 동안 머문 뒤 29일 돌아올 예정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서는 일정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대북특사 파견은 지난 10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직후 곧바로 결정

된 뒤 북한에 통보됐으며, 북한은 서울에서 열린 제9차 남북 장관급 회담 관계자를 통해 24일 새벽 대북특사 수용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의 특사 파견 결정은 북핵 문제로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

북·일 사이에 긴장상태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이 주도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점을 찾아내려는 의지표명으로 해석된다. 특히 노당선자 측을 대표한 사실상의 특사도 함께 파견되는 만큼 북핵 문제를 풀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특사 방북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핵문제와 남북관계 제반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우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미·일·중·러·유럽연합 등과 총력외교를 펼쳤다"며 "그런 연장선에서 남북 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성 기자 yskim@hani.co.kr

임동원 北核특사 27일 訪北

김정일과 면담... 金대통령 친서 전달 盧당선자측 이종석 인수위원도 동행



◇임동원 특보 ◇이종석 인수위원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 통일특보가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임 특사의 방북 사실은 24일 오후 3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종석(李鍾奭) 외교통일안보분과 인수위원과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임 특사와 함께 방북한다.

임 특사가 북한에 가는 이유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것과 함께 2월 24일까지의 김 대통령의 임기 전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유로관광 등 남북한 간 현안들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24일 말했다.

임 특사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직접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함께 북한 핵문제가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김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불거진 북한 핵문제가 해가 바뀌어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 10일 북측에 특사 파견을 제의했으며, 북한은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장관급회담 기간 중 북측 대표단을 통해 수락 의

사를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임 특사 일행은 27일 항공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한다. / 金仁執기자 ginko@chosun.com

임동원특사 27일 방북

南北 동시발표...“핵문제·남북관계 현안 논의”

김정일 면담 김대통령 친서 전달기로 盧당선자측 이종석 인수위원도 ‘동행’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사진)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7일 북한에 파견키로 했다. / 관련기사 3면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임특보가 27일부터 평양을 방문한다”면서 “이번 특사 방북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핵문제 및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평양방송도 이날 오후 임특사 방북 예정 사실을 보도했다.

임특보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북핵문제와 관련한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특보 방북에는 임성준(任晟準)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이 수행하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의 이종석(李鍾奭)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이 동행한다. 노당선자의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특사와 북측 사이에 대화가 잘 이뤄져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 파견은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앞둔 시점에서 남북 수뇌간 간접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미·일·중·러·유럽연합(EU) 등과의 협력 논의내용을 설명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특보는 또 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최고지도부들 만난 뒤 김위원장의 북핵사태 해결방안에 대한 메시지도 받아들여 예정이다.

노당선자측 인사로는 처음 북한측과 공식대면하는 이종석 인수위원은 북핵문제에 대한 노당선자측의 메시지를 북한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임특보는 27일 오전 전세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 2박3일간 북한에 머문 뒤 29일 귀환할 예정이지만 북한 인사들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귀환시기가 30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이 나온 지난 10일 북한측에 대북특사 파견을 제의했으며, 북한측은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 과정에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근기자

harubang@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3. 1. 25 (토)

임동원 北核특사 27일 방북

南北 합의... 김정일 면담 김대통령친서 전달

盧측 이종석씨 동행... 임성준수석 수행
서해 직항로 이용 입북... 29일 귀환 예정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임동원(林東源) 대통령평일외교안보특보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7일 북한에 파견한다. 임 특보는 29일까지 2박3일간 북한에 머물 예정이다.

박선숙(朴仙淑)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24일 이같이 발표하고 "이번 특사 방북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서 북한 핵 문제 및 남북관계 등 제반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A3면에 관련기사
임 특보는 방북 기간 중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북 핵 문제와 관련한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 방북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측의 이종석(李鍾奭·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이 동행하며 임성준(任成準)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수행한다. 이 위원은 북 핵 문제에 관한 노 당선자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관련국들과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온 점을 설명하고 북한의 '가시적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비서관은 "특사 파견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남북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의 길을 찾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0일 북측에 특사 파견을 제의했고 북측은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



임동원씨



이종석씨



임성준씨

과정에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특사 파견과 관련해 미국 일본 등 우방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박 수석비서관은 전했다.

한편 북한 평양방송도 24일 남북의 요청에 따라 임 특보가 대통령 특사로 27일부터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東亞日報

2003. 1. 25 (토)

임동원 특사 27일 방북

核·2차 정상회담 협의
김정일 면담 친서전달
인수위 이종석씨 동행
盧메시지도 전달 예정

국민일보

2003. 1. 25 (토)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7일 북한에 파견키로 했다고 남측이 24일 공동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임특보가 27일부터 평양을 방문한다"면서 "이번 특사 방북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핵 문제 및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며, 우방과도 충분히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평양방송도 "남측 요청에 따라 김대통령의 특사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이 27일부터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임특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북 핵 문제와 관련한 김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사 방북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의 이종석 인수위원이 동행해 북 핵 및 남북관계에 관한 노당선자의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임특보를 수행한다.

임특보는 또 핵 문제 외에 2차 남북 정상회담과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방북을 통해 노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이후 2차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구체적 일정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특보는 27일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 사흘간 머문 뒤 29일 귀환할 예정이지만 북측 인사 면담 결과

에 따라 귀환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북측에 특사 파견을 제의했고, 북측은 서울에서 열린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 과정에서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편 노당선자는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 핵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더라도 거기서 제재 문제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면서 "대단히 심각한 긴장을 가져오고, 전쟁 위험을 높이는 제재 문제를 결정하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당선자는 취임 이후 김정일 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거절당해 창피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과감히 제안하고 대화를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 전석운기자

임동원특사 27일 訪北

남북동시발표 金正일면담...核-남북현안 논의

김대통령 친서전달...가시적조치 요구키로 임성준수석-인수위 이종석위원도 동행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가 김대중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7일부터 평양을 방문한다고 남북 양측이 24일 오후 동시에 발표했다. 임 특보 방북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의 이종석(李鍾奭) 인수위원이 동행하며 임성준(任成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수행한다. (관련기사 3면)

임 특보는 27일 오전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 2박3일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등 북한 고위 인사들과 면담하고 29일 귀환할 예정이지만 귀환시기가 30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임 특보는

김 위원장에게 북핵문제와 관련한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가 27일부터 평양을 방문한다"면서 "이번 특사 방북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서, 핵문제 및 남북관계 재반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 결정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핵 문제 해결방안을 남북간 직접 대화를 통해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특사 방북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임동원 특사



◇임성준 수석



◇이종석 위원

다. 김 대통령은 임 특보가 휴대할 친서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온 점을 설명하고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할 전망이다.

노 당선자측의 이종석 위원은

북핵 문제에 대한 노 당선자측의 메시지를 북한측에 전달하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방남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측에 대북특사 파견을 제의했고 북한측은 서울에서 열린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 과정에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북한 평양방송은 임동원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27일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평양방송은 "남측의 요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역이 1월 27일부터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고 짧막하게 전했다.

/정승욱·조정진기자
jswook@segye.com

한국경제

2003. 1. 25 (토)

임동원 특사 27일 訪北

김정일 위원장 면담



김대중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사진)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오는 27일부터 3일간 북한에 파견한다. (관련기사 A2면)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이번 특사 방북은 남북한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임 특사는 방북기간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북핵문제와 관련한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 방북에는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대통령직 인수위 이종석 위원이 동행한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외교적 노력을 해왔으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남북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의 길을 찾고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

경향신문

2003. 1. 25 (토)

盧의중 잘아는 '햇별' 이론가

이종석위원은 누구

이종석(李鍾奭·44·사진) 인수위원은 햇별정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온 소장학자다. "당선자와는 후보시절부터 남북관계 등에 대해 토론한 만큼 이번에 따로 길게 얘기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정도로 노당선자의 의중을 잘 알고 있다. 노당선자의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하게 전달할 책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전문가로 인수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정과제를 맡고 있으



며 당선자 '북핵 태스크포스' 팀에 참여해 왔다. 임동원 대북특사외도 개인적으로 잘 안다. 2000년 6·15 정상회담 당시 수협위원으로 임특사와 함께 방북하기도 했다. 그간 북한을 세차례 다녀왔고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이다. 최재명기자 cjyoung@kyunghyang.com

임동원특사 27일 訪北

南北 동시 발표... 北核·제반현안 논의

김정일위원장 면담... 김대통령 친서 전달

盧측 이종석 인수위원·임성준 수석 수행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 통일특보가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7일 북한에 파견된다. ▶관련기사 3면

이번 특사 방북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후 "임 특보가 27일부터 평양

을 방문한다."면서 "이번 특사 방북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핵 문제 및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평양방송도 같은 시각 "남측의 요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 임동원 특보가 1월27일부터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다.

임 특보는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북핵 문제와



임동원 특보

(李鍾奭) 인수위원이 동행하며, 임성준(任成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수행한다.

김 대통령은 친서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등 관련 국들과의 외교

관련한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 방북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의 이종석

적 노력을 경주해온 점을 설명하고 김 위원장에게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주도록 거듭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석 인수위원은 오후 기자들과 만나 "노 당선자의 북핵 해결 3대 원칙인 ▲핵 개발 불용 ▲대화로 평화적 해결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 등을 북측에 제시할 것"이라며 "특히 북측에 '핵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북측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오종연 김상언기자

poongymn@kdaily.com
2면으로 [A

경향신문

▼ 2003. 1. 25 (토)



제9차 정관금회담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왼쪽)가 24일 오전 서울 워커힌 호텔에서 북한으로 출발하는 김경성 북측 단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위원은 노 당선자의 친서를 휴대할지, 김 위원장과 노 당선자의 회담을 제의할지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27일 오전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 2박3일간 북한에 머문 뒤 29일 귀환할 예정이지만 북한 인사들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귀환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북핵측에 대북 특사 파견을 제의했고, 북한측은 최근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核특사 임동원 27일 訪北

盧측 이종석 인수위원회도 동행

한국일보

2003. 1. 25 (토)

김정일 면담... 金대통령 친서 전달 장관급회담 “核 평화해결 협력” 합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파견한다고 남측이 24일 공동 발표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에서는 이종석(李鍾奭)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특사단에 참가하며,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임 특보를 수행한다.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북 특사 파견 합의를 발표한 뒤 “핵 문제 및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평양방송도 “남측의 요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 임동원 특보가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2·3·4면

임 특보는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도 북한 핵 문제 및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노 당선자의 메시지를 전달 것으로 보인다.

특사 파견은 북한 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앞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선(先) 핵 포기를 전제로 체제보장 및 에너지·식량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클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로 18·21일 방북한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최성춘(崔成春)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중국 러시아 미국이 함께 대북 안전보장을 하는 방안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마·일·중·러 및 유럽 연합(EU) 등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특사 파견 문제를 미국 일본 등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임 특보는 27일 오전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 2박3일간 북한에 머문 뒤 29일 귀환할 예정이지만, 북한 인사들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귀환시기가 30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임동원 특보 이종석 인수위원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10일 북한측에 대북특사 파견을 제의했고 북측은 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9차 장관급 회담 도중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측은 이날 폐막한 장관급 회담에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남측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10차 회담을 노무현 정부 출범 후인 4월7~10일 평양에서, 4차 경협추진위를 2월11~14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중앙일보

2003. 1. 25 (토)

“盧당선자 의지 북한에 전달”

北에 동행 이종석 인수위원 문답

대북 특사단에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를 대표해 이종석(李鍾奭·사진)인추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이 포함됐다. 盧당선자가李위원을 통해 전달할 대북 메시지가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李위원은 24일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정부를 성원하고자 하는 당선자의 뜻이 담긴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조율 등은 盧당선자 측이 아닌 현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盧당선자의 친서나 메시지를 가져가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번에는 현 정부가 노력 중이니 당선자도 나름대로 성원한다는 의미가 크다. 동행 자체가 대화로 풀겠다는 뜻을 북한에 전하는 게 될 것이다.”

-북측에 핵개발 포기 등을 요구하나.

“그런 일은 현 정부가 할 일이다.”

-어떻게 특사단에 포함됐다.

“청와대가 인수위에서 한명이 같이 가면 어떻겠냐고 제의해 왔고, 盧당선자가 이를 수용했다.”

-물밑 작업을 끝내고 방북하나.

“알 수 없고, 그런 말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李위원은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의 수행팀에 참여하는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 집행과정에 관여해 왔다. 햇볕정책을 지지해온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소장 학자로 임동원 특사와의 가깝다.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매일경제 2003. 1. 25 (토)

임동원 對北특사 27일 파견

盧 “무조건 정상회담 갖자”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가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 동안 평양을 방문한다.

▶관련기사 5면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김 대통령 특사로 임 특보가 27일부터 평양을 방문한다”며 “이번 특사 파견은 남북간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핵문제와 남북관계



를 민담하고 김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 방북에는 노무현 대통령

제반 현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임 특보는 27일 오전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당선자측을 대표해 이종석 인수위원이 동행하며 임성준 외교안보수석과 실무자 2명이 수행한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4일 미국 CNN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취임 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공식 만남을 제안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런 저런 문제를 무릅쓰고 만나자고 제안하고 대화를 하려고 한다”며 무조건적인 접촉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남북한은 24일 장관급 회담을 마치면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등 양측 모두 만족을 보였다.

최기영기자 choiky@mk.co.kr
윤상환기자 shyoan@mk.co.kr

“核, 남북이 당사자...담판 시도”

이종석 인수위원 盧측 대표로 동행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제의할듯

대북특사 파견은 북한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이 기회를 빌려 남북정상회담을 타진하고 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에 노 당선자 특사로 참석한 정동영 의원은 '북한판 마셜 플랜' 구상을 밝히면서 러시아에서 한반도를 관통하는 가스관 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되고 있다. 마치 2000년 6·15정상회담 전인 그해 3월 김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통해 남북대화와 대북지원을 거론하던 때를 연상시킨다.

북핵위기 해소를 위해 한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임 특사 임명의 방북결과가 말해 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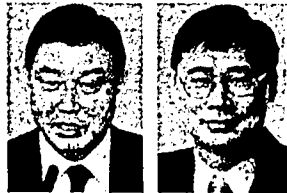
◇D.J의 마지막 승부수=대북특사 파견은 김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이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펼쳐온 총력외교의 마지막 카드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지난해 10월 로스카보스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키로 합의한 뒤 정부는 미·일·중·러·유럽연합(EU)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총력외교를 펼쳐왔다"면서 "그러한 연장선에서 남북간에 직접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특사 파

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석 인수위원 등이 동행하는 것은 차기 정부와의 교체기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박 대변인은 "(노무현)당선자와 정부는 핵문제에 대해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가야 하고, 또 남북관계 연속성이란 차원에서 도 의미할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핵문제에 대해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김 위원장 면담은)확정되지 않았다. 핵문



임성준 외교안보수석 이종석 인수위원

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관해 대통령 특사가 북측에 뜻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친서는)아마도 갖고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동원 대북특사는 김 위원장에 미국측에 제기되는 문서형식으로 다자간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북핵특사로 방북했던 알렉산더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다자안전보장방

안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노 당선자의 메시지=노 당선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담판과 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긴장국면 돌파를 구상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23일 아사히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체제안정과 경제지원을 보장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후보 시절 당선되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북한도 '노무현 체제'의 출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성사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이종석 인수위원이 노 당선자의 메시지를 북한 고위층에 전하는 동시에 정권과 관계없이 남북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다루나갈 것이라는 점을 북한측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위원은 "당선자들이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장관급회담은 둘러리=24일 오전 막을 내린 9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일행이 없는 회담'이었다. 새로 진전되거나 합의된 사안이 거의 없다.

의미를 찾는다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 정도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 남북한 양측이 동시에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특사가 대북특사로 방북한다는 것을 발표했다. 양측은 장관급회담에 대표를 둘러리로 내세워 특사 회담을 앞두고 사전 탐색전을 벌인 셈이다.

윤상환기자 shyoan@mk.co.kr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끝난 24일 오전 웨리톤 워커히호텔에서 정세현 통일부 장관(왼쪽)의 배웅을 받으며 김형성 북측 단장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서울경제

2003. 1. 25 (토)

임동원 특사 27일 訪北

김정일 면담 北核등 논의 盧 "취임후 정상회담 제의"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임동원(사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특사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7일 북한에 파견키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5면

임 특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김대

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 방북에는 임 특보 외에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의 이종석 인수위원이 동행한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남북간 합의에 따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임동원 외교안보특별특사가 27일부터 평양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김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 결정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남북간 직접 대화를 통해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특사 방북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날 미국 CNN 방송 회견에서 다음 달 25일 대통령 취임이후 북한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북핵 돌파구 찾기 적극행보

■ 대북특사 의미·배경

김대중 대통령이 임동원 외교안보 통일특보를 북한에 특사로 보내기로 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승부수 성격을 지닌다. 특히 북한이 우리쪽의 특사 방문 제의를 수용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남북이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 대통령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부터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해 왔으나, 지난 10일 발표된 북한 정부의 성명을 보고 최종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당시 성명에서 핵무기들 만들 계획이 없으며, 북-미 간 별도 검증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사 파견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임 특사 일행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쪽을 대표하는 이종석 인수위원이 포함된 점이다. 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퇴임 전에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를 터놓고 퇴임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노 당선자 쪽으로는 앞으로 5년을 이어갈 새 관계의 다리를 놓는다는 의미가 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의 인수인계인 셈이다.

노 당선자 쪽은 '이번 특사는 김 대통령의 특사인 만큼 노 당선자의 친서는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특사 자격으로 이종석 인수위원을 파견함으로써 간접적이지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첫 대화'를 갖고 자신의 대북 구상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으로서도 김 대통령에 이어 노 당선자와도 기존의 남북관계 흐름을 이어갈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전 서울 세라리온 워커히호텔에서 제9차 남북 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뒤 정세현 남북 대표가 인천공항으로 떠나는 김경성 북북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남북 주도로 해법 도출 관심 새정부 '대북정책' 인수인계

관심의 초점은 임 특보 일행이 이번 방북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북핵 해법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모아진다. 또한 노 당선자가 최근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특사단 방북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논의될지도 주요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 특사 일행은 이번 방북기간에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와 미국의 '핵 폐기 먼저, 대화 나중' 입장과 관련한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통령은 그동안 북쪽에 "평화적 해결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 북한이 핵 폐기와 관련된 가지적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 노 당선자 쪽도 △북한 핵개발 불인정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남한의 적극적 개입 등의 원칙

을 제시하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대규모 경제지원을 해야 한다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따라 특사단은 이번 방북에서 북한이 핵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줄 경우 미국쪽에 북한의 체제보장을 서면으로 보장하도록 설득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남쪽이 어떻게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 특사는 특히 이담 초 미국을 방문한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방미 결과를 북한 쪽에 전달하고, 북한과 미국의 견해 차이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성 기자 yskim@hani.co.kr

북한에 특사로 파견되는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는 유난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인연이 깊다.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모두 네번째 면담이 된다.

임 특사는 2000년 6·15 남북 정상 회담에 앞서 국가정보원장 신분으로 5월에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사전 협의를 한 뒤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때 수행했다. 또 '9·11 테러' 이후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자 지난해 4월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해 다시 대화 국면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종석 대통령직 인수위원은 주체 사상 등 북한 문제에 정통한 개혁 성향의 소장격자로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

이 위원은 노무현 당선자의 후보

■ 임동원 특사·이종석 인수위원

임 특사, 김위원장 네번째 면담 이 "북에 줄 보따리는 현정부 몫"

시절부터 대북관계에 관한 폭넓은 조언을 통해 당선자의 북핵 해법 3원칙 정립에 큰 영향을 끼쳤고, 최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해 해법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1995년부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일해 왔고,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 수행팀에 참여하는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 집행 과정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 위원은 24일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에 대한 노 당선자의 지원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임 특사와 동행하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노 당선자가 북한에 전달 메시지나 특별한 임무를 줬는가?

="임 특사를 동행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을 성원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선자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당선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든 만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런 의지는 신문이나 공중파를 통해 이미 북한에 전달됐을 것이다.

-미국의 북한체제 보장 약속 등이 제시되나?

="임 특사가 그런 문제를 하러 가는 것이다. 내 역할은 지원이다.

-북한에 풀어줄 보따리가 있나?

="보따리가 있다면 현 정부가 풀어야 한다.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지원하는 게 옳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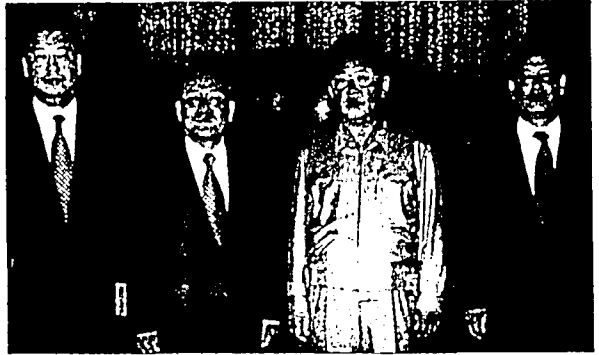
한반도 '핵구름' 돌파구 찾나

대북특사 파견 의미·과제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대표를 대북 특사로 파견기로 한 것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 환경은 물론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임북보의 대북 파견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의 이종석 인수위원을 동행케 함으로써 차기정부와 남북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

새정부와 관계 연속성 신경 개성공단·육로관광도 논의

대북 특사가 북한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북한 핵문제를 풀을 수 있다. 핵 문제를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면서 현재 핵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핵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유 기정 사실화하면서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압박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핵 사태 해법 마련에 주력할 것이 확실시된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대북 특사 파견은 남북한 대화를 통해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 파견을 통해 김위원장이 핵사태를 어떻게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해 4월 대북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국민일보 자료사진

이해하고 있고,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경우 이것만도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핵문제는 북-미간 문제이며,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는 게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그 이상의 성과는 거두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정부는 핵문제의 민감성을 감안해 이담초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미·일 연세 방문 때 양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대북 특사 파견 문제를 협의하는 등 3국 공조를 유지하는 데에도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핵문제는 별개로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육로관광 문제도 주안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금강산 육로관광이 이뤄지고 개성공단사업도 골격이 잡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핵문제와 개성공단, 금강산 육로관광 문제에 관한 입장을 담은 친서들을 김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2차 남북 정상회담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2차 정상회담은 노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김위원장과 회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당선자측의 어휘인이 임북보와 동행하는 이유로 노당선자와 김위원장의 회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2차 정상회담 문제는 임기가 끝나가는 현 정부 인사가 북핵과 논의하기 걸려온 문제여서 인수위측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며 "특사 방북과 2차 정상회담에 관한 구체적 일정을 갖고 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진홍기자 jhkim@kmb.co.kr

"美·日과 충분히 협의"

박선숙 대변인 일문일답

-정차권에 설명했다.
△중일부장관이 여야 정당과 국회 통일외교위원장에게 전화로 통보했다.
-어린 의미가 있다.
△지난해 10월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한·미·일 3국 정상들이 만나 북한 핵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해 합의했다. 그같은 3국의 합의를 출발점으로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그동안 미, 일, 중, 러, 유럽연합(EU) 등과 총력외교를 펼쳐왔다. 그 연장선에서 남북간 직접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임성준 외교안보수석과 이종석 인수위원이 동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은 북핵의 회신이 온 뒤 당선자측과 비교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당선자측과의 협의를 통해 당선자측 대표가 함께 가기로 한 것이다. 남북관계의 연속성이란 차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미국 등 주변국과도 협의했다.
△지난 1월초 임성준 수석은 미국과 일본에 보내 평화적 해결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 바 있다. 특사파견에 관해서는 우방과 충분히 협의된 일이다.
-채유기장은.
△대체로 2,3일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확정된 것은 없다.
-기시 누구를 만나.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 특사 파견 하겠다고 제안했고 북측이 그에 동의해서 진행되는 일이다. 핵 문제 등 남북관계 재변천에 관해서 대통령 특사가 북측에 뜻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김진홍기자

햇볕정책 핵심참모... 오래전부터 호흡맞춰

임동원·이종석·임성준 누구-

대북특사로 임명된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대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의 일관자이던 동시에 집행자이다. 육사와 서울대 철학과를 나온 임북보는 외교안보연구원장,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통일원 차관을 거친 뒤 이태평화재단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대외정책 브레인으로서 자리 매김했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특보로 자리를 바꿔가며 대북정책을 주도해 왔다. 임북보는 지난해 4월에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이종석 인수위원



임성준 외교안보수석

교착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킨 적이 있다. 방북 동행자로 걸정된 이종석 대통령직 인수위원은 임북보와 각별한 사이다. 용산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이위원은 상대에서 조선노동당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국내파 학자다.

두 사람은 1990년대 중반 세종연구소에서 각각 객원연구위원과 연구위원으로 함께 일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위원은 각종 세미나 참석과 왕성한 언론 기고문 통해 햇볕정책 전도사관 법명을 얻었다. 임북보는 햇볕정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위원을 적극적으로 챙겼고, 이위원도 임북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이위원은 임북보의 배려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임북보급 수행하게 된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외교부 차관보급 지낸 정종외교관이다. 대북 및 대외정책에서 임북보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왔으며 유 1월 미국, 일본을 방문해 양국 핵심 관계자들과 북핵 문제를 조율했다. 이번엔 미국과 일본 정부의 입장을 북측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도영기자

임동원 특사과견 배경·전망

김대중 대통령이 임동원 외교안보특별위원을 대북 특사로 파견하는 것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 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월 임 특보의 특사 과

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남북관계를 전면 원하고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북·미 대화의 물꼬를 텅텅 것처럼 극적인 반전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 직접 만나 담판

北核해결 극적反轉 기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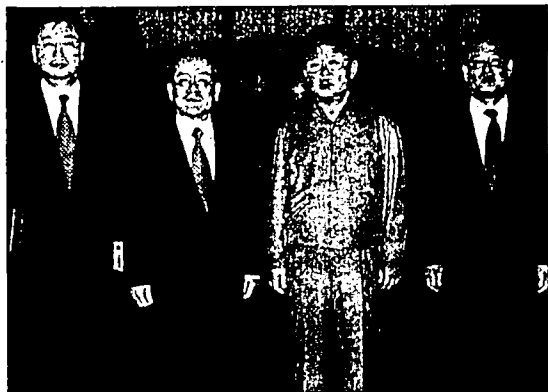
2003. 1. 25 (토)

◆파견 배경=특사 파견은 북·미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핵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으로부터 일정 부분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특사를 파견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설득하고 나섰지만 가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 특보를 보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직접 담판지도 록 하는 게 핵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북한의 핵개발 계획 추진 파문과 핵시설 동결해제 선언 이후 극도의 긴장관계를 보여왔던 북한과 미국은 최근 대화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미국은 북한 체제 서면 보장과 '과감한 경제적 지원'의 뜻도 밝혔다. 북한도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등 다소 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전제조건으로 '선(先) 핵폐기'를 고수하고 있고 북한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할 경우 양측이 마주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도 특사 파견의 배경으로 보인다. 한정부 임기 내에 북



임동원 특보(왼쪽 두번째)가 지난해 4월 대통령특사로 방북했을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경지로서진

핵 해결의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도 반영돼 있다.

◆전망=임 특보의 방북활동 성공 여부는 북한이 한 걸음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북·미 양측이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는 보이고 있지만 서로 상대방에게 먼저 '신뢰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측이 일단 임 특보의 방북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

는 임 특보의 방북 이후 미국도 집중 설득, 북·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북한이 임 특보의 방북을 계기로 핵문제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보이는 대신 북의 입장을 한·미에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을 설득할 명분을 잃게 되고 북·미 관계는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근·홍영식 기자
ygkim@hankyung.com

盧당선자 “유엔 對北제재 반대”

김정일 위원장과 평양서도 회담가능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4일 “북한 문제가 UN에 상정되더라도 제재문제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권고하고 각국의 노력을 서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UN의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가 점차 강화되었을 때 대단히 심각한 긴장을 가져오게 되며 그것은 전쟁의 위험

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당선자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아무 조건없이 만날 수 있다”면서 “혹시 거절당해서 국민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제안하고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서, 또 북한 국민의 고통스러운 상

황에 대해 김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의 문제와 북핵문제를 푸는 현실적 방법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 당선자는 24일 자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반드시 서울에서 해야 한다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면서 “조건이 맞으면 평양에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남북 직접협상 '核돌파구' 모색

'北 NPT 탈퇴' 직후 우리가 먼저 제안 체제보장·에너지 등 일괄타결 논의 유엔 안보리 회부앞둔 시점도 눈길

對北 특사 파견

■ 의미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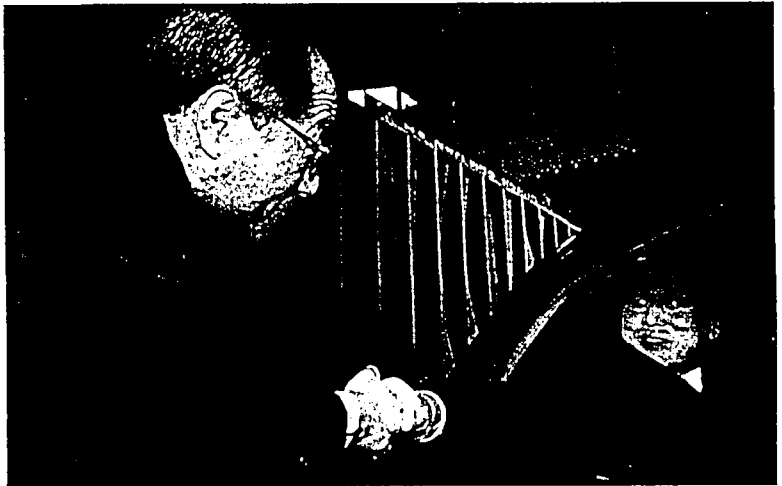
임성준 수석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특별특보의 27일 방북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써 성사됐다. 정부는 주변국의 설득에만 의존했다는 데 위기가 1994년처럼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 마지막 카드로 간주했던 남북 직접협상 카드를 조기에 꺼냈다.

임 특보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핵 포기의 반대급부인 미국 등 주변국이 대북 체제보장과 에너지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괄타결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핵 위기의 시발점인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 개발 시인 파문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측은 IAEA의 사찰을 수용하라고 촉구할 공산이 크다. 수행하는 임성준(任晟濬)외교안보수석은 최근 순방을 통해 파악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핵 문제 해결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4월처럼 임 특보에게 '종 큰' 대응을 할 경우 바람 끝으로 치달아온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한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미국의 직접 사찰 허용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고 특히 김 위원장은 러시아측이 최근 제안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다자(多者) 안전보장에 관심을 표명했다. 북한이 특사회담을 수용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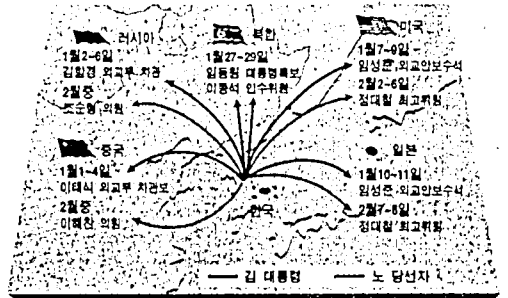


“잘가세요” 남북김정일회담의 정세현(왼쪽) 남북 대표가 24일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려는 김창성 북측 대표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가 핵 재동결 등 '선물'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날 종료된 9차 장관급 회담에서 드러난 북측의 태도값 감안하면 특사회담이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북한은 핵 문제에 관한 한 여전히 북미협상 구도도 고수하면서 민족공조의 논리로 남한을 압박하고 있다. 더욱이 핵 문제는 북한의 자세 변화 이상으로 미국의 협상 의지가 관련된 만큼, 남한의 지렛대 역할이 자칫한 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이동준기자 dlee@hk.co.kr

■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당선자의 특사의 외교



“우방과 충분히 협의”

■ 박선숙·이종석 일문일답

“당선자親會 여부 아직 몰라”

▲ 박선숙 대변인 일문일답
- 남북간 합의는 언제 이뤄질까?
“이 달 초 우리측이 먼저 북측에 제의해 최근 답변을 받았다.”
- 주변국과 협의했다?
“특사 파견은 우방과 충분히 협의된 일이다.”
- 특사 파견의 의미는?
“총력 외교의 연장선에서 남북간 직접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 노무현 당선자 측 인수위원회 합세 가는 것이 이뤄졌으므로 보인다.
“북측에서 회신이 온 뒤 대통령 지

시에 따라 당선자측과 협의했고, 당선자측 대표가 함께 가기로 한 것이다. 당선자와 정부는 핵 문제에 관해 공동의 관심을 갖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연속성 차원에서라도 의미 있을 수 있다.”
- 특사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누구를 만날지 확정되지 않았다. 가 봐야 한다.”
-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가?
“특사를 파견하기 때문에 이미 들고 갔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종석 인수위원 일문일답
- 당선자의 편지나 친서, 메시지 갖고 가는가?
“아직 잘 모른다. 현 정부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당선자가 나름대로

성원하는 것이다. 너무 깊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
- 이번 방문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새 정부에서도 유효하게 되나?
“그건 내가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 임 특사의 역할 분담은?
“임 특보가 특사이고 나는 동행할 뿐이다.”
- 당선자와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 회담을 제의할 생각인가?
“김 위원장 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만나서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게 당선자의 입장이다.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할 일이 있고 당선자와 김 대통령은 뜻이 같다.”
- 체제 보장안을 제시하고 이틀 미 국에 설득하겠다는 뜻도 전달하나?
“현 정부가 할 일이다. 임 특사가 말할 문제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이준현기자 dejavu@hk.co.kr

南北 직접 만나 '核해법' 모색

임동원특사 전격파견 배경-의미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의 아래 27일 임동원 특보를 '특사로 평양에 보내기로 한 것은 강부 주도에 의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특사 파견은 북한이 핵무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지난 10일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청와대 주도로 결정됐으며, 즉각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을 관철키

게 추진한 데는 우선 미국이 대이라크전쟁 준비로 북핵에 적극 대응할 수 없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상향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문제에 전념할 수 없는 시점에서 한국이 북한을 설득, 핵문제의 평화해결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재임 중 의무적으로 추진해온 남북교류 사업들을 어떤 형식으로든 매듭지어야 한다는 다급함도 깔려 있다.

김 대통령이 노무현 당선자측 대표로 이종석 인수위원을 임 특보와 동행시킨 것은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남북문제는 어느 국정현안보다도 우선적으로 김 대통령과 노 당선측간에 인수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은 시점이다.

북한이 임 특사를 받아들여기로 한 것은 핵문제와 관련해 아직 성숙한 노 당선자측과의 협상보다는 김 대통령과 논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음직하다. 특히 3월 춘궁기를 앞둔 북한으

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한국 미국 일본이 권고하는 선택포기를 선언하면 다양한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이해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임 특보는 이같은 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김 위원장의 결심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임성준 외교안보수석도 미국측의 의도를 설명하고 북한이 먼저 핵포기를 선언할 경우 한미일 3국이 즉각

“先핵포기때 적극지원” 北설득 주력

김정일 답방-철도연결 문제도 조율

로선 남한의 식량지원이 절대 필요한 처지다. 따라서 임 특보가 방북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 담판 이후 어떤 형태로든 핵문제에 대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

임 특보는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용순(金容淳) 대남담당비서 등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 특보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북한의 선미후남(先美後南) 전략 대신 선남후미를 택해 실리급 찾으라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남한·주도의 대북대화할 지지하는 만큼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인 점과 미국이 문서로 북한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의미

북한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이란 점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 특보는 김용순 비서와 만나 6·15 공동선언에 의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조속한 철도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주민 동요를 막고 체제 보장에 필요한 식량과 비료 지원 등 대북지원율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격지원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인 전망도 나온다. /정승욱기자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가 지난해 4월 평양 방문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정일 이번도 '통큰선물' 줄까

北 보따리에 촉각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과연 27일부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특사지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에게 뭘 내놓을까.

성급하게 결론내리기는 어렵지만 임 특보에 대한 북측의 신뢰와 김 위원장의 '통큰 정'스타일로 볼 때 핵문제와 경제 등 남북현안에 있어 파격적인 보따리들 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측이 특사파견을 제의하고 북측이 동의하는 형태를 취하긴 했지만 북측이 특사를 수용한 데는 나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사 방북의 주 의제가 '핵문제'라는 점에서 북측은 ▲핵확산

임특사 방북때마다 '깜짝카드' 구체적인 액션 나올 가능성도

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철회 ▲핵동결 해제조치 원상회복 ▲조건없는 북미대화 재개 등 파격적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24일 끝난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도 특사파견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이같은 가능성 높여주고 있다.

임 특사의 경우 지난해 4월 방북, 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잇따라 면담하면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금강산관광합성화 회담 등 일정에 합의하고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까지 얻어냈다. 당시 임 특사의 특사 방북은 6개

월 이상 정체됐던 남북관계를 2000년 6·15성상회담 직후 수준으로 원상회

복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특사 방북때 경의선 외에 동해선이라는 '깜짝카드'를 내민 김 위원장은 이번에 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것으로 짐쳐진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군사분계선(MDL) 중립문제에 대한 북측의 양보를 통해 정제된 경의선 철도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착공 등 남북 3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미국에 간접적인 대화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기동기자
kidong@segye.com

임동원특사 27일 방북

“北核 파국 막자” 南北 직접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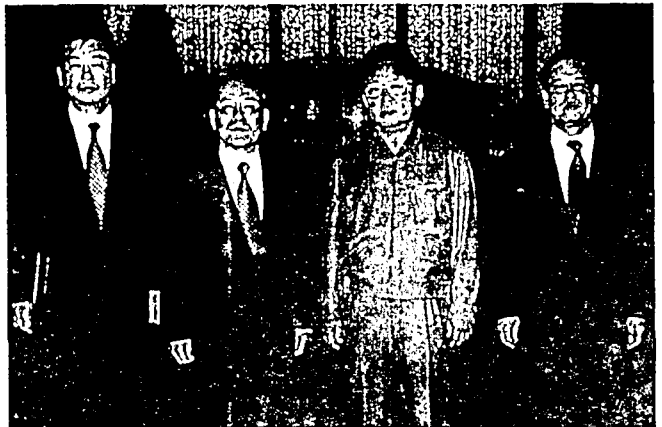
임동원(林東源) 대령명임외교안보특보의 방북은 북핵 문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초미의 관심은 임 특보가 과연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핵 포기’ 결심을 받아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대북특사 의미=임 특보의 방북은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이관하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곧 불탄 국무부 차관의 아시아 순방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를 조기에 개최해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따라서 별다른 상황변화가 없다면 다음달 3일에는 IAEA가 북핵 문제를 유엔

▽북한에서 무엇을 하나=임 특보는 지난해 4월에 이어 이번에도 김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가질 것이라는 게 정부측 기대다. 그러나 임 특보의 방북이 핵문제 해결의 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실무자들이 김 국방위원장에게 현재 진행중인 ‘핵 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의 위기를 직접 설명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측이 갖고 가는 보따리의 내용도 관심거리다. 임 특보와 새 정부 대북 정책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이종석(李鍾奭) 대령명직인수위원은 북한이 핵위기를 해결하고 나실 경우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북한에 줄 수 있는 ‘선담 보따리’를 펼쳐놓고 협상을



김정일과 임동원
지난해 4월 방북한 임동원 대통령 특사(왼쪽에서 두번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임 특사가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면 내년과 회동이 된다.

北설득 못하면 핵문제 내달초 안보리로
경제 지원등 우리측 선물 보따리 관심
北 “美와만 협상” 고집맨 사태 더 악화

안보리에 상정한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임 특보의 방북 결과에 따라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입버릇처럼 “북한이 핵산출금지조약(NPT)에 복귀하거나 IAEA 핵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등의 상황변화가 없다면 북핵 문제는 유엔 안보리로 가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해왔다. 별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결국 안보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체념조’의 언급이었지만, 임 특보가 김 국방위원장에서부터 NPT 복귀 약속을 받아낸다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밝힌 ‘과감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와 김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주목거리다. 노 당선자는 24일 미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을 제안하겠다”고 밝혀 놓은 상황이다. 비록 김일성(金日成) 북한 주석의 사망으로 무산됐지만, 94년 핵위기 때도 김영삼(金泳三) 당시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의사를 통한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북한은 일차적으로는 북핵 문제가 북한과 미국의 양자문제라

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9차 장관급회담에서도 북한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특사 방북의 성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히려 임 특보에게 ‘미국을 설득해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도록 하라’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4월에도 임 특보에게 ‘민족공조나, 외세공조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특사 방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그나마 할 진행되던 남북관계마저 후퇴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분위기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작년 특사방북과 다른점

작년 “남북관계 풀러...”
올해 “핵위기 불끄러...”

임동원 특보는 지난해 4월에도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지만 이번 방북의 성격과 주변 국제정세는 전혀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난해에는 북한의 핵사찰 수용시한, 미사일 발사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제기됐던 이른바 ‘2003년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당시 임 특보는 5시간에 걸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위기 관리’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김 국방위원장에서부터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이렇기 바탕으로 북-미 뉴욕 채널이 가동됐다.

또 지난해의 방북은 남북간 소강상태를 탈피하기 위한 돌파구였지만, 정작 이번에는 남북관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에 특사 파견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도 다르다. 특히 직접자살 무적추과 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있는 중에 합의된 특사방북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방북 시기도 당시에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던 시점이었지만 이번에는 정권 교체기다. 자칫 특사의 권한에 ‘힘’이 실리지 않을 수도 있다.

특사단에 대령명직인수위원인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을 포함시킨 것은 그런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北 “盧측근 함께 오라” 요구 가능성

이종석위원 왜 동행하나

“포용정책 계속” 당선자 메시지 전달할 듯

임동원 특사와 함께 북한을 방문할 대령명직인수위원 외교동일안보본과 이종석 위원은 24일 자신의 동행에 대해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현 정부의 노력에 대한 노무현 당선자의 성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임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아 이번 특사 방북 과정에서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위원은 이에 대해 “현 정부가 노 당선자

에게 ‘인수위촉 인사도 동행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노 당선자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뿐이다”며 “인수위 차원에서 별도의 (대북 협상) 보따리 같은 것이 있겠느냐”며 화해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현 정부나 북한측 모두 어떤 타협을 찾아내더라도 곧 정권을 인수할 노 당선자의 동기가 없다면 협을 얻기 어렵다. 서울 외교계에서 이 위원의 동행은 북한측의 직간접적 요구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 당선자측의 한 핵심관계자는 “노 당선자는 그동안 현 정부의 햇볕정책 기초를 보안적으로 계속 발전한다고 밝혀왔다”며 “이 위원의 동행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을 북측에 직접 전달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행 방북의 결과가 나쁘면 노 당선자도 부담을 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김대통령 지시따라 당선자측 대표 동행”

■ 박선속 대변인 문답

박선속(朴仙燾)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대북특사 파견을 발표한 뒤 일문일답을 가졌다.

●정치권에도 설명했다.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여야 정당과 국회 상임위원에게 전화 통보했다.

●임 특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만나나.
기과와 야나. 핵 문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대통령 특사가 북측에 뜻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언제 협의가 이뤄질지.
1월 초 북측에 제의했고, 최근에 답변이 왔다.

●어떤 의미가 있나.
지난해 10월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끝나 북한 핵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해 미·일·중·러·유럽연합(EU) 등과 총력외교를 펼쳐 왔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남북간 직접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의 길을 찾고자 한다.
●임성준 외교안보수석과 이종석 인수위원이 동행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대통령은 북측의 회신이 온 뒤 당



선자측과 바로 협의하라고 지시, 당선자측 대표가 함께 가기로 한 것이다.

당선자와 정부는 핵문제에 관해 공동의 관심을 갖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남북관계의 연속성이란 차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미국 등 주변국과도 협의했다.
지난 1월 초 임성준 수석은 미·일에 보내 긴밀히 협의한 바 있다. 특사 파견에 관해서는 우방과 충분히 협의했다.

●체류기간은.
대체로 2,3일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확정된 것은 없다.

●방북 경로는.
비행기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가게 된다.

●대통령 전서를 가져 가나.
특사로 파견되기 때문에 아마 갖고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의선 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등 3대 현안도 논의하게 되나.
구체적인 것은 다녀와서 특사가 직접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장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가 협의됐나.
더 설명할 내용이 없다.

●오동연기자

■ 정치권 반응

한나라 “임특사 부적격”

민주당 “방북결과 기대”

한나라당 박종환(朴鍾煥) 대변인은 24일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대북특사 파견방침에 대해 “임 특보는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핵포기를 당당하게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임 특사 파견방침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북핵 사태의 해결을 위해 특사들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임 특보는 북한의 핵개발 사실을 무려 3년여 전에 알고도 쉬쉬 했었던 주역으로 의심받는 사람”이라며 “임 특보는 지난해 4월에도 특

사로 방북했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빈 손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영삼(閔泳三) 부대변인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이 남북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로 이해하고 특사의 방북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사 방문이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아울러 북한은 북핵 문제에 대해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특사와 북측 사이에 대화가 잘 이뤄져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ji@kdaily.com

北 NPT탈퇴후 南서 먼저제의 장관급회담서 수용 통보

특사파견 교섭 뒷배기

정부의 임동원 특사 방북 결정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말부터 차분히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NPT 탈퇴선언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특사파견을 최종 결정해 북측에 통보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당시 NSC에서 임 특보는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이준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에게 그간 추진과정 및 특사파견의 필요성을 설명, 동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대한 특사파견 통보는 청와대가 맡았다. 임 특보 지휘 아래 청와대측은 지난 4월초의 임 특보 방북 추진 전례에 따라 비공개 경로를 통해 북한에 통보했다.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지난 6일 밤미방일에서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특사 문제를 논의하려는 것” 아니냐

는 질문을 받고 “필요성에 대해선 그 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임 수석은 밤미시 대북특사 파견 문제를 미국측에 전달, 긍정적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9차 남북 장관급 회담 기간중 북측으로부터 임동원 특사 방북요청에 대한 수용 결정을 통보받고도 이를 회담기간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대표단이 24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이날 오후 청와대 박선속 대변인을 통해 공식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급 회담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24일 오후 3시에 남북한 동시에 발표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발표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박선속 청와대 대변인도 “이번 특사 방문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1월 초에 북측에 제의했고 최근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정승욱기자 jswok@segye.com

‘盧메시지’ 전달 책임자 햇볕정책 ‘승계’의미도

이종석위원 왜 함께가나

임동원 특사의 방북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노무현 당선자측 대표로 이종석(44) 인수위원이 특사단에 포함된 점이다. 박선속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행”이 아닌 “동행”이라는 표현을 사용, 이 위원들의 방북이 현 정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이뤄진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임 특사 방북에 노 당선자측의 이 위원들을 동행시킨 것은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남북문제는 어느 국정현안보다도 우선적으로 김 대통령과 노 당선자측간에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정부 당국자는 “이 위원의 방북에는 차기정부가 김 대통령령의 대북포용 정책을 승계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며 “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대표적 소장학자인 이 위원은 북한에 노 당선자의 메시지를 정확

하게 전달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 위원은 북핵 문제에 대해 노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협상용 카드’라는 인식과 함께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시대착오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미국의 패권주의적 발상을 때때로 강하게 비판하는 태도를 보였다. 때문에 그의 방북은 새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오히려 더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위원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해온 대표적인 개혁성향 소장학자이다. 노 당선자에게 대북관계와 북한의 주제 사상, 대미관계 등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왔다.

그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수행팀으로 참여했다. 1995년부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2002년부터는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으로 각각 활동해왔다. 이 위원은 주체사상유연연구 북한연구소 ‘조선로동당연구’ 등 저서가 있다.

/박창익·박성준기자 daniel@segye.com

임기내 '北核 실마리' 모색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해온 정부가 미국과 북한을 설득, 대북특사 파견 카드를 상사시키는데 성공했다.

북한의 '선(先) 핵포기'를 고수해온 미국과 '선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해온 북한간의 힘겨루기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 핵문제 해결이 급선무=정부는 윤초 특사파견 방침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전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최소한 한반도 상황을 지난해 10월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 이전 상황으로 돌려놓겠다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1993~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전쟁 발발 직전 방북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겼던

• 對北특사파견 배경·전망

한국 주도적역할 金대통령 의지 담겨 金위원장 결단촉구 해결돌파구 기대

상황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지난 7~9일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미국에 급파, 정부의 방침을 설명했고 북한에는 10일쯤 비공식 대북채널을 통해 특사 파견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지난 21일 방한한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보를 통해, 북한은 9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수용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 파견방침에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결단 없이는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북한이 특사 방북을 수용한 것은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또다른 성과"라며 "김위원장에 게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황타개 가능할까=정부는 지난해 4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의 방북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를 전면 복원하고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북·미대화의 물꼬를 튼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만만찮다.

정부로서는 북한과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한쪽으로는 '민족공

조'를 강조하고 있는 북한을, 다른 한쪽으로는 북한에 합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미국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가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특사 방북을 통해 그 자리에서 해결되기보다는 실마리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대목에도 성패를 쉽게 짐작할 수 없는 곤혹스러움이 묻어 있다.

대북특사는 우선 북한의 핵화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촉구하고, 핵동결 해제 조치를 원상회복하라고 권유할 예정이다. 북·미대화 재개의 단초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임동원 특사는 북한이 강력히 희망해온 불가침조약 체결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분계선(MDL) 통과문제를 둘러싼 유연사와 북한측의 입장차로 중단된 3대 사업도 주요 논의사항이 될 전망이다. 차세형기자

경향신문

2003. 1. 25 (토)

盧 메시지 전달...햇볕정책 승계 뜻도

• 인수위 이종석위원 '동행' 의미

임동원(林東源) 특사의 방북에서 이채로운 것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 인사가 특사단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임특사의 방북 합의사실을 발표하면서 "노당선자측 인수위의 이종석(李鍾奭) 외교안보분과위원이 임특사와 '동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특사단에 차기 대통령측을 대표하는 인사가 함께 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수행'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현 정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위원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한다면 이는 노당선자측의 '북한과의 첫 공식 만남'이 된다. 노당선자와 북측은 서울에서 열린 장관급회담 중 '상대방이 요청하면 만나겠다'는 뜻을 서로 밝혔으나 각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무산시켰다.

이위원의 임무는 노당선자의 대북 메시지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위원은 특사 발표 뒤 기자들에게 "김위원장을 만나게 되는지 등에 대해 물어보지 못했다"며 "노당선자의 친서나 메시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특사단 포함에 대해 "북핵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평화적 해결노력을 노당선자가 성원한다는 의미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측에 노당선자의 북핵사태에 대한 인식과 복안을 전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노당선자의 대북 메시지에는 노당선자의 취임 이후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용의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당선자는 차기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이위원의 방북에는 차기 정부가 김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승계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며 "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대표적 소장학자인 이위원이야말로 북한에 노당선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위원은 "특사 방북을 통해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 좋고 그게 안된다 하더라도 대화의 단초가 마련되거나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현 정부와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근기자 harubang@kyunghyang.com

北核해법 ‘물밑 딜’ 있었나

■ 임동원특사 訪北 안팎

美·日등 주변국 메시지 간접전달 가능성

盧당선자 ‘적극개입’등 3대원칙 제시할듯

임동원(林東源) 외교안보특사임명보가 오는 27일부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북특사로 평양을 방문하게 됨에 따라 북핵 문제가 잘 풀릴지 주목된다. 특히 방문단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의 이종석(李鍾奭) 인수위원이 동행,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핵 해법 찾을 수 있을까

임 특사 일행이 평양에 도착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으로 불거진 북한 핵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할 것 같다. 북한은 (핵 문제는) 여전히 북·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도 한반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달 초 우리가 먼저 특사를 제외한 데 대해 북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물밑’을 틔다는 분석이다. 북한 핵 문제로 세계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특사)합의가 이뤄진 만큼 일말의 기대감을 넣고 있는 것이다. 임성준(任晟準) 외교안보수석이 최근 미·일 방문을 통해 북한 핵 문제 및 대북 특사 파견 문제를 협의한 바 있어 이들 나라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핵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노 당선자측 동행 의미

노 당선자측의 이종석 인수위원이 함께 가는 의미도 적지 않다. 적어도 남북관계만큼은 당선자측이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은 대내외에 선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 역시 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김 대통령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면서, 새 정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번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으로 왔던 김영성 내각참사가 “노 당선자를 만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당선자 대북 메시지 뭉개

이번 특사방북은 간접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노 당선자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첫 대화’

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임 특사 일행이 김 위원장 등을 면담하는 과정에 노 당선자의 메시지가 어떤 형태로든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북핵 파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 핵개발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 북한의 적극적 개입 등 ‘3대 원칙’을 제안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체제보장 및 대북지원과 관련,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미국측에 서면으로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토록 설득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 특사로 다보스포럼에 참가 중인 민주당 정동영(鄭東泳) 의원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과감한 ‘북한 재건 계획’(북한판 마셜플랜)을 준비 중임을 밝혀 시선을 모았다. ●오룡연기자 poonyon@kdaily.com

한국일보

2003. 1. 25 (토)

美·日 “核해결 가닥 잡힐수도” 기대

미국과 일본은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시하며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특사 임명보의 평양 파견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카드’가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이달 초 김 대통령의 특사지격으로 방문한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으로부터 임 특보 특사 파견 방침을 통보받고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 관리들은 한국이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데는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했지만 신 정부 출범 때까지는 핵 위기 해결의 가닥을 잡겠다는 김 대통령의

對北 특사 파견 ■ 해외반응

美 “남북이 美 압박전선 구축가능성” 우려도

日 “안보리 회부前 해결위한 최선 노력”환영

외신들 “한국 대화해결 노력 일환” 긴급뉴스

생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정은 간단하지 않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의 ‘밀착’은 오히려 미국에 대한 공동 압박의 성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내에서는 여차피 한국의 새 정부와 핵 문제 해결의 공동보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러나는 정부의 마지막 카드가 지날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실

제로 미 관리들은 임 수석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 방침을 전달받고 그리 달가워하지 않은 표정을 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김 대통령의 특사 파견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 이전에 해결해 보려는 한국 정부의 최 대한의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핵 문제가 안보리로 넘어가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우

려해 온 일본 정부로서도 특사 파견을 환영하며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북 특사는 김 대통령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함께 보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 같은 한국의 성의마저 북한이 거부한다면 국제사회는 더욱 냉담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AP, 프랑스 AFP 통신, 영국 BBC 방송, 일본 교도(共同)통신 등 외신들은 특사 파견 소식을 “한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긴급뉴스로 타진하고 해결 전망 등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통해 사대 타개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si8101@h.k.co.kr 도쿄=신은석특파원 ysshin@hk.co.kr

한나라 "퍼주기 장본인 또 보내나"

정치권 반응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4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임동원 특보를 특사로 보내는 데는 반대했다.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우리 정부가 북핵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옳다고 본다"며 "그러나 핵문제 해결을 구실 삼아 '퍼주기' 등 뒷거래를 기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퍼주기식 햇볕정책의 전도사로서 남북관계를 이 지경으로 왜곡해 망쳐놓은

장본인인 임 특보를 왜 특사로 보내려는지 의아하다"며 "북핵 초기의 당위성을 정당하게 설득할 수 없는 임 특보의 파견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 "核 평화해결 기대"

한편 민주당 민영삼(閔泳三)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로 이해한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북측에 확실히 각인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대한매일

2003. 1. 25 (토)

중앙일보

2003. 1. 25 (토)

盧당선자축서 먼저 제기

■ 특사 파견 뒷얘기

24일 오전 서울 웨라론 위커펠에서 열린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 북측 대표들이 핵문제에 대해 전혀 진전이 없는 '알맹이 없는' 합의를 만들어 놓고 서울을 떠난 5시간 뒤 발표된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 방침을 놓고 말들이 무성하다.

이번 장관급 회담이 특사 파견 이후의 성과를 남겨주기 위한 '가면극 회담'이었는지, 아니면 북측 회담 대표들도 특사 방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회담을 했는지도 궁금하다.

3박4일 동안 북측과 회담을 한 통일부의 당국자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1월10일 대북 특사 파견을 제의했고, 이 제의에 대해 북측이 장관급 회담 기간 중 회담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이를 확인하는 질문에 구

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특사 파견 방식은 일단 아니고, 장관급 회담 채널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정부의 특사 파견은 지난해 말 북한 핵 사태가 심화되자 노무현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측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자축은 이 인을 바탕으로 임동원 특보나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비서실장을 대북 특사로 파견해 줄 것을 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 측은 특사 파견의 주체 문제와 성과가 없을 경우의 부정적 영향을 놓고 한동안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을 전후 한 시점에 임 특보가 특사로, 인수위측에서 이종석 인수위원이 동행하는 형식으로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공동 파견 모양새를 갖췄다.

●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NPT 탈퇴후 극비 타진 ... 北, 장관급 회담중 "OK"

특사 訪北 성사까지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은 지난해 대선 직후인 12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선 과정에서 북핵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어떻게든 현 정부 임기 내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이다.

곧바로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와 국정원·통일원 일부 관계자 등이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신중론도 만만찮았다고 한다. 자칫 별

성과가 없을 경우 안 보내느니만 못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지만 김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결국 특사를 파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해 벼두부부터 부산하게 움직였다.

1일 이태식(李泰植)외교부 차관보를 중국에, 3일 김항경(金恒經)외교부 차관을 러시아에 파견하고 6,7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를 하는 등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전개하면서 물밑에선 국정원 채널을 통해 북측에 특사

파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에 특사 파견을 최종 통보한 것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지난 10일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23일 저녁에 열린 장관급 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특사를 수용한다고 통보했다. 김영성 북측대표는 남북간 직통전화통을 통해 특사 수용 의사를 우리 측에 통보토록 훈령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김대통령은 7~11일 임성준(任晟準)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미국과 일본에 보내 특사 파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신홍기자

jbjean@joongang.co.kr

대한매일

2003. 1. 25 (토)

世界日報

2003. 1. 25 (토)

“北인권탄압 김정일 책임

盧당선자 CNN회견 취임후 金위원장에 회담제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24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해 “취임후 공식 제안할 생각”이라며 “혹시 거절당해서 국민들에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제안하고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미 뉴스전문채널 CNN과의 인터뷰에서 “인권변호사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어 북한의 인권탄압과 북한주민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이 옳지 않더라도 대화를 할 수밖에 없으며, 나쁜 사람들과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북한의 여러가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아주 불편하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북한문제가 UN에 상정되더라도 제재 문제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권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재는 점차 그것이 강화됐을 때 대단히 심각한 긴장을 가져오

고 전쟁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제재가 아니라 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북한에 대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부정적 견해에 대해 “저도 북한의 여러가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 북한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정미기자 bird@segye.com

■ 특사단 면면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별보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설계자요, 전도사로 불린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두 차례 통일부장관을 역임했고, 외교안보수석과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등을 맡으며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 관계 등을 거의 지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사회자는 통일부장관이지만 사실상 회의를 주도하는 것은 임 특보다. 관련 부처 임박에선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인지, 임 특보 자신의 생각인지 모를 정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햇볕정책의 줄기를 직접 챙겼다.

평북 위원군이 고향. 육군 출신으로서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다. 육군 소장까지 오른 뒤 호주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0년 5월 6·15정상회담에 앞

임동원 햇볕정책 설계자

이종석 北의중 파악 정통

임성준 美메시지 전달역



서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방북하면 김 위원장과 네 번째의 만남이 이뤄진다. 이번엔 특사로 파견되는 것과 관련,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킨다는

기조를 잡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모종의 역할을 할지가 관심사다.

이종석 인수위원은 현재 인수위팀에서 일하고 있는 서동만 상지대 교수 등과 함께 임동원 특보의 정책을 학계에서 함께 세우고, 측면지원해온 대표적인 대북 포용 학자다. 세종연구소 남북관계 연구실장으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때 방북했으며, 노 당선자가 ‘햇볕정책의 발전적 계승’으로 줄기를 잡도록 조연한 주역이기도 하다. 성균관대 출신으로 북한의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하루치도 빼놓지 않고 분석, 남한 학자중 북한의 의도들 가장 잘 꿰뚫어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성준(사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외교부 북미국장파 차관보를 역임, 품평한 스타일의 참모형이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미국측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미에서 임 수석이 대북 특사에 파견됐다는 분석이다. 외교부 출신이 대북 특사단에 파견된 것은 이례적이다.

●김수정기자

“나도 北태도에 불만... 여건되면 평양갈수도”

盧당선자, CNN·아사히신문 인터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24일자 일간지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적당한 시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며, 조건이 갖추어지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장을 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모든 외교 교섭에 있어 복잡하고 미묘한 이해관계, 절차상에서의 전략적인 선택이 있는 것은 우리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 서울에서 하는 데 반드시 구애받지 않는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평양에 간다’라고 이해해도 좋은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北인권탄압 김정일책임

노 당선자는 또 이날 미 뉴스전문 채널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핵문제가 유엔에 상정되더라도 제재 문제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권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제재는 점점 강화됐을 때 심각한 긴장을 가져오게 되고,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나도 북한의 여러 가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며,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 김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김 위원장이 옳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 없을 때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으며, 나쁜 사람들과하고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 당선자가 24일자 아사히 신문과 가진 인터뷰 요지. -북한 핵문제에 대해 93-94년 핵위기 때와 같이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북한도 체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면 핵 포기를 포기할 의사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는가?

“북한이 미스를 범하는 것도



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 불신을 감을 가져, 예의에 맞지 않게 약속을 위반하는 행동을 범하는 것

도 있다. 그런 때 우리가 강경한 태도로만 대응하면 갈등이 계속돼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된다. 그들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점차 쌓아갈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특히 젊은이 사이에 미국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많아졌는데.

“단순하게 반미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한·미 간 문제는 실제로 한·미 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한국에서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내고 있는 당연한 요구와 주장을 미국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며,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 내 일부 사람들이 ‘미국의 기분을 손상시키면 큰 손해가 된다. 반미다’라고 규정해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이 보다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렇지만 않으면) 한·미 간의 큰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反美 과장하지 말아야

-한국이 북한과 접근하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한·미 간에 갈등이 있을 때라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해결을 위해서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것은 갈등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든가, 갈등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생각이나 태도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부딪혀온 문제이고, 나도 지금부터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몇 번이고 부딪혀 갈 것이다.”

/수출기자 ck-kim@chosun.com /東京=權大烈특파원 dykwon@chosun.com

경향신문

2003. 1. 25 (토)

盧 “유엔 對北제재 반대”

CNN회견...김정일과 조건없이 대화 용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24일 “북핵문제가 유엔에 상정되더라도 제재문제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를 권고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각국의 노력을 서로 예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가 점차 강화되었을 때 대단히 심각한 긴장을 가져

오게 되며 그것은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엔에서 제재가 아니라 해결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아무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면서 “혹시 거절당해서 국민들에게 참피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제안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래용기자

중앙일보

2003. 1. 25 (토)

“北 인권 김정일위원장에게 책임”

盧당선자, CNN과 인터뷰

“안보리 북한 제재는 반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4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 결의 가능성과 관련,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盧당선자는 이날 미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가 점차 강화될 때 대단히 심각한 긴장을 가져오게 되며 그것은 전쟁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유엔은 제재가 아니라 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조건없

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거절당해 국민에게 참피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 정상회담을 과감하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盧당선자는 이어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 또 북한 국민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김위원장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김위원장에 대한 평가의 문제와 북핵 문제를 푸는 현실적 방법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김위원장이 옳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경우에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으며, 나쁜 사람들과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희 기자 kimchy@joongang.co.kr

盧 “남북정상회담 제의”

北核문제 유엔 제재논의 반대

CNN·아사히신문 회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4일 “취임 후 공식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미국 CNN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어느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고 해서 거절당하면 대단히 위신이 손상된다.”면서 “혹시 거절당해서 국민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정상회담을) 제안해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특히 북한문제를 유

엔안보리에 회부하는 문제와 관련, “북한 문제가 유엔에 상정되더라도 거기서 제재를 결정할 게 아니라 대화를 권고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나라의 노력을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팩터원기자 tiger@kdaily.com
3면으로

그는 “제재라는 것이 강화됐을 때는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 되므로 유엔에서는 제재가 아니라 해결방법을 논의하는 게 옳다.”고 유엔의 제재 논의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어 “김 위원장이 옳지 않다 해도 핵문제를 풀 수 없을 경우에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나쁜 사람들 하고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당선자는 또 일본 아사히(朝日)신문과의 회견에서도 적당한 시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경우에 따라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와 함께 “북한은 체제 안정과 경제지원을 보장하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당선자가 이와 함께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참가하는 ‘6자 협의’를 조만간 제의하겠다는 생각도 밝혔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東亞日報

2003. 1. 25 (토)

盧 “北 인권탄압 김정일에 책임”

北태도 마음에 안들지만 核문제 대화로 풀어야

CNN회견... “金위원장에 회담 제의할 것”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24일 “인권변호사 활동을 했던 경험에 있어 북한의 인권 탄압과 북한 주민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도 북한의 여러 가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아주

불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지만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와 북한핵 문제를 푸는 현실적 방법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김 위원장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경우에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나쁜 사람들과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 만나고 해서 거절당하면 대단히 위신이 손상되지만 그런 이런 문제를 무릅쓰고 (김 위원장에게) 만나고 제안할 것”이라며 “거절당해서 국민에게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제안하고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당선자는 “북한 문제가 유엔(안보리)에 상정되더라도 제재 문제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문

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권고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에 관한 여러 나라의 노력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해 국제사회의 대(對)북한 제재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CNN은 노 당선자와의 인터뷰를 25일 오후 8시반(26일 오후 10시반 재방송) ‘더 코리아 디바이드(The Korean Divide)’라는 30분 짜리 특집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한다. 이승원기자 ddr@donga.com

對北 특사 파견 ■ 전문가 의견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24일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지 기대하면서도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北, 南통해 美와 대화 노린듯”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

북한이 특사 파견을 수용한 것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 시작 전에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또 북미간 직접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핵 문제가 국제화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듯 하다. 특사 파견은 간접적인 정상회담의 성격을 갖는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모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 포기 등 전향적인 해법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를 통해 북미간 대화의 고리를 잡으려 할 것이다. 우리도 남북간 논의의 결과를 갖고 북미간 의견조율에 나설 것이다.

“北에 핵우려 직접 전달 의미”



윤덕민(尹德敏)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대북 특사 파견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북한 핵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특사 회담에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다. 북한 수뇌부에 심각성을 직접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북측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북측도 남측의 우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 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 의도 확인할 기회로”



조명철(趙明哲)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팀장

조만간 미국이 북 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으로 보여 남북 모두 직접 대화가 급실한 상황이다. 경제 제재 등 최악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는 남북이라는 점에서 특사 파견은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은 핵에 대해 분명하고 진전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북한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뿐이며 우리측 특사에게 어느 정도의 명분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김 위원장의 의도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우리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성과 있겠지만 단정은 못해”



백현(白顯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의 본격적인 시도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 정부에서 대통령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에서도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이 엄중하며 따라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노 당선자가 미국에 특사를 보내기 전에 북측과 먼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선다는 것도 상징성을 갖는다. 특사 회담의 기본 성격상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미 대화를 원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사실상 'DJ·盧 공동특사'

대북 특사로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특보와 대통령직 인수위의 이종석(李鍾奭) 인수위원이 동행키로 한 것은 이번 특사 교환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공동 특사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야 할 북한 핵 사태에 대해 김 대통령과 노 당선자가 공동 대처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위원은 24일 '임 특보와 동행하게 된 것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정부의 노력을 성원하고자 하는 노 당선자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북한 핵 사태에 대해 김 대통령과 노 당선자가 공동 대처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위원은 24일 '임 특보와 동행하게 된 것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현정부 노력 돕고자 하는 盧당선자 의지 담겨있다”

문에 현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말해 남북간 특사 교환 논의의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노 당선자는 북한 핵 사태 해법 모색을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김 대통령과 대북(對北) 정책 조율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당선자측 태스크포스는 이종석 위원 등 대통령직 인수위 통일외교안보분과위원과 연세대 문정민(文正民)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노 당선자의 대북(對北) 정책을 가다듬어 왔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측의 핵심 관계자는 '태스크 포스가 청와대, 국정원 등의 보고를 받

고 태생기자 tsgo@hk.co.kr

고 태생기자 tsgo@hk.co.kr

林, 세번째 특사말은 햇볕 전도사 李, 盧에 안보정책 조언 인수위원

■ 임동원·이종석 누구

임동원(林東源) 특보는 야당 시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통일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고, 현 정부 출범 후에도 줄곧 대북정책을 총괄해온 '햇볕정책의 전도사'다. 국정원장을 지내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했고, 북미관계가 악화하던 지난 해 4월에도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다. 김 대통령의 특사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3번째. 육사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 나이지리아와 호주대사를 역임했고 통일부장·차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통일부장관, 국정원장을 지냈다.

이종석(李鍾奭) 대통령직 인수위원은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출신으로 대표적 소장파 학자이다. 각종 논문과 칼럼 등을 통해 햇볕정책 지지를 밝히며 진보적 대북관을 견지해 왔다. 95년부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남북정상회담에 김 대통령의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한 그는 평소 '북한의 적대성을 감소시켜 공존의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 후보시절부터 외교통일안보 분야 정책을 조언해 왔다. 성균관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같은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조선로동당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내파 학자이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先 핵포기, 後 북미협상·경제지원”

林 특사, 2단계案 제시할듯

오늘 訪北... DJ·푸틴 통화 중재안 논의

임동원(林東源) 대북 특사는 27일 북한을 방문, 북한이 먼저 농축우라늄 및 플루토늄 핵 개발을 포기하면 북미 협상 및 에너지·식량 지원을 추진하는 '선(先)조치 후(後)협상 및 지원'의 2단계 중재안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10면

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임 특사의 임무는 북한의 선 조치를 유도해 북미 직접 협상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특사는 특히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체제보장 서한을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보증하는 러

시아측 중재안에, 이를 미 의회 혹은 유엔 등이 추가적으로 지지·보장하는 '2중(Two Track)' 안전보장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 문제를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해소할 경우 중유 등 포괄적인 에너지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26일 '국제사회가 희망하고 북도 호응한다면 제네바 합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특사 방문에서 핵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가

지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 이 같은 설득 카드가 포함된 대북 중재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 특사, 이종석(李鍾奭) 대통령직 인수위원 등 대북 특사단은 27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이용, 서해 직항로를 통해 3~4일간 평양을 방문한다.

임 특사 일행은 북한의 영빈관인 백화원 초대소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이산상봉 후보명단 교환

남북은 26일 관문점에서 제6차 이산가족상봉(2월 20~25일, 금강산) 후보자 각각 200쌍의 명단을 교환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춘)는 인선위원회와 신체검사 등을 통해 선발된 남측 후보자 명단을 이날 관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

/이상민기자 21smin@segye.com

“한국민 원치 않는데 주한미군 언제든 철수”

美 베이커前국무 주장

제임스 베이커 전 미 국무장관은 25일 “한국 국민이 주한미군을 원치 않는다면 미군은 언제든(한국을)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공화당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베이커 전 장관은 이날 미 휴스턴을 방문한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과거 필리핀의 아키노 대통령이 ‘미군은 나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저없이 떠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 대표 측이 전했다.

베이커 전 장관은 “노무현 당선자의 미국관에 대해 한·미 양국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등의 표현을 쓰면서 “총당선자가 북한 문제를 잘

풀어가려면 한·미의 동등한 관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베이커 전 장관은 “북한과 대화는 하되 전제조건이 있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북한이 핵무기·생화학무기·미사일 등의 생산과 확산을 포기하는 가시적인 조치, 즉 국제사회가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만 미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는 북·미가 서로 믿음을 갖고 협상했으나 돌아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결과였다”면서 “미국은 그러한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일 기자
leesi@joongang.co.kr

경의선 2월중 연결 무산

北 동해선과 동시완공 주장... 지원방식등 합의

남북이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연결 완공시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경의선 철도의 2월 개통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 들어 시작된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된다.

남북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2차 회의에서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방향으로 각각 진행시켜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연결하려는 등 5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해 관련 자재·장비 등을 해로와 육로로 보낸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열차 및 차량은행 사무소 개설문제, 신호·통신 전력계통 설계에 필요한 현장조사 문제는 실무접촉과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으며, 열차 운행 합의서는 이른 시일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 대표단은 우선 가능한 경의선을 2월중 완공하자고 주장한데 반해 북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을 동시에 완공해야 한다고 맞섰다. 신창호기자

중앙일보

2003. 1. 27 (월)

北체제보장·경제지원 협의

임동원 특사 오늘 訪北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 통일특보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7일 평양을 방문. 3~4일 동안 북측과 핵문제 및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林특사는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하며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이종석(李鍾奭) 대통령직 인수위원 등 7명이 동행한다.

林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한다.

林특사는 북한 측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면

서 북측의 긍정적인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미 대화 재개 방안과 대북 안전보장 방식도 협의하는 한편 북한의 긍정적인 조치가 이뤄지면 경제 회생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林특사 일행은 지난해 4월 특사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영빈관인 백화원초대소에서 머물게 된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林특사의 방북 계획을 설명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문제 해결 노력에 지지를 나타냈다.

오영환·박신흥 기자 hwasan@joongang.co.kr

“核 전향자세 경우 盧 조기 평양방문”

임동원특사 오늘 방북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특사인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는 핵 문제 등 남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전 서해 직항로를 이용,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평양에 간다. 임특사 일행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임특사는 방북기간 중 북한 당국에 핵 포기를 강력 요구하고, 북측이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경우 노무현 차기 대통령의 조기 평양 방문과 남측의 대규모 경제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당선자의 조기 평양 방문 추진은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원칙이지만 북핵 문제만 풀 수 있다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노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 경제지원은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포럼에서 밝힌 '대북 마셜플랜' 구상과 맥이 닿아 있다.

이번 특사단은 임특보 외에 이종석 대통령직인수위 인수위원과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국장급 수석인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김위원장과 김용순 노동당 비서, 백남순 외무상,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임특사는 북한과의 의견조정을 통해 북·미간 직접 대화를 증대할 예정이지만 북측이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서한 형식의 불가침 문서화'라는 미국측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혀 심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통행 문제와 이와 맞물린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등 경험사안에 대해서도 일괄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신창호기자 procol@kmbi.co.kr

東亞日報

2003. 1. 27 (월)

임동원특사 오늘 방북

임동원(林東源) 대통령통일의교안보특보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책을 협의하기 위해 27일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한다.

그는 이날 오전 8시반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방북 성명을 발표한 뒤 성남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타고 평양순안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다.

임 특보는 3. 4일간 평양에 머물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기기자 espril@donga.com

世界日報

2003. 1. 27 (월)

林특사 오늘 訪北 서해직항로 통해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 이종석(李鍾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8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은 27일 오전 10시 대통령 전용기로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한다. 임동원 특사는 26일 오후 김대중 대통령에게 방북에 앞서 김일성 북한 국방위원장 설득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정승욱기자 jswook@segye.com

訪北 보따리 국내외 '주목'

美 '대화만 가능' 입장고수 주변국 목소리 전달 설득 MDL 문제등은 진전 기대

• 林특사 평양길 순탄할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마지막 카드'로 27일 방북하는 임동원(林東源) 특사의 발걸음에 국내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결정할 특별이사회 개최를 임특사의 귀환 뒤로 미루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이 대북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그의 방북길이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특사의 대북 설득, 성공할까=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26일 한 방송 프로에 출연, "제9차 장관급 회담중 남북이 핵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하며 입장을 타진했기 때문에 임특사는 그 토대 위에서 얘기를 시작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장관은 또 "북·미 기본합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합의를 국제사회가 희망하고 북도 호응한다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새로운 합의'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기대했다.

임특보는 방북기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등 북한 최고지도부를 면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과의 협의 결과와 미국 내 강경 입장을 북한에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북한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9일 미국을 방문한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특사단에 포함된 것도 미국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1993~94년 클린턴 행정부 때와는 다른 미국 내 강경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벼랑끝 전술'이 아니라 먼

저 양보함으로써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 외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등 남북 3대 현안사업의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군사분계선(MDL) 통과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 변화는 기대되는 대목이다. 북한으로서는 핵 문제를 비켜가면서도 미국에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장관도 현 정부 임기내 경의선 연결 가능성에 대해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으로 풀릴 문제"라며 "특사 방북을 통해 실마리가 풀린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의 시각차는 여전히 크다=정부 당국자는 26일 "미국은 우리 정부의 특사파견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의 핵포기 선언 이행 방안에 대해서만 '대화(talk)'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6~7일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COG) 때부터 밝힌 대로 '협상'이 아닌 '핵포기 이행방안에 대한 대화'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도 북핵 문제를 북·미간 문제에서 다년간 문제로 바꾸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미국이 핵문제를 다자회담에서 논의하겠다는 주장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에게 대한 압박을 국제화하려는 불순한 기도가 깔려 있다"고 비난했다.

결국 임특보는 미국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포기 선언을 유도할 만한 '새로운 제안'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셈이다. 차세현기자

한겨레

2003. 1. 27 (월)

임특사 오늘 평양으로 북핵문제 돌파구 모색

임동원 대통령 특사 일행이 27일 오전 10시 서해 직항로를 통해 사나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해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모색한다.

이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은 26일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로부터 방북 관련 보고를 받고,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관련국들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온 점을 설명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핵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통령 특사 일행은 임동원 특보를 비롯해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이종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 인수위원, 수행원 등 모두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26일 오전 방송된 <MBC 통일전담대>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제네바 합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합의를 국제사회가 희망하고 북도 호응한다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처음으로 정부가 제네바 합의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사실상 '核중재' 성공할까

■ 林특사 오늘 訪北

27일 방북하는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겸 김정은(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로부터 농축우라늄 핵개발 포기 검증 등 가시적 조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북한에 전향적으로 움직인다면 남한의 지렛대 역할이 대미 설득으로 이어져 북미협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핵 문제의 당사자인 남한의 사실상 '중재' 역할이 성공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은 북미 직접 협상을 통해 체제보장과 경제 지원을 받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남한이 민족공조의 차원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임 특보는 북한의 민족공조 요구를 비켜가면서 핵 포기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북한을 움직일 카드이다. 그 핵심은 북한이 일관되게 신경과제로 요구해온 대북 체제 보장이다. 이와 관련, 임 특사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체제보장 시한을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보증하는 러시아측 중재안을 입안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중재

美입장·체면과 北요구 점점찾기 시도 체제보장 2중 보증·지원책 제시할듯



다보스포럼에 참석중인 정동영(왼쪽) 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스위스 다보스 시내 뱀베더호텔에서 열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만나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다보스=국회사진기자단

안의 타당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25일 조선중앙

통신 논평을 통해 공식성명이나 서한 교환 형식으로 불가침 의사를 문서화하는 방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북한 외무성은 러시아와 미국 등이 논의 중인 '5+5' 다자 협의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는 결국 임 특보가 문서 이상으로 믿음직한 체제 보장 방안을 갖고 와야 핵 문제의 실마리를 풀린다는 메시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러시아측의 다자 안전보장 방안을 미국 의회 지도자 측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이 재보증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내부 사정상 불가침조약 체결이 불가능한 만큼 '2중 보증'으로 북한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핵 포기 조치를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입장과 체면을 고려하면서 북한의 요구도 충족하는 현실적 대안을 관련국과 다각도로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남한이 주도적으로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대북 지원책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 특사인 이종석(李鍾奭)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동행한 것은 이 같은 대북지원 약속이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지켜질 것임을 보증하는 의미가 있다.

/이동준기자
dljee@hk.co.kr

“核 외교적 해결을” 각국 움직임 가속도

러 '5+5 협의체' 제의...EU, 대북특사 보내기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화할 것을 지시해왔으며 결국 대화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측통들은 '일부 진전을 한국 정부의 특사 파견 등으로 해석하면 서도 북미간 골밑 접촉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을 대북 특사로 파견했던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남북한, 일본 호주 유럽연합

(EU) 등이 참여하는 '5+5' 다자 협의체 구성을 제의한 대목은 예사롭지 않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의중을 직접 확인한 바 있는 러시아는 협의체 구성을 주도하면서 북미간 직접대화를 성사시켜 위기의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미대화는 IAEA 사찰단원의 북한 복귀의 전제조건"이라

고 밝힌 것도 응급처방식 북미 대화를 미국에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유럽 연합(EU)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27일 EU 외무장관회담에서 대북 특사 파견을 결정하기로 했다. EU의 중재 참여는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방식이 국제사회의 광범대이자, 대세임을 확인시켜주는 지표가 될 듯하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러한 중재 노력들이 북한이 임 특보 방북을 계기로 미국을 향해 공세적 대화 자세를 보일 경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핵 문제가 직접 대화로 회부되기 전 북한이 직접 대화에 수동적인 미국을 향해 압박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임동원(林東源) 특사의 27일 방북을 앞둔 시한 주변 북한 핵 문제의 중재 관련국과 국제기구들은 중재 외교를 벌여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의 관심은 임 특사의 방북 성과와 북한의 대응을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5일 북한 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달 3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특별이사회를 연기했다. 임 특사의 방북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다. 벨리사 블레밍 IAEA 대변인은 "핵심 당사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지켜본 뒤 개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이사회 연기를 공식 발표했다.

푸틴 회견 미 국무장관도 이날 "북핵 문제에서 일부 진전이 있다"며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世界日報

2003. 1. 27 (월)

경의선 내달개통 무산

남북철도·도로실무협 폐회

임기 내 경의선을 연결하려던 현 정부의 바람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지난 25일 끝난 제2차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협의회에서 남북은 경의·동해선 철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결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북은 또 합의서에서 철도·도로 연결공사 관련 자재·장비를 해상과 육로를 통해 제공키로 하고 열차운행합의서는 곧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키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이상민기자
21smin@segye.com

경향신문

2003. 1. 27 (월)

경의선 내달 완공 난망

철도실무협 개통시기 이견

남북은 지난 25일 평양에서 철도·도로 연결실무협의회 2차회의를 열어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군사분계선(MDL)에서 각각 남북 방향으로 진행시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연결하기로 하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철도 연결완공 시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 정부 임기 내인 2월중 경의선 연결 개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평양 / 공동취재단

대한매일

2003. 1. 27 (월)

경의선 새달연결 불투명

남북 완공시기 이견

【금강산 공동취재단】남북은 경의·동해선 철도연결 공사를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 방향으로 각각 진행시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연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완공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는 2월 연결이 불투명하게 됐다.

22~25일 평양에서 개최된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2차회의에서 남북한은 철도·도로 연결 공사의 빠른 진행을 위해 관련 자재·장비 등을 해로·육로로 수송하는 등 내용을 담은 5개 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먼저 2월 중 경의선을 완공하자."는 남측의 주장에 대해 "경의선·동해선을 동시에 완공해야 한다."는 북측 주장이 맞서 일정을 확정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겨레

2003. 1. 27 (월)

“경의·동해선 최대한 빨리 연결”

남북 철도·도로실무협 5개항 합의…구체시기 이견 못 좁혀

남북은 25일 평양에서 3박4일 동안의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2차 회의를 마치고, 경의·동해선 철도연결 공사를 군사분계선(MDL)에서 각각 남북 방향으로 진행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연결하기로 하는 등 5개 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핵심쟁점이었던 경의·동해선 철도의 구체적 연결 시점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의·동해선의 현 정

부 임기안(2월25일 이전) 연결은 임동원 특사 방북과 다음달 11~14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해결과제로 넘겨졌다.

철도 연결 시기와 관련해 남북은 경의선을 먼저 다음달 연결하자고 한 남측과 경의·동해선 동시 연결을 주장한 북측의 견해가 갈려 특정 시점을 못박지 못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한국일보

2003. 1. 27 (월)

경의선 내달개통 합의못해

남북은 25일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공사의 최대 쟁점인 군사분계선(MDL) 통행 문제를 MDL을 기준으로 남측은 남쪽으로, 북측은 북쪽 방향으로 각각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두 철도를 연결하기로 했다.

남북은 평양에서 진행된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2차 회의의 마지막 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북은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경의선의 2월 개통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철도·도로 연

결공사에 사용될 자재·장비 등을 해로는 물론 육로도 보내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열차운행 합의서를 채택키로 했다.

또 조만간 실무접촉을 갖고 열차 및 차량 운행사무소 개설, 신호·통신·전력 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 조사 문제 등을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철도 연결공사 완공 시기와 관련, 남측은 경의선을 2월 중에 먼저 완공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경의·동해선의 동시 완공으로 맞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대북지원 핵과 연계안해”

이종석 인수위원 방북회견 “남북 공동번영 위한 조치”

임특사 어제 평양도착 김용순과 현안 논의

이종석(李鍾奭)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은 27일 새정부에서는 대북 경제지원과 북핵문제 해결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북 특사단의 일원인 이위원은 27일 남북대화사무국에서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와 함께 방북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과 경제협력 문제는 결코 핵문제 해결과 관련,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면서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면 이것을 주겠다는 방식이 아니며 이것은 당선자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은 “대북 지원이나 경제협력에 대한 문제는 핵이나 이런 근본적인 한반도 안보불안 요소들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실현될 수 있다”면서 “북에 대한 경제지원은 남북 공동번영과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임동원 특사, 임성준(任晟準)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이종석 위원 등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3호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오전 11시53분 평양에 도착했다. 북측에서는 립동욱 당중앙위 제1부부장을 비롯한 관계 간부들이 영접을 나왔다. / 관련기사 3면

임특사 일행은 백화원 초대소에서 북측 파트너인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비서 주위의 환영오찬에 참석한 뒤 김 비서와 회담을 갖고, 현안인 핵문제와 검협사안 등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했다.

임특사는 방북에 앞서 “이번 평양 방문은 어떻게 하든지 전정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우선 대화의 물꼬와 실마리를 만들어 내는 데 뜻이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북측 지도자에게 전달하고 그의 생각을 듣고 오는 것이 기본임

무”라고 설명했다.

임특사는 “핵문제 해결엔 속상상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해결방향이 마련된다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려해가 걸리며, 얼마나 걸릴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특사는 미국 정부의 사전조율과 관련,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이미 (대통령 특사로) 위장탄을 다녀왔다”면서 “특사 파견 발표 후 우방국 정부의 긴밀히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한겨레

2003. 1. 27 (월)

임특사, 오늘 김위원장 만날듯

방북 길에 오른 임동원 대통령 특사는 27일 숙소인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용순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와 회담한 뒤 북쪽 경제시찰단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임특사와 김 비서는 회담에서 “한반도 경제와 남북관계 발전에서 제기되는 상호 관심사들을 토의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 관련기사 4면

임 특사는 방북에 앞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사무국에서 한 출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뜻을 북측 지도자에게 전달하고, 북측 지도자의 의견을 들어오는 게 기본 임무”라며, 핵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실마리를 어떻게

펼치겠는지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전례에 비춰볼 때 임특사는 28일 오후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종석 대통령직 인수위원은 정동영 노무현 당선자 특사가 다보스포럼에서 밝힌 ‘대대적 대북 경제개발 지원’과 관련해 “핵 문제 등 근본적인 한반도 안보불안 요소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 문제를 해결하면 이걸 주겠다는 방식이 아니며,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흥정거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건 당선자의 철학”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인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가 27일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한 여성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임 특사와 이 인수위원, 임성준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등 특사단 8명은 대통령 전용 3호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서해상 직항로를 거쳐 평양에 도착했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林특사, 오늘 김정일 만날듯

어제 평양 도착... 김용순과 핵문제 등 조율

임동원(林東源)대통령 대북 특사 (외교안보통일 특보) 일행이 27일 서해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 북측과 핵문제 및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본격 조율에 들어갔다. <관계기사 5면>

林특사는 이날 김용순 노동당 비서 등과 회담한 데 이어 28일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북·미대화 재개 문제 등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林특사는 방북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북을 통해 전쟁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핵문제)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문제는 갑자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속성상 장기간이 소요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林특사와 함께 방북한 이종석(李鍾奭)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은 회견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정동영(鄭東泳)의원이 밝힌 대북 경제개발 지원은 한반도 안보의 불안 요소들이 해소돼 가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전용기로 방북한 林특사는 이날 평양 순안공항에서 임동욱 노동당 제1부부장의 영접을 받았으며, 김용순 비서와 오찬을 같이했다.

林특사는 이어 지난해 10월 방한했던 북측 경제시찰단(단장 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오영환 기자

hwasan@joongang.co.kr

東亞日報

2003. 1. 28 (화)

임동원특사 오늘 김정일 면담

金대통령 친서 전달

임동원(林東源)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27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임 특보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종석(李鍾奭) 위원, 임성준(任晟準)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전 대통령전용기인 공군 3호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임 특보는 이르면 28일 중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면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핵문제 해법에 관해 의

견을 교환하는 한편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강석주(姜錫柱) 외무성 제1부상, 조명록(趙明祿)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 특보는 이날 오후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발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임 특보의 방북 및 김 비서와의 회담 사실을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성동기기자 espri@donga.com

대한매일

2003. 1. 28 (화)

임동원 대북특사 어제 평양 도착

核문제 논의 착수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 등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특사 일행은 27일 평양에 도착, 오후 4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북한 김용순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회담을 갖고 핵 문제와 남북관계 현안 전반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임 특사와 김 비서는 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발전에서 제기되는 상호 관심사들을 진지한 분위기에서 토의했다."고 전했다. 임특사는 이르면 28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을 만나 김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과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임 특사는 출발 기자회견에서 북한핵 문제와 관련, "평양 방문은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우선 대화의 물꼬와 실마리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데 잠점이 있다."고 밝혔다. 임 특사와 동행한 이종석(李鍾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은 정동영 의원이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한 '북한판 마셜플랜'과 관련, "이미 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밝힌 것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과 경제협력 문제는 결코 핵문제 해결과 관련,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林특사 오늘 김정일 면담

함께 방북한 이종석 인수위원은 '盧의 對北구상' 金에 설명할 듯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는 방북 이틀째인 28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화해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바라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뜻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임 특사는 작년 4월 방북 때에도 방북 이틀째인 김 위원장을 만났었다. 김 대통령의 친서 역시 작년 4월 방북 때처럼 김 위원장 면담 전에 북측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임 특사는 또 김 위원장에게 부시 대통령의 '서한'이나 '공식성명' 등 문서 형식으로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미국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 이종석(李鍾碩) 대통령직 인수위원도 동석한다. 이 위원은 27일 평양으로 떠나기 전 "현 정부의 핵문제 해결노력을 성원하러 가는 것"이라며 자신이 조연(助演)임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 위원은 김 위원장에게 노 당선자의 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 구상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북측도 노 당선자의 대북구상에 더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노 당선자가 일본 신문과의 회견에서 의향을 밝힌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부분에 대해, 이

위원은 "그런 제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은 "핵포기 대가로 대규모 지원을 하는 흥정은 않는다는 게 노 당선자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임 특사는 27일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비서와 회담을 갖고 핵문제와 함께 경의선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등에 대해 협의했다. 임 특사는 이날 남북 군사당국 간 경의선과 동해선 임시도로 동행에 관한 군사보장합의서가 타결됐다는 점을 감안해, 경의선 철도연결 등 세 가지 사업들을 김 대통령 임기 내에 실현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특사 일행에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용순 비서 등 대남사업 관계자들 외 북한 고위 인사와의 면담은 잡혀있지 않다. 그러나 김영남(金永男)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조명숙(趙明淑)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과는 오찬이나 만찬 자리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또 핵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강석주(姜錫柱)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간의 별도 접촉도 있을지적이다.

임 특사 일행은 27일 저녁에는 지난해 10월 방한한 북한 경제시찰단과 만찬을 함께 했다.

/金仁執기자 ginko@chosun.com

한겨레

2003. 1. 28 (화)

북 속뜻 파악 주력

■ 평양 도착한 임특사 일행 북-미 대화 다각 타진 '지나친 기대 부담감'

'특사 방북으로 북한과 미국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마주앉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면 최선이 아니겠는가.'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임동원 대통령 특사 방북에 대한 나라안팎의 높은 기대가 부담스러운 듯 이렇게 말했다. 임 특사도 출발 전 기자회견에서 "(핵문제 해결은) 순조롭게 진행돼도 여러 해가 걸린다"라며 기대수준을 낮추려 했다. 그는 기본임무를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북측 지도자의 의견을 들어오는' '메신저'로 규정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 휴대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를 전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핵문제에 대한 '의중'을 파악해, 접점을

모색할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정부는 특사방북을 통해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핵위협 중단'을 전제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조-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해 증명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복안'을 확인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생각하는 '검증'의 맥락에 따라선 '협상'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선호하는 '다자적 접근'과 북한의 일관된 '북-미 직접 협상' 주장의 병행 추진 등 둘 사이의 관계 설정에 북측의 생각도 탐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특사가 '핵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날지도 관심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측의 특성상 가능성은 낮지만, 김 위원장 면담에 그가 배석하거나 별도 만남이 이뤄진다면 좀더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北核-경협 분리 시사

訪北 李중석위원 美입장과 달라 논란예고

노무현(盧武鉉) 차기 정부는 대북 경제지원과 북핵문제를 연계하지 않는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북 특사단의 일원으로 27일 방북한 이종석(李鍾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은 출발에 앞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재건계획(일명 북한판 마셜플랜)은 결코 핵문제와 흥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관련기사 5면)

그는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은 '주고받기식'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불안요인들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밝혀 새

정부는 핵문제와 별도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의 발언은 '핵개발을 포기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미국의 입장과 달라 한미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특사로 평양에 도착한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는 백화일초대소에서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비서와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특사 일행은 28일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면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21smin@segye.com

대통령취임식 1만명 인터넷추첨 초청

北사절단 초청하기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될 일반인 중 1만여명을 인터넷으로 신청자를 접수하며, 이렇게 초청될 인원은 1만~1만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식 전체 초청자 규모는 4만5000여명이다. 희망자가 참석 이유 등을 인터넷으로 접수시키면, 인수위측에서 선별해 이메일과 전화로 답장을 보내

게 된다.

현재 초청자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계에서 한국을 빛낸 한국인들,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한 외국기업의 CEO 등과 함께 환경미화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 계층도 초대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임식에 북한 사절단을 초청하는 방안도 인수위 내에서 한때 거론됐으나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李洛淵) 당선자 대변인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적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鄭佑相기자 imagine@chosun.com

한국일보

林특사, 김용순과 첫날 회담

■ 核특사 아제 방북

北 "관심사 토의" 보도

核문제 논의 한듯

임동원(林東源) 대북 특사는 27일 오전 평양에 도착. 숙소인 백화일 초대소에서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비서 등 북한 고위층과 회담을 가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방북은 현 시기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경제와 북남관계 발전에 제기되는 호상 관심사를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회담은 동포애와 호상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밝혀 첫

날 회담부터 핵 문제와 함께 포괄적인 대북경제보장 및 지원책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앞서 "임 특사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사전에 핵문제에 대한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특사도 출발 기자회견에서 방북의 목적에 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풀고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라면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우려를 전달하고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얘기를 경청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 특사는 "핵 문제 해결에는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강조, 북한이

쉽게 핵 포기 선언이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등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사단은 우선 미국과 러시아 간에 논의되고 있는 '5+5' 다자협의체 등에 대한 김 국방위원장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북한측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의 이종석(李鍾奭) 인수위원을 동행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의 큰 틀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북측에 확실하게 인식시켜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위원은 이날 "대북 경제지원은 남북공동번영과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다보스 회의에서 정동영(鄭東泳) 의원이 언급한 '한반도 마셜 플랜'의 실체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특히 "대북지원은 핵 문제가 해결되면 가능하다"는 식의 흥정거리가 아니다"라고 못박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노 당선자측의 언급은 북한과의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결국 평양에서 임 특사는 북측에 핵문제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이 위원은 새 정부 출범 후 대북지원 등 당근을 약속하는 역할분담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외 외교에서 나타났던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선악분담이 다시 재현되는 셈이다.

특사 일행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3호기 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국제사회 核우려 전달”

• 임동원특사 일문일답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는 27일 방북에 앞서 서울 삼청동 남북대화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방북은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를 전달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각을 들어보고 오는 것”이라고 방북 목적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핵문제 등 현안을 해결할 북안은 무엇인가.

▲임특사=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북안을 갖고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그대로 전달한 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하고 상대의 의견을 듣고 오는 것이다.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면 모색하겠다.

-9차 장관급회담에서 북핵과 특사 파견방법을 합의한 뒤 미국측과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협의하는가.

▲임특사=대통령은 핵문제가 불거질 때부터 미·일·중·러·EU 등 여러

“訪北발표 이후에도 우방국과 긴밀협의”

러 나라와 여러 채널을 가동해서 총력외교를 수행했다. 임성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번 대통령 특사로 워싱턴에 파견되기도 했다. 임수석은 특사 방북사실을 발표한 이후에도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평양에 간다.

-북한에 요구할 마지노선은 갖고 있는가.

▲임특사=마지노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북측 지도자에게 전달하고 그의 생각을 들어오는 것이 기본임무이다. 핵문제 해결에는 속성상 장기간이 소요된다.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선언된 지 11년이 지났고, 제네바 합의도 9년이 지났지만 아직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해결방안이 마련된다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러 해가 걸린다. 어떻게 해

서든 전쟁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모색하려는 게 이번 방문의 목적이다.

-지난주 정동영(鄭東泳) 의원이 다보스 포럼에서 북한관 '마셜플랜' 카드를 밝혔다. 이번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로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거론될 수 있는가.

▲이종석 인수위원=제가 평양에 가는 것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을 노당선자측에서 성원하고 있음을 북측에 알리기 위해서다. 북에 대한 경제지원 및 개발에 관한 얘기는 노당선자가 이미 밝힌 바 있다. 대대적 지원이나 경제협력에 대한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불안 요소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북측 핵문제와 결부돼 흥정거리가 될 수는 없다. 북에 대한 경제지원은 남북 공동번영과 동북아 중삼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이해돼 달라

이용욱기자

임동원 對北특사

“국제사회 北核우려 설명할 것”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대북특사는 27일 방북에 앞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를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장에는 함께 방북한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이종석(李鍾奭) 대통령직 인수위원도 배석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안은 있다.

“북안을 갖고 가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의견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서 오는 것이다. 군사분계선(MDL) 붕괴 문제도 논의하겠다.”

-任수석과 李위원의 역할은.

“평화적 해결 모색 위해 털어놓고 이야기하겠다”

“任수석은 북한 핵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총력외교를 수행해왔으며 지난번 대통령특사로 워싱턴에 파견되기도 했다.任수석은 특사 방북 발표 이후에도 우방과 긴밀히 협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평양에 간다.”

(李위원 답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현 정부가 임기 말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노무현 당선자 측에서 성원하고 있음을 북측에 알

리기 위해 간다.”

-북한에 가서 많은 얘기를 나눌 텐데 핵문제와 관련한 마지노선은 있다.

“마지노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문제를 털어놓고 이야기할 것이다. 부연할 것은 핵 문제 해결에는 속성상 장기간이 소요된다. 이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여곡절을 겪으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이번 방북의 목적이다.”

오영환 기자

hwasan@joongang.co.kr



평양도착한 특사 일행 임동원 대북특사 일행이 핵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방북, 평양 순안공항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꽃을 든 사람이 임특사, 임특사 왼쪽은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오른쪽은 이종석 대통령직인수위원. 평양=조선중앙통신 변

햇볕정책 더 강화되나

訪北 이종석 위원 '북핵-경협 불연계' 발언 파장

북한 핵문제와 대북 경제지원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이종석 대통령직인수위원의 발언은 새 정부가 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국내외 파장이 예상된다. 더구나 이위원은 인수위 환동을 통해 노당신자의 대북정책 수립에 깊숙이 간여해온 인물이라 이번 발언 배경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위원은 임동원 대북특사 일행과 출발하기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과 경제협력 문제는 결코 핵문제 해결과 관련,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북에 대한 경제지원은 노당신자 스스로도 밝힌 바 있는 것으로, 남북 공동 번영과 우리나라의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부차원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이위원은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대적인 경제원

조를 새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따라서 이위원의 발언에는 현 정부보다 북한을 더 크게 포용하겠다는 의지가 실려있다는 해석이다.

이위원의 핵문제-경제지원 불연계 발언이 새 정부 대북정책으로 확정될 경우 미국 의 '선 핵포기시 경제지원' 입장과 상충되는

李위원 盧당선자 대북정책 수립 깊숙이 간여 원인제거 없는 지원 반대 - 美와 마찰 일수도

것이어서 새 정부가 미국과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국민 설득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핵개발로 전쟁위기를 조성한 북한에 원인제거 없이 경제지원을 할 경우 적지 않은 국민이 반대하고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위원은 이를 염두에 둔 듯 "북에 대한 경제지원은 한반도에서 안보 불안 요소들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북한이 핵문제

에 대해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받아들여 한발짝 양보한다면 이와 병행해 대규모 경제지원을 실천하겠다는 생각이다.

임특사가 "북핵문제는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네바합의 9년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았듯이 앞으로도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위원

발언배경을 설명한 것도 새 정부의 대북정책 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핵문제가 단시일에 북·미 직접대화로 풀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경제마비 상태인 북한을 방치하기보다는 경제지원을 통해 회생시키는 것이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임특사 일행은 방북기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새 정부의 이런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가시적 이면서도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 경우 노당선자의 대북 마셜플랜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창호기자 procol@kmbf.co.kr

대한매일

2003. 1. 28 (화)

北核·경제지원 연계 않나

■ 이종석위원 회견놓고 논란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합 특보와 함께 방북한 이종석 대통령 직 인수위원이 27일 오전 출발에 앞서 서울 삼청동 남북대화사무국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은 "최근 정동영 의원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주장한 '북한판 마셜플랜'을 카드로 갖고 가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북 경제 지원과 개발정책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여러차례 밝힌 바 있고, 한반도의 안보불안 요소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실현될

다는 우리도 함께 나왔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이 위원의 언급에 대한 해석이 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 풀이됐다."며 경계하고 나섰다. 그는 "이 위원이 회견에서 핵 문제의 명확적 해결을 위해 현 정부가 임기말까지 노력하는 것에 대해 노 당선자 측에서 성원하고 있음을 북측에 알리기 위해 간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즉 "홍정거리가 아니다."라고 한 부분은 핵 문제와 대북 지원을 '조건부'로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핵 문제는 핵문제대로 단호히 해결돼야 한다는 뜻이 라고 설명했다.

"홍정거리 될수 없다" 발언에 별도추진 해석

인수위측 "핵 단호히 해결 강조한것" 해명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지원)문제와 북한 핵문제는 홍정거리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북에 대한 경제지원은 남북 공동 번영과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틀 두고 일각에선 노 당선자 측이 핵 문제는 핵 문제대로 대처하면서, 대대적 대북 경제개발 지원이나 협력은 그것대로 '병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새 정부가 대북경제 지원 및 협력을 핵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대목으로 보인다. 나아가 '선 핵포기시 대대적인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시 미 대통령의 '대담한 접근(Bold Approach)' 방식과도 상이해 미국과 정책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

"북핵 문제를 풀지 않고서 대대적인 대북 경제 지원이 가능하겠느냐."면서 "물론 핵문제는 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지만, 남북간 신뢰가 형성돼 우리 국민의 안보 우려가 해소되는 수준은 돼야 노 당선자가 준비해온 대북 정책을 과감히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특사는 "한반도 비핵화가 선언된 지 11년이 지났고, 제네바 합의도 9년이 지났지만 아직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면서 "해결방향이 마련된다 해도 핵문제의 속성상 (최종)해결되려면 여러 해가 걸린다."고 진단했다. 이어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이번 방문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林특사 오늘 김정일 면담

金대통령 친서 전달

임동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7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2박3일 간의 공식 임정에 들어갔다.

임 특보는 이날 오후 4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북한 김용순 노동당 비서와 회담을 갖고 핵문제와 남북관계 현안 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임 특사와 김 비서는 현 한반도 경제와 남북관계 발전에서 제기되는 상호 관심사들을 토의했다"며 "회담은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임 특보는 이르면 28일 김정일 국무위원장을 면담해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핵문제 해법에 관

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만난 것으로 예상된다.

임 특보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종석 위원, 임성준 외교안보수석 등 특사 임행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3호기를 타고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김용순 노동당 비서와 백화원 초대소에서 주최된 환영연회에 참석했다.

순안공항에는 임동원 통일외교안보특보 1부부장을 비롯해 최승철 북한직접사과 상무위원 등이 나와 임 특보 임행을 맞이했다.

임 특보는 서울을 떠나기에 앞서 "이번 평양 방문은 어떻게 하든 진경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필요와 실마리를 만듬어내느냐 하는 데 집중이 있다"고 말했다.

윤성환기자 shyoon@mk.co.kr

한국경제

2003. 1. 28 (화)

"북핵 중장기 관점서 풀겠다"

평양도착 임동원특사...경제지원과 연계안해

EU, 북에 특사파견 합의

임동원 대통령 특사는 27일 평양에 도착. 김용순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등과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해 본격 논의했다.

임 특사는 이날 회담에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또 빠른 시일내 핵개발 계획 포기 선언과 핵동결 해제조치 원상복구,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철회 등도 북측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는 이르면 28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EU 대변인이 27일 (현지시간) 밝혔다.

엠마 우드윈 EU 대변인은 이날 번



27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임동원 대통령 특사.

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대북 특사 파견을 위한) 구체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시정판단을 구성한다는 데 장관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홍양식 기자

yshong@hankyung.com

‘군사분계선 통행’ 남북한 극적 타결

군사 실무회담 대표 접촉

북측과 유엔시간 정전협정 준수 여부에 따른 감등으로 담보상태를 빚어온 비무장지대(DMZ) 남북관 리구역내 군사분계선(MDL) 통행 문제가 남북 군사당국자간 합의로 타결됐다. (관련기사 5면)

하지만 이번 합의는 임시도로에 한정돼 본도로 및 철도 개통을 위한 추가 군사보장합의서 교환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장광일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은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간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동·서해지구 남북관 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서명, 이를 발표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과 개성공단 착공 및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 등 3대 현안사업이 협정부 임기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병진기자 worldpk@segye.com

군사분계선 통행협상 타결

남북 군사당국 합의서 서명

비무장지대(DMZ) 남북관리구역 내 민간인의 군사분계선(MDL) 통행 과 관련한 남북 군사당국간의 협상이 27일 타결됐다. >관련기사 29면

문성묵(文聖默·육군 대령) 군사실 무회담 남측 수석대표와 북한군 유영 철 대좌는 이날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진 수석대표 접촉에서 '동·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마련, 서명했다. 모두 4개 조항으로 된 합의서에서는 쌍방이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개방하기로 했으며, MDL 통과 승인과 관련하여는 종전 의 군사보장합의서와 마찬가지로 '정전협정'에 따르기로 했다.

또 쌍방은 승인된 인원과 장비에 한해 MDL 통과를 허용하고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지도록 돼 있다.

이번 MDL 협상 타결로 이 문제로 인해 중단됐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1단계 작업과 개성공단 착공식, 육로 를 통한 금강산 관광사업 등이 이트 먼 협정부 임기 내인 내달 24일 이전 에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승진기자 redtrain@kdaily.com

국민일보

남북 육로통행 기반 마련

MDL 타결 의미와 전망

北韓 '정전협정 준수' 양보 첨예대립문제 절충점 찾아

비무장지대(DMZ) 남북관리구역내 군사분계 선(MDL) 원경문제가 27일 타결된 것은 그간 정전 협정의 무력화를 피하며 유엔사의 개입을 일관되게 반대해온 북한이 일단 한발 양보했기 때문에 가능 했다.

이번 합의는 DMZ를 통한 남북한 육로통행의 제 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북한은 이번 통행합의서 2항에서 '비무장지대 일부인 남북관리구역'과 '승인과 관련된 절차상 문제들은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한다'는 문장을 넣음으로써 그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문제들 에 대한 절충점을 찾았다.

경의선 및 동해선 임시도로·철도연결을 위한 남 북관리구역의 통행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는 남과 북이 직접 통보해 처리하되 남북관리구역에서 군사 적인 충돌이나 분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정전협정 에 의한 유엔사의 권한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전협정의 큰 틀을 유지했다.

북한측이 주장해온 남북관리구역에서의 남북한 간의 자율적인 관리와 유엔사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정전협정준수라는 입장을 모두 만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철도 및 도로연결에 최대 걸림돌이던 MDL 통행 에 관한 문제는 지난해 11월초 풀거졌다. 남북양측 에서 지뢰제거상황을 검증할 요원들의 MDL 통과 절차를 놓고 북한과 유엔사가 이견을 보인 것. 그간 유엔사의 개입을 허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바 뀀 것은 정전협정에 따라 MDL 통행 관할권을 지키 겠다는 유엔사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데다 남북교류 협력을 본격 진전시켜 실리를 얻기 위해서는 명분 싸움인 합의 문구에 매달리기보다는 우선 MDL 문 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임동원 대북특사의 방문이 이뤄진 27일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열어 3개월간 진척을 보이지 않았던 MDL통행문제를 타결, 북한이 대화를 원하 고 있다는 입장을 극적으로 파시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방부는 임시통행합의서 타결이 비무장지대를 남북화해의 장으로 '부활'시키 는 첫 장을 연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서에는 어느 일방이 합의서의 기본정신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경우 통보만 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도록 해와 어렵게 이뤄진 남북 간 합의가 예기치 않은 일로 폐기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최현수기자 hschoi@kmib.co.kr

임시도로 통행 합의서 전문

남북은 27일 판문점에서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을 갖고 '동·서해지구 남북관 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 한 잠정합의서'를 타결지었다. 다음은 잠 정 합의서 전문.

1. 쌍방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내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개방한다.

2. 쌍방은 임시도로를 통해 비무장지대 일부인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으로 들 어가려는 경우 인원 명단과 차량, 자재 및 장비수, 군사분계선 통과시간을 사전에 다 른 일방에 통보해야 한다.

승인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들은 2000년 11월17일과 2002년 9월12일 체결된 '국제 연합군측과 조선인민군측간 합의서' 2항과 2002년 9월17일 체결된 군사보장합의서 1조 2항에 준해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 처 리한다.

3. 쌍방은 승인된 인원, 차량, 자재 및 장 비에 한해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남 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4. 본 잠정합의서는 어느 일방이 합의서의 기본정신에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방 의 통보에 따라 또는 동·서해지구 본 도로가 개통되어 새로운 합의서가 채택, 발표되는 경 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경의선-개성공단 내달 본궤도

남북 군사보장 합의서 타결... 유엔시 군사분계선 관할권 인정

경의선과 동해선 임시도로 통행을 위한 남북 군사보장합의서가 27일 타결됐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비무장지대(DMZ)의 동쪽(동해선)과 서쪽(경의선)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두개의 임시도로를 통해 금강산 육로관광과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 개성공단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광일(章光一)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양측은 27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에서 군사실무회담을 갖고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며 "이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에서 양측은 남북관리구역이 DMZ의 일부이

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정전협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며 "북측은 DMZ 통과를 위한 유엔군 사령부의 군사분계선(MDL) 관할권도 계속 인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북측은 그동안 합의서에 '쌍방(남북)이 협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유엔사의 DMZ 통행승인권을 배제하고 남북 합의를 우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

다. 합의서에 따라 남북 양측은 MDL의 통과 인원 명단과 차량 및 자재, 시간을 사전에 통보하면 MDL 통과를 허용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의서는 임시도로에 한정된 것이지만 본도로 및 철도가 개통된 이후 DMZ 남북관리구역내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의 기본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한겨레

2003. 1. 28 (화)

임시도로 군사보장 타결

남북 "정전협정 따라 처리" 합의...금강산육로등 내달 가능

남북 경의선·동해선 연결의 선결 조건인 비무장지대 임시도로 통행과 관련한 남북 군사당국 사이 협상이 27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 왔던 개성공단 착공과 금강산 육로관광이 이르면 다음달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공사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3면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통일각에서 문성득 대령(국방부 회담운영단장)과 북측 류영철 대위가 참석한 가운데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열어 '동·서해지구 남북 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장광일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육군 준장)은 "이번 합의서는 임시도로에 한정되지만 본도로와 철도가 개통된 이후 비무장지대 남북 관리구역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합의서의 기본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개항으로 된 합의서는 2항에서 '(통행) 승인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는 2000년 11월17일과 2002년 9월 12일에 채택된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 간 합의서 2항과 2002년 9월 17일 체결된 군사보장 합의서 1조2항에 준해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 처

리한다'고 명시했다.

북한 측은 그동안 통행 승인 문구에 대해 '남북 쌍방이 협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을 것을 주장해 유엔사 쪽의 반발을 사왔으나, 이날 회담에서 이를 양보했다.

장 차장은 이와 관련해 "북측이 남북 관리구역도 정전협정이 적용되는 비무장지대의 일부라는 우리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도로 통행협정의 타결로 그동안 중단됐던 경의선·동해선 연결 1단계 작업과 개성공단 착공,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이 이르면 현 정부 임기 안인 다음달 24일 이전에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열 기자 skkim@hani.co.kr

南北 '군사분계선 통행' 타결

폭10m 임시도로 개방

비무장지대(DMZ) 내 민간인의 군사분계선(MDL) 통행과 관련한 남북 군사당국 간 협상이 27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 또는 연기됐던 경의선·동해선 인공작업과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 등이 이르면 한 정부 안기 내인 다음달 24일 이전에 실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남북 양측은 27일 문성무 국방부 회담운영단장(대령)과 북한 유영철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수석대표 접촉에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장광일(章光一)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준장)이 밝혔다. 양측은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의 군사분계선을 10m만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경의선 철도공사는 남측이 레일부설 공사까지 거의 끝낸 반면 북측은 레일부설 공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최소 3주 정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성공단 착공식은 우리 측이 자체 및 장비를 지원하면 다음달 중 가능할 전망이다.

또 오는 2월 20일로 예정된 6차 이산가족 상봉 남북 참가자들이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금강산에 가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廣龍源기자 kysu@chosun.com

남북 'MDL 통행' 타결

군사실무 합의서 서명, 경의선연결등 곧 성사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의 선결조건인 비무장지대(DMZ) 남북관리구역내 민간인의 군사분계선(MDL) 통행과 관련한 남북 군사당국간 협상이 27일 타결됐다. /관련기사 18면

남북은 이날 판문점 통일각에서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

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시켰다.

이에 따라 이 문제로 인해 중단됐던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 1단계 작업과 개성공단 착공 및 건설,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장광일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육군 준장)은 "4개 조항으로 된 이번 합의서가 임시도로에 한정되지만 본 도로 및 철도가 개통된 이후 DMZ 남북관리구역내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합의서의 기본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된 데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합의서 2항의 승인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유엔사들 매제하기 위해 북한군이 추가하기를 고집했던 '쌍방'이란 낱말을 넣지 않고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한다는 데 동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합의서 2항에서 "(통행) 승인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는 2000년 11월 17일과 2002년 9월 12일에 채택된 'DMZ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 합의서' 2항과 2002년 9월 17일 체결된 '군사보장합의서' 1조 2항에 준해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국민일보

南北 '군사분계선 통행' 타결

잠정합의서 서명... 철도-도로연결 본격화될듯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선결조건인 비무장지대(DMZ) 남북관리구역내 군사분계선(MDL) 통행과 관련한 남북 군사당국간 협상이 27일 타결됐다. ▶관련기사 26면

국방부 장광일 군비통제차장(육군 준장)은 "남북은 이날 오전 판문각에서 군사실무회담을 갖고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서명하고 발표시켰다"고 밝혔다.

장차장은 "남북 양측은 4개항으로 된 잠정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 일부인 남북관리구역내에서 정전협정이 준수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통행에 관한 문제는 통과인

원의 명단과 차량, 자재 및 장비의 수 등을 남북한 양측이 상대방에게 통고한 뒤 이를 유엔사에 알려주면 유엔사가 즉시 승인하는 판문점식 간판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차장은 "금번 합의서가 비록 임시도로 통행에 한정되지만 본 도로 및 철도가 개통된 이후 비무장지대를 통해 계속될 각종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합의서의 기본

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DL 통행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그간 지뢰 제거작업을 끝냄에도 진행되지 않았던 금강산 육로관광 및 개성공단 착공을 지원하기 위한 경의선 및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시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장비와 자재들이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북측에 인도할 계획"이라며 "기상상황만 좋다면 다음달 하순부터 임시도로를 통한 금강산 육로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현수기자 hschoi@kmbi.co.kr

南北 군사분계선 통행 타결

잠정 합의... 도로 연결·육로 관광 장애 해소

주한 유엔사령부와 북한군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지연돼온 비무장지대(DMZ) 남북관리구역 내 군사분계선(MDL) 통행 협정이 27일 타결됐다.

이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경의·동해선 1단계 연결공사와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등 3대 현안사업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성사될 가능성이 생겼다.

장광일(杲光一·육군 준장) 국방부 군비통제처장은 "남북 군 당국은 이날 판문점 통일각에서 수석대표 접촉을 하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선결조건인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

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杲처장은 "잠정 합의서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됨에 따라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 및 건설 등 남북 간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잠정 합의서는 임시도로에 한정되지만 본 도로 및 철도가 개통된 이후 DMZ 남북 관리구역 내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합의서의 기본 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정전협정 준수와 관련, 합의서에는 '통행'승인과 관련

한 절차상 문제는 2000년 11월 17일과 2002년 9월 12일 체결된 국제연합군측과 조선인민군 측 간 합의서 2항과 2002년 9월 17일 체결된 군사보장합의서 제1조 2항에 준해 정전협정에 따라 합의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막판에 북측이 주장했던 '정전협정에 따라 쌍방이 협의 처리한다'는 문구 중 '쌍방'은 북측이 양보해 생략됐다.

민간인 및 건설자재의 MDL 통과에 대해서는 남북 양측이 상호 통보한 뒤 유엔사령부에 명단 등을 전달하면 유엔사령부는 즉각 이를 승인하는 간소화된 관문점 통행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철희 기자 chlee@joongang.co.kr

경향신문

내달 금강산 '육로 상봉' 길 터

· 'MDL 통행' 타결 안팎

남북 비무장지대(DMZ) 내 민간인 군사분계선(MDL) 통행 협상이 27일 타결되면서 경의선 철도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 관광 등 3대 사업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다음달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제6차 이산가족상봉행사 때 남북 이산가족이 육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합의서의 내용과 의미=합의서는 쌍방이 동·서해지구 관리구역내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MDL을 개방한다며 임시도로의 폭을 규정했다.

이번 합의서는 또 임시도로 통행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계속된 각종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른 합의서의 기본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관리구역내 군사 충돌이나 분쟁 발생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권한을 수행할

'도로 연결지점' 10m씩 개방 기존 관문점 통과절차 준수 南, 유엔사 형식적승인 통보

수 있게 하면서도 통행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는 남북이 직접 통보해 처리토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나름대로 협상 성과를 밝혔다.

◇협상과정과 타결 배경=남·북·미 갈등은 지난해 11월 DMZ 지뢰제거 검증 요원의 MDL 통과 절차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2월23일 열린 군사실무회담 접촉에서도 "남북관리구역이 정전협정이 적용되는 DMZ의 일부"라는 문구를 합의서에 명시하자"는 유엔사의 주장과 "관리구역에서의 문제는 남북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유엔사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북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둘과구는 북측이 남북경협이라는 살리를 택해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승인권을 문서화하는 데 동의하면서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남측이 임동원 특사를 평양에 보내고 '핵과 경제협력은 별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도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MDL 통행 관할권을 지키겠다'는 유엔사의 '벼랑끝 전술'도 북측의 입장을 누그러뜨리게 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통행절차=합의서는 지금까지 관문점에서 관행화된 통과절차를 남북관리구역에서도 확대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 사람이거나 물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갈 경우 유엔사 대신에 남측이 유엔사의 형식적인 승인을 거쳐 명단 등을 북측에 전하나 팩스 등으로 직접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이번 합의는 관문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MDL 통행절차가 남북관리구역으로 확대 적용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남북 '군사분계선 통행' 합의

■ 군사실무회담 타결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선결조건인 비무장지대(DMZ) 남북관리구역 내 민간인의 군사분계선(MDL) 통행과 관련한 남북군사 당국간 협상이 27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 공단 착공 및 건설과 금강산 육로관광의 걸림돌이 사라져 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남북은 이날 오전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4개 조항으로 된 '동·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은 이날 합의서에서 "동·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 내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개방한다"고 합의했다.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이 마지막까지 갈등을 빚은 통행 승인 주체에 '쌍방'이라는 문구를 넣는 문제와 관련, 북측이 쌍방을 넣지 않기로 양보해 타결에 이르렀다.

남북은 논란이 돼 왔던 남북 관리구역 통행 승인 절차와 관련, '2000년 11월17일과 2000년 9월12일 체결된 '국제연합군측과 조선인민군측간 합의서' 2항과 2002년 9월17일 체결된 군사보장합의서 1조2항에 준하여 정전협정에 따라 합의·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그 동안 유엔사를 배제하기 위해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쌍방이 합의·처리한다'라는 문구를 고집했었다.

국방부 장광일(章光一) 군비통제차장(준장)은 "MDL 통행문제로 남북 3대사업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리측의 꾸준한 설득이 주요 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서명 즉시 발표된 합의서는 '임시도로'에 한정되지만 본 도로 및 철도가 개통된 이후 DMZ 남북관리구역 내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합의서의 기본 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임시도로 연결지점서 10m 개방"

철도·개성공단·육로관광 가속도

北양보... 국방회담도 재개 가능성

가 있다. 북한이 이날 현안에 대해 양보한 것은 남북 간 경협 현안이 풀려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MDL 문제로 유엔사측과 대립하기 보다는 실리를 택해 철도·도로연결을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을 원만하게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북한의 결단은 이날 시작되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의

방북에 따른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합의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경의선·동해선 연결 1단계 작업과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 관광사업 등 현 정부의 3대 남북사업이 과연 언제 결실을 맺을지 여부다.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임기 내에 '성과물'을 기대하며 추진을 서두를 경우 3대 사업이 조만간 가시적

인 성과를 낼 가능성도 높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남북간 실무 접촉만 거치면 3대 현안사업이 조만간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 달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6차 이산가족상봉행사에 남북 이산가족이 육로를 이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편 이날 합의로 2000년 9월 1차 회담후 중단된 남북국방장관 회담의 재개가능성도 높아졌다. 남북은 지난해 10월 판문점 군사실무회담에서 11월·북측 지역에서 2차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었으나 당시 다시 불거진 북한 핵문제와 상호검증 요원 명단 통보절차를 둘러싼 유엔사와 북측간의 갈등으로 무산됐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매일경제

2003. 1. 28 (화)

군사분계선 민간인통행 타결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선결조건인 비무장지대남북관리구역 내 민간인의 군사분계선(MDL) 통행과 관련한 남북 군사당국간 협상이 27일 타결됐다.

이번 MDL 협상 타결로 이 문제로 중단됐던 경의선·동해선 연결 1 단계 작업과 개성공단 착공식,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사업 등이 이르면 현 정부 임기 내인 다음달 24일 이전에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이날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수석대표 접촉에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며 "남북은 이번 합의서

발효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 및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장광일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이 밝혔다.

장 차장은 또 "앞으로 남측에서 북측으로 자재나 사람이 넘어갈 때 우리가 유엔사에 승인을 요구하면 유엔사는 즉각 승인하고, 남측은 이를 전화나 팩스 등 간편한 통신수단을 이용해 북측이 통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타결은 막판 쟁점이 됐던 북한군의 주장인 '쌍방이 합의 처리한다'중 '쌍방'이란 낱말이 북측의 양보로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원기자

기자의 눈 對北특사 발목잡기

“임동원(林東源)씨는 퍼주기식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남북관계를 왜곡시킨 장본인이다. 임씨가 대통령 특사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가는 게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지 의심스럽다.”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특사의 방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작심한 듯 “임씨는 지난해 4월에도 방북했지만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뚜렷한 성과없이 그냥 돌아왔다. 김대중(金大中) 정권은 민족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바로 전날 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국민은 특사 파북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사단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했던 격려의 메시지와는 거리가 먼 주장이었다.

평소 같으면 하 최고위원의 발언은 햇볕정책의 부정적 산물에 대한 야당의 건전한 비판이나 견제 정도로 간주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햇볕정책의 ‘시작이자 끝’이었던 임 특사에게 ‘대북 포용 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게 북한의 비밀 핵개발과 한반도의 긴장고조밖에 더 있는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북한의 핵화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북핵 파문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은 북핵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생각이고 국제원자력기구(AEA)는 임 특사의 방북결과를 보고 특별이사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북한을 설득해 보겠다고 떠나는 대통령 특사의 뒤에 독설을 퍼부으며 발목부터 잡는 건 책임 있는 공당과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 민족의 앞날을 좌우할 북핵 위기는 햇볕정책의 공과를 따진 뒤 대처할 만큼 한가한 사안이 아니며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패배한 뒤 한나라당은 진정으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원대한 목표도 일단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는 정파를 초월해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 나갈 때 더 빨리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종훈 정치부

taylor55@donga.com

北, 실리감안 한발양보

‘MDL 협상’ 타결 안팎

담보상태를 벗어난 비무장지대(DMZ) 남북관리구역내 군사분계선(MDL) 월경문제가 27일 남북 군사당국자간 합의로 타결된 것은 사실상 북측의 양보

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11월 이후 MDL 상호검증요원 명단 통보절차를 둘러싼 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준수 입장을 거듭 거부해온 북측이 먼저 실무회담을 제의해온 것이나 이를 뒤 회담에서 속전속결로 합의가 도출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잠정 합의는 이날 오전 임동원 대북특사의 방북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여 북측의 태도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잠정합의서 내용과 동과절차는 판문점에서 군사실무회담 수

석대표 접촉을 갖고 타결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는 4개항으로 우선, 남북 쌍방이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내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

양측 임시도로 연결지점 DMZ 개방 임동원특사 방북 때 맞춰 ‘선물’ 준듯

계선을 개방한다는 것이다. 또 쌍방은 임시도로를 통해 비무장지대 일부인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경우 인원 명단과 차량, 자재 및 장비의 수, 군사분계선 통과시간을 사전에 서로 통보해야 한다. 여기에 어느 한쪽의 행위가 합의서 기본 정신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한쪽의 통보에 따라 또 동서해지구 본 도로가 개통

돼 새로운 합의서가 채택, 발효되는 경우 자동으로 폐기한다고 명시했다.

◆타결배경과 전망=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핵문제가 대화를 통한 해결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데다 남북회담이 잇따라 열려 북측도 ‘민족공조’

를 강조하면서 남북교류협력력을 지속할 의지를 밝혀왔다”면서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 북한군도 실리를 감안한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합의가 “남북관리구역을 ‘정전협정상 DMZ 일부’라는 조항을 DMZ 통행보장 합의서에 명기하지는 유엔군사령부의 주장을 북측이 받아들이고 남북간 철도-도로를 공동시켜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병진기자 worldpk@segye.com

“北, NPT탈퇴 철회를”

林특사, 김영남과 만나 김용순과 2차회담 주목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는 2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철회 등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측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임 특사는 김 위원장 면담에서 최근 러시아와 미국 등이 제안한 '5+5' 다자협의체 등 국제 사회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선 특히 최근 미국을 방문한 임성준(任

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북미 직접 대화와 북한 체제보장 방안 등을 포함한 미국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 이종석(李鍾奭) 인수위원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는 또 이날 밤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비서와 만나 제2차 회담을 가졌다. ★관련기사 5면

한편 임 특사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면담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연두교사가 발표된 이후인 29일 오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경향신문

林특사, 北에 핵포기 요구

김영남 만나 남북협안 논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중인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는 28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金永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핵문제 등 남북간 협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특사는 김상임위원장에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남측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행한 임성준(任晟準)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도 임동옥 노동당 통일선전부 제1부부장과 별도접촉을 갖고 핵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밤 성사될 것으로 보였던 임특사 일행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면담은 밤 11시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임특사와 김위원장의 면담은 29일 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특사단의 귀환도 하루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林특사, 김영남 면담

北核 전향적조치 촉구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방북중인 임동원(林東源) 특사는 28일 오전 25분간 북한의 대외적 국가수반인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다.

임 특사는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방북한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이날 림동옥 노동당 통일선전부 제1부부장을 만나 핵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임 특사는 이날 오후엔 김용순(金

容淳) 당 비서와 2차회담을 가진 데 이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 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특사 일행은 평양 도착 첫날인 지난 27일 북측 장성택(張成澤)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이 참석한 환영만찬에서 북핵 문제와 노무현(盧武鉉)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만찬은 오후 8시부터 잠정 5시간45분동안 진행됐다”면서 “특사 일행이 대부분 술을 잘 못해 많은 얘기가 오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21smin@segye.com

한적, 이산가족 못찾아 애태워

북쪽명단 200명중 130여명 남쪽가족 확인안돼

대한적십자사가 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북쪽에서 보내온 후보자들의 남쪽 가족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한적은 조선적십자회와 다음달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6차 상봉 후보자 200명씩의 명단을 교환했으나, 명단 교환 나흘째인 28일 현재 북쪽명단 가운데 남쪽의 상봉대상 가족이세로 15명뿐이라고 밝혔다. 남북 적십자사는 다음달 9일 상봉 후보자 가족의 생사와 상봉

의사를 확인해 서로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10일 각각 100명씩의 상봉자를 확정짓는다.

이날까지 확인된 가족은 지난 1~5차 때 후보 명단에 들었다 탈락했던 49명을 포함해 64명이며, 나머지 136명의 가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상봉 후보자 문의는 한적 홈페이지(redcross.or.kr)나 전화(02-3705-3705)로 하면 된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한국경제

2003. 1. 29 (수)

林특사 김영남과 핵문제 논의

임동원 대통령 특사, 방북 이틀째인 28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하고 핵문제 논의 집중 논의했다.

임 특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부터 25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북한 핵개발

계획 및 핵 감시시설 제거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핵개발 계획을 포기할 경우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제지원 등에 대해서도 깊숙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밤 평양 대동강 영빈관에서 열린 임 특사 일행의 환영 만찬은 28일 새벽까지 5시간45분간 지속됐다.

이날 만찬은 북측의 당정 핵심 관료들과 남측의 대북 정책 최고 책임자들이 장시간에 걸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며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우리 당국은 보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중앙일보

2003. 1. 29 (수)

林특사, 김영남과 핵 논의

평양을 방문 중인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외교안보통일특보)는 28일 오전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 당국자는 "25분 동안 진행된 이날 면담은 남북 간 현안들을 중심으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관계기사 3면>

林특사는 이어 김용순 노동당 비서와 2차 회담을 하고 만찬을 함께 했다. 林특사는 당초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

장을 만나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핵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후 11시 현재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林특사와 함께 방북한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후 임동욱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과 만나 핵문제 등을 논의했다. 林특사 일행은 이에 앞서 북측 경제시찰단이 27일 오후 8시부터 5시간45분 동안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오영환 기자**

hwasan@joongang.co.kr

국민일보

2003. 1. 29 (수)

한겨레

2003. 1. 29 (수)

임특사, 오늘 김정일 면담할듯

어제 김영남과 현안논의

임동원 대통령 특사 일행이 29일 중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5면

정부 당국자는 28일 "당초 임특사 일행은 28일 만찬에서 김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후 11시 현재 만나지 못했다"면서 "이에 따라 임특사 일행과 김위원장간 직접 면담은 29일 중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임특사 일행은 오전 11시20분부터 25분간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한 내각 책임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으

며, 남북 현안을 주제로 진지한 분위기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면담에는 북측에서 안경호 조평통 서기 국국장 등이 배석했다.

임특사는 27일 오후 4시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용순 노동당 중앙위 비서를 만나던 이어 오후 8시부터 5시간 45분 동안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이번 만찬은 장성택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 북측 경제시찰단이 주최했으며 지난해 방한했던 시찰단 전원과 김용순 비서, 임동욱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호기자 procol@knib. co. kr

임동원특사, 김영남위원장 면담

공동보도문 발표 내버쳐

김정일위원장 면담 늦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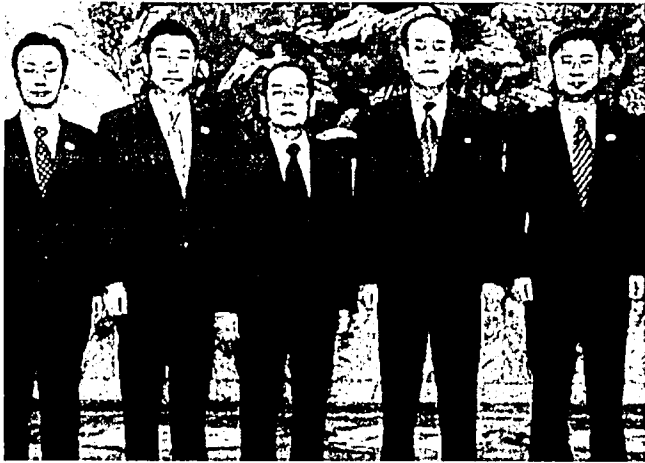
임동원 대통령 특사는 방북 이틀째인 28일 오전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으며, 면담은 "남북간 현안 문제들을 주제로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라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임 특사 일행은 이날 밤 늦게까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 관련기사 3면

정부 당국자는 "임 특사 일행은 27일 이후 이날 저녁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등 북측 관계자들과 2차 회담을 했고, 이어 만찬을 함께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낮엔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북측 김동욱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과 접촉해 핵문제를 중심으로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 특사 일행은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등 북측 관계자들과 철도·도로 연결 행사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합의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뒤, 지난해 4월 특사 방북 때처럼 공동보도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임동원특사·김영남위원장 기념촬영
방북 중인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운데) 일행이 2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AP통신

林특사, '김영남 면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중인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특별특보 일행은 28일 저녁 김용순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와 전담에 이어 2차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간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앞서 임 특사는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의 대외적인 국가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장과 만났으며, 별도로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오후 3시쯤부터 40여분간 숙소인 백학원 초대소에서 북측의 임동욱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 부장과 만나 핵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임 특사는 이날 오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관측했으나 밤 11시 현재까지 김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않았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北입장 파격변화 오나” 촉각

■ 林특사, 김용순 2차면담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특사단의 방북·활동에서 임동원(林東源) 특사와 이종석(李鍾碩) 대통령직 인수위원간의 역할분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 특사가 핵 문제에 대한 북측의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약역'을 맡고, 차기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입안자인 이 위원에게 포괄적인 대북 지원책 등을 제시하는 이른바 '투캅스(two cops)'의 접근법이다. 이렇듯 현 정부와 새 정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측근으로서 대미 특사를 맡은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약

역은 내가 맡겠다'고 말한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임 특사는 방북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대통령의 우려를 전달하고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해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북측과의 직

임동원, 핵우려 전달등 약역 맡고

이종석은 지원책 제시 '역할 분담'

접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찾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임 특사가 28일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북측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또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임 특사

를 수행, 미국의 입장을 간접 전달기로 한 것도 '국민의 정부' 임기 내에 핵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반해 이종석 위원은 "대북지원은 핵 문제의 해결 후 가능하다는 식의 흥정거리가 아니다"라고 못박

으며 "대북 경제지원은 남북 공존변영과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보스 포럼에서 민주당 정동원(鄭東源) 의원이 언급한 '한반도 마샬 플랜'의 실체를 간접 확인하는 한편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면 포괄적인 대북지원책을 제시할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노 당선자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승계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대북 메시지를 전

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향후 북측과의 원활한 관계 설정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편 임 특사가 이날 북측 김영남 위원장과 만난 이후 실질적 협상 파트너인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비서를 전담에 이어 한번 더 만난 것으로 확인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에서 북측의 파격적인 입장 변화가 나오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측의 대외적 국가수반이면서 김 국방위원장에 이은 최고위급 인사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므로부터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북측의 공식입장을 확인한 후 세부 실무내용 조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임 특사의 임명된 국방위원장의 면담에서는 북한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과 북미 직접대화를 포함한 협상 테이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서울경제

2003. 1. 29 (수)

林특사 김정일 면담
金대통령 친서 전달

임동원 대통령 특사는 2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임 특사는 또 이날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임 특사가 김영남 위원장과 면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하는 한편 최근 러시아와 미국 등이 제안한 '5+5' 다자협의체 등 국제 사회의 북핵 문제 해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중앙일보

2003. 1. 29 (수)

북한 핵심 인사들과 새벽까지 만찬

林특사 방북 이모저모

평양을 방문 중인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외교안보동일특보)는 28일 오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하는 것으로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다.

林특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은 이날 오후 11시 까지 이뤄지지 않아 29일 아침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林특사 일행은 이에 앞서 전날 오후 8시부터 무려 5시간 45분 동안 북한 핵심 인사들과 만찬을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林특사 일행의 김영남 위원장 면담은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25분 동안 만수대의사당에서 이뤄졌다.

면담에는 북측에서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 등 관계자들이 배석했으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林특사-김영남 위원장의 면담은 만난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핵 문제를 본격 조율했다기보다 대외적 국가수반인 김위 위원장에 대한 예방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6일부터 8박9

장성택 박남기 김용순 등 참석
군사분계선 통행해결 화기애애

일 동안 방한했던 북측 경제시찰단 주최로 전날 열린 환영 만찬에는 북측에서 장성택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 등 시찰단 18명 전원과 김용순 노동당 비서, 임동욱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참석했다.

환영 만찬이 일린 대동강 영빈관은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서 차량으로 1시간 가량 걸려 특사 일행은

28일 오전 2시 45분쯤 초대소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환영 만찬 시간이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초대소에 남아 있던 남측 관계자도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지 못했고, 서울에선 林특사와 김정일 위원장의 전격 면담설이 돌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환영 만찬이 길어진 것은 지난 5년 동안 대북 업무를 사실상 총괄해온 林특사의 공식 방북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남북 관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방북의 양대 의제가운데 하나였던 군사분계선(MDL) 통행 절차 문제가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해결되면서 만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오영환기자 hwasan@joongang.co.kr

核문제 남북시각차 조율

林특사, 임동욱 부부장과 회담

김대중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중인 임동원 외교안보동일특보는 28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외적으로 북한의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 등 관계자들이 배석했으며 동포애적인 분위기 속에 환담했다고 평양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영남 위원장 면담 후 임 특사의 일정이 서울 상황실에 전혀 알려지지 않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밤 12시까지 임 특사는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9일 임 특사와 김 위원장의 면담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임 특사는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와 전날에 이어 2차 회담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 이는 북한 핵문제를 놓고 남북간의 인식 차가 아직 좁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8일 오후 3시 30분부터 40여 분간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서 북한의 임동욱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과 만났다고 김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사람이

핵 문제를 중심으로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임 특사 일행은 27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인 28일 새벽 1시 45분까지 무려 5시간 45분 동안이나 북한 당국의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만찬은 지난해 10월 방한했던 장성택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 북측 경제시찰단이 주최했으며 당시 방한 인사 전원과 김용순 비서 등이 참석했다.

일부 대북 전문가들도 임 특사에 대한 특별한 환대 표시로 북한 고위층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해석했다.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말이나 법정 휴일에 측근들과 비공개 만찬을 자주 여는 데 종종 초치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며 심지어 2-3일 간 열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 환영만찬도 비록 김 위원장이 빠진 했지만 김 위원장의 측근인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를 비롯해 장성택 임동욱 등이 참석한 만큼 북한 고위층의 연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윽고 김 위원장이 임 특사를 배려해 측근들에게 미리 그 같은 지시

를 내렸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상현기자 shyoon@mk.co.kr

東亞日報

2003. 1. 29 (수)

林특사, 김영남 만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 중인 임동원(林東源)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28일 오전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 권력서열 2위인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한데 이어 이날 저녁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만찬을 같이 하며 핵문제와 경제사업 등 남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 특보는 김 상임위원장에게 북한 핵문제에 대한 남측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핵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가기 전에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임 특보 일행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 김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지만 이날 밤늦게까지는 김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밤늦게까지 김정일위원장 못만나

■ 임특사 방북 이모저모

부시 새해연설 들은 뒤 면담 추측도

임동원 특사 일행은 방북 이틀째인 28일 북쪽 고위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났지만 정작 최대 관심사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은 이날 밤늦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임 특사는 이날 오전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한의 대외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다. 면담 시간은 오전 11시20분부터 45분까지 25분간. 정부 당국자는 "면담 시간에 비취볼 때 의전적인 성격이 강한 면담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면담에 대해 "남북간

현안문제들을 주제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라고만 밝혔다. 북쪽 배석자가 대남관계를 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안경호 서기국 국장이었던 점에 비추면 면담의 주된 내용은 핵문제보다는 남북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임수석-림동옥 '핵' 의견교환

낮엔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북쪽 림동옥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간의 '접촉'이 있었다. 정부는 "핵문제를 중심으로 서로 진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장 면담과 달리 핵문제 등 쟁점과 관련한 실무적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임 특사의 행적이 알려지지 않아 김 국방위원장과 면담이 진행 중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정부는 이날 밤 늦게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 면담은 전례에 비취 이날 오후께 진행된 뒤 만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으나 계속 늦어졌다.

임 특사 일행은 대신 27일에 이어 이날 저녁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등과 2차 회담을 했고, 만찬을 함께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핵문제보다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관련한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이 자리에서 특사 방북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 내용이 논의됐음을 내비쳤다.

귀환일정 늦춰질 가능성도

이날 밤 늦도록 임 특사와 김 위원장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정부 당국자들은 특사단의 방북일정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특사 방북의 주 목적이 김 위원장을 면담해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하고, 핵 문제 등과 관련한 그의 의견을 듣고 오는 것인 만큼 면담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당국자는 한국 시각으로 29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새해 연설 뒤 면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매일경제

2003. 1. 29 (수)

林특사, 김정일위원장 못만나

김대중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중인 임동원 특보는 28일 저녁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등과 2차 회담을 했다. ▶관련기사 6면

이어 임 특사는 김 비서 등과 만찬을 함께했다.

그러나 임 특사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은 이날 성사되지 못했고 김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하지 못했다.

앞서 임 특보는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25분 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남북간 현안들을

주제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면담에는 북쪽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 외에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 등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또 임 특사와 함께 평양에 간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이날 오후 3시께부터 40여 분 간 림동옥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과 만났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사람이 핵 문제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윤상환기자 shyoon@mk.co.kr

대한매일

2003. 1. 29 (수)

김용순과 연이틀 회담·만찬

■ 임특사 방북 이모저모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 이틀째를 보낸 임동원 외교안보 통일특보 등 특사 일행은 28일 다각적인 채널로 북측과 접촉을 갖고 북한 핵문제 등 현안에 대한 조율 작업을 계속했다.

임 특사 일행은 전날에 이어 김용순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와 2차 회담을 갖고 만찬까지 했지만 밤 11시까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돼 우리 당국자들을 실망시키기도 했다.

●특히 이날 오전 임 특사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25분 동안 면담한 이후 저녁 늦게까지 그의 행방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일찌감치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속소에 체류하고 있는지를 놓고 관측이 무성했다.

지난 4일 임 특사 방북 당시엔 김위원장과 면담 및 만찬 사실이 밤 10시 50분이 돼서야 남측에 통보됐다. 통

상 김 위원장에 대한 경호가 주이유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29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발표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본 뒤 면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특사 방문을 받아들인 만큼 면담이 당연히 이뤄지지 않겠느냐"면서도 결과는 기다려 봐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햇볕정책 전도사로 '북측을 가장 잘 이해하는 남한 사람'으로 평가받

는 임 특사에 대한 북측의 환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저녁 대동강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은 28일 새벽 1시45분까지 잠정 5시간 45분간이나 지속됐다.

장성택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 지난해 10월 경제시찰단으로 서울을 찾은 18명 전원과 김용순 노동당 대남 비서, 임동옥 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 당국자는 "특사 일행 대부분이 술을 못해 오랜 시간 핵 문제와 국제사회 분위기를 북한 경제를 살리는 방법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눴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김정일 면담 '보따리' 뭘까

訪北 특사단 북핵해법 골몰

방북 이틀째인 임영남 대북특사 단장(국무위원)은 28일 당초 예상과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면담을 갖지 못했다.

원래 정부는 임특사 일행이 김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만찬에 참석할 뒤 그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밤 늦게까지 면담이 실시되지 못했다. 북한 당국은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단순히 김위원장의 일정을 이유로 들었다.

임특사 일행은 오전에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한 권력서열 24인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김위원장의 면담에 대비, 핵문제 해결까지 탐색전에 나섰다. 오전 11시20분부터 약 25분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의 면담에서 특사단은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기본 골격을 설명하고 이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는 뜻을 피력했다. 북한의

林특사 이틀째 北설득

김영남 면담은 25분 짧게

5시간 45분 마라톤 만찬

핵개발 시인으로 인해 아끼던 한반도 긴장기에 대해 김대중과 우리 국민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서면용 통한 체제보장 용의까지 밝힌 미국의 태도변화를 설명하면서 북측에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핵동결 해제조치 철회 등 가시적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특사 일행은 27일 오후 8시부터 북한 당국의 환영만찬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는 다음날 새벽 1시45분까지 무려 5시간45분 동안 이어졌다.

이번 만찬은 지난해 10월 북측 경제사절단장으로 방한했던 김정일 위원장의 매우 장성

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주치, 김용순 비서를 비롯해 북한 지도부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식사와 술자리로 이어진 만찬에서 우리측은 이들을 상대로 북핵 문제로 야기된 국제정세의 복잡성을 설명하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 놓인 우리 정부 입장, 노무현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골간을 허심탄회하게 전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금 상황을 1994년 한반도 핵위기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풀려 한다면 상황인식 착오라고 충고하면서 미국 정부의 성격이 당시 클린턴 행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경하기 때문에 먼저 북측이 가시적인 핵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미국의 양보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측 인사들은 핵포기 의사를 먼저 밝힐 수 없으며 핵 문제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호기자 procol@kmb.co.kr

— '北核해법' 어떤 다자구도 유리하나

북핵 사태가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자(多者) 구도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미국의 반대로 북이 양자구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형태의 다자 구도가 유리한지 장단점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거론하고 있는 다자구도는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북핵 다자(多者)안전보장 형태 특징

형 태	장 점	단 점	비 고
양자(북-미)	· 신속한 핵문제 해결	· 한국의 주도권 상실 · 일방의가시 대책강구 어려움	· 불신으로 기능성 회담 및 회담비중 증가
3+2 (미-중-러+남북)	· 북이 양자구도의 차선책 중-러 참여로 북한 실득 용이	· 주변3국의 영향력 확대 · 일본 반발	· 다자-양자 조율형
5+5 (인보르5개국+남북, EU, 일본, 호주)	· 북측은 국제사회의 인모보장 · 대북지원 역할분담	· 문제발생시 핵임소재 불분명 · 여러나라 참여로 신속 대응 어려움	· 미국 구상안
4+2 (미-중-러-일+남북)	· 북측 당사자 논의구도 부합	· 북한이 일본 참여 반대	· 노무현 차기정부 구상안

'3+2' 中-러참여 北설득용이... '양자'차선책

'5+5' 국제사회 참여많고 한국발언권 강화

'4+2' 핵당사자 논의부합... 盧당선자 구상안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이사국과 남북한-유럽연합(EU)-일본-호주가 참여하는 '5+5협의체'다. 기존 '4+2'처럼 한반도 당사자의 협을 벗어나 유럽연합과 호주를 끌어들이 사실상 아프리카와 남미를 제외한 각 대륙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구도이다.

이 협의체는 원래 지난해 로슈코프 리서아 특사가 지난 20일 방북 당시 김정은(金正日) 국무위원에게 설명, 공식적인 반대의 일원이다. 물론 화요일 국무위원회도 이같은 협의체를 제안하고 나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보아도 한반도 인본문제와 관련, 정부의 발언권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이 보장되는 방안이다. 노무현 차기 정부로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역할을 자연스럽게 분담함으로써 대북 '과주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구도는 그러나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다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최대 단점이다.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중-러 3국이 남북과 협의해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3+2 협의체'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와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는데 다소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양자구도의 차선책으로 나온 '다자양자 절충형'으로 빛을 받고 있다.

이 협의체는 한반도 주변 3

개국의 대북 영향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한국의 입지가 다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협의체에서 소외된 일본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단점이다.

남북한과 미-중-러-일이 참가하는 '4+2'의 경우 북핵 문제를 순수하게 '당사자'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도라는 점에서 차기 노무현 정부가 구상 중인 북한이다. 일본의 한반도 핵문제 개입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다.

정부 당국자는 "어떤 형태의 다자안보 보장안은 한미공동조약 해치지 않고 남북이 신뢰를 취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동기자 kidong@seggye.com

“김정일 核답변 유보”

林특사 귀환... 金위원장 면담 불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핵문제와 관련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간접 전달받고 김용순 노동당 중앙위 비서를 통해 사의를 나타낸 뒤 “김 대통령의 따뜻한 조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추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사흘간의 방북 합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임동원(林東源·사진) 대통령 특사는 29일 오후 서울 삼경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측은 김 국방위원장이 지방에서 중요한 현지 지도도를 하는 사경 때문에 만날 수 없게 됐다고 이해를 구해왔다.”며 “김 위원장은 김용순 비서를 통해 구두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일의 구두 메시지는 전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다.”며 “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은 받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3면

임 특사는 김 대통령의 친서에는 핵 문제와 남북관계, 새 정부의 관계에 대한 당부 등이 담겨 있으며, 특히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의 해명과 사실일 경우 폐기 방법론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핵 문제와 관련, 북측은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없으며, 현 단계에서 개발할 의사도 없고 이 문제는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나 검증은 원한다면 미국의 검증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특사는 “5+5 협의체 구성문제를 포함,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해결방안을 모두 언급했다.”면서 “경의선철도 연결 공사의 2월중 완료와 금강산 육로관광 2월 초 실현 등에도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종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김 국방위원장에 보내는 인사말과 함께 취임 후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김용순 비서를 통해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김용순 비서는 임 특사에게 “공정한 북·미 직접 협상”과 북·미 불가침조약만이 유일한 핵 문제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世界日報

林특사, 김정일 못만나

“金대통령 조언 검토후 답변” 구두메시지만 받아

어제 귀환 對국민보고

2박3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 임동원(林東源) 특사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면담에 실패, 북핵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임 특사는 29일 귀환 기자회견에서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

비서를 통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뒤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철회 ▲국제사회가 제기한 다자(多者)협상 호응 등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김 대통령의 조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전해왔다고 임 특사

는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임 특사는 김 위원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 “(핵문제와 관련) 즉각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특사가 꼭 국가원수나 행정수반을 만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다만 지난해 전례와 현 한반도 상황을 감안할 때 다소 아쉬운 것은 사

실”이라고 말했다.

임 특사는 김용순 비서 등과의 회담에서 “우리는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강력히 촉구했으나, 북측은 ‘그런 것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 임 특사는 “남북한은 군사당국간 군사분계선(MDL) 통행협상이 타결된 만큼 경의선 철도연결 공사를 2월 중 완료하고 금강산 육로관광을 2월 초에 실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임 특사와 김 비서의 회담 소식을 전하며 “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도는 조·미 협상과 불가침조약 체결뿐”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동·이상민기자

林특사 김정일 면담 불발

예상못한 일... 北核문제 한국 입지 위축

林 “金대통령 친서에 즉답 어렵다는 뜻인 듯”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임동원(林東源)외교안보특별보좌관(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하지 못한 채 29일 귀환했다. <관계기사 3, 4면>
북한이 대통령 특사 파견을 수용하고도 만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설득과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林특보는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열린 방북 결과 설명 기자회견에서 “金위원장이 중요한 지방 현지 지도 중이라 만날 수 없다는 양해의 말을 들었다”며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金위원장이 김용순(金容淳)당비서를 통한 구두 메시지에서 남측의 특사 파견과 친서 전달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林특보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친서는 우리나라 농축핵 개발 의혹에 대한 해명과 폐기 촉구할 포함한 핵문제, 남북관계, 새 정부와의 관계 등 크게 세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며 “金위원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은 것은 金대통령이 제안한 사항에 꼭꼭 답변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金대통령은 친서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철회와 핵 동결 해제

의상 복구,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 개발 폐기와 함께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林특보는 공개했다.

그는 또 “북한은 우리 측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추후 연락하겠다. 면서도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강조했다.

林특보는 “미국·일본 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했으나 북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다만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林특보는 “쌍방은 군사 당국자 사이에 군사분계선(MDL) 통과 문제가 해결된 데 따라 경의선 철도 연결을 2월 중 완료하고 금강산 육로관광도 2월 초부터 실현시킨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그러나 지난해 4월 특사 방북 때와 달리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노무현(盧武鉉)당선자 측을 대표해 동행한 이종석(李鍾奭)인수위원은 “남북 정상회담을 북한에 제의하지 않았고, 취임 후 金위원장과 만나기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영증 기자

yjlee@joongang.co.kr

중앙일보

2003. 1. 30 (목)

최재일기

이영증 통일외교팀 기자

林특사의 이해못할 북한 해명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중요한 지방 현지 지도 중이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던 임동원(林東源)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29일 기자회견을 연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을 때곡히 메운 7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은 林특사의 언급에 귀를 의심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친서까지 휴대하고 방북한 특사를 만나 주지조차 않은 북한 측의 무례가 믿어지지 않아서다. 한 구미계 외신기자는 “현지 지도가 뭐냐”는 질문에 답해주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남측 대통령 특사가 공장이나 군부대를 찾는 것보다 하찮은 일이라는 듯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면담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金위원장이 DJ 친서를 간접 전달 받고 필요하면 나중에 답을 주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정부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특사 파견 합의를 발표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 북핵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라고 부각하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방북활동이 핵문제 해결 등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쳐 미흡하다”는 말이 나올 법도 했지만 끝내 빠졌다.

북핵 특사 방북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정부는 북측의 특사 수용 의사를 23일 오후 서울에 머물던 장관급 회담 북측 대표단을 통해 전달받았고 이를 감추며 회담 막판에 핵 관련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연막을 쳤다. 그러나 이미 최고위급 특사 채널이 마련된 마당에 핵문제에 합의할 리 없었다. 결국 남측 수석대표는 이튿날 특사합의 발표를 빛내기 위해 ‘깨끗한 답’을 보여야 했다.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대북 설득도 좋지만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남북관계도 해치는 방법은 피해야 한다.

yjlee@joongang.co.kr

'핵' 해법찾기 시간 걸릴듯

■임특사 방북 성과와 향후전망

면담불발은 중재안 사양 뜻 남쪽 노력엔 우호적인 태도

입동원 대통령 특사가 방북 기간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하지 못한 것은 지금 단계에서 핵문제에 대한 남한의 '중재'가 안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1월 초 핵문제의 중재를 위해 임성준 외교안보 수석을 미국에 보냈으나 임 수석은 '중재'라는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돌아왔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임 특사와의 면담 '거부'는 이 점에서 북-미 대치 국면이 상당 기간 계속되리라는 걸 예고한다.

그러나 임 특사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번 방북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우선 북한이 남한의 이런 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28일 김용순 노동당 중앙위 비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고, 따뜻한 조언에 감사드리며, 구체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다면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구두 메시지를 밝혔다. 임 특사는 이를, "대단히 의미있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임 특사를 만나기 어려웠던 것은 남쪽의 '조언' 내용 때문

이었을 것이다. 임 특사도 "(김 대통령의 조언과 권고에) 즉각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강조한 것은 '핵문제의 발단인 농축 우라늄 핵 개발 계획 여부에 대한 해명과 이를 폐기하는 데서 시작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쪽은 '그런 것은 없다고 밝혔다'는 게 임 특사의 설명이다. 김 대통령이 친서에서 밝힌 '권고안'에 어떤 추가적 내용이 담겼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북쪽의 일방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대화 또는 협상 보장이 없는 한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중중한 사양' 형태로 남쪽의 조언을 직접 거부하는 모양새를 피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한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과 6시간 동안 면담한 전례와 비교

해보면 그 맥락이 좀더 분명해진다. 러시아의 제안은 받아들일겠다는 뜻이다. 러시아의 제안은 '북-미 직접 협상' 촉구 등 북쪽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짐 부고 위 당국자는 "우리 의견을 전달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임 특사가 군비통제 이론까지 거론하며 '핵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여서 그 해결 과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탓으로 보인다.

핵 문제가 있음에도 2월 중 경의선 철도·도로 1단계 연결과 2월 초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 등 남북 화해 협력은 지속한다는 합의를 재확인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해결과점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안정적 남북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재훈기자 nmád@hani.co.kr

朝鮮日報

林특사, 김정일 못만나고 귀환

김정일 "DJ친서 구체검토후 알려주겠다"

내달 경의선 연결·금강산 육로관광 합의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지난 27일 평양을 방문했던 입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29일 귀환했다. ▶관련기사 A2면

임 특사가 가져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는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비서를 통해 전달됐다.

김 대통령은 친서에서 농축 우라늄 핵계획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으며,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 등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김 비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추후 알려주겠다"고 답했다고 임 특사는 전했다.

임 특사와 함께 방북한 이종석(李鍾奭) 대통령직 인수위원은 "북측에 노 당선자가 취임 후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임 특사는 경의선을 2월 중에 연결하고, 금강산 육로관광을 2월 초 시작하자는 데 북측과의 견해를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아산은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에 금강산 육로관광 답사와 시범관광을 각각 2월 4일과 12일에 하자고 제의했다.

/金仁執기자 ginko@chosun.com

북 “남 중재안 검토뒤 답변”

임동원특사 귀환...김정일위원장 못만나

김대통령 친서통해 핵개발계획 포기촉구
내달중 경의선 철도 연결·육로관광 합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친서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 해명과 사실일 경우 이를 폐기하는 것이 핵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조언한 데 대해 김용순 노동당 비서를 통해 전한 구두 메시지에서 "따뜻한 조언에 사의를 표하며, 신중하게 구체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다면 입장을)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29일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밝혔다. > 관련기사 3면

임 특사는 방북 기간에 예상과 달리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으며, 대신 28일 밤 김용순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2차 회담을 마치고 29일 오전 11시 평양을 떠나 서해쪽 직항로를 거쳐 돌아왔다. 그는 귀환 뒤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쪽은 김 국방위원장

이 지방에서 중요한 현지도도를 하는 사정 탓에 만날 수 없게 됐다고 양해를 구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과 면담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해 유감을 애둘러 표명했다.

임 특사는 김 대통령의 친서는 크게 핵문제, 남북관계,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당부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핵문제와 관련해 '(문제의 발단인) 우라늄 농축 핵 개발 계획의 의혹을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폐기하는 것이 핵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구체적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임 특사는 김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회부와 제재 결정을 막기 위해서 (북쪽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

언을 조만간 철회해야 한다'며 '북쪽이 원하는 불가침조약 체결은 간단히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이 러저러한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과 일본의 메시지를 북쪽에 전달했으나, 북한이 미·일에 보내는 메시지는 받아오지 못했다'며 '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해 달라는 북쪽의 요청은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다음달 중 경의선 철도 연결 완료와, 다음달 초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에 의견 일

치를 봤다고 밝혔다.

임 특사와 함께 방북한 이종석 대통령직 인수위원은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노무현 당선자의 인사말을 김용순 비서를 통해 전달했다'며 '내용은 노 당선자가 대선공약에서 밝힌 개괄적 대북정책 방향과 핵문제 조기 해결·필요성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 당선자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밝힌 내용에 기초해 취임 뒤 김 위원장을 만나기를 바란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한겨레

2003. 1. 30 (목)

서울경제

2003. 1. 30 (목)

경의선 연결공사 내달 완료

임동원특사 귀환... 금강산 육로관광도 합의

김정일위원장 면담 못해

남북한은 군사당국간 군사분계선 통행 협상이 타결된 만큼 경의선 철도 연결 공사를 오는 2월 중 완료하고 금강산 육로관광을 2월 초에 실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무장지대(DMZ)를 가로질러 남측 송선리와 북측 고성읍을 잇는 '동해안 임시도로' 개통식은 다음달 12일 진행된다.

사흘간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29일

돌아온 임동원 대통령특사는 이날 삼척동 남북대화사무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 군사당국간에 군사분계선 문제가 해결된 만큼 금강산 육로관광 및 경의선 철도 연결문제를 다음달 중에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12일째 동해안 임시도로 개통식이 연결현장에서 개최될 것'이라며 '개통식 후 참석자들이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넘어가서 금강산에서도 간단한 행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임 특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철회 등을 담은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김 위원장은 김용순 비서를 통해 '따뜻한 조언이 담긴 친서를 보낸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 조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알려졌다'고 전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한국일보

2003. 1. 30 (목)

“金, 즉답 어려워 면담 피한듯”

■ 林특사 일문일답

‘5+5’등 北에 설명

임동원(林東源) 대북특사는 29일 기자회견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충실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는데.
“현지 지도자 지방에 있다가 양해 끝에 왔다.”
-면담 불발에는 북한의 속사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
“우리의 초안과 권고에 대해 즉각

답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홍순 노동당 비서를 통해 전달했다.”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들었다.
“핵무기 개발하지 않았고 현재 로선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핵 문제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이며 김증을 원한다면 받아들일 용의도 있다고 얘기했다.”
-중측 우라늄 문제에 대한 북측의 해명이 있었다.
“그런 일이 없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들었다.”

-북핵 해법에 관해 어떤 제안을 했다.
“5+5 다자합의체를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논의중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아닌가.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은 계속될 것이다. 북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도움을 원할 것이다.”
-이번에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인 시간에 대해 협의하러 간 것이 아니라서 원래 계획에 없었.” /양정대기자 torch@hk.co.kr

“北 ‘美와 직접대화’ 되풀이”

김정일 “친서 검토후 답변” 구두 메시지

■ 林특사, 김정일 면담 못하고 귀한

北, 핵문제 강경태도 안변할듯

경의선 연결 내달 완료엔 합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임동원(林東源) 특사 대 외교안보통일 특보는 29일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임 특보는 이날 2박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친 뒤 서울 삼성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일(金正日) 위원장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북측은 김 위원장이 중요한 현지 지도자를 하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김홍순(金紅淳) 노동당 대남 비서를 통해 김 대통령 친서와 조안에 대해 시의를 표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알려주겠다”고 구두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일문일답 2면

김 대통령 및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단이 김 위원장 면담에 실패한 것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강경태도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그 동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온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임 특보는 “(김 위원장이) 즉각 답하기 어렵다는 뜻”이라

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임 특보의 특사 방북 때는 서해지역 항공구류부 시찰 도중 면담이 없었다.
임 특보는 특히 북한이 핵 문제의 사망선인 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해 “그런 것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임 특보는 김 대통령의 친서에는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 개발 계획 시간 해명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철회 ▲북한의 선(先) 불가침조약 체결 요구와 미국의 입장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남북관계와 관련, “군사 분쟁 문제를 해소한 만큼 내달 중에 경의선 연결 공사를 완료하고 내달 초에 금강산 육로관광을 실현케로 의견 일치점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아산은 육로관광 답사 및 시범관광을 각각 내달 4일과 12일에 할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
노 당선자측 대표로 방북한 이종석(李鍾奭) 대통령직 인수위원은 “노 당선자의 개괄적인 대북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고 취임 후 김 위원장과 만나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김홍순 비서를 통해 전했다”고 말했다. /이종석기자 dilee@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世界日報

2003. 1. 30 (목)

“김정일 지방에 머물러 못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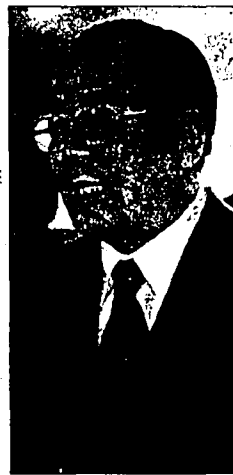
임동원특사 일문일답

核문제 우리측입장 충실히 전달
北 농축우라늄계획 없다고 밝혀

임동원 대통령 특사 임명은 29일 방북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핵문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충실히 전달했다”며 “북한도 심사숙고해 적절한 대안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특사와의 일문일답.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면담을 못했다는 데.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지 친서를 전달하고 자세한 입장을 들

는 임무를 띠고 갔지만,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 중이어서 못만나 이렇게 생각한다. 대신 김홍순 비서를 통해 김 위원장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왔다고 생각한다. 면담을 하지 않은 것은 즉각 답변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농축 우라늄에 대해 북측의 해명이 있었다.
▲농축 우라늄 계획을 해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지만 북측은 “그런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한 전망은.
▲핵문제의 속성상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100% 감증이 있을 수 없고 핵무기 개발하려는 속이 개발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 환경이 조성될 때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은 미국과 이 문제론 다 무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29일 오후 서울 삼성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재원기자
-대통령 친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이 뭔가.
▲핵문제와 남북관계 문제, 새

장부와의 관계에 대한 당부 등 세 가지 내용이다. 방법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권고한 제시했다.
또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철회해야 할 필요성도 회부의 제재조치가 결정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고 불가침 협정을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무슨 말씀을 전했나(이종석 특사에게).
▲노무현 “당선자의 개괄적인 대북 방향을 전했다. 핵문제는 조기에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선 공약에서 밝힌 대로 취임 후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성민기자 21smin@segye.com

‘林특사 홀대’ 유례없는 결례

“평양은 영하 17도에 바람이 몹시 불어 체감 온도는 엄청나게 매서운 추위를 느끼게 했다.”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가 2박3일간의 평양방문 일정을 마치고 29일 서울에 돌아온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한 말이다. 임 특사가 비단 평양의 날씨만으로 그 같은 추위를 느꼈을까?

임 특사가 느낀 추위는 당초 계획했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면담이 불발돼 더욱 매서웠을 것이라ں 측면도 없지 않다. 김 위원장은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들 생양을 방문한 임 특사를 왜 만나 주지조차 않고 돌려보냈을까. 임 특사는 “김 위원장이 중요한 지방 출장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남측 대통령 특사를 불러놓고 자리를 비운 것은 특사와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이 짙다. 일각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외교상 결례’라고 분석한다. 김 위원장은 작년 4월 임 특사 방북 때에도 지방 출장 중이었으나, 특사 방북 둘째날 평양으로 돌아와 임 특사를 만났다.

임 특사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 “실망은 아니지만 아쉽다”고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핵문제 등에 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듣고 싶었는데 지방 순시를 나가 있다고 하니까 별 재간이 없는 일이 아니냐”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이 만나주지

않은 것에 대해 “(친서에서 핵문제 의 조속한 해결을 권고한 데 대해) 즉각 답변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핵문제가 미국과 논의할 사안이므로 직접 남한 인사와 대화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김용순(金容淳) 비서 등이 임 특사에게 핵문제와 관

련, 남측이 그동안 보여준 외교적 노력에 ‘사의’를 표시하면서도 이 문제는 미·북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미국의 전쟁위협에 남북한이 함께 맞서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또 정권 교체기의 남측에 대해 그 나름의 ‘길들이기’를 하려는 계산일 것이라ں 분석도 나온다.

임 특사와 김용순 비서 간의 회담에서 핵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

이가 상당히 김 위원장이 만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측이 친서와 임 특사·김용순 회담 등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설득하자, 북측은 오히려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임 특사에게 요청할 정도였다.

김용순 비서를 통해 전해진 김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답변은 “김 대통령의 따뜻한 조언에 감사한다”고 ‘의전적 격식’은 차렸으나, 요지는 ‘나중에 보자’는 식이었다. 결국 이번 임 특사 방북을 통해 핵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의 역할 공간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김인기기자 ginko@chosun.com

林특사 “지방순시 나갔다는데 재간 있냐”
北, 核은 美와 직접대화로 해결 되풀이
南 정권교체기에 ‘盧 길들이기’ 일수도

東亞日報

2003. 1. 30 (목)

林특사, 김정일 못만나

金위원장 “DJ친서 검토후 답변”

경의선 연결공사 내달완료 합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박3일간 북한을 방문했던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29일 서울로 돌아왔다.

▶A3면에 관련기사

그는 이날 도착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국방위원장은 김 대통령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조건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김 대통령의 조언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추후 대답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친서에서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의혹을 해명하는 것부터 시작해 대화에 나서야 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철회를 조속히 밝히고 북한이 원하는 불가침조약 체결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저리한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했다고 임 특보는 설명했다.

임 특보는 아울러 경의선 철도연결 공사의 2할중 완료와 금강산 유로관광 2월초 실현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donga.com

林특사 김정일면담 불발

金 “DJ친서 검토후 답변” 구두 메시지만

특사단 귀환 “北, 핵문제 답변 어렵다는 뜻”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방북한 임동원(林東源) 특사의 면담을 사실상 거부했다. 김위원장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간접 전달 받은 뒤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중앙위 비서를 통해 “김대통령이 제안한 좋은 권고와 따뜻한 조언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조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의 특사인 임동원 외교안보중앙 특보는 29일 2박3일간의 특사한동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겸한 기자회견을 갖고 “북측은 김위원장이 지방에서 중요한 현지도를 하는 사정 때문에 남측 특사 일행을 만날 수 없게 됐다고 양해를 구해왔다”면서 “김위원장은 김용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남측에 이같은 내용의 구두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임특사는 “그쪽 사정에 의해 김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핵문제에 대해) 즉각 답변

하기엔 어렵다는 뜻을 내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권관기사 3면

김대통령은 친서에서 ▲우리는 농축계핵 의혹 해명과 핵계획 폐기를 출발점으로 대화에 나서야 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조만간 철회해야 유엔 안보리 회부 및 제재조치 결정을 막을 수 있으며 ▲분기침조약 체결은 5+5 협의체 구성 등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임특사는 “미국과 일본의 구두메시지는 간했으나, 북한이 미국과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는 받아오지 못했다”면서 “다만 미국에 대해 직접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해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북측은 핵문제와 관련, ▲축을 개발하지 않았고 ▲현 단계에서 개발할 의사가 없으며 ▲미국이 감증을 원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임특사는 전했다.

특사 일행과 동행한 이종석(李鍾奭) 대동령직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은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의 개괄적인 향후 대북정책 방향 및 핵문제의 조기해결을 강조한 노동선자의 친서를 김용순 비서를 통해 김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뒤 “취임 후 김위원장을 만나길 바란다는 노동선자의 인문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남북은 이와 함께 6·15공동선언에

기초해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인식하에 경의선 철도 연결공사를 2월중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임특사는 “이번 방북을 통해 핵문제 등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했다”면서 “북측도 우리의 입장 전달에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 심사숙고해 적절한 대안을 강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욱기자

woodyr@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3. 1. 30 (목)

중앙일보

2003. 1. 30 (목)

“北서 미국에 대화 뜻 전달 요청”

林특사 일문일답

임동원 특보는 2박3일간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회견에서 “평양은 영하 17도에 바람이 몹시 불어 매서운 추위였다”고 입을 열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현지 지도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면담에 응할 수 없었다는 북측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다. 속사정은 뭔가.

·“김위원장을 직접 만나 친서를 전달하고 우리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한

뒤 생각을 듣기 위해 갔는데 북측 사정에 의해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핵문제에 대해) 즉각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이나 일본의 메시지를 가져갔다. 북측이 미국이나 일본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없었다.

·“미국과 일본의 구두(口頭)메시지를 전달했다. 북한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메시지는 받아오지 못했다. 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해 달라

는 요청을 받았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하는 데 아직도 한국이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핵문제는 미·북 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고 우리는 그 한 당사자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도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4월에 방북했을 때 김위원장은 현지 지도 중이지만 만나지 않았는가.

·“그렇다. 당시는 김위원장이 평양에 면담 하루 전 돌아왔는데...”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北 외교결례... 남북관계도 영향

林특사, 김정일 면담 불발

임동원(林東源)대통령 특사가 평양 방문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핵문제와 관련해 의미있는 진전을 끌어내지 못한 파장이 적잖을 전망이다. 여기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대북 강경 기조를 누그러뜨리지 않아 북·미 간 대치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林특사의 미미한 방북 성과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 채널의 유용성을 도마에 올리면서 핵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좁힐지 모른다. 이번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내건 '핵문제 해결 주도론'은 실 땅을 잃으면서 국제사회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당장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특별이사회를 열어 북한 핵문제를 유엔

한국 '北核해결 주도' 설득력 '잃어'

유엔으로 넘어가... 장기화 불가피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을 '연기시키자'고 할 명분도 약해졌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한국이 포함된 다자 해결을 바라지만 핵문제가 안보리로 넘어가면 5개 상임이사국(미·러·영·프·중)이 논의의 주도권을 잡을 것은 뻔하다.

핵문제 해결의 장기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특사 방북에서 미국이 협상의 선결과제로 보는 새 핵개발 계획의 포기에 대해 "그런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선 미국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부시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악의 축'이라는 용어를 '무법정권'으로 바꿨을 뿐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

하지 않겠다고 밝혀 북한의 핵개발 계획 포기 없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林특사가 김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은 남북관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급 특사를 김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이유로 만나지 않은 것은 근색한 변명이자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들이다. 북한 체제 속 성상 김위원장의 의중이 절대적이고 어느 때보다 이번 특사의 방북에 무게가 실렸으며 林특사가 김위원장을 두어차례 만났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김위원장은 지난 18~21일 방북한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무려 6시간 동안 면담했

다. 국내의 대북 여론이 고을 리 없게 된 것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남북 장관급 회담에 이어 특사 방북 카드마저 소용 없게 된 부담 또한 적잖고, 이는 차기 정권의 선택의 폭을 좁힐 수도 있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뒷전으로 미룸으로써 역사적인 남북 경의선 연결 계획이나 육로관광 실시는 적잖게 빛을 잃었다.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의 방패막이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오영환 기자

hwasan@joongang.co.kr

중앙일보

2003. 1. 30 (목)

東亞日報

2003. 1. 30 (목)

北에 홀대당하고 체면만 구긴 꼴

임동원특사 '빈 손 귀환'

임동원(林東源) 대통령특별외교안보특보는 2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으로 출발할 때 "북측 지도자에게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하고 북측 지도자의 의견을 들어오는 게 기본임무"라면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특보는 해법을 모색하지도 못했다. '북측 지도자'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29일 서울로 돌아왔다. 스스로 밝힌 최소한의 목표 달성에도 실패한 셈이다.

북한으로서는 남측 대통령특사의 방북을 수용하고도 김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허용하지 않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4월 임 특보의 특사 방북시에도 현지지도 중이었으나 면담 하루 전 평양으로 돌아와 임 특사를 만났다.

또 2000년 8월에는 2차 장관급회담에 참석한 박재규(朴在圭) 당시 남측 수석대표를 자신이 머물고 있던 동해안 지역으로 불러 면담한 적도 있어 지방에 내려가 현지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북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양측이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쳤는지도 궁금종을 날게 하고 있다. 정부측은 "누구를 만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기는 했으나 김 국방위원장과 직접 면담을 북측에 강력히 희망했고, 확답은 못 받았지만 전례에 비해 단연히 만날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면담 불발의 가장 큰 이유는 평양에 머물던 임 특사일행과 북측간의 핵문제 해법에 대한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 특사는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중앙위 비서 등과 만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남측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철회 등을 촉구했으나 북측은 북·미간 직접 대화와 불가침조약 체결이라는 기본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북한측이 김 대통령의 친서에 담긴 '당근', 즉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협조한다면 한국 미국 일본 등이 북한에 제공할 정치 경제적 혜택과 핵 포기를 했을 때의 손해에 대한 자율질을 끝내지 못했고, 김 국방위원장이 직접 임 특사를 만날 경우 어쩔 수 없이 핵문제에 대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달로 임기가 끝나는 김대중 정부보다는 새 정부를 '파트너'로 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서 임 특사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 당선자측 관계자는 "북한 입장에서는 임 특사에게 선물을 주면 노 당선자의 신정부에 줄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성동기기자 esdri@donga.com

林특사 방북 시간대별 상황

1월 27일
11시 53분 평양 도착
오후 1시 50분 김용순 방비서
주최 면담 오프
4시 임동원-김용순 회담
8시~28일 오전 1시 40분 경
제시할 단 주최 환영만찬

28일
오전 1시 20분 임동원-김영
남상임위원장 면담
오후 중 임동원-김용순 2차
회담 임성준 외교안보수석
임동욱 당 제1부부장 집회

한국입지 위축 가능성

● 김위원장 면담불발 파장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갖지 못한 채 29일 서울로 귀환했다. 특사 방문을 약속하고 면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위원장은 미국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지는 위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방북 결산=핵문제 해결과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안고 북한 방문길에 나선 특사단은 후

北, 美와 직접해결 의도 담겨 경의선 철도 연결등은 성과

자에 있어서는 성과를 거뒀으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했다.

임특사가 북측 실세들과 만나 핵 문제에 대해 속여가담 깊숙이 교환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가시적 성과로 보기에는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임특사 일행이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하고 돌아온 대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위원장이 현지지도할 이유로 임특사 일행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 정부의 제안 가운데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내용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임특사도 "(김위원장이 면담하지 않은 것은) 남북 권고에 대해) 즉각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측이 "핵은 북·미간 문제" "핵 개발 의사가 없다" "검증을 원한다면 미국의 검증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

서도 남북의 설명을 확인·재확인하는 성의를 보인 것은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다.

남북은 경의선 철도 연결공사를 2월중 완료하고, 금강산 육로관광도 2월초부터 실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남북간 3대 주요사업의 구체적인 입장이 합의됨에 따라 향후 교류·협력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사활동 이후 전망=임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임특사는 "핵문제는 속성상 대화 협상의 긴 프로세스를 통해 점진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향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위원장이 김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이다. 임특사는 방북 기간동안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으며, 이같은 입장은 이날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재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방북과정에서 북측 고위당국자들이 보여준 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30일 밤(한국시간) 이사회를 열어 다음달 3일 북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역시 이라크사태로 인해 당분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겠지만 북측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철·이용욱기자
csh@kyunghyang.com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임동원 특사가 29일 낮 김대중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정외대 사진기자단

“北, 직접대화 희망 美에 전달 요청”

● 林특사 일문일답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는 29일 삼청동 남북대화사무국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직접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미국측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지지도로 김위원장이 면담에 응할 수 없었다는 북측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다.

“김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친서를 전달하고 우리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한 뒤 김위원장의 생각을 듣기 위해 갔다. 북측 사정에 의해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대신 김

위원장은 김바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친서를 잘 받았고 김 대통령이 제안하신 조건과 권고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면 알려드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친서를 직접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고 듣고 싶었는데 지반순시 나가 있다고 하니까 별 재간이 없는 일이었다. 다만 친서를 받아보고 최초 반응을 보였다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김위원장이 친서에 대해 검토 후 알려주겠다고 했다는데 형식에 대해 논의했다.

“형식은 예측하기 힘들다. 북측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북핵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해달라.

“대단히 어렵다. 핵문제는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100% 검증이 있을 수 없고, 개발하려는 축이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환경이 조성될 때 해결될 수 있다. 대화와 협상의 긴 프로세스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하는데 아직도 한국이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핵문제는 국제사회의 문제고, 우리는 한 당사자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부시 미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북핵문제를 다른 국가들과 함께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한·미·일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정상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외교적 노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것을 다시 강조했더니 좋은 점조라고 생각한다”

—김위원장 답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번에는 그런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지 않나”

—5+5 협의체 구성문제도 논의했다.

“얘기했다. 그밖에도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여러가지 방안을 다 얘기했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김정일 면담 거부' 속셈

전문가 4인 견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평양을 방문한 임동원(林東源)특사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29일 돌아왔다. 면담을 불발시킨 북한의 의도와 그 파장을 전문가들에게서 들었다.

北, 南과 교류협력 하되 핵문제선 따돌리기 전략

▶김영수(金英秀)서강대 교수=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 문제만큼은 미국과의 창구로 단일화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은 핵 문제에 끼여들지 말라는 의미다.
또 이종석(李鍾奭)인수위 위원에 포함된 특사 일행과의 면담을 거절함으로써 노무현 정부에도 부담을 주겠다는 전략이 포함돼 있다. 결국 김위원장은 앞으로 새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새 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도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사가 평양을 방문한 시점도 적절하지 못했다. 김위원장은 내심 새 정부가 오는 3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서 어느 정도 핵 문제의 가닥을 잡은 뒤 특사를 보내 주길 바랐을 것이다. 과격적인 경제적 지원 없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기존 보따리만 가진 林특사나 새 정부의 확실한 특사가 아닌 李위원을 굳이 이 시점에서 만날 필요가 없다고 김위원장이 판단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번 특사 방문은 한국 정부의 카드만 보여주고 북한으로부터 아무 것도 얻지 못한 꼴이 됐으며, 협상 기술에서 북한보다 한 수 낫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김연철(金鍊鐵)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임동원 특사 일행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 김위원장을 직접 만나 남한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전달하고 김위원장의 의견을 확인하겠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이유로 특사를 만나지 않은 것은 명목상의 이유다. 실제로는 남측이 전달한 요구사항이 북측의 주장과 차이가 있었고, 이에 대해 내부정리가 되지 않아 즉시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특사 방문기간 중 남북은 민간인의 군사분계선(MDL) 봉행 협정을 타결했고, 경의선의 2월 중 완공에 합의했다. 북한이 핵문제는 미국과 풀고 교류협력은 남한과 하겠다는 구도다. 그러나 북한이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이다. 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방북을 통해 남한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북한에 전달하고 설명한 것은 큰 성과다. 대화국면 조성을 위해 북한이 협상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허문영(許文寧)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일단 핵 개발 문제로 불거진 한반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를 보낸 것은 당사자인 남한도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 특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못함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는 볼 수 없게 됐다. 이런 결과는 대북 특사가 발표됐을 때부터 이미 예견됐다.

북한은 핵 문제를 제기한 것이 미국인 만큼 미국하고 풀겠다는 게 대외 협상의 기본 전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이 이런 북한을 설득할지 상당히 의문스러웠고, 결국 우러가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특히 북한이 면담을 성사시키지 않은 것은 북한의 대남 협상 전략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외교적 결례로 드러난 북한의 대남 협상 전략을 들여다보면 남한을 상대로 위장 협상 및 무행동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한과 협상은 하되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무시와 지연 전술도 병행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고유환(高有煥)동국대 교수=대통령 특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 불발은 북한 핵 문제 해법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북-미 협상에 주력하면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NPT 복귀 등을 요청한 남한 대통령 특사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김정일 위원장이 대통령 특사를 면담할 경우 합의문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핵 문제에 대한 남북간의 합의문을 이행하면 북-미 대화에 무제를 실을 수 없어 협상 전략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 남한 정권 교체기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도 면담을 성사시키지 않은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면담 불발 사태는 남북 모두에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특사 파견에 합의했을 때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은 명백한 외교적 결례로 국제사회에 비취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남한은 핵 문제 해결의 주도성이라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 국면에 빠져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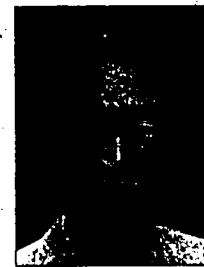
고유환
동국대 교수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김영수
서강대 교수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한 인식차 극복 못해 새 정부 길들이기 포석도

이철희 기자
chlee@joongang.co.kr

金, 의도적 면담회피 核설득 방북 '헛걸음'

林특사의 성과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27일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했던 임동원(林東原) 특사가 29일 귀환했지만 방북 성과는 대내외의 높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적이다.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우리측의 요청에 대해 '검토 후 추후 답변'을 받아내는데 그쳤다.

최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 통행문제 해결의 후속조치로 경의선 연결을 2월중 완료하고, 앞서 2월초 금강산 육로관광을 실현하는데 합의한 것은 소극으로 꼽힌다.

◆핵문제 소득 없나=북한이 체제보장 차원에서 감행한 핵문제를 쉽게 포기할리는 만무하지만 북한의 최고실력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커녕 핵발언 당사자인 강석주(姜錫柱) 외무성 제1부상조차 대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얻지 못한 셈이다.

임 특사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핵포기 선언 ▲핵동결해제 원상회복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철회 등을 촉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지방 현지지도를 핑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임 특사와의 면담을 회피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김대중대통령 친서 내용

핵개발 문제	우라늄 농축, 핵개발 의욕 해명하고 폐기해야 NPT 탈퇴 조만간 철회해야 유엔 안보리 회부 금지해결안 등 국제사회 경제안정 증진에 한국도 핵문제 당사국이기에 대문은 반드시 열려야
남북 관계	6·15 공동선언에 기초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새정부출범 관련	화해협력 지지하고 한 치 앞 다 놓음 교류협력 추진

◇김정일위원장 답변(구두 메시지)

따뜻한 조언에 감사하며 구체적으로 검토해 추후에 알려주겠다.

우리측 조언 사실상 거부 北-美 직접대화 의도담겨 남북교류사업엔 긍정적

4월 임 특사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은 공군사령부 산하 서해지역 항공구락부를 시찰하다 평양으로 돌아와 임 특사를 만난 전례가 있다.

핵문제에 대한 남측 입장이 완강한 상황에서 굳이 줄 것 없는 자리를 만들지 싶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남북 경협사업 진전되나=임 특사 방북 기간중 북한이 남북관

계에 있어서 노무현(盧武鉉) 차기 정부와도 꾸준히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실제로 경의선 연결을 2월중 완료하고 금강산 육로관광도 2월초 실현시키는데 합의했다. 현 정부의 최대 역점 사

업인 '3대 경협' 사업이 임기내에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민간인의 MDL 통과 문제가 해결됐지만 일각에서 2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사시기를 짐치기 힘든 상황이었다. 9차 장관급회담과 2차 칠도도로 실무협의회에서도 '경의선 2월 완공'이라는 우리측 주장에 대해 '동해선과 동시 연결'로 맞선 상황이었다.

좌초위기에 놓인 금강산 육로관광 시행시점도 합의, 금강산 면회소 설치와 함께 다음달 하순으로 예정된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육로 이용도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김기동기자 kidong@segye.com

林특사 김정일위원장 못만난채 귀환

김용순 통해 "DJ친서 검토후 답변"

경의선 내달 연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핵문제와 관련한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간접 전달받고 김용순 노동당 중앙위 비서를 통해 사의를 표시한 뒤 김 대통령의 조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추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2박3일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29일 서울로 돌아온 임동원 대통령 특사는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능숙 우리측 핵개발계획과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등의 철회를 권고하는 김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이같은 구두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임 특사는 또 경의선 공사를 내달 중 완공하고 금강산 유로관광도 내달초에 실시키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 특사는 이번 방북 기간 중 김 국방위원장이 지방 현지지도 중이어서 직접 만나지 못했으며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를 통해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 특사는 방북 중 북한의 대외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29일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기자들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hankyung.com

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등과의 회담에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북핵에 대한 우려와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고 핵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안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한 입장을 추후 검토해 전달해주겠

다고 대답. 이번 특사 방북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북측은 △핵문제는 미국과의 현안이며 △핵무기 개발의사가 없고 △미국과 광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기를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선 핵개발 계획폐기를 바라는 미국과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이날 국정 연설에서 북한을 '무법 정권'이라고 규정, 근본적인 대북 불신감을 나타내 당분간 북·미가 마주 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김 국방위원장이 임 특사를 만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시간을 좀더 필요로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핵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국방위원장이 아직 특사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북한, 미국과 핵담판 고집

김정일, 왜 林특사 안만났다

대통령 특사인 임동원 외교안보포럼 특보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면담. 불발은 무엇보다 북핵 문제를 북·미 간의 양자 논의 구도로 끌고 가겠다는 북측의 확고한 뜻 때문으로 판단된다. "5(남북한·일본·호주·유럽연합)+5(안보리 상임이사국)협의체 구성 등 다자 협의 문제도 모두 언급했다"는 林특보의 29일 설명에도 불구하고 남측 특사와 핵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가 북한 지도부 내부에서 대두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 지난해 4월 남북 관계 현안 타개를 위한 林특보의 방북 때와 달리 북·미와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얽힌 핵문제에 대해 김위원장이 나서지는 게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핵문제를 미국의 북핵 대응과 이라크 공습 등의 조치를 지켜보며 풀어가겠다는

친서에 담긴 메시지에 불만 가능성 이라크사태 관망 시간별기 분석도

전략에 따른 것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관측에도 불구하고 특사 파견 제의를 수용했던 김위원장이 왜 林특보와의 만남을 피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까지 휴대한 특사를 그대로 돌려보낸 것은 외교적 결례인데다 지난 20일 러시아 대통령 특사인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과는 6시간 회담했다.

林특보가 회견에서 면담 무산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林특보의 친서에 담긴 대북 제안이나 미국·일본 측의 메시지를 북한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야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해 왔

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물론 군사분계선(MDL) 통과 문제 타결에 따라 경의선 철도 연결과 금강산 유로관광의 일정을 잡는 등 부분적인 진전은 있었다. 또 이종석 인수위원을 통해 노무현 당선자 측의 대북정책 구상을 전달하고 이를 위한 핵문제 조기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닷새 전 특사 파견 발표 때 정부가 "우리 입장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기회가 된다"며 의미를 부각한 것과 비교하면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이영준 기자

北核 돌파구 기대 미흡

■ 임동원특사 방북 결과

“김대중 대통령의 조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후후 알려주겠다고 한 만큼, 북측이 심사숙고할 것으로 생각한다.”

임동원 특사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3일 만에 귀환해 이 같이 밝혔다. 특사 파견의 최대목적이었던 핵문제와 관련,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국제사회의 핵에 대한 우려를 가감없이 전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당초 기대치에는 못미쳤지만, 우리측과 진지한 논의를 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임 특사는 “북측이 우리측의 설명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재확인

특사 받고 안만난건 非禮

北입장 홍보 들러리 선 격

하는 성의를 보였다.”고 했다. 기대를 모았던 ‘전격적인 핵돌파구’를 마련하진 못했으나, 남측의 노력으로 북측의 추가 행보 및 국제사회의 다음 조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풀이다. 북측이 향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측은 특사 방문 기간 중 북·미간 회담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불가침조약 체결 등의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우리측의 특사 파견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지방 순시를 이유로 면담하지 않은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국제외교 예의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어서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북측이 핵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만 국제사회에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번 회담의 의의를 찾자면, 남한이 핵 문제 당사자로 나서 북한과 핵문제를 다뤘다는 점, 그리고 향후 새 정부가 과감한 대북 청사진을 북측에 제시하며 핵문제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북측에 대해 고민의 여지를 던져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김위원장 전화로 메시지 보내와”

■ 일문 일답

임동원 특사는 29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북결과를 설명했다.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이 불발됐다.

아깝게 생각한다. 현지 지도 방문 중인 김 위원장이 김용순 비서와 전화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왔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하신 따뜻한 ‘조언’에 감사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필요하다면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친서를 확인한 내용으로, 직접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포했다고 본다.

●고농축우라늄 핵개발에 대한 설

명이 있었는지.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이에 대한 해명과 향후 조치를 강조했다. 북한의 입장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부시 대통령이 오늘 북한 등을 ‘무법정권’으로 규정했다. 향후 핵문제 해결전망은.

방북시 말했듯 핵문제 속성상 쉽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군비통제 분야 해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100% 검증은 있을 수 없다.

●미·일의 메시지를 갖고 갔느냐. 북한측의 답변은.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북측 메

시지는 받아오지 못했다. 다만, 미국에 대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김 대통령의 친서 내용은, 핵문제 해결에 한국이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핵 문제와 남북관계,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의 관계 당부 말씀 등이다. 핵문제는 3가지인데 하나는 고농축 우라늄 농축계획 의혹을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폐기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내용이다. 방법론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다음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조속히 철회, 유엔안보리에 회부돼 제재조치 들어가는 것을 막으라고 했다. 끝으로 불가침조약 체결은 간단치 않아 여러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수정기자

林 특. 4 방북 무일 남겼나

北核 조기타결 기대 멀어져

북한 핵문제의 1년여를 찾지 못해 방북한 임위원장이 29일 오전 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게 못하고 돌아왔다.

임 특사는 "(북측은) 임 위원장이 지방에서 현지지도 때문에 만날 수 없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며 "김 위원장이 구두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 20일 북측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로슈고프 러시아

기 사장은 분명하게 확인했다.

북측 국면이 지난 93년과 마찬가지로 장기전 양상으로 갈 공산이 크며 조기 타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93년 3월 북한이 핵무산 금지조약(NPT) 발효를 선언하면서 빛이었던 1차 핵사태 당시에도 북-미간의 지루한 줄다리기를 거쳐 이듬해인 94년 10월 제네바합정을 타결하기까지 1년 반을 끌었다.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임동원 대통령 특사(오른쪽)가 29일 남북대화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북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김재훈기자>

北, 다자협상 거부입장 밝혀 한국 주도적 역할 어려울듯

외무차관과 회담한 것으로 미루면 때 외에도 임 특사의 면담을 꾀할 것이다.

즉 김 위원장과 임 특사가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만나야 오히려 부담스럽게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임 특사는 "김 위원장이 친서로 받았고 김 대통령이 개관하신 후 권고와 뜻깊은 조연에 대해 표현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알려 주겠다"며 북측이 인위적 방법으로 우리측 제안에 호응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임 특사는 북측이 '북-미간 직접 협상'과 '북미합계합정 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이 한-미합의를 통해 제시한 다자협상구도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화 개시를 위한 첫 단계인 구제적 핵개발 포기 선언 등에 대해서도 반대론 언급이 없었다.

북한은 이번 핵문제 역시 제네바 협상과 같은 양자협상 구도로 풀고 가면서 불가침협정과 경제지원이라는 두 가지 체제인정 보장 장치뿐 얻어내려 하고 있다.

대국이 남북관계에 관한 한 북한에서는 임기만료를 앞둔 김대중 정부와는 '비밀'을 밝힌 한 치지가 아니므로 차기 노무현 정부 출범까지는 핵문제에 대해 협상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다.

임 특사는 "심각한 핵문제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해결 과정이 쉽지 않다"면서 "같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북핵 문제의 장기화 될 인정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말하는 핵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은 그만큼 더 절망적일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양측은 2월 중 김의선 연결 안료, 2월 초 금강산 육포관광 실시 등 남북간 현안에 합의했다.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꾀하는 동시에 김 위원장이 김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해 '마지막 선물'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주기자 dilee@mk.co.kr
윤상환기자 shyoon@mk.co.kr

한겨레

2003. 1. 30 (목)

“김위원장, 김용순 통해 메시지 전해와”

■ 임특사 귀환표정·문답

임동원 대통령 특사 일행은 29일 낮 12시38분 상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이 취담 성과를 묻자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다"며 짧게 답했다. 임 특사는 "출발할 때 보니 대통령 하기가 없었어 있더라"고 덧붙였다. 공항에는 정세원 통일부 장관과 김보현 국가보안원 3차관 등이 마중하러 나왔다.

정부는 28일 밤 임 특사와 김용순 노동당 중앙위 비서의 회담-면담 뒤 김경일 위원장 면담이 불발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김 비서와 회담 뒤 '면담 없는 회담' 쪽으로 의견충돌이 있었으나 최종 방북은 29일 이른 아침에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동보도문, 북측과 같은 것이으나, 김 위원장 면담의 구상과 관련해 공동보도문 없는 '마지막 쪽으로 방북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지도 위해 지방 시찰중 전화 추후 북쪽 통보 형식 예측 어려워

특사 일행은 48시간 남짓한 방북 기간에 임 특사-김 비서 두차례 회담-면담(27일 2시간, 28일 4시간 남짓)을 통해 핵문제와 관련한 양쪽 견해를 주고받았고, 28일 낮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임동원 통일부 선부 제1부부장 간 1시간 남짓한 접촉이 있었다.

다음은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전한 임 특사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김경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이 지방 현지활동 때문에 안 된다는 해명에 납득할 수 있는가. 직접대면을 하지 못한 속사정이 있나?

=김경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 친서로 전달하고 자세한 우리 입장

설명한 뒤 김 위원장의 생각을 들어 오라는 임무를 띠고 갔지만 북측 사정에 의해서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대신 현지지도 방문 중인 김 위원장이 김용순 노동당 비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를 읽어주는 것을 들었다. 김 위원장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해 왔다고 본다. 즉각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검토해서 알려주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나. 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나?

=형식은 예측하기 어렵다. 농축 우라늄 계획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히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의 입장은 알려진 대로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핵문제는 속성상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개발하려는 쪽이 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 해결 가능한 문제다. 대화, 협상을 통해서 점

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미국이나 일본 쪽의 메시지를 전달했나?

=미국과 일본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북한 메시지는 받아오지 못했다. 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 대화에 나서주기 바란다는 것을 간단히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번에 전달한 대통령 친서의 구체적 내용은? 김 위원장을 못 만났는데, 그럼에도 한국이 핵문제를 푸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친서는 핵문제, 남북관계,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당부 등을 담고 있다. 핵문제는 다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농축 우라늄 의혹을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폐기하는 데서 시작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조속히 철회해야만 유엔 안보리 회부와 제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번째로 참가 협조와 체결이 간단히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어려울만한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했다. 북측은 '김 대통령의 설명과 따뜻한 권고에 감사드리며, 나중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알려드리겠다'고 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메시지라고 평가한다. 핵문제와 관련하여선 우리도 당사자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북측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훈 수원제기자 wonje@hani.co.kr

北은 무법정권... 핵협박 不容

부시 국정연설 강조 “동맹국 지지 없어도 이라크 공격 하겠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8일 국정연설에서 북한, 이라크, 이란을 '무법정권(outlaw regimes)'으로 지칭하며 핵무기 개발 계획을 이용한 북한의 협박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과 이라크 정책을 차별화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모인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갖고 "현재 미국과 세계 및 대테러 전쟁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보유한 무법정권들"이라고 전제한 뒤 이란, 북한, 이라크 문제를 차례로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이용해 양보를 얻어내려 하지만 미국과 세계는 협박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9면 그러나 "미국은 한국 등 한반도 주변국과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라크와 달리 무력사용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다양

한 위협에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라크 정책과 북한 및 이란 정책이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핵개발 포기 여부에 대한 반대급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은 핵무기 야심을 버릴 때에만 세계의 존경과 재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이라크, 이란을 일일이 거명하며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했던 지난해 국정연설과 달리 구체적 거명 없이 '무법정권'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란, 북한, 이라크 문제를 차례로 언급해 '무법정권이 세 나라를 지칭함'을 암시했다.

그는 북한 문제 언급이 끝난 뒤 "한반도에서 교훈을 얻어 이라크가 더 큰 위협으로 자라나도록 허용해선 안된다"며 동맹국 지지 없이도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전쟁을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유엔 무기사찰을 "경멸했다"고 주장하며 동맹국의 의견을 묻겠지만 "언제까지 기다리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달 5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유엔에 보내 이라크가 유엔 사찰단을 속였고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태원준기자·연필 wjtae@kmib.co.kr

“김정일, DJ친서 검토 후 답변”

귀국 임특사 밝혀... 동해선 임시도로 12일 개통

임동원 대통령 대북특사는 2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와 관련해 김대통령의 조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다면 추후에 알려주겠다는 구두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임특사는 사흘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위원장은 김용순 노동당 비서를 통해 전달한 구두메시지에서 김대통령에게 따뜻한 조언이 담긴 친서를 보낸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3·4면

임특사는 또 "북측은 김위원장이 지방에서 중요한 현지도 사업을 하는 사정상 만날 수 없게 됐다고 양해를 구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이 보낸 친서에서, 핵문제와 남북관계, 새 정부와의 관계 등 세 가지에 관해 조언했다.

임특사는 "방북 기간에 미국과 일본의 구두 메시지를 북측에 전했다. 북한이 미국과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는 받아오지 못했다"며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은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특사와 함께 방북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의 이종석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후 김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임특사는 아울러 "북측과 경의선 철도 연결을 추진해 2월중 완료하고, 금강산·육로관광도 2월초부터 실현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2~2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간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2차 회의에서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 일자 등을 다음달 12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은 조선 아태평화위원회에 내달 4일, 90명 규모로 금강산·육로 관광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내달 12일, 400명 규모로 시범관광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박주호·신창준기자 procp@kmib.co.kr

對北인식 여전히 '고압'

• 부시 국정연설 될 담았나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올해 국정연설은 경제회복과 이라크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두 문제 모두 불충분한 근거와 불확실한 전망 때문에 이날 연설로 미국인과 세계인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기대는 상당한 난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문제=부시 대통령은 최근의 유화적인 태도표명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대북 시각과 북핵 해법 원칙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북한을 '국민을 공포와 기아 속에 살게 하는 압제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협약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속이고 있다"고 묘사했다. 북한이 핵을 카드로 양보를 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심지어 "북한을 통해 이라크에서 더 큰 위협이 생기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이 당장 강경력을 쓸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부시 대통령은 "다른 위협에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북핵

식량지원등 유화책 언급안해 이라크엔 최후통첩성 메시지

문제에 대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추구하는 '평화적 해결'을 다짐했다. 그는 이날 최근 북한의 핵포기를 조건으로 제시해오던 에너지 및 식량 제공 등 이른바 '담근'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라크=부시 대통령은 이날 비록 선전포고는 아니었지만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이라크와 국제사회에 던졌다. 이런 점에서 비록 평화적 해결 희망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전쟁 수순밥기로 볼 수 있다.

다음달 5일 끝난 파월 국무장관의 유엔 연설계획을 밝힌 것도 이라크와의 전쟁에 부정적인 프랑스와 독일 등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은 파월 장관이 유엔 연설을 통해 이라크의 무기 은닉과 사할 방해물 증명할 수 있는 인공위성 사진과 감청자료, 그리고 이라크와 알 카에다간 연관성을 보여주는 알 카에다 고위간부의 증언 등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확실한 증거가 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파월 장관의 연설이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사회나 미국내 여론을 돌리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와 알 카에다를 연계시키는 한편 정보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라크의 관련 물질 및 서류 은닉, 사찰단 감시, 과학자 개별면담 방해 등을 열거하면서 특히 "사담 후세인이 사찰단에 협조하는 과학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선택이 다른 나라의 결정에 달려 있지 않다"고 말해 독자적 군사작전 감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라크 문제가 시급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응이 너무 늦어진다"고 반박했다. 부시 대통령은 다음달 9일 실비오 베르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10일 토니 블러어 영국 총리와 각각 회담할 계획이다. 이들 두 나라는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나라다.

◇국내문제=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올해 국정 연설의 첫째 목표로 경제회복을 꼽으면서 주식매담금 파세 폐지, 소득세 세율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6천7백억달러 감세 계획과 함께 수소자동차 개발에 12억달러, 아프리카 에이즈 치료에 1백억달러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특파원
lsc@kyunghyang.com

중앙일보

2003. 1. 30 (목)

부시 "북한 등 3국 無法정권"

의회 국정연설 "北 핵개발 위협에 굴복 안해"

[워싱턴=김진 특파원]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위협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28일 국정연설에서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한국 시간 29일 오전 11시)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은 핵·화학·생물무기를 추구하고 보유한 '무법정권(outlaw regime)'들"이라면서 이란과 북한·이라크의 위협을 차례로 열거했다. (관계기사 11면)

부시 대통령은 "지금 북한 정권은 핵개발 계획을 이용해 공포를 조성하며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세계는 그 같은 위협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사용해 논란을 빚은 '악의 축'이라는 용어를 다시 쓰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북한 등 3개국을 '무법정권'으로 지칭해 이들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부시 대통령은 "핵무기가 결국 북한 자신의 고립과 경제적 침체, 그리고 영속적인 고난을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북한 정권에 일깨우려 한다"고 밝히고, "북한 정권은 핵개발 야욕을 버릴

때에만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고 주민들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위기와 관련, "자국민을 탄압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독재자인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무장해제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경제·정치적 압력으로 북조선을 옥죄려 하는 짓은 뱀이 먹이를 잡아먹을 때 쓰는 수법"이라고 맹비난했다.

jinjin@joongang.co.kr

사 설 · 칼 럼

논 단

북한 핵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일에는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가 개최됐으며, 6~7일간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그룹회의(TCOG)가 열린다. 뒤늦게나마 김대중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주 중국과 러시아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한 데 이어, 7~11일간 임성준 외교안보수석을 미국과 일본에 파견해 중재방안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특히 미국 방문에서 DJ의 해결방안인 북한 핵포기와 미국의 북한체제-안전보장이라는 일괄타결 '방법론의 큰 틀'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의 반응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다음주에는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도 서울에서 예정되

제로 지칭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간지연 전술도 북한이 활용하고 있는 수단이다.

현정부 해결 과욕 차기정부로

미국이 이라크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해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압박과 유연안보리 상정, 경제봉쇄, 제한폭격 등의 단계적인 수순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간에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면 기정사실화되니 좋고 안 돼도 한국이나 일본 등의 '인질'들로부터 상당 정도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주변국 초대전술이다. 최근 북한은 관련국들의 중재를 환영한다



金光庸

北核 장관급회담 적극 활용을

있다.

상황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북핵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물론 미국 부시 정부는 북한을 공격할 뜻이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천명했고, 북한도 지난 3일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 등의 입을 빌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자신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관련국 시각차 점점 찾아야

그러나 관련국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 해결방안 사이에는 서로 접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먼저 북한은 북핵문제의 발단이 미국의 체제위협과 제네바 협정의 불이행으로 빚어진 것이라며 한미간의 정책공조의 틈을 파고 들어오고 있다. 2003년도 북한의 공동사설은 '북과 남의 조선 민족 대 미국의 문제'라는 대립각으로 북핵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평양방송은 6·15 공동선언의 제1항의 내용인 '우리 민족끼리'를 향후 통일운동의 생명이념으로까지 격상시키고 있다. 또한 북핵문제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조선반도의 핵문

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미국을 고립시켜 압박을 분산하고 차후 있을지도 모를 대북봉쇄의 실효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예비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완강하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구체적인 실행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일체의 양보나 담근은 없다는 것이다. 불가침협정도 전례가 없으며, 현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호히 거절한다.

어차피 한달 보름이면 새 정부가 출범할 것인 바, 현 정부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가닥을 잡겠다는 것이 과욕이다. 차기정부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새롭게 일을 벌리기보다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9차 장관급회담에서 교류협력에 관한 협상보다는 북핵 이슈에 초점을 맞춰 강력하게 항의하고, 미국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해 정책공조 회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한 예가 될 것이다. /한양대교수·북한학

◇본면의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주목되는 '동시다발 남북대화'

이번주 서울과 평양, 금강산에서 남북 대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오늘 금강산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다룰 제3차 직접자 실무접촉이, 서울에서는 내일부터 제9차 장관급 회담이 열린다. 또 모래부더 평양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협회가 예정돼 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등 위기가 잔뜩 고조돼 있는 터라 남북이 대화를 끊지 않고 이처럼 활발히 만나는 것만으로도 일단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구실을 할 것이다.

특히 장관급 회담은 이번이 사실상 김대중 정부에서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기에 큰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아홉 차례 지속된 회담의 성과와 위상을 평가하고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의 근간으로서 제구실을 다하도록 잘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의 큰 틀을 잇겠다는 뜻을 밝힌 터라 장관급 회담은 지속되었지만 참석자들이 대쪽 바뀌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어서 처음부터 신경전이 예상된다. 북쪽은 핵 문제는 미국과 협상해야 할 시안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인 당사자이며 현실적으로 북핵 시대로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나름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핵 문제로 위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남북 간에 성실한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내 서로 신뢰를 높여야 한다.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통과문제와 교착상태에 빠진 경의선·동해선 연결문제와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착공 등 시급한 현안들을 풀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실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바란다. 실조음으로 의견이 좁혀졌다가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던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타결됐다는 기쁜 소식이 금강산에서 들려오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여러 갈래로 열리는 남북대화를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東亞日報

社說



'무더기 남북회담' 核 주의제 돼야

남북한간의 접촉만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남북관계는 낙관할 것처럼 보인다. 이번 주에 장관급회담, 적십자 실무접촉,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을 위한 실무협회가 일제히 열려 남북대표들이 협실태이불에 마주 앉았다. 3가지 회담이 동시에 열리는 것은 남북회담 역사상 처음이다. 남북 민간공동행사추진본부 준비위원회까지 나서 21일부터 올해 공동행사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남북관계는 북한이 조성한 핵위기로 인해 최악의 상황이다. 미국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이 모두 뛰어들고 최악의 경우 핵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남북 대표가 여기저기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어지러운 지경이다.

정부의 생각은 일단 북한과 마주 앉아 "핵개발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북한은 회담을 앞두고 각종 매체를 동원해 남북대화를 핵문제 해결의 장(場)이 아니라 '민족공조'를 다지는 무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관계자는 "핵문제는 우리(북한)가 미국과 풀어야지 남측 사람들이 풀 수는 없다"며 남북 접촉에서 핵을 배제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시점의 남북대화가 혼쾌하지는 않지만 이왕 대화에 나섰으니 정부는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회담의 모양새나 사소한 합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최대 현안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회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민족공조 전략'에 휘둘려 핵위기에 돌입하고 남북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을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처신하기 바란다.

사설

남북, '북핵' 진지한 논의를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발생한 이래 두번째 남북 장관급회담이 오늘부터 서울에서 열리지만, 벌써 회담의 제1의제가 될 북핵문제에 대해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 관측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간부가 지난주 "핵문제는 우리가 미국과 마주앉아 풀어야지, 남측 사람들이 풀 수 없다"고 미리 회담의 한계를 설정해 놓은 뒤 더욱 분명해졌다.

북핵문제는 1차적으로 북·미가 마주앉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된 상황에서 제네바 합의를 복원하든 대체하든, 북·미가 직접 대화하고 협상해서 미국의 체제보장 약속을 받고 북·미관계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남북간의 문제이자 국제 현안으로서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대사가 그제 북핵이 북·미간의 문제

가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라고 한 것도, 북한 주장과 같이 일방적인 측면이 있다. 북한이 북핵의 다자적 성격을 무시하고 있다면 미국은 북·미 양자적 특성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다자접근법이 북한과 성실하게 협상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처럼 북핵이 남북문제가 아니라는 북측의 주장 역시 남북관계를 여전히 북·미관계의 수단으로 여기는 기존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의심을 줄 수 있다. 북한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한 남북관계에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남북 현안이 왜 제자리 걸음을 하는지만 생각해 봐도 북핵이 남북 현안이 아니라는 주장의 허구성은 입증된다. 최근 미국이 북한 체제보장 문서화 방안을 제시하고, 핵포기 이후 대북지원 구상도 공개적으로 언급할 만큼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지 세계가 이 회담을 주시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성실하게 논의하고, 대화노력을 해온 남한의 조연과 구상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대한매일

2003. 1. 21 (화)

사설

남북회담, 핵문제 꼭 다루야

오늘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북한핵 위기가 발생한 뒤 처음 열리는 정부 차원의 회담이다. 당연히 회담에서는 북한핵 문제에 대해 남북간의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하고, 문제 해결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최근 남북 회담에서 핵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평통의 고위 인사는 "핵 문제는 미국과 마주앉아 풀어야지 남측 사람들이 풀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만약 북한이 회담에서 핵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면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임은 물론, 남북협력 정신마저 외면하는 처사라는 점을 미리 지적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북한 대표단을 가까이 면담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지금 북한핵 문제는 '명분 싸움'에서 '시간 싸움'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북한핵의 유엔안보리 상정이 눈앞에 다가왔고, 더 끌다보면 국제사회의 다자간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북한은 물론 한국

의 역할도 줄어들고 한반도의 안정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북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18일 러시아 특사와의 만찬에서 "북핵 문제는 국제화 될 경우 해결은 더욱 복잡하고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은 상황을 잘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핵 문제는 과거 제네바 합의 때처럼 한국의 어깨너머로 미국과만 대화해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북한이 남북협력 사업은 민족공조라고 주장하면서, 핵 문제는 한·미공조를 무시하고 미국과 대화로 풀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거나 남한과의 약속도 깨는 것이다. 북한은 남북이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야 한다.

북한이 핵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핵 문제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지름길이다. 남한 당국도 북한의 주장에 휘둘러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현 정부와 차기정부의 '북한핵 해결 원칙'을 분명히 전달하고, 북한의 진심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이산가족 상봉’처럼 풀러가기를

지난해 9월 이후 중단 상태에 놓인 이산가족 상봉이 5개월 만에 재개되게 됐다는 소식은 반갑기 그지없다. 헤어진 가족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기쁨도 기쁨이려니와 북한 핵위기 사태로 불안감을 느껴온 국민에게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낭보를 전하게 된 것이 큰 소득이다.

건설 규모 문제로 이견을 보였던 이산가족 면회소를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금강산 지역에 짓기로 합의한 것도 진전이다.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돼온 이산가족 만남이 면회소 설치를 계기로 정례적이고 대규모 상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다만 기대했던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 확대,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사람들 생사확인 문제 등을 나중에 협의하기로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나이 많은 당사자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사람이라도 더 가족들을 만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평양에서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 실무협의를 열리는 사이에 금강산에서는 적십자회담 대표들이 먼저 생산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다른 회담 결과에도 기대감을 부풀린다. 북한이 내세우는 ‘민족 공조’가 말로 그치지 말고 실제 합의를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핵 위기로 빚어진 외부 환경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며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민족 공조일 터이다.

남북 사이에 시급히 풀어야 할 민감한 사안인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통과문제도 조금씩 물려서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의선·동해선 연결과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착공 등은 마냥 뒤로 미룰 수 없다. 비무장지대 지뢰를 제거하고 길을 닦아놓고도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실사구시 정신으로 접근해야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일보

2003. 1. 24 (금)

사설

남북회담, 北 선전장 아니다

걱정했던 대로다.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북한의 정치선전장화하고 있다. 북한은 첫날 회의에서 핵문제 논의에 진지하게 나서기는커녕 ‘남북한 대 미국’이라는 예외 황당한 민족 공조를 주장하면서 선전공세를 펼쳤다. 북한은 특히 ‘전례 없이 공개회의를 주장하는 등 이번 회담을 선전장으로 이용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유효한 수단으로 강조돼온 남북대화가 북한의 정치선전장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자칫하다간 남북대화가 존재 이유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물론 북한이 핵문제를 남북대화에서 거론했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남한의 촉구에는 일절 귀를 닫고 오로지 한·미간 이간과 남·남(南·南) 갈등을 겨냥한 선전 발언이나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핵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남북 협력도 어렵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옳다. 김영성 북측 대표단장은 핵문제와 남북 합의사항 실천이 별도임을 강조했고, 이봉조 남측 대표단 대변인도 핵문제와 남북간 협의사항 논의를 병행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대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측이 각종 협력사업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적십자회담 3차 실무접촉에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4월 착공 및 다음달 6차 상봉행사에 합의한 사실만 해도 그렇다. 그 자체로 보면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그것이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지도 모를, 아니면 더 많은 이산가족을 만들어낼지도 모를 핵무기 개발계획을 묵인하는 것으로 북한에 받아들여진다면 그런 아이러니가 없다. 북한의 선전공세 중단과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사설

'핵개발 안한다' 행동보일때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실제 그렇게 못하고 있다. 북한이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한의 역할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마지막에 남북간 북핵문제를 거론할 뿐, 남한을 실질적인 해결방안 논의의 상대로는 생각지 않고 있다.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측 대표의 발언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이런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다. 북측 대표는 민족공조로 외세의 전쟁위험을 저지하지며 이른바 '민족공조론'을 제기, 남북간 북핵 해결방안 논의를 피해나가려 했다. 북측은 남한내 미국 비관 분위기를 살려 '반미 민족공조론'을 확산시키려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민족공조론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민족의 문제인 북핵문제를 남북이 마주앉아 풀겠다는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구현하자는 것은 공감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이다.

민족공조는 핵확산 금지 등 국제사회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제적 보편가치와 충돌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북한이 진정한 의미의 민족공조를 할 생각이려면, 남한과 마주 앉은 기회에 핵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게 순서다.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및 제6차 이산가족 상봉 합의나 남북경협사업 진전은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남북간 핵문제 해결을 피해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도 핵문제 해결 없는 남북관계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곧 유엔 안보리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중국, 러시아는 물론 한국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원하지 않는, '북핵의 국제문제화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민족공조는커녕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가 가동될 상황이다.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는 선언에 국제적 신뢰를 얻으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행동으로 보일 때이다.

世界日報

2003. 1. 25 (토)

시론



金光庠

이번 한 주는 남북관계에 특이한 기간이었다. 금강산에서의 제3차 적십자 실무접촉, 평양에서의 경의-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제2차 실무협의회, 그리고 21일부터 24일 새벽까지의 제9차 장관급회담의 동시 개최가 그것이다. 마치 남북간에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같은 주일에 3개의 남북회담이 한반도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전례없는 일이다.

核 의미있는 합의 못이뤄

북핵문제도 여론이 들끓고 있는 미국인들에게는 이런 무신경이 부러워할 만도 하겠다. 그 중 가장 주요회담인 장관급 회담은 동상이몽이었지만 남북 모두의 '성공'이라는 자평속에 공동선언문이 발표되며 끝났다. 남측에게는 4차 경험추진위, 10차 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등의 향후 개최일정 합의로 대화의

계속성 보장과 핵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북측에게는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이 관철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다는 것이다.

한계 드러낸 장관급회담

과연 그런가. 본래 이 장관급회담은 말이 장관급이지 남측대표인 통일부장관을 제외하고는 남북 모두 차관급이거나 그 이하의 직급자로 구성된 실무 차원의 회담이었다. 과거의 선례에서 보듯이 이 회담은 대북지원이나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복잡한 정치-군사적 문제의 경우 북한대표단은 군부나 상부에 건의하지는 식으로 스스로의 격을 낮췄다. 그러니 이번 핵문제처럼 중대 사안의 경우 그런 북측대표단이 무슨 권한이나 의견을 갖고 있을 리는 만무했다. 당연

히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옳았을 지도 모른다.

결국 핵문제는 애매모호하게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문구로 덮여졌으며, 군사분계선 통과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의욕을 보였던 철도 도로연결이나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문제도 다음 회담으로 넘겨졌다. 애초에 1개월 정도밖에 남지 못한 DJ정권이 주도하는 이 회담은 본질적으로 인수인계하는 성격의 것이 되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내인 2월24일까지 철도와 도로를 개통하자고 욕심을 냈던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었을까. 보다 심각한 것은 북한 핵문제에

미국과 일본, 중국, 아니면 남한의 핵문제인가. '민족공조라는 단어로 모든 문제를 불식시키려 함으로써 회담장을 선전장으로 만든 북측대표단의 회의진행 방식은 결코 진지한 협상자의 태도가 아니다. 지난 17일 "핵문제는 우리가 미국과 마주앉아 풀어야지 남측사람들이 풀 수 없다"는 북한 조평통 부국장 조충한의 발언은 장관급회담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北, 회담장을 선전장 만들어

아무리 일방적으로 물자를 지원해주고 대화에 나서도 내용없는 대화는 말장난에 그칠 뿐이다. 대화는 필요하지만 대화만을 위한 대화는 평행선을 갈 뿐이다. 예컨대 남측이 북측에 단지 핵개발계획 포기선언과 핵동결 해제조치 원상복구, NPT(핵확산금지조약) 복귀 등을 촉구했다 해서 한반도에 저절로 평화는 오는 것은 아니다.

'변화'라는 바람으로 집권에 성공한 노무현 정권이 앞선 정부의 기존 햇볕전략에만 대인한다는 것 또한 스스로 지지세력의 바람을 저버리는 일이다. 대북특사 또한 그 범위를 넘지 못한다.

/한양대 교수·북한학

◇본면의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林 특사 방북에 거는 기대

북한 핵문제가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를 특사로 북한에 파견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처사다. 임 특사의 방북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 인사도 동행하게 된 것도 대북정책의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임 특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의 방북으로 유엔 안보리 회부를 앞두고 있는 북핵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핵문제는 북미문제'라고 주장해 온 북한의 태도로 미뤄 이번 임 특사의 방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핵문제를 보는 남북의 시각차가 워낙 큰 만큼 너무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제 끝난 9차 남북 장관급회담

의 공동보도문에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는 원칙론만 되풀이된 것이 남북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을 보여준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10월 핵개발 계획을 처음 시인한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진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핵문제의 안보리 회부는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돼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이란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할 수 없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핵개발 포기선언과 핵동결 조치 원상복구,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철회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은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진전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북한은 이번 임 특사의 방북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

'북핵 특사'에 거는 기대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실망감만을 남긴 채 끝났다. 제8차 회담을 가진 이래 3개월이 지나 열린 회담이었지만, 북한은 제8차 회담 결과에서 한발짝도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북한 대표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는 발언을 했지만, 공동보도문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한마디도 들어 있지 않았다. 사실 남북 장관급회담은 본래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장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북핵문제 해결의 통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북핵문제가 정권 차원의 문제로서, 정무원 산하 장관급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장관급회담 직후에 나온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키로 했다는 소식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북핵문제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북한체제 성격상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김위원장이 특사 방

북을 받아들이고 특사 파견을 남북 공동으로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 태도변화의 단초일 수 있다. 러시아 외무차관이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특사로 방북, 김위원장을 만나 일괄타결안을 논의한 지 며칠 안된 시점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북핵문제를 낙관할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흔히 그렇듯이 북한은 복잡하고 이중적인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특사 파견은 이런 모호성을 걷어내고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금 한편에서는 미국 주도로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사회 상정이 추진되고 있고, 북한은 '유엔 안보리 상정은 곧 전 쟁선포'라고 맞서는 등 자칫 새로운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임특사는 김위원장에게 국제사회의 엄중한 현실을 깨닫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핵폐기 결단을 내리도록 설득해야 한다. 김위원장이 세계 앞에 분명한 정책전환을 보여주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사설

특사, 北에 현실 깨우쳐 줘야

9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성과로 남측 특사의 방북 성사를 잡게 됐다. 이번 서울회담은 북핵 문제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 대표단은 사태의 심각성을 북측에 설명하고 국제규범에 따라 행동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든가 “핵 문제는 북·미간 논의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처럼 북핵과 관련, 북측의 입장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견되는 대북특사는 그 임무가 막중하다.

최근 들어 북핵 해법과 관련해 적지 않은 구상들이 공론화됐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다자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특사는 평양을 방문해 사태의 일괄타결안을 제의기도 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를 대신해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정동영 의원은 북한판 마셜 플랜이란 포괄적 해결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같은 제의는 모두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북특사의 임무 역시 북핵 사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민족끼리’를 앞세운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선전인가를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공통된 우려를 전달함으로써 북측이 현실감 있는 상황인식을 갖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 북한이 핵 문제를 북·미대화로 풀겠다고 남측의 간여를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북핵 위협에 대한 일차적 불모가 한국민일 뿐 아니라 이제까지 제안된 북핵의 평화적 해법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국의 경제적 기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번이 좋은 기회다. 남측 특사의 입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책임 있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북핵 해결은 한국의 역할을 소중하게 여길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민족공조다.

社說

특사 방북, 북 핵포기 계기 되기를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임동원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작년 4월에 이어 다시 평양에 파견된다. 북한이 우리측 제의를 받아들여 방북이 성사됐다는 점은 일단 고무적이다. 북-미간 중재가 아닌 북한을 설득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북한 핵 문제는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유엔 안보장이사회 회부가 확실시되는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런 불행 이전에 남북간 대화를 통해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다면 그보다 다행스러운 일은 없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핵 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한 뒤 1월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에 이르기까지 계속하고 있는 잘못된 행보를 돌이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측 고위 인사를 만날 임 특사가 명심해야 할 일들이 있다. 무엇보다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핵 동결 해제 원상복구, NPT 복귀 등도 분명하게 요구하기 바란다. 핵 문제는 북-미 현안일

뿐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남북한의 현안이라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 이 같은 요구는 김 국방위원장에게 전달될 김 대통령의 친서에도 담겨지는 것이 좋다.

임 특사가 방북 활동을 최대한 투명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개적 대화보다 특사파견이라는 은밀한 채널에 무게를 두어온 정부의 대북 전략에 다수의 국민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대화가 여의치 않다고 해서 일방적 양보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임 특사는 현 정부 대북정책의 대미를 장식하겠다는 욕심보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현 정부의 임기는 불과 한달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측의 이종석 인수위원이 동행토록 한 것은 적절하다. 임 특사는 핵 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위해 차기 정부와 북한의 대화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도 원만하게 수행해야 한다.

社說

對北 特使활동 堂堂하고 투명하게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가 이 시점에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 위해 거쳐야 할 필요한 과정으로 여겨진다. 지금 절실한 것은 북한 당국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북핵 저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단호한 결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특사 파견이 유효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사는 당연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는 특사 파견이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이번 특사 파견이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 정부나 특사가 미국과 북한 간의 중재자라는 인식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북한은 특사에게 이른바 '외세 공조'를 버리고 '반미(反美) 민족 공조'를 이룰 것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은 남북 특사 대화가

한·미 간에 틈을 가져 오지 않을까 우려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애매한 중간자 입장을 취할 경우 북핵 저지를 위한 국제 연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사는 핵문제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북한 최고 당국자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리고 할 말을堂堂하게 모두 해야 한다. 그리고 특사의 활동은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관련국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임기 중에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욕심을 내 특사에게 과중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특사는 어디까지나 특사일 뿐 해결사는 아니다. 북한 당국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공식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만으로도 특사의 역할은 성공적일 것이다.

대한매일

시설

核특사 방북 평화해법 찾아야

북한핵 위기가 국제화로 치달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의 임동원 특사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의 이종석 인수위원이 27일 방북하기로 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다. 북한 평양방송이 남한의 발표를 즉각 보도한 것도 특사 방북에서 돌파구 마련의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는 북한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해결에 대한 실천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덧붙여 남북간은 물론, 국제사회 신뢰회복의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반도의 안정이 담보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끝난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남북 당국이 처음으로 핵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고, 평화적 해결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 4월에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은 차기정부에서도 남북화해와 협력의 틀이 계속된다는 안정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말보다는 실천이 북한핵 문제 해결

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북한핵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고 다자간 협의 상태이기에 오르면 시간도 시간이거나 남한의 중재안이나 북한의 주장 등 한반도의 입장이 반영되기 힘들어진다. 남북 당국은 이번 특사 방북을 북한핵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사 방북에서는 실천조치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핵 해결의 실천조치로는 먼저 북한이 핵포기 및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복귀 선언이 우선이라고 본다. 그 다음 한국 정부가 나서 북·미 대화를 중재하고, 미국은 북한체제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인정받게 되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에 이어 지원조치도 뒤따를 것이다.

남북 당국은 핵문제가 명분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담보하는 생존과 실리 문제라는 점을 다시금 새기기 바란다.

사설

임동원 특사 방북, 돌파구 열리나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김대중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7일 평양을 방문한다. 임 특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해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사 방북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쪽의 이종석 인수위원이 동행하며, 얼마 전 미국을 다녀온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함께 간다고 한다.

임 특사는 교착국면에 빠진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을 상대로 펼친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남북간 직접대화를 통해 해결의 길을 찾자는 김 대통령의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석 인수위원도 노 당선자 쪽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북쪽 대표단이 이번 장관급 회담 과정에서 남쪽이 오래 전 제안했던 대북특사 파견 제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미루어 김 위원

장이 상황을 진전시킬 모종의 결심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의 정부 마지막으로 열린 제9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공동보도문에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확인하고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한 다면서도 원론적 견해 표명에 그쳤으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이런 기대감 때문이다.

임 특사가 충분히 설명하리라고 믿지만, 현재 한반도를 덮고 있는 핵 먹구름은 평화적으로 순조롭게 풀리리라고 낙관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에 비해 다소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미국 쪽의 완강한 태도는 여전하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 등 관련국들이 협상을 주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에 대한 설득 노력은 별도로 하고, 북한은 이제 비랑끝 전술을 거둘 때가 됐다고 본다. 임 특사 방북이 핵 위기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일보

2003. 1. 25 (토)

사설

對北 특사에 기대해 본다

김대중 대통령이 27일 북한에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를 특사로 파견한다. 정부가 지난 10일 특사 파견을 제의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상황이 긴박해진 때문은 아닌 듯하다. 애초 장관급 회담 정도로는 풀어 낼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양측 정상이 특사를 통해 직접 대화하기로 했다고 볼 수 있겠다.

김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태를 다음 정부에 그대로 넘기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임기 중에 문제를 풀게 되면서 더 바란게 없겠지만 그게 안되더라도 해결의 실마리 정도는 찾아주고 싶어하게 마련이다.

특사의 면면에서도 김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다. 임특사 외에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의 이종석 인수위원이 동행한다. 한 정부와 차기 정부가 특사의 역할을 함께 보증한다는 뜻일 터이다.

단순히 설득하기 위한 특사 파견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대안을 갖고 갈 게 틀림없다. 아마도 핵 포기 이후의 에너지 지원과 안전 보장

일 것이다. 거기엔 미국측의 의지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특사 파견이 예정된 상태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을 공동보도문으로 강조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특사 파견에 더 기대를 걸게 된다.

북한도 이 문제를 더 풀어서 좋을 것이 없다. 미국이 이라크 쪽에서 벗어난 후가 되면 북측 핵공세 위력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지금이야말로 핵 압박의 효과가 극대화된 시점임을 명념해야 한다.

북한 스스로 강조해온 바 '민족 공조'를 위해서라도 남한의 설득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 그것이 일관되게 대북 포용정책을 고수해온 김대중 정부에 대한 의리이기도 하다. 그럴 때 차기 정부의 신뢰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장관급 회담에 이은 특사의 방북을 통해 북한 핵 문제의 해결책이 강구되거나 최소한 결정적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社說

마지막 특사에 쏠리는 눈길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 결정은 북핵사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27일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할 임특사 일행은 김 대통령의 특사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그동안 정부가 벌여온 북핵외교 활동을 토대로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이해 시키며, 김 위원장의 생각을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임 특사의 평양방문은 시기상으로도 매우 의미 있다. 우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과 교류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한 김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보내는 특사라는 점이다. 그 동안 김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통해 쌓아온 노력이 핵 문제 해결에 최후의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어제 끝난 남북장관 회담에서 남측은 핵 문제 해결을 집중 요구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는 못했지만, 남측과 국제사회가 핵 문제에 얼마나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

는지, 북한은 감지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평양 수뇌부에 전달되는 시기와 임 특사의 방북이 겹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임 특사 파견은 김 대통령이 제의하고 김 위원장이 수락한 것이다. 임 특사는 사실상 햇볕정책을 기화했고,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을뿐 아니라, 특사 자격으로 여러 번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따라서 임 특사의 방북은 현정부의 햇볕정책을 심판받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또 노무현 당선자측 이종석 인수위원이 특사단에 포함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할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이라크 문제가 해결되면 핵 사태는 국제 이슈로 부각되고, 북한은 더욱 고립되어 견디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태를 현명하게 판단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남북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대한매일

2003. 1. 25 (토)



대북특사에 거는 기대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은 남북관계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냉각 상태에 있는 북핵문제를 푸는 데 매우 적절하고도 유의한 일로 평가된다.

대북특사가 북측의 구체적인 응답을 얻어 온다면 더 없이 바람직한 일이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남한의 신정부에 대한 북측의 신뢰를 구축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점을 전달하는 역할만으로도 대북특사 파견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우선 시기적으로 매우 미묘한 시점에 특사가 파견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한에는 약 한 달 후 새 대통령이 새 정부를 출범시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북측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북한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험하기 전에 새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해 북측을 안심시키는 것은 핵문제 해결은 물론 남북관계 전반의 신뢰관계를 새 정부에서도 지속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조만간 긴급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핵 개발계획과 핵 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항공모함 키티호크는 23일 북한 정찰을 위해

출항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유연을 통한 국제적 압력과 직접적인 군사적 시위 양면을 구사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런 움직임들이 북한에는 미국이 핵문제를 구실 삼아 체제붕괴를 노리고 있다는 기존의 적대적 시각을 더욱 강화토록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과 북한간에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하는 불신과 갈등의 구조는 심화되고, 그 결과 북핵문제는 해결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북특사는 새 정부 입장과 북한이 처한 국제적 상황을 진솔하게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태도가 더욱 적대적인 방향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고 협상에 응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특히 북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돼 국제여론이 북한에 공식적으로 더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전에 북한이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시켜야 한다.

북한은 대북특사의 설명을 귀를 기울여 북한이 처한 국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대화로 나서는 데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기 바란다.

지금은 북한의 주장을 들어야 할 때

북한 정권은 전체주의적인 대다 대화방식도 매우 서투르다. 이 때문에 북한은 비이성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따라서 진지한 협상이나 장기적인 약속을 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 그러나 딱해 보이는 하지만 위협스러운 북한 정권은 1980년대 이후 계속해서 미국·일본·한국과의 적대 관계를 해소해 보려고 시도해 왔다. 물론 북한이 알고 있는 유일한 방식인 협박과 반대를 구사해서 말이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서 이 같은 시끄러운 주장의 이면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몇몇 청취자들을 찾았지만, 워싱턴에 대해서는 실패했다.

미 사회과학연구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동북아 안보협력계획의 책임자인 레온 시겔은 미국 내 몇 안 되는 북한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하겠다는 평양의 반복되는 제안은 어느 정도 진지하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이미 80년대부터 빈곤을 초래하는 고립만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당시 지도자였던 김일성은 핵 개발이야말로 외부와 협상할 무언가를 얻는 방법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반면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에 앞서 먼저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일본·한국이 대북 관계 개선에 나서지 못하도록 막았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짓게 됐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은 양국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는 94년 제네바 핵합의를 도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94년 바로 이 때 의회를 다시 장악한 공화당은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양보'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행정부는 핵 합의 때 했던 약속을 실행하는데 주춤거렸고, 경수로 건설도 지연시켰다.

이 사이 평양이 대미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한 흔적이 있다. 98년에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워싱턴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북한은 그 해 미사일을 쏘아 올려 미국과 일본의 주목을 받는 데 성공했다.

시겔에 따르면 이 같은 북한의 전술은 많은 이들이 "북한은 경제지원을 얻는 대가로 어떤 반대급부도 내주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실 북한은 '눈에는

“ ”

80년대후 美와 관계개선 위해 부시 강경책이 핵 재개발 유발

눈'이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워싱턴이 협조하면 우리도 협조하고, 워싱턴이 보복하

면 우리도 보복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2001년 들어선 두 번째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했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거나 재해석했다. 부시 행정부는 남한의 대북 햇볕정책을 비난하고,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켰다. 이는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일에게는 느닷없는 개인적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예상대로 북한은 핵 개발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라크와의 전쟁보다 북한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여기게 됐고, 워싱턴은 지금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협상은 하는 게 낫다. 남북한과 일본이 모두 원하는 해결책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손이 닿는 범위 내에 있었다. 워싱턴과 평양은 80년대 이후 격렬하게 서로의 과거를 비난해 왔다. 지금은 워싱턴이 평양의 얘기를 들어볼 만한 시점이다. 정리=채병건 기자

mfemc@joongang.co.kr

시론

북한은 작년 말부터 파죽지세로 핵개발 기도를 본격화하여 금년 초 마침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였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부산하던 와중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에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제의하였고, 북한은 일정을 약간 수정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증폭되고 있던 상황에서의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는 당사자간의 회담이라는 점에서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문제가 미-북간의 문제이며, 남북은 오직 민족단결을 강화하는 종래의 '민족공조'론을 되풀이함으로써 남북회담을 단지 그들의 선전장으로 활용하려 했던 의도가 역력하다.

김대중 정부는 27일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특사를 평양에 파견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유엔

위험한 것이다. 전쟁은 결코 물자의 싸움이 아니라 의지의 싸움이다.

核포기 입증때 대화 응해야

소수의 정예군이 단결하지 못한 대규모 군대를 격파한 사례는 전사(戰史)에 허다하다. 북한은 이미 약간의 핵무기와 한반도를 사거리로 하는 다량의 근(近)거리 미사일 및 상당량의 생물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민의 경계 및 대항의지를 약화시키는 북한의 대남 선전전과 심리전이다. 한반도 위기가 북핵 때문이 아닌 미국의 강경정책 때문이라는 주장, 남북 한민족이 한데 뭉쳐 미국에 대항하자는 주장,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론, 어떻게



洪官諤

對北특사 기대반 우려반

안보리 회부를 논의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 개최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현상황에서 방북 특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것은 매달리듯하는 대화로서 북한의 의도가 쉽사리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北의 의도 변화기대 어려워

핵개발에 대한 북한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핵보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핵개발을 기정사실화해 이른바 핵보유 국가군(群)에 들어가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보유는 단순히 협상용으로서 경제적 이익의 획득을 넘어 서서 대남 군사적·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남한의 국민총생산(GNP)이 북한의 20~30배에 이르고, 대외무역고가 100여배에 달하며, 북한이 항상 식량과 에너지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은

든지 전쟁을 피하에만 한다는 명분하에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매달리는 태도 등이 남한의 안보의지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대남 적대적 정책을 간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실로 이는 수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가치관의 전도(顛倒)이며, 안보관의 혼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현 상황에서 북핵해를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함에 입각한 대북 억지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길이 아닌가 한다. 곧 한-미 동맹을 토대로 강력한 대북 외교·경제 제재와 군사적 억지정책을 구사하면서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고, 철통 같은 전국민적 방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 북한이 핵포기를 행동으로 입증하고 진정으로 대화의사를 표명해 올 경우 실질적인 대화에 임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한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본면의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林東源특사

북한의 대남 모욕이 도를 넘었다. 온갖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대북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김대중정부는 임기 말에 끝내 북측으로부터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한 임동원 대통령특사를 '현지지도(지방시찰)'란 명목으로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측이 우리 특사의 방북에 합의한 것은 최소한 김유원장의 특사면담을 전제한 것이었다. 林특사도 방북 전 이를 분명히 했다. 대표단에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구두 인사말을 가지고 간 인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핵 문제의 해결 방안과 관련한 서로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그 면담에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는 문제는 처음부터 전혀 별개의 영역이었다. 그럼에도 북측이 이 면담 약조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서 북측의 대남관 그 자체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북측의 행동은 용인될 수 없는 대남 모욕이었다.

정작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분노하게 한 것은 林특사의 귀환 후 설명이다. 그는 회견에서 대통령 친서를 간접 전달한 점에 대해 "실망스럽다기보다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측을 끝까지 감싸안으려는 눈물겨운 그의 자세는 그러나 국민이 느낄 분노와 모욕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자세이니까 면담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북측으로부터 핵 문제는 '북-미간'의 일이라는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신정부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와 규범을 무시하는 북한 정권의 실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 대북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감상적 민족주의의 틀에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그 방식을 더욱 대담하게 추진하려 한다면 내외의 벽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북측으로부터도 이번처럼 알잡힘만 당할 것이다.

대한매일

2003. 1. 30 (목)

사설

기대 못 미친 林특사 방북

임동원 대통령 특사와 이종석 차기대통령측 인수위원의 방북이 기대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실망스럽다. 북한핵 문제는 다음달 유엔안보리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등 시간을 다루는 사안이다. 북한핵 문제가 국제무대에 올라 다자간 협상으로 진전되면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 쌍방대화는 물론 남한의 중재 역할도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林 특사의 방북은 남북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려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중요한 모멘트가 된다는 점에서 기대됐었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 정부의 林 특사와 차기 정부의 특사적인 이 인수위원을 만나지 않은 것은 핵문제 해결 의지와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다. 김 위원장은 현지지도 시업 때문에 김용순 노동당 중앙위 비서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와 따뜻한 조언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하지만 핵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는지 묻고 싶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林 특사를 만나 소강상태였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텄고, 최근에는 로슈코프 러시아 대통령 특사도 만나지 않았는가.

우리는 북한핵 문제가 특사를 만나고 안 만나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임을 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조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추후에 알려주겠다." 정도의 성의밖에 보이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를 겨냥해 남한을 이용한다는 인상마저 준다. 게다가 林 특사의 귀환 시점에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이 논평을 통해 "한반도의 핵위협은 북으로부터가 아니라 미국에 의해 남으로부터 오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한 것은 남한의 처지나 노력을 무시한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가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와 대치하는 형국이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더 이상 한국의 중재 노력을 외면하고 사태를 바람 끝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조언에 대해 하루빨리 구체적인 답변과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사설

실망스런 임특사 방북 결과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방북했던 임동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김위원장이 특사 방북을 수용하고도 지방으로 현지지도를 떠날 만큼 성의없이 특사를 대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다. 남측도, 북측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더 이상 새롭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였는지 모른다. 김위원장이 김대통령의 친서를 넘겨받고 추후에 응답해주겠다고 한 것처럼 무언가 말을 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은 언제라도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북핵문제의 당사자다. 최고지도자가 간접 방식이나 서로 의견을 교환, 상호이해를 높이고 설득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중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특사는 극적인 타결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형식상으로도 특사를 최고 책임자가 만나주지 않은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

그런 의미에서 김위원장이 임특사를 그냥 돌려보낸 것

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북한이 남한과 북핵문제 논의의 틀을 깨리는 현실에서 남한이 북핵문제의 한 당사자여야 한다는 원칙론이 얼마나 공허한지도 새삼 절감케 한다. 김용순 당비서는 임특사에게 새 핵개발계획 자체를 부인하기까지 했다. 그제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의회의 법적 절차를 거친, '구속력 있는 불가침조약 체결' 등 요구 수준을 높인 담화도 발표했다. 반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핵에 협박당하지 않겠다"며 근본주의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남한의 역할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도 정부는 인내심 있게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남한의 임지를 줄이는 행동은 전혀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은 남한이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조기 회부해야 한다는 미국 요청을 거부하는 등 그동안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김위원장은 김대통령의 친서를 속고, 남한을 북미대화의 통로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東亞日報

社說

김정일 못 만난 대통령특사

김대중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임동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환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가가 막힐 뿐이다. 임 특사는 김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사람이다. 북한이 사전협의를 거쳐 방북한 대통령특사를 외면한 것은 외교적 모욕에 해당한다. 노무현 당선자측의 이종석 인수위원회까지 동행했었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난다. 국가의 위신과 국민적 자존심 또한 큰 상처를 입었다.

정부가 어떻게 처신했기에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휴대 한 특사가 이처럼 홀대받았는지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 임 특사는 방북하기 전 "대통령의 뜻을 북측 지도자에게 전하고, 북측 지도자의 의견을 받아 오는 게 임무"라고 밝혔었다. 이제 구구한 변명보다 김 위원장 면담이 불발된 사유를 솔직히 털어놓아야 한다.

6·15 정상회담 이후 현 정부는 김 위원장을 신뢰할 만한 대화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는 핵문제

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결정적 시기에 매몰차게 특사를 외면했다. 그런데도 구애하듯이 그에게 매달리는 대북정책을 고수할 것인가. 남북간에 낮은 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이 수없이 진전된다 하더라도 김 위원장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정부는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다 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속내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임 특사가 임무수행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동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대북 강경노선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악의 축'이라고 했던 북한을 '무법정권'으로 지칭하면서 핵 위협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쉴튼 특사외교가 강경 대치를 계속 중인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정부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 같아 걱정이다.



사설

부시의 위험한 이분법

북핵 위기에 대해 미국은 최근 다양한 기회에 평화적 문제 해결을 말해 왔다. 우리는 그런 언급이 실질적인 대화와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29일 나온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그의 대북 시각이 지난해 '악의 축' 발언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남북은 물론 러시아,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나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나온 그의 발언이어서 더욱 실망스럽다.

그는 이란·이라크·북한을 이번엔 '무법정권'이라고 불렀다. '핵과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려는 무법정권들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테러와의 전쟁에서도 매우 위험한 존재'라고 말한 데서 '나는 옳고 나와 다른 쪽은 악'이라는 지극히 단순하고 위험한 이분법적 발상법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북한에 대한 최근의 유화적 언급과는 달리, 감경 일변도의 비난을 쏟아 붓는 데 대해 우려를 금

할 수 없다.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핵 개발 계획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나, 합의 파기는 북한 쪽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세계가 그런 공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 파월 장관이 언급하곤 했던 대화와 '과감한 접근' 등은 모두 빈말이었는가?

부시 대통령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역내 이해 당사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북한 핵무기가 북한 자신의 고립과 경기침체, 그리고 영속적인 고난을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북한 정권에 일깨우려 한다"고 한다. 체제 보장이나 지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대화가 아닌 압박을 강조할 뿐이다. 당사자인 한국민의 뜻은 물론, 대화를 바라는 세계의 여론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남북 대화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우리의 뜻을 명확히해야 한다.



실망스런 북한의 태도

평양에 간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갔기에 김정일 위원장 면담이 당연히 이뤄지리라 예상했던 터여서 뜻밖의 면담 불발 사태는 많은 이들을 당혹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국제 외교 관례에 벗어남은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럴 바에는 남쪽의 특사 파견 제의를 왜 수용했느냐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임 특사를 만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나온다. 북쪽에선 뭔가 새로운 내용이 보따리에 담겼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했으나 별것이 없음을 확인했고, 의견 접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면 서로 부담만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이 그것이다. 김 위원장이 나서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거나 언질을 주기에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상황판단을 했을지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고 북쪽 지도층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위안을 삼는 것 같다. 하지만 면담이 성사되지 못해 모양새가 우스워졌음은 차치하더라도,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태도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음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남쪽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으며 핵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의 밀고당기는 실랑이가 더 진행되고 대치국면이 지속되고서야 대화가 되더라도 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그래서 나온다.

핵 위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남북 대화와 협력이 더 절실하다고 주장해온 우리는, 북쪽의 이런 외교 태도에 실망하면서도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계속 북한을 설득하는 한편, 남북 합의사항은 이와 상관 없이 양쪽이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미국에 대해서도 대화 촉구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社說

이런 특사 무엇하러 보냈나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은 납득이 안 된다. 북한의 입장 정리가 끝나지 않아 만나도 성과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설득력이 없다. 우선 김 위원장이 만나지도 않으려면, 무엇 때문에 특사 방북을 수용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어느 정도 사전 정지작업을 했는지도 묻고 싶다. 임기 말 대북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이벤트성 파견이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김 위원장을 면담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지난 4월의 경우와 대비가 된다.

북한은 우리측이 요청한 강석주 외교부 제1부상과의 회동을 거부하고,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립동옥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을 보냈다. 강 부상은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최고 핵심인물이고,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의 실재를 시인한 장본인

이어서 회동을 회피한 이유가 수상쩍지만 하다. 노무현 당선자측의 이종석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노 당선자의 대북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북한 요로에 전달했다는 얘기도 별로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지적들 때문에 특사를 왜 파견했느냐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김 위원장은 말로는 북한 핵 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 동족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행동은 따로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성 차관을 만났다. 러시아 대통령 특사는 만나고, 한국 대통령의 특사는 만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다.

임 특사의 성과 없는 방북은 임기를 26일 남겨놓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접근이 현실적 한계에 봉착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